

정책연구 08-70

# 방송통신 규제기관 국제협력 방안 연구

강하연/서보현/김성웅/박민정

2008. 12

## 서 언

방송과 통신서비스 시장에 경쟁이 도입되고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방송통신 융합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간 경쟁이 심화되고 그로 인한 이용자 권리 침해 및 사업자간 분쟁의 수도 증가하였습니다. 각국의 규제기관은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위해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화된 규제기관의 경우 이용자 보호를 1차 목적으로 규정하고 규제 완화 및 사후규제에 대한 관리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직하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실정 및 환경을 고려한 적절한 사후규제 제도 개선을 위하여 관련법령 개정 및 사례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 규제기관간의 정책적 교류 현황을 파악하고 방송통신 규제이슈에 대한 교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규제기관의 업무체계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사후규제 제도 개선 시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해외규제기관의 국제협력 업무 및 교류현황을 파악하고, FCC, Ofcom, 및 BNetzA의 사후규제 집행부서 및 업무, 권한, 집행과 관련한 절차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해외 규제기관 규제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이들의 규제경험을 담았습니다. 해외 규제기관과의 교류의 일환으로 ‘2008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의 규제세션을 주최하고 그 논의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이론적인 기여보다는 규제실무 담당자간의 국제교류 강화 및 선진 사후규제 시스템 이해 제고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사후규제 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 및 토대로서의 소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방송통신 규제기관이 향후 융합시대를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본 연구를 통해서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본 연구는 방송통신협력연구실의 강하연 책임연구원, 서보현 방송통신협력실장,

김성웅 연구원, 박민정 연구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각 계 전문가들의 의견 및 협조가 큰 도움이 되었고, 특히 수요자인 정부 실무담당자와 지속적인 피드백을 함으로써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우리나라 방송통신서비스 분야의 선진화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08년 12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 장 방 석 호

## 목 차

서 언 .....	1
요약문 .....	11
제1장 서 론 .....	15
제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5
제2 절 보고서의 구성 .....	17
제2장 주요국 방송통신 규제기관 국제협력 .....	20
제1 절 주요국 방송통신 규제기관간 국제협력 현황 .....	20
1. FCC .....	20
2. Ofcom .....	26
3. 방송통신 규제기관 국제협력 업무관련 제언 .....	28
가. 추진일정(안) .....	29
나. 모델 일정표 .....	30
제2 절 2008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 규제세미나 .....	31
1. 컨퍼런스 ‘규제’세션 개요 .....	31
2. 규제세션 세부 논의내용 .....	32
가. 발표내용 .....	32
나. 패널 토론 및 질의 .....	35
다. 발표자 답변 .....	38
제3 절 FCC, Ofcom 및 DoJ 인터뷰 .....	43
1. FCC .....	43
2. Ofcom .....	50

3. 미국 법무부(DoJ) .....	52
----------------------	----

제3 장 주요국 방송통신 규제기관 사후규제 제도 .....	56
----------------------------------	----

제1 절 개 관 .....	56
----------------	----

제2 절 미 국(FCC) .....	57
---------------------	----

1. FCC 조직, 예산 및 인적 구성 .....	57
-----------------------------	----

가. FCC 개요 .....	57
-----------------	----

나. FCC 조직 .....	60
-----------------	----

다. FCC 예산 .....	61
-----------------	----

라. FCC 인적 구성 .....	61
--------------------	----

2. FCC 업무 범위, 내용 및 규제권한 .....	62
-------------------------------	----

가. FCC 미션 .....	62
-----------------	----

나. FCC 업무 범위 및 내용 .....	62
-------------------------	----

다. FCC 규칙제정 절차 .....	68
----------------------	----

라. FCC의 조사·분쟁해결 및 중재 기능 .....	72
-------------------------------	----

마. FCC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	73
--------------------------	----

3. 사후규제 관련 집행국 법적 권한 .....	73
----------------------------	----

가. FCC 집행국 개요 .....	73
---------------------	----

나. 집행국 업무 .....	76
-----------------	----

다. 집행국의 핵심 업무과 .....	81
----------------------	----

제3 절 영 국(Ofcom) .....	109
-----------------------	-----

1. Ofcom 조직, 예산 및 인적 구성 .....	109
-------------------------------	-----

가. Ofcom 개요 .....	109
-------------------	-----

나. Ofcom 인적구성 .....	111
---------------------	-----

다. 사후규제 업무 담당 부서 조직 .....	112
---------------------------	-----

2. Ofcom 규제권한 및 규제집행 경향 .....	114
-------------------------------	-----

가. Ofcom의 규제집행 권한 .....	114
-------------------------	-----

나. Ofcom 규제집행의 경향 .....	117
3. 사후규제 관련 법령, 법적 권한 .....	120
가. EU 규제 프레임워크와 사후규제 .....	120
나. 2003년 통신법하 규제권한 .....	121
4. 규제기관 내부규제 규칙: 집행가이드라인 .....	127
가. Ofcom의 집행력 .....	127
나. Ofcom 집행권한 및 관련 절차 .....	128
제 4 절 독 일(BNetzA) .....	140
1. BNetzA 조직, 예산 및 인적 구성 .....	140
가. BNetzA 개요 .....	140
나. BNetzA 조직 및 인적 구성 .....	141
다. BNetzA 예산 .....	145
2. BNetzA 업무 범위, 내용 및 규제권한 .....	146
가. 개 요 .....	146
나. BNetzA 규제 권한 .....	148
3. 사후규제 관련 법령, 법적 권한 .....	149
가. 통신규제 관련 법령 .....	149
나. 사후규제 관련 BNetzA의 법적 권한 .....	150
제 4 장 결 론 .....	158
제1절 바람직한 방송통신규제기관간 국제협력 방안 .....	158
제2절 해외사례로 본 효과적인 사후규제 방안 .....	159
제3절 국내 사후규제 업무 개선관련 시사점 .....	162
참고문헌 .....	164
<첨부 1> 미국 의사결정절차 관련법규: 행정절차법 .....	167

<첨부 2> 미국 통신법 사후규제 관련 조항 .....	171
<첨부 3> 미국 FCC 규정 제208조 공식제소 일반절차 .....	277
<첨부 4> 미국 FCC 규정 집행국 기능 조항 .....	300
<첨부 5> 미국 연방규정(C.F.R) 사후규제 관련 조항 .....	336
<첨부 6> 영국통신법 분쟁해결 관련 조항 .....	357
<첨부 7> 영국통신법 경쟁관련 조항 .....	366
<첨부 8> 영국통신법 집행절차 관련 조항 .....	373

## 표 목 차

[표 2-1] FCC 주요 국제협력 활동 .....	22
[표 2-2] Ofcom 국제컨퍼런스 .....	26
[표 2-3] 국제미디어지식연구포럼 .....	27
[표 2-4] 국제규제자포럼 .....	27
[표 2-5] 민간단체 VLV 컨퍼런스 지원 .....	27
[표 3-1] 미국, 영국, 독일의 집행부서 업무 개괄 .....	56
[표 3-2] FCC의 규제권한 .....	59
[표 3-3] 위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Office Staff 구성 .....	63
[표 3-4] FCC 의사결정절차와 설명 .....	71
[표 3-5] 집행국의 주요 업무 .....	74
[표 3-6] 집행국의 각 과별 인력 배치 현황 .....	75
[표 3-7] 집행국 업무 .....	76
[표 3-8] 조사심리과 주요업무 .....	82
[표 3-9] 미 통신법 제251조 및 제252조 관련 결정 .....	83
[표 3-10] 미 통신법 제271조 및 제272조 관련 .....	85
[표 3-11] 선정성 민원제기 및 징계명령 통계(1993~2006) .....	93
[표 3-12] 주요 방송이슈 .....	94
[표 3-13] 시장분쟁해결과의 주요 업무 및 근거법 .....	95
[표 3-14] 진행중인 미 통신법 제208조 공식 제소 .....	103
[표 3-15] 제208조 공식 제소 관련 공개 허용된 자료 목록 .....	104
[표 3-16] 통신소비자과의 주요 업무 및 근거법 .....	105
[표 3-17] 이용자 보호 관련 조치 대상 .....	107

[표 3-18] 규제기관 통합 .....	110
[표 3-19] Ofcom의 주요 정책 분야 및 전략(2008/09) .....	110
[표 3-20] 영국 통신분야에 대한 규제기관의 규제집행 권한 .....	116
[표 3-21] 주파수 규제 경향 .....	117
[표 3-22] 방송 규제 경향 .....	118
[표 3-23] 통신 규제 경향 .....	118
[표 3-24] Ofcom의 주요 결정-규제변화의 방향 .....	118
[표 3-25] Ofcom의 규제원칙 .....	128
[표 3-26] 분쟁 및 민원의 접수 조건 .....	132
[표 3-27] Ofcom이 다루는 분쟁의 유형 .....	135
[표 3-28] BNetzA 결정위원회 .....	142
[표 3-29] BNetzA 조직 구성 및 담당 업무 .....	144
[표 3-30] BNetzA 예산 .....	145
[표 3-31] BNetzA 소득 .....	146
[표 3-32] BNetzA 주요 기능 .....	147

## 그 립 목 차

[그림 2-1] DoJ 조직도 .....	53
[그림 3-1] FCC 설치 및 권한의 법적 근거 .....	59
[그림 3-2] FCC 조직 .....	60
[그림 3-3] FCC 조직별 변호사 현황 .....	61
[그림 3-4] FCC의 의사결정절차 .....	70
[그림 3-5] FCC 집행국 조직도 .....	74
[그림 3-6] FCC 인력배치 현황(2008년 기준) .....	74
[그림 3-7] FCC 세출예산 현황(2008년 기준) .....	75
[그림 3-8] 집행국의 핵심 업무부서 .....	81
[그림 3-9] 미 통신법 제271조 준수평가 절차 .....	89
[그림 3-10] 선정성민원제소 해결과정 .....	92
[그림 3-11] 공식제소 일반절차 .....	96
[그림 3-12] 신속심리절차 .....	101
[그림 3-13] 통신소비자과의 민원해결절차 .....	106
[그림 3-14] Ofcom 정책집행부 조직도 .....	113
[그림 3-15] Ofcom 운영집행부 조직도 .....	114
[그림 3-16] Ofcom 집행부서 구조 .....	116
[그림 3-17] 분쟁 및 민원의 집행절차 .....	131
[그림 3-18] 분쟁 해결 일반 과정 .....	140
[그림 3-19] BNetzA 조직도 .....	142
[그림 3-20] 조정절차 결과 .....	156

## 요 약 문

### 1.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방송 및 통신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방송과 통신간 융합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EU 등 선진국에서는 융합화 현상에 맞춰 이미 수 년 전부터 관련법 및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융합환경에서의 규제방향은 공정한 경쟁체제 구축 및 이용자 보호로 요약된다.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를 인식하고 각종 절차 개선, 집행력 제고 등 규제체계 정비에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다. 특히 시장경쟁 활성화, 공정경쟁 구축 및 이용자 보호 등 효과적 사후규제 집행을 위해 사후규제에 대한 연구와 법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해외 규제기관들의 사후규제관련 업무, 업무절차 및 제도에 대한 심층적 파악이 부족하며, 문헌 이외의 규제집행 경험을 접하지 못하여 국내 사후규제체계 정비 시 참고할 자료가 부족한 편이다. 게다가 해외 규제기관 간 국제교류 또한 미미하여 융합 환경하의 기술적, 정책적 이슈에 대한 이들 규제기관들의 앞선 경험을 참고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것도 사실이다. 국내 규제체계 개선 시 해외 규제기관의 경험 및 교류를 통해 얻어지는 귀중한 정책적 경험을 정례화할 필요성을 바탕으로 고안된 본 연구는 해외 규제기관의 규제업무 분석과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국내 사후규제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가. 내 용

본 보고서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하에서 바람직한 사후규제에 대한 규제동향을 파

악하고 해외규제기관과의 정책적 교류 강화를 모색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해외 방송통신 규제기관간 국제 교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요 해외 방송통신규제기관의 사후규제관련 업무 및 조직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 사후규제 정책 개선 및 제도 운영 시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 주요 해외 방송통신규제기관의 국제협력 업무 현황 파악, 사후규제 관련 업무교류 실태 분석 및 방송통신 규제기관간 국제협력 업무 방향 제시
- ‘2008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 규제세미나에서의 한국, 영국, 일본 및 독일의 사후규제 관련 정책 경험 사례 발표 및 시사점 정리
- 미국, 영국 및 독일의 방송통신규제기관 조직 및 업무 중 사후규제 관련 업무 내용, 규제집행 절차 및 근거 법령 등을 분석
  - － 미국 FCC의 집행국(Enforcement Bureau), 영국 Ofcom 및 독일 BNetzA의 사후규제관련 규제집행 권한, 조직 및 규제집행 절차 분석

#### 나. 연구 범위

주요 해외 규제기관의 사후규제 등 규제관련 국제교류 현황 및 미국, 영국 및 독일의 사후규제관련 국제교류 현황 파악 및 사후규제 체계를 먼저 도입한 미국, 영국 및 독일의 방송통신규제기관 규제집행 업무 및 조직 운영에 대한 정성적 분석 및 해외 규제담당자와의 인터뷰 위주로 연구를 진행한다.

### 3. 연구결과 및 시사점

방송통신규제기관의 규제담당자/전문가간 교류가 미미한 현실에서 융합 환경하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등 업무의 효과적 집행을 위하여 사후규제 전문가간 정책

적, 업무적 교류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한 성공적 정책 교류 및 협력의 조건, 그리고 향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외 방송통신규제기관의 사후규제체계의 틀 및 규제집행 업무의 파악을 본 연구에서 진행하여 규제담당자들의 효과적 사후규제 업무 진행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였다.

미국 FCC의 경우 규제집행을 전담하는 집행국(Enforcement Bureau)을 2000년 조직 개편시 신설하여 통신법 및 FCC 규정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집행국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위규제 보다는 이용자보호, 통신 및 방송분쟁 관련 업무에 인력과 재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1996년 이후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충분하여 사업자에 대한 규제당국의 직접적 개입이 크게 줄어든 데서 기인한다.

영국 Ofcom 및 독일 BNetzA의 경우도 미국과 비교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으나 규제집행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규제사안에 따라 대응 팀의 구성원 및 규모를 차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규제체계 자체를 EU framework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체계의 틀이 사후규제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영국 Ofcom은 경쟁법의 집행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관련 규제집행 사례는 거의 없으며 규제집행 업무는 주로 이용자 분쟁해결업무에 치중되어 있다. 분쟁해결절차는 투명하게 운영되어 분쟁해소 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한다. 독일 BNetzA의 경우 공정경쟁 관련 규제보다는 통신법에 근거하는 사전 규제적 성향이 여전히 강하며 불공정경쟁행위 규제는 연방카르텔청과 공동으로 규제권한을 행사하나 주로 BNetzA가 행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속한 분쟁해결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공식적 분쟁조정 절차 이전단계인 신속 해결절차를 도입하여 사법적 통제 비용을 줄였다.

####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FCC, Ofcom, BNetzA 등 해외 주요 방송통신규제기

관 국제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이들 방송통신규제기관과의 정기적 정책적 교류 추진 시 활용한다. 또한 FCC, Ofcom BNetzA의 사후규제집행 관련 조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방송통신 사후규제체계 정비 및 개선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규제집행 절차의 구체화 및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5. 기대효과

향후 국내 방송통신 사후규제체계 및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개선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1 장 서 론

### 제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통신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통신과 방송의 융합현상이 진행되면서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 및 시장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통신규제체계의 개편은 모든 통신선진국들의 당면과제가 되었다. EU는 이미 2003년부터 융합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 캐나다 등의 서구권 국가들도 제도개편을 시작하였거나 도입 중이다. 이들 국가들이 도입하는 규제체계의 핵심은 기존의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기능을 원활히 하고 경쟁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이용자 후생을 제고하는데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움직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바, 설비 기반 경쟁에서 서비스 기반 경쟁으로 통신 경쟁정책의 전환을 추진 중이며 방송통신 통합법 제정 등 융합 환경에 적합한 방송통신 규제체계 도입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서비스 기반 경쟁정책의 핵심은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이다. 사업자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후적 불공정행위가 다양화, 복잡화되고 이용자 이익침해 사례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후적인 시장 감독기능 강화는 규제기관이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할 규제능력이다. 즉, 사전규제가 완화되면서 규제당국은 사업자들이 통신법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사후적으로 감독하고, 문제가 있을 때 시정조치를 취하는 등 관련 법 집행을 담당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방송통신규제 당국의 사후적 규제집행 능력은 해외 규제당국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설비제공, 상호접속 등의 협정 인가, 고시안 심의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활동이 미흡하고 재정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김정현 외, 2006)을 받고 있으며, 방송 및 통신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권한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희수, 2007). 더구나 불공정 행위 규제를 위한

법제도적 체계가 미흡한 것도 문제지만 전반적으로 규제 집행절차의 투명성 및 개방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어서 효과적이고 전문성 있는 사후규제 집행이 어렵다. 이 외에도 방송 분야의 사후규제체계에 대한 규제 집행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통신 분야의 경우 규제집행 노력이 단말기 보조금, 약관과 다른 요금 할인 등 규정을 토대로 판단이 용이한 일부 금지행위 심결에 편중되고, LLU 등 경쟁촉진분야에서는 크지 않아 편중된 규제집행 능력을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김정현 외, 2006).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조사 분석기능 강화 및 전문 인력 충원 등 융합 환경에 적합한 규제체계 정비 및 규제집행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해외 규제기관에 비해 사후규제관련 규제집행력의 규모 및 전문성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설비 기반 경쟁정책을 추구해 온 우리나라의 통신정책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통신서비스 시장 육성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규제능력이 중요하여 사업자 인허가, 요금규제 등 사전규제 및 관련 업무능력이 발달된 반면 서비스 기반 경쟁정책 집행을 위한 사후규제 업무 능력 및 조직은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었기 때문이다(이상우 외 2002, 김희수 외 2007). 그러나 융합 환경에서 다양한 시장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규제방식보다는 사후적 규제방식이 더 바람직한 인식하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심결 절차 개선, 사업자간 분쟁해결 다양화 등 효과적인 사후규제 집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에 기여하고자 다음의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리보다 먼저 사후규제 체계를 도입한 주요 해외 방송통신규제기관의 사후규제 관련 규제업무 및 집행 경험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제도 개선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설비기반 경쟁에서 서비스 기반 경쟁으로의 정책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융합 환경에 부합하는 효과적 규제체계 구축 또한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사후규제를 먼저 도입한 해외 규제기관과의 적극적 정책적 교류를 통해 그들의 사후규제관련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국내 제도 개선시 활용하는 것이 때

우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해외 방송통신규제기관간 국제교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규제담당자간 교류 활성화 및 정례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융합환경하에서의 기술적, 시장적 변화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규제 및 규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후규제를 먼저 도입한 방송통신규제기관과의 적극적인 정책적 교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 FCC 및 영국 Ofcom의 규제담당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문헌이나 공개된 자료에서 파악되지 않는 사후규제집행에서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2008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에서 개최된 규제세미나의 발표 및 패널 토의 내용을 분석, 정리하여 향후 국내 담당자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되도록 하였다. 영국 Ofcom, 독일 BNetzA 및 일본 총무성의 규제담당자들의 발표는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규제집행 시 애로사항 및 규제관할권 충돌 문제 등 규제집행자가 겪는 실질적 문제에 대하여 귀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본 연구는 미국, 영국 및 독일의 사후규제 집행체계 및 집행절차에 대한 분석을 하여 국내 사후규제제도 개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선행 연구 대부분이 방송통신 특정 분야(예컨대 이용자보호)의 규제 위주로 구성되어 실무자들이 해외 규제기관의 사후규제 집행업무 전반에 대한 파악을 하기 쉽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해외방송통신 규제기관 업무 중 집행업무 전체에 대한 포괄적, 체계적 조사를 하여 규제실무자들이 해외 규제기관의 집행업무 전반에 대한 파악을 쉽게 할 수 있게 하였다.

## 제2 절 보고서의 구성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에 치중하기 보다는 실증적 및 정성적 자료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본 연구가 규제관련 실무자들로부터 해외 규제기관의 업무체계 및 조직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접근성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실제 수요에 부응하여 고안된 연구이기 때문이다. 연구의 목적이 해외 방송통신규제기관의 규제집행체계에 대한 실증적 조사인 만큼, 학술적 문헌자료를 활용하기보다 해외 방송통

신규제기관들이 직접 발행하는 자료 및 관련 법령을 분석하였다. 특히 문헌자료에서 파악되지 않는 부분은 규제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외 방송통신규제기관의 조직운영 및 규제 집행시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제2장은 해외 방송통신규제기관의 국제교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방송통신규제기관간 교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 사후규제 세미나에서 발표된 규제전문가들의 발표내용을 담아 사후규제집행에 대한 선진국의 경험을 규제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효과적 사후규제 집행에 대한 해외 규제담당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고 특히 사후규제 체계를 도입하면서 발생하는 통신전문규제기관과 일반규제기관과의 관계에 대하여 각국의 경험과 사례를 소개하였다.

제3장은 미국, 영국 및 독일의 통신규제기관의 사후규제 관련 업무내용 및 조직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제2절에서 다루고 있는 미국의 경우, FCC의 7개 정책부서 중 하나로서 규제집행 담당부서인 집행국을 분석하였다. 특히, 집행국의 업무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자네트워크국과 가장 연관성이 큰 조사심리과, 시장분쟁해결과 및 통신소비자과의 업무 및 사후규제업무 절차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제3절에서는 영국 Ofcom의 규제집행 조직 및 업무방식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특히 규제집행절차를 상세히 정리하여 Ofcom의 규제집행방식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였다. Ofcom은 우리나라와 달리 역무 중심으로 부서가 조직되어 있지 않아 외부에서 특정 업무처를 파악하는것이 쉽지 않다. 이는 EU의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하여 규제사안에 따라 팀제를 운영하는 독특한 조직운영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제4절은 독일의 BNetzA의 조직 및 업무를 조사하였다. BNetzA는 전력, 가스, 통신, 우편 및 철도에 관한 규제당국으로 통신관련 규제는 통신법 및 다른 법류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BNetzA도 EU의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나 방송분야 규제권할은 제한적인 반면 통신분야 규제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 제4장 결론부문은 보고서 본문에서 조사된 해외 방송통신규제기관간 국제

교류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방송통신규제기관 국제교류 방안에 대하여 제언을 하고 있다. 아울러 본문에서 수행한 미국, 영국 및 독일 방송통신규제기관의 사후규제 집행 및 조직 운영 경험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측 규제 실무자들에게 향후 사후규제 체계정비 및 개선 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제 2 장 주요국 방송통신 규제기관 국제협력

### 제 1 절 주요국 방송통신 규제기관간 국제협력 현황

일반적으로 정부간 국제협력은 외교의 영역으로 한 국가의 정치경제적 이해를 추구하는 공적(public) 행위로 볼 수 있다. 외교는 충성 없는 전쟁이라는 말이 있듯이 철저한 자국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방송통신분야도 예외는 아니며, 방송통신규제기관들이 추진하는 국제교류 업무 대부분은 자국의 규제 경험 및 규제 철학을 방송통신 후발국에게 전파하여 자국 사업자 및 서비스의 해외시장 진출여건을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미국 FCC 및 영국 Ofcom의 국제협력 업무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본 연구의 관심사인 사후규제 관련 교류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료의 접근성 등 현실적 제약 때문에 조사대상 방송통신규제기관을 FCC와 Ofcom으로 국한하여 조사하였다.

#### 1. FCC

미국 FCC의 국제협력 업무는 국제국(International Bureau)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국은 FCC 조직연혁상 상당히 늦은 1994년 11월에 설립되었으며, 모든 국제 통신 및 위성 프로그램과 정책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제국은 또한 국제 컨퍼런스, 행사 및 협상에서 FCC를 대표한다.

국제국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최대한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서비스 제공에서 경쟁 도입이 원활하게 되는것”을 주요 목표로 다양한 국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주로 국가간 이해가 걸려있는 국제주파수 규정, 국제 위성 및 국제통신정책 관련 이슈, 외국인 지분이슈 등 통상협상 업무, 국내외 컨퍼런스 참여 및 위원장 해외출장

지원업무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FCC 웹사이트에 소개되어 있는 국제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sup>1)</sup>

- 1) 국제통신정책 개발 업무
- 2)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국제통신정책 관련 자문 수행
- 3) 국제통신 설비 및 서비스, 국내외 위성시스템 관련 허가 및 규제를 위한 정책, 규제, 절차 개발 및 관리
- 4) 국제국에 의해 부여된 인허가 조건 이행여부 감시
- 5) 국내외 컨퍼런스, 회의 등에서 국제통신업무 관련 FCC를 대표하고, 관련 내용 준비
- 6) 국제통신업무 관련 다른 정부기관, 국외/국제 기구 및 해외정부기관과 협력하는데 FCC의 단일창구(single focal point)로서 역할 수행
- 7) 통신통상협정의 협상 및 이행에 있어 미국 무역담당자에게 자문 및 기술적 지원 제공
- 8) 국제통신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경제적, 법적, 기술적, 통계적 연구 분석 수행, 국외 및 국제기구 관련 통신, 규제, 시장정책 정보 수집 및 전파
- 9) ‘입법실’과 함께 국제정책 관련 FCC의 주요 활동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담당
- 10) 주파수/궤도 할당 관련 국제적 협력 도모하여 국제적 무선 간섭 최소화
- 11) 무선 주파수 할당의 양자간 협력 절차 마련을 위한 국제협정의 협상을 진행 및 조정
- 12) 국제적 합의 및 조약 하의 FCC 책무 이행사항 확인, FCC의 규제, 절차, 주파수 할당이 국제적, 양자 합의사항에 준수할 수 있도록 점검
- 13) 미국 주파수 및 궤도 할당에 대한 국제 자문, 협력, 통지 관련 활동을 감독, 관리
- 14) 위원장 해외 출장시 자문 제공 및 국제 출장 계획 일정 수립

---

1) <http://www.fcc.gov/ib/functions.html>

FCC가 선호하는 국제협력 방식은 주로 국제기구에서의 멤버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FCC는 국제전기통신동맹(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TU) 하에 개최되는 포럼과 같은 국제적 포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범미주통신 컨퍼런스(Inter-American Telecommunications Conference, CITEL),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등과 같은 지역 및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제국 하의 ‘전략분석협상과’는 ITU-T, ITU-D 및 주요 ITU 컨퍼런스에 대한 참여 및 OECD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도 갖추고 있으며, 동 업무에 투여되는 인력도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이외에도 정보화사회를 위한 국제정상회의(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WSIS), ITU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WTSA) ITU 통신개발컨퍼런스(ITU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 등 국제 주요 컨퍼런스에 참여한다. FCC는 최근 참여한 국제컨퍼런스 및 회의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고 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 FCC 주요 국제협력 활동(2006~2008)<sup>2)</sup>

행사명	개 요		FCC 참여현황	비고
ITU Council	(High Level Segment of the 2008 Session) 2008. 11. 13, 스위스		위원(Commissioner) 1인 발표자로 참여	
ITU 전권회의 (ITU Plenipotentiary Conference)	PP-06	2006. 12. 6~24 터키	회원국으로 참여	ITU의 최고 정책수립기구로 매4년마다 개최되며, ITU의 종합적 정책, 4개년 전략 및 예산 계획 수립, 기구 주요 경영진 등 선출 등을 논의

2) 국제 컨퍼런스 및 회의활동 중심으로 정리

행사명	개 요		FCC 참여현황	비고
ITU 통신개발 컨퍼런스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 WTDC)	WTDC- 06	2006. 3. 7~15 카타르 도하		개발분야 관련 모든 주제를 자유롭게 토론하고 ITU 통 신개발국의 프로그램 및 프 로젝트를 검토하는 컨퍼런 스로 매 4년마다 개최
		(아메리카 지역 준비회의) 2005. 8. 9~11, 페루	1인 참석 (국제 개발 담당)	
	WTDC- 02	2002. 3, 이스탄불	국제국 국장 (Chief) 포함 총 4인 참석	
ITU 세계 전파통신회의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	WRC- 07	2007. 10. 22~11. 16, 스위스	ITU 회원국으로 WRC에 참여 (Advisory Com mittee 통해 국 민의견 수렴, WRC에 제안서 제출)	ITU 의사 결정 기관의 하나 로, 전파 규칙(RR)을 개정할 권한을 갖는 회의. 2년마다 개최되는 이 회의는 RR의 부분적 또는 전면적 개정을 포함하여 전파 통신에 관한 세계적 문제를 다룸
정보화사회를 위한 국제정상회의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1차	2003, 제네바	국제국 국장 포함 총 5인 참석	
	2차	2005. 12, 튀니스	위원장을 포함 총 5인 참석	
OECD ICCP	1차	2008. 3. 5~7, 프랑스	불참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국제 발전과 공공복리를 위한 협 력과 정책적 코디네이션을 강화방안 모색
	2차	2008. 6. 19, 한국	국장 2인 (유선국, 국제국) 참석	
OECD CISP	2007. 12. 3~4, 프랑스		국장 2인(유선 국, 국제국) 참 석	
OECD Conference on the Future Digital Economy	2006. 1. 30~31, 이탈리아		위원 1인: 세션 발표 및 폐회사 발표자참여	

행사명	개 요		FCC 참여현황	비고
세계 규제자 심포지엄 (Global Symposium for Regulators(GSR))	제8차	2008. 3. 11~13, 태국	위원장 포함 총 4 인 참석 위원장: Moderator (섹션 2), Special Remarks Speaker (섹션 4)로 참여	ITU 통신개발국(BDT)이 주관하 는 국제 심포지엄으로 각국 정 부대표, 국제기구, 법조인, 학자, 민간전문가 등 참가
	제7차	2007. 2. 5~7, 아랍에미라이트	1인 참석(국제국 Senior Counselor)	
Network Neutrality Conference	2008. 9. 30, 덴마크		위원장: Pre-session, Keynote Speaker로 참여	
Annual International Symposium and Business Expo	14th	2008. 11. 4~6, 미국	위원장: Regulatory Keynote Speaker로 참여; 국장 2인(국제국, 무선국): Symposium speaker로 참여	Wireless Communications Asso- ciation International(WCAI)개최 ※ co-located 회의: Broadband Summit: Connecting America - FCC-NARUC Joint Conference on Advanced Services - 위원장 및 위원: Opening Statements 발표자료 참여
Global Forum	'08	2008. 10. 21~22, 그리스	위원장: Keynote Speaker(Day 2)로 참여; 위원 1인: Key note Speaker(Day 1)로 참여	세계 각국 정책입안자 및 산업 이 모여 빠르게 진화하는 정보 화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한 집중적 인 브레인스토밍의 자리
	'07	2007. 11. 5~6, 이탈리아	위원 1인: Speaker 로 참여	

행사명	개 요		FCC 참여현황	비고
West Africa ICT Roadmap to Opportunities Conference	2008. 7. 8~10, 가나		위원 1인: Speaker로 참여	양국 장관 등 고위급 공무원, 산업협회 등이 모여 아프리카의 ICT개발 증진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APEC TEL MIN	7차	2008. 4. 23~25, 태국	위원 1인: Speaker (Plenary session 5)로 참여	
APCO International Annual Conference	73차	2007. 8. 5~9, 미국	위원장, 위원 1인: 발표자로 참여	
Telecommunications and Media Forum			위원 1인: Speaker로 참여	International Institute of Communications 주최
ACCENTURE Global Convergence Forum	2006. 5. 12, 중국		위원 1인: Speaker로 참여	

국제국 업무 중 한가지 눈에 띄는 점은 개도국 또는 통신후발국을 위한 ‘국제방문 프로그램(International Visitors Program, IVP)’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방문 프로그램’은 개도국 출신 정책담당자 또는 공무원들이 방송, 통신을 포함한 다양한 통신이슈와 관련하여 FCC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동 프로그램에서 FCC는 FCC의 조직, 업무 및 규제집행 절차에 대한 소개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진행한다. 한 해 평균 100여개국에서 온 400~500여명이 파견단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총 135회 회의를 수행, 66개국에서 700명 이상이 참가하였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최소 2주전에 FCC에 요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통신규제기구 관련자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며 학생 및 상업적 여행그룹은 참여할 수 없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방송통신 규제접근 방식을 민영화 및 시장경쟁형성이라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미국의 규제모델을 전파하는 등 교육프로그램의 영향력은 상당할 수 있다. ‘국제방문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은 자국의 방송통신정책의 전파를 추구하는 동시에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해외 정보와 전망을 교환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를 갖는 셈이다.

## 2. Ofcom

Ofcom도 FCC와 유사한 국제협력 담당부서를 두고 있다. 자료접근성의 한계로 Ofcom의 해외교류 업무 전부는 파악되지 않으나, 주로 국내외 Ofcom 방문 및 컨퍼런스 등 행사의 개최 및 Ofcom이 직접 참여하는 컨퍼런스로 구분될 수 있다. FCC가 직접 주최하는 국제 컨퍼런스가 별로 없는 반면에 Ofcom은 다양한 형태의 국제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것이 특징이며, EU차원의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Ofcom이 주최한 컨퍼런스 주제는 주로 융합환경하의 경쟁규제 문제인 것으로 파악된다(아래 표 참조). 학계, 업계, 해외규제기관 및 EU 집행위 담당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컨퍼런스의 규모나 논의의 질 측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Ofcom이 개최하는 대표적인 컨퍼런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2> Ofcom 국제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주 제	일 시	참여자 규모
Communications and Convergence Challenges for 21st Century Digital Economies	2006. 11. 29~12. 1 런던	EU 집행위, Ofcom, CTRC(캐나다), CCR(아일랜드) 등 규제기관, T-mobile, Vodafone, BT, 구글 등 사업자 및 학계교수
Next Generation Regulation	2005. 11. 9~11 에딘버그	EU 집행위, Ofcom, FCC, ARCEP, ANACOM, CCR(아일랜드), ANRC(루마니아) 등 규제기관, THUS plc, Warner Bros, BT, Vodafone 등 사업자 및 학계교수
NEXT GENERATION-NET GENERATION: Managing competitive communications in a digital age	2008. 11. 20~21 런던	EU 집행위, Ofcom 등 규제기관, 일본, 인도, 프랑스 등 각국 통신부처, T-mobile, Telefonica Europe, AT&T, Verison, Vodafone, BT, 구글 등 사업자 및 학계교수

자료: Ofcom 홈페이지

<표 2-3> 국제미디어지식연구포럼(International Media Literacy Research Forum)－  
IICOM과 공동주최

목적 및 배경	일시	참여자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디어활용 증진에 따라 세계적 수준에서 현안에 대한 이해와 공유 필요성이 증대</li> <li>－ 미디어지식 활용 연구 분야의 지식 공유 목적</li> </ul>	2008. 5. 14～16 (창립총회) 2008. 10. 31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등의 지원</li> <li>－ 대부분의 포럼 활동은 온라인상에서 행해짐</li> </ul>

자료: Ofcom 홈페이지

<표 2-4> 국제규제자포럼(International Regulators Forum)－IICOM<sup>3)</sup>과 공동주최

목적 및 배경	일시	Ofcom 관련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국의 규제기관 간 규제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안전한 규제 환경을 도모</li> </ul>	2008. 11. 1～2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obin Blake(Head of Media Literacy, Ofcom): 세션1 발표(Regulatory approaches for the future-is co and self-regulation the answer?)</li> </ul>
	2009. 캐나다	

자료: IICOM 홈페이지

Ofcom이 지원하는 컨퍼런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5> 민간단체 VLV(Voice of the Listener & Viewer) 컨퍼런스 지원

주 제	지원	일시	참여자 규모
Making the most of New Media	Ofcom, BT	2009. 4. 1 런던	Ofcom, BBC 등 방송, Vodafone, BT, 구글 등 사업자

자료: Ofcom 홈페이지

이 밖에 Ofcom은 국제기구 및 해외 다른 국가의 컨퍼런스에도 지속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3) International Institute of Communications

- 경쟁법 및 정책세미나(2004) 참석 발표: Vincen Affleck(The Concept of SMP: Member States' Experiences)
  - 규제자심포지엄(8th Global Symposium for Regulators) 참석(2008) 발표: Vincent Affleck
  - BSG conference 참석(2008)
  - 유럽 우편통신컨퍼런스(CEPT-The European Conference of Postal and Telecommunications Administrations)에서 다른 국가 규제기관과 공동 활동
  - 기타 OECD, ITU 등 규제관련 국제교류 활동: OECD CISP(통신인프라서비스 정책작업반)<sup>4)</sup> 및 ITU World Radio Conference 참석하여 Ofcom의 입장 표명
- FCC와 Ofcom의 국제협력 업무 중 사후규제관련 교류에 대한 구체적 파악은 매우 어렵다. 다만, 다양한 국제기구 및 컨퍼런스에서의 참여를 통해 규제담당자간의 교류가 활발히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3. 방송통신 규제기관 국제협력 업무관련 제언

바람직한 방송통신규제기관간의 국제교류는 아래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방송통신 규제당국이 국제 컨퍼런스 및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및 국제 컨퍼런스에서의 참여는 저조한 편이다. 이는 언어의 문제도 있지만 규제담당자들의 잦은 보직 변경 및 업무 인센티브가 적은 환경에서 해외 규제논의에의 참여가 쉽지 않은 여건도 크게 작용한다고 본다. 그러나 국제 논의의 장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세계 각국의 규제전문가 및 정책담당자와의 정책적 교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해외 규제논의 및 규제기관과의 교류는 단발성 또는 일회성 행사로 진행해서는 안 되며,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자주 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규제사안에 대한 평상시의 허심탄회한 논의 및 의견교환을 통해 구축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민

---

4) Working Party 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 Services Policies

감한 규제사안에 대한 해외규제담당자들의 조언 또는 자문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해외 주요 방송통신규제기관과의 정책적 교류는 기존의 국제논의의 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우리가 규제논의를 주도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 금년 10월 30~31일 개최한 2008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에서 개최한 규제세미나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다만 영국 Ofcom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규제이슈에 대한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주최하여 규제이슈에 대한 외부의견 수집 및 전문성 축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Ofcom은 해외 규제기관 뿐만 아니라 국내외 학계, 사업자 등 민간부문에게까지 참여의 문을 열어 다양한 논의 및 의견을 추구하며 이러한 노력은 곧 Ofcom의 규제전문성의 축적으로 귀결된다.

마지막으로 해외 규제담당자와의 교류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 규제논의의 실효성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규제기관과의 정책적 교류를 전담하는 팀이 없어 정례화된 국제교류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국제 행사가 단발성 및 전시성 성격을 갖는 면이 있어 심도 있는 규제논의의 장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FCC 또는 Ofcom 수준의 국제 교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반 인력 및 기획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국제 컨퍼런스의 기획 및 추진은 개최일 최소 6개월 전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6개월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아래 소개되는 컨퍼런스 및 국제교류 추진 모델을 제언한다. 컨퍼런스 주제 선정 및 발표자 섭외는 경험상 많은 시행착오가 수반되는 관계로 선정 이전에는 충분한 고려가 있되, 선정 후 변동사항 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가. 추진일정(안)

##### (1) 1단계(사전 교류): 연중

— 주요 해외규제 기관과의 규제업무 관련 연락

- － 사후규제 및 이용자보호 관련 업무 및 사례 상호 교류 및 서신 교환
- － 분야별 규제담당자 리스트 작성 및 관리

(2) 2단계(준비단계): 세미나 개최 최소 6개월 전부터 시작, 1~2 개월 소요

- － 주제선정위원회 및 전문 자문단 구성, 자문회의 개최
- － 행사 기본계획 수립－주제 확정 및 연사, 발표자 리스트 마련
- － 연사 및 발표자 섭외 시작

(3) 3단계(진행단계): 세미나 개최 5개월 전부터 시작, 3~4개월 소요

- － 발표자 섭외 및 섭외 후 업무 진행, 세부 프로그램 구성, 국내외 홍보
- － 항공, 숙박 확보, 행사장 확보 등 기본적인 의전 업무

(4) 4단계(마무리단계): 세미나 개최 1개월 전부터 준비

- － 행사 개최
- － 평가, 결산, 자료집 작성 등 후속 조치

#### 나. 모델 일정표

구 분		'09.4	'09.5	'09.6	'09.7	'09.8	'09.9	'09.10	'09.11
1단계 (사전교류)	해외 주요국 방송통신 규제기관과 관계 지속/개선								
2단계 (준비)	주제선정위, 자문회의 개최								
	행사 기본계획 수립, 발표자 접촉								
3단계 (진행)	주제/프로그램 확정, 발표자 섭외								
	국내외 홍보, 행사장 확보 등								
4단계 (마무리)	행사 개최								
	후속조치								
상시	주요 해외 행사 참석								

## 제 2 절 2008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 규제세미나

## 1. 컨퍼런스 ‘규제’세션 개요

지난 2008년 10월 30~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를 개최하였는데, 그 중 일부인 규제세션(New Regulation)에서 주요국 방송통신 규제기관 관계자의 규제정책 및 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다. 동 세미나는 주요 해외 방송통신규제기관과의 교류를 목표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의 일환으로 기획, 추진되었다. 동 세미나는 발표자의 발표 이후 패널토의 및 일반 참가자의 질의와 논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영국, 독일 및 일본에서 온 발표자들은 방통융합 사후규제 정책 및 방송통신 분야의 효과적인 불공정행위 규제 사례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소개하였다.

규제세션의 발표자 및 패널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다.

## ○ 발표(R1)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사후규제 정책 방향

구분	이름	직함	소속	국가
moderator	엄명배	교수(정보통신정책학회장)	충남대학교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
speaker	Greg Bensberg	Principal Advisor, Broadcasting	Ofcom	영국
speaker	이기주	국장	방송통신위	한국
panel	박상인	교수	서울대	한국
panel	이종화	연구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
panel	이희정	교수	한양대	한국

## ○ 발표(R2) 방송통신분야의 효과적인 불공정행위 규제 방안

구분	이름	직함	소속	국가
speaker	Helmut Schadow	Chief Executive Director (Department 2)	BNetzA	독일
speaker	Takuo Imagawa	Director for Information Economics, Global ICT Strategy Bureau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 Communications(MIC)	일본

구분	이 름	직 합	소 속	국가
panel	이종화	연구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
panel	김태호	연구원	헌법재판소	한국
panel	김형일	CEO(박사)	SOC Solution Group, Inc.	미국

\* Moderator는 R1과 동일

## 2. 규제세션 세부 논의내용

### 가. 발표내용

#### (1) Ofcom(그렉 벤스버그 수석자문관)

- Ofcom의 역할과 영국 방송통신 현황, 융합과 NGN 관련 규제이슈 등 주로 일반적인 내용이 발표내용의 대부분을 차지
  - 사업자간 협상에 따른 MVNO의 출현, 시장기능을 통한 주파수 활용의 효율성 증대 등 시장기능을 주로 강조
  - BT에 대한 운영분리를 통한 NGN 시대의 공정경쟁 제도 마련
- 사후규제 관련: 융합 환경에서 대두되는 규제 이슈는 주로 콘텐츠 규제임을 소개하며 Ofcom의 콘텐츠 규제 정책방향을 소개
  - 영국 정부는 현재 주문형 비디오(Video on Demand)와 같은 온라인 콘텐츠 형태를 커버할 수 있는 규제 범위 확산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가 Ofcom의 직접 통제가 아닌 Ofcom-산업과의 공동 규제(industry co-regulation) 기반의 해결책을 선호
  -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관한 규제: 불법 콘텐츠 유통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트래픽에 지장을 주고 있는바, P2P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 및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이용자에 대해 Ofcom은 초고속인터넷사업자가 경고통지문을 발송하거나, 더욱 강력한 수단으로 위반 사용자의 브로드밴드 접속을 막는 법 체제를 고려중
  - 반면 이러한 행위는 이용자로 하여금 법에 보장된 권리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진전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다양한 시각과 국제적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해답을 찾을 필요가 있음

- 합법적 콘텐츠에 대한 공정한 가격 지불 이슈와 관련, Ofcom은 최근 영국 시장에서 TV콘텐츠에 대한 초과요금과 같은 조건을 규제하는 제안서를 발행함

## (2) 방송통신위원회(이기주 국장)

-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및 IPTV법 상의 사후규제 관련 조항 소개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 3 제1항에서 주요 금지행위 유형을 규정
    - 부당한 차별 및 부당한 협정체결 거부, 협정 불이행
    - 상호접속 등에서 취득한 정보 부당 유용
    - 비용/수익의 부당한 분류에 따른 요금 및 이용대가 산정
    - 이용약관과 다른 역무제공 및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 방송법은 주로 사전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보편적 시청권’ 관련 사항만 규정
  - IPTV법은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와 유사한 구조지만, 다양한 금지행위가 추가되었고 다른 법률(경쟁법)에 우선하여 적용
- 향후 과제를 제시
  - 방송통신의 융합이 급격히 진전되면서 서비스별 규제에서 탈피, 이종 산업간 불공정행위까지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의 틀 마련
  - 사전규제 축소에 따른 규제 공백 방지
  - 사후규제 절차 개선 및 조직 전문성 제고
    - 심결 시 준사법절차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심구조 강화
    - 복잡한 사후규제 사안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법률, 회계 등 전문성 제고
  - 결합판매 등 새로운 서비스에 의한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신속하고 저렴한 이용자 피해 구제 등 이용자 보호제도 개선
  - 중복규제 방지를 위한 공정위와의 역할 재정립 및 협력방안 마련

(3) 독일 연방네트워크 규제청(헬무트 샤도우 BNetzA 기획조정실장)

○ 융합 환경하의 법체계

- 인터넷을 포함함 모든 통신망 및 통신서비스를 위한 통일된 법적틀 마련
- 콘텐츠에 대한 규제들은 아직 없으나 콘텐츠 규제는 연방 관할  
(방송은 각 주 미디어 청이 관할)

○ 사후규제기관과 사전규제기관

- 연방카르텔청(Federal Cartel Office)은 경쟁 구조가 방해될 때, 개별 사례별 및 사후 조치로만 개입을 함
- 연방망규제청(Federal Network Agency)는 사전규제기관이며 지배력의 남용을 사전에 통제(ex-ante control of abuse)

○ 연방망규제청과 연방카르텔청의 권한 구분

- 통신법 및 경쟁법(GWB)이 병행해 적용 가능하므로 병행적 관할이 두 기관에 모두 적용될 수 있음
- 지배력 남용 사례가 나타나거나 요금이 규제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허가에 문제가 있을 때는 연방망규제청이 관할을 함
- 연방카르텔청의 관할은 무엇보다도 각 분야에 있어서 연방망규제청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침
- 통신법에서는 관할 규정을 명확히 가지고, 경쟁법이 병행해서 관할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음으로 종국적 규율이 명시된 것은 없음
- 관할권의 구분은 통신법에 특별규정으로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 경쟁법의 적용가능성을 제외하였으며, 특정 행위가 통신법상의 금지행위가 아닌 한, 경쟁법상의 지배력남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4) 일본 총무성(타쿠오 이마가와 과장)

○ 일본의 초고속인터넷 경쟁정책 등 규제 전반에 대하여 설명

- 동선가입자망 및 FTTH 개방
- MVNO 가이드라인

- 망중립성: P2P트래픽 shaping에 관한 가이드라인
- 분쟁해결절차
- 불법 및 유해 콘텐츠 유통 방지를 위한 이용자 홍보
- 일본의 주요 규제 이슈는 규제완화와 시장진입 촉진, 및 비대칭적 규제의 균형을 찾는 것임
  - 상호 규제와 관련된 이슈는 다음과 같음: 상호접속과 관련된 규칙과 논쟁 해결과 관련된 부문, 시장 분석과 정보 공개, 보편적 서비스의 고객 보호, 정보의 보안, 기술 표준 등이 있음
  - 비대칭적 규제는 지배적 통신사업자들에게 적용; 주로 NTT에 적용되고 있음
  - 작년에 구축한 ‘경쟁보호시스템’ 및 매 해 발행하는 ‘시장분석’(Competition Review)을 토대로 현재의 규제 틀이 마련이 됨
  - 분쟁과 관련, ‘분쟁조절 위원회’를 수립하였으며, 현재 이 위원회에서 통신사업자간의 분쟁조절 담당(방송은 담당하지 않음)
  - 그래서 이 비슷한 메커니즘을 방송쪽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IPTV 서비스에 있어서 분쟁이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 간에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융합서비스에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
  - 네트워크가 점점 IP기반의 네트워크가 되면서 포괄적인 브로드밴드 규제 정책이 필요한 바 “신경쟁촉진프로그램 2010”을 마련; IP 기반 네트워크에서의 공정한 경쟁 촉진, 정보격차 해소, 사용자보호, 혁신적인 비즈니스 개발 등등의 세부적인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음

#### 나. 패널 토론 및 질의

##### (1) 박상인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 한국의 방송통신 관련법을 보면 수직적인 규제 틀과 수평적인 규제 틀이 혼합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미디어 통신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간의 통신사업과 미디어 산업의 관할권에 관한 분명한 결정이 없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 통신사업, 미디어 산업 및 융합 미디어산업의 관할권을 갖는가에 대한 경쟁 가능성 제기
  - － 경쟁을 통해 전문성을 가지는 순기능
  - － 규제가 어떻게 관련기업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 과거에 정보통신부가 있을 때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관할권에 간한 합의가 있었으나 잘 이행되지 않음
- 관할권의 작은 부문을 두고 두 규제당국이 경쟁을 하면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여러 분야에 할당하기보다 관할권이 불분명한 분야에 집중하게 되어 많은 낭비를 가지고 옴
- 이러한 의미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교환을 통해 서로에게 배움을 통해 양쪽의 이득을 불러 올 것으로 봄

(2) 이종화 박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융합시대에 있어 많은 콘텐츠 제공자와 플랫폼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출 할 것으로 예상되고,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 문제 및 네트워크의 표준화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 될 것임
  - － 네트워크 접근성과 관련된 사전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사후 불공정 행위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혁신적인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간의 관할권 중복에 따라 통신 사업자에게 이중적 처벌 및 규제가 들어갈 수 있음
  - －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는 두 가지 큰 추세의 한 가지는 특정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 분야의 전문규제기관이 담당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분야별로 특수한 규제제도를 생성하기보다는 일반 경쟁법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전문규제기관에 부여하는 것임
  - －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시장의 모든 경쟁관련 문제를 관할하

는 것이 한 가지의 해결책임

- 현재, 한국의 방송법은 현재 방송시장에 있어서의 반경쟁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으나 방송시장에도 더 많은 플랫폼과 방송사업자가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복잡한 반 경쟁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경제적 측면인 효율성이나 경쟁보다는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소유권의 다양성이 중요하므로 시장을 획정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식별하는 사전규제의 적용이 어려우므로 사후규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따라서 사후규제에 관련한 관할권 이슈가 더 심각해질 수 있음
  - 규제적 불확실성의 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간의 관할 책임에 관한 협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프로그램 배분과 같은 분야별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광고와 같은 일반적인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함

### (3) 이희정 교수: 한양대 법대

- Ofcom도 방송통신 산업 진흥에 관한 문제와 경쟁규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하나의 기관이 두개의 모순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흔히 지적되고 있는데 Ofcom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와의 관계는?
-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되고 기술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면서 규제 기관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유형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들이 나타났을 때 규제를 어떻게 하는지?
- 통신법에는 규제조건에 우리나라 금지행위와 마찬가지로 무엇이 위반 행위인지를 모두 열거해 놓았는데 법적 시정조치를 바로 취하지 않고, 일단 자발적인 준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어떤 취지에서인지?
- Ofcom에서는 통신 합병에 관해서는 개입할 권한이 법률상 없는 것으로 아는데 미디어 합병의 경우에 Ofcom에서 여러 가지 공익상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출 법도 한데 미디어 합병에 있어서 Ofcom에서 어떤 식으로 의견을 제출하는지?

(4) 김태호 헌법재판소 연구원

- 연방망규제청도 기존에 주파수 경매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파수 경매제도의 장단점은? EU는 시장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것인데 시장의 사후규제는 축소되는 결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5) KCC 이용자네트워크국 이기주 국장

- 연방망규제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통신서비스사업자들이 불공정행위를 다루는 국이 따로 있는지?
- '00년도 이후에 일본에서 비대칭 규제를 강화하였는데 현재의 일본 통신시장은 경쟁이 이전보다 훨씬 더 진전되었는 바, 비대칭적 규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 한국에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통신사업자들이 이러한 절차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음. 일본의 경우는 활발히 분쟁해결위원회를 사용하고, 해결하고 있는지?

다. 발표자 답변

(1) 이기주 국장

-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관할권과 직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제고에 대한 대답
  - 사전규제와 정책 담당 기관들이 시장과 기능의 변화에 따라 사후규제에 대한 기능이 보강과 강화 되어야하고 그에 따라 직원들의 전문성제고에 대한 전문성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구체적 계획이 있음
  - 수직적 규제 체제에서 수평적 규제 체제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수평적 규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현실적 어려움이 많음

- ‘방송통신발전기금법’을 계획, 본격적으로 수평적 규제의 길로 가기위한 첫 단추를 실행하고 있음
- 조사절차에 대한 보완 관련,
  - 준사법절차인 대심구조로서 제대로 가기 위한 절차를 많이 보완하려 노력 중
  -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Ofcom보다 사전규제내지는 정책기능 거기에 산업육성기능이라고 하는 진흥기능도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음
  - 위와 같은 관계상 위원회체제에서 사후규제 심판을 하기위한 합의제와 사전규제정책 진흥기능을 위한 합의제 규제 사이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
  - 조사제제의 절차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 위원회의 관할권 인력교환에 관한 대답
  - 과거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MOU를 몇 차례 체결을 했으나 나름대로 실효성은 있었으나 한계도 있었음
  - 가장최근에도 두 기관의 중복적인 조사제재가 문제가 되어 법제처가 주관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을 위해 법을 제정하려는 범정부적인 노력이 있었음
-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 위원회간의 인력교환에 관한 대답
  - 두 기관 간의 많은 시도가 있었으나 실현이 되질 않고 있는데 법적으로 중복제재를 해소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이 되고 나면 후속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따라야 할 것으로 봄
- 각 분야 담당 규제기관과 일반 경쟁규제기관과의 기능 배분 문제에 있어서 전문규제기관이 전문성에 기초해서 더 많은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
- 방송 통신 분야에 있어서 일반경쟁법인 공정거래법을 통신방송시장에 적용하는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규제기관이 가져야한다고 보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논의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함

## (2) 그렉 벤스버그 수석자문관(Ofcom방송부문)

- Ofcom과 영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쟁위원회의 관계에 대하여,
  -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거나 M&A가 있을 때, 경쟁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하고 Ofcom은 자문을 함
  - 국가법이나 EU법을 위반한 경우는 상호 협력을 함
  - 규제 당국 간의 경쟁을 한다고 말하기 보단 상황에 맞추어 담당
  - 위원회 쪽에 사건을 의뢰하기 전에 협력을 먼저 하기도 하고 때론 사건을 넘긴 후에 협력을 하기도 함
  - Ofcom은 주로 소비자들의 이익을 담당함
- 대부분의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BERR(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기관과 통신 산업에 관한 문제를 긴밀히 협력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음
- 금지사항 위반 시 즉각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자발적 시정조치를 취하는 이유
  - 일단 위반상황이 있을 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자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 자발적 시정이 안 이루어 질 때,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으로 조치를 취하고, Ofcom이 법적시정을 결정하면 법정이나 심판위원회(Tribunal)에서 검토 후 결정 함

## (3) 이마가와 과장

- 일본에서는 3년 전 NTT가 ADSL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많이 저질렀으며, 최근 FTTH 시장에서도 현 기존 사업자가 몇몇 경쟁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침을 내놓았으며,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모바일 시장에 있어서 광고와 관련된 문제가 있음
- 앞으로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FTTH와 이동전화시장에서는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일본의 모바일 시장은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NTT와 DoCoMo가 많은 단말기 제조사나 콘텐츠 제공사에 행사를 하고 있으며, 플랫폼회사에도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음
  - 총무성은 각각의 영역을 다양한 방식으로 개방하려고 하고 있으며 MVNO를 위한 지침, unbundling 의무를 통해 모바일 시장을 개방하고자 함
  - 최근 기존의 3개 사업자 이외에 새로운 모바일 사업자가 진입하였음
- 일본의 비대칭적 규제 관련,
  - 이미 시장이 경쟁에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비대칭적 규제가 유효한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물론 시장에 경쟁이 어느 정도 도입되었다고 생각하면, 비대칭적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음
  - FTTH시장에서의 점유율이 70%이상이며, 빠른 속도로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FTTH에서의 기존 사업자를 주시할 수밖에 없음
  -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비대칭적 규제로 완화할 계획은 없음
-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 한국에도 비슷한 위원회가 있는데 잘 활용이 안 되는 것처럼, 일본도 같은 경우임
  - 하지만 2001~2002년에 많은 분쟁이 있었는데, 상당부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였음
  - 또 사실 일본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통신사업자 간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총무성에 그 내용을 알림으로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융합의 시대 도래로 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간의, 특히 IPTV 쪽에서 많이 늘어나고, 수요측면에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함
  - 따라서 컨버전스 시장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함

○ MVNO 관련,

- 2001년 MVNO를 위한 지침: MVNO에 대한 시장 진입이 많이 이뤄지지 않았음
- 모바일 시장의 경우, 통신사업자들이 거의 모든 LAYER에 큰 영향력 행사 중
- MVNO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나, 모바일 사업자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MVNO가 시장을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 일본 정부는 MVNO 지침을 두, 세 번에 걸쳐 개정함
- 가능하면 이 지침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작년에 중요한 부분이 다시 한 번 개정이 되었음
- MVNO와 MNO사이를 조율하여 NTT DoCoMo가 새로운 사업자 진입을 허용하고자 함

(4) 독일 샤도우 실장

- 규제기관이 경쟁과 융합관련해서 연방망규제청의 역할
  - 전송에 관한 사항은 각 주의 관할임
  - EU 집행위원회는 Review 2006에서 규제를 소비자입장에서 개선하려고 하였는데 DMB, IPTV 등이 해당됨
- 연방망규제청은 VoIP 어떻게 시장이 전개될지 기다리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가 “아직 음성전화의 품질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추정적 규제만을 하고 있음
- 연방망규제청의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
  - 신청을 통해서가 아니라 연방망규제청의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여,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조사하여 불공정행위로 판단하면 금지를 명령함
- 연방망규제청에 의한 요금규제
  -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사전규제를 받으며 EU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SMP 사업자를 지정
  - EU가 DT에게 26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으며, 소매와 도매가격

의 차이가 너무 적어, 경쟁업체가 유사한 소매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임

### 제3 절 FCC, Ofcom 및 DoJ 인터뷰

주요 해외 방송통신규제기관의 사후규제 업무의 파악을 위하여 본 과제에서 미국의 FCC 및 영국 Ofcom을 방문, 관련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아래 내용은 당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주로 사후규제 집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각 규제기관의 경험을 위주로 질의하였으며, 답변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서술식으로 정리하였다.

#### 1. FCC

##### 가. 사후규제 집행업무 관련

FCC 사후규제 집행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개해달라고 부탁하고 집행국 담당자는 아래의 답변을 하였다.

FCC 집행국의 업무는 2000년 이전까지 독립된 부서로 존재하지 않고 FCC 업무의 일부 및 FCC 정책과 병행하여 진행하였으며, 초기 집행 업무는 정책의 일부 또는 정책을 보조하는 수준이었으나 2000년 조직 개편을 시행하면서 집행(enforcement) 관련 업무 담당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FCC 담당자는 독립된 규제집행 부서의 출현을 시장경쟁 활성화로 인한 법제도 집행 관철의 중요성이 높아짐을 그 이유로 꼽았다.

특히 집행국이 신설되면서 이전의 통신 및 방송분야 규제집행 tool이 집결, 집행국 담당자 전원이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규제집행에 있어 일관성 및 조직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참고로 집행국은 FCC조직 중 연혁이 가장 짧은 부서이다.

집행국 예산 및 조직/인원 관련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아래의 답변을 하였다.

집행국의 FCC 2008년도 예산은 313백만 달러, 총 인원(full time employee)은 총 1818명, 집행국 인원은 총 313명이다.

※ 집행국 대부분 인력은 TCD 및 IHD에 근무, 지원실 인력의 절반은 행정업무담당

- 지역사무소(field office): 135명
- 조사심리과: 55명
- 통신소비자과: 53명
- 시장분쟁해결과: 11명
- 주파수과: 24명
- 지원실(총괄업무 담당): 34명

전문적 인력 현황과 관련하여 담당자는 아래의 통계를 소개하였다.

- 시장분쟁해결과 전원이 변호사
- 통신소비자과는 총 53명 중 40%가 변호사
- 조사심리과는 총 55명의 절반이 변호사
- 경제학자는 일부 있으나 최근 필요성이 낮아졌음
- 기술전문가(엔지니어 등)은 대부분 주파수과에 근무

이외에도 FCC는 조직 전체를 관할하는 IT 인력이 존재하며, FCC database, 서버관리 등 총체적 IT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 나. 집행국 업무 소개

시장분쟁해결과(Market Dispute Settlement Division)의 주 업무는 기간사업자간 분쟁해결이며, FCC 규정 해석,분쟁/이의제기 관련 신규 규칙 제정 업무 등을 담당한다. 담당자는 시장분쟁해결과는 정책/결정을 통해 사업자간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법적소송(Litigation) 방식을 사용하여 기간사업자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법적소송(litigation) 방법론을 채택한 후 분쟁해결방식상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전에는 FCC가 문제해결에의 책임을 졌지만 지금은 이의제기자(소 제기자)가 입증책임(burden of proof)을 져야 하기 때문에 통신사업자(이해당사자)들의 분쟁에

대한 인식변화를 초래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시장분쟁해결과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의뢰하는 이해당사자들은 주로 대형 로펌(사업자를 대표하는 로펌들)이나 주요 사안에 대하여 소비자를 대신하여 자체적으로 조사/개입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담당자는 매 년 다루는 케이스가 5개 내지 20개 정도 밖에 되지 않고(이는 공식적으로 제소가 된 케이스임) 대부분의 사례는 당사자들간의 조정으로 마무리된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공식 소 제기 이전 단계의 사전분쟁조정/해결 방식을 선호하며, 시장분쟁해결과는 주로 조정업무를 한다고 설명하였다.

시장분쟁해결과의 담당자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공식적 분쟁해결절차는 매우 길기 때문에 공식적 절차에 의존하기 보다는 비공식적으로 당사자간 조정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하였다. 담당자는 공식절차 진입 가능성 자체가 당사자간 사전조정 유인으로 작용할 정도로 그 과정이 길고 고통스럽다고 설명하였다. 즉, 대부분의 케이스는 FCC에 공식적으로 접수되기 이전에 해결된다고 설명하였다 (“Most cases are resolved before filing”).

시장분쟁해결과는 FCC 타 부서와 공조하여 기간사업자에 적용하는 신규규정·규칙을 제정하는데, 보통 동 과에서는 일반 규정(general rules)을 제정하고, 규정의 세부 적용은 개별 과에서 담당하도록 되어있다. 담당자는 규칙제정 과정에서 FCC가 부여받은 권한범위 및 정책목표에 부합되는 규정을 만드는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FCC가 공표하는 Order에는 해당 정책/결정에 대한 FCC의 입장 및 사유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소개하였다.

통신소비자과(Telecommunications Consumer Division)는 소비자 보호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통신소비자보호법 TCPA(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에 따라 원하지 않는 전화(unwanted unsolicited calls) 관련 민원 해결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상기 문제와 관련된 통신업체들은 대부분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관련 규정위반에 대하여 이들 업체에게 통보하고 행위변화를 유도한다고 설명하였다.

통신소비자과 업무 중 CPNI(Customer Proprietary Network Information) 관련 업무는 제3자에의 소비자 정보유출 문제를 다루며 위반업체에 과징금 부과 등 규제집행을 주로 하는데, 본 업무는 시장상황 및 시류의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있으며 규제 집행 대상이 바뀔 수 있다. 현재 통신소비자과의 주요 업무는 디지털TV전환 문제이며,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다.

통신소비자과는 소비자 민원을 주로 담당하다보니, 업무량은 많으나 특별한 기술적 전문성은 크게 요구되지 않아 전문직 인력 배치비율은 낮으나 인력은 전체 집행국 인력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심리과(Investigations and Hearings Division)는 크게 유선통신, 무선통신 및 방송분야 문제로 나누어져 있으며, 유선통신분야에서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 위반문제, 번호이동성 문제를 다루고 무선통신 분야에서는 면허의 불법적 전용/전이 문제를 다루며, 전국의 무선국 면허 소지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방송분야와 관련하여 외설(Indecency) 등 콘텐츠 건전성 규제를 주로 하고 있다. 동 과는 업무의 성격상 비기술적요소(Non-technical)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문제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IT 엔지니어 등 기술인력은 없으나 FCC 규정집행 실무를 많이 하는 곳이다.

#### 다. 집행국내 업무분할 및 규제집행 절차 관련

집행국의 업무 분할 및 절차에 대하여 담당자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소비자 불만 처리방식은 케이스마다 다르며, 어떤 과에 할당되는지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소비자 및 정부국(Consumers and Governmental Affairs Bureau)에서 일차적으로 접수하고, 관련 사항에 따라 해당 국/과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다수의 불만, 여론 등은 보통 소비자정부국에서 다루지만, 특정 법을 어겼을 경우 집행국 소관인데 그 이유는 집행국은 조사/심의 및 처벌 권한이 있는 반면 소비자정부국은 그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정부국은 보통 정보의 수집을 주로 하며(창구 역할을 함), 해당 이슈에 대한 구체적 개입은 집행국이 담당하고 있다.

집행국의 업무절차 가이드라인(Enforcement Bureau Manual)은 직원의 업무상 기본 지침 및 조사시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으며, 이는 기밀(confidential) 자료이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고 하였다. 본 매뉴얼을 토대로 신규 직원을 트레이닝 시키나, 대부분의 업무 파악은 업무 현장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집행국에 전해지는 소비자민원 등 업무는 팀제로 운영하는데, 팀은 케이스별로 새로 구성되며 팀 멤버가 변하면서 업무관련 지식의 확대, 공유 및 전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담당자는 팀제가 변동적이며, 그 이유는 FCC가 다루는 이슈가 가변적이기 때문인데, 1990년대 주요 이슈가 공중전화 문제였다면 지금은 사라진 문제라고 소개하였다.

담당자에 의하면 집행국은 직원의 교육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상 지역사무소(field office)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들이 워싱턴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어 주기적 트레이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FCC 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on-the-job-training을 토대로 전문성을 키우고 있으며, 업계 전문가들의 상시 채용으로 필요한 전문성을 수입하고 있다. FCC내 인사관리부가 있어 전문가 또는 업계의 채용(recruiting)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장분쟁해결과의 경우 매주 직원 간담회(staff meeting)을 통해 업무관련 정보의 공유 및 의견교환을 활발히 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전 직원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으며, FCC의 Council Office에서는 비정기적으로 법률적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 라. 집행국의 조사 절차

집행국의 조사절차에 대하여 조사심리와 담당자는 아래 내용을 설명하였다.

첫째, 일단 민원이 제기되면, 담당자는 민원 당사자에게 연락을 하여(편지, 전화 등) 일개의 질문을 한다. 둘째, 답변을 수집, 분석하여 통신법 위반사항여부를 결정한다. 면허소지자의 경우 FCC에게 정보제공의 의무가 있으나,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FCC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FCC는 당사자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거나 진실되지 않다고 판단되면 면허취소, 면허연장 거부 등의 제재수단을 갖고 있다. 셋째, 과징금 부과 기준은 FCC 규정 제13조에 의해서 결정되며, 각 사안에

따라 벌금부과 여부, 사안의 위해성, history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결정한다. 조사팀이 과징금 규모(액수)에 대하여 담당과 및 국장에게 제언, 결정되거나 심각한 위반사례의 경우 과징금 규모를 상임위원 차원에서 결정하기도 한다. 한편 FCC는 전국적인 조사권을 보유, 지역사무소 직원이 현지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통신소비자과의 업무절차에 대하여 담당자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대부분의 통신소비자 불만건은 면허/허가와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신소비자과 담당자는 당사자에게 규정위반을 통보(citation)을 하고, 위반행위의 중단을 요청한다. 만약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위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벌금을 부과한다.

마. 사후규제 체계 관련

FCC 담당자는 인수합병 심사절차를 중심으로 FCC와 DoJ 간의 보완적 협력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DoJ는 조사절차 및 경쟁제한성 분석에 있어 강점을 갖는 반면 FCC는 집행권한 및 공익성 분석에 강점을 갖고 있어 양 기관이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며 이에 따라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인수합병 이외의 일반적 사후 경쟁규제 분야에서는 규제완화 추세에 따라 전반적으로 FCC와 DoJ 양 기관 모두 적극적 규제 개입 사례가 많지 않으나, 최근의 Trinko 사건은 FCC의 전문규제기관으로서의 사후규제 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FCC는 인수합병에 따른 면허의 이전 건에 대하여 공익성을 기준으로 이를 사전심사하고 있는데, 통신법은 면허의 이전과 관련이 있는 인수합병에 대해 FCC가 공익성 및 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승인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해당거래가 면허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FCC의 관할권이 없다. 한편, Clayton Act에 의거 DoJ와 FTC가 인수합병 규제 권한을 공동으로 보유하는데 common carriers에 대해서는 FTC는 규제권한이 없다.

담당자는 합병심사에 있어 FCC와 DoJ의 규제권한 중복이 있으나 두 기관 사이에는 상당한 협력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관할권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두기관간 고위급에서 의견교환이 있고 실무급에서는 DoJ에 제출된 서류를 조사한 당사자로

부터 서류열람을 승인받아 자료를 교차점검이 가능하다. 대부분 DoJ가 먼저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라 FCC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DoJ 심사가 종료된 후 FCC 심사가 완료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DoJ의 인수합병 심사는 경쟁저해성이 심각한지의 이슈에만 초점을 맞추고 대개 구조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며, 신고하여 검토되는 사건 수에 비해 2차 검토되는 케이스의 수는 대단히 작다(경쟁제한성 입증 책임이 DoJ에 있으므로 입증가능성이 높은 사건만을 진행). 보통 조사를 비공개적으로 진행하므로 당사자들이 자료 제공에 더 협조적이고 조사도 효과적이며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내에 규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인수합병을 저지할 수 없음도 설명하였다.

FCC의 인수합병 심사는 DoJ와 달리 행정적 절차(administrative procedure)로서 경쟁제한성뿐 아니라 포괄적인 공익의 증진 여부를 검토한다. 심사과정의 대부분 내용은 기록, 공개되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만 접근 제한이 있을 뿐이다. 인수합병 신청 사업자들은 합병이 공익에 부합됨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FCC의 승인을 거쳐야만 공익성이 입증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경쟁이 저해되는 경우에도 전체적인 공익을 증진시킨다면 조건부로 승인 가능하다. 5인의 위원들이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FCC의 인수합병 심사는 종결되지 않으므로 DoJ에 비해 더 강력한 권한이 있으며, FCC는 심사를 지연하는 것만으로 인수합병을 저지할 수 있다. 그러나, FCC가 승인거부 권한을 실제로 행사한 적은 거의 없으며 Direct TV-Echostar 합병승인 거부 사례가 거의 유일하다.

한편, 경쟁저해성 판단에 있어서 DoJ와 FCC의 시각 차이가 존재할 수는 있는데, DoJ는 현재의 경쟁상황 보호에 관심이 있지만 FCC는 공익성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경쟁을 넓게 해석하기 때문에 미래의 잠재적 경쟁상황에 대한 평가를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인수합병 승인에 있어 DoJ는 구조적 해결방식을 추구하는 반면 FCC는 행위적 해결방식을 추구한다. 즉, FCC와 DoJ의 인수합병 심사는 규제목적 및 심사 기준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승인조건이 다르게 부과되는 것이 당연하며, FCC

가 승인한 최근 주요 인수합병 사례에서 승인조건으로 행위 관련 요건(Conduct-related Conditions)을 부여하였고 이통사 합병에서는 구조 요건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사업자가 FCC 승인결정을 수용하되 부과된 승인조건에 대해서만 항소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FCC 승인조건은 강력한 힘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96년 이전에는 FCC가 요금규제를 하였으므로 DoJ는 통신분야에 규제권한을 갖지 못하였으나 '96년 통신법에 의해 경쟁기반 규제체계가 도입된 이후에는 경쟁규제기관인 DoJ가 common carrier 관련 인수합병 및 요금 등에 대한 규제권한을 갖게 되었는데, 과거에는 요금의 상호보조, 약탈적 요금, 가격차별 등을 FCC가 다루었으나 이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2. Ofcom

### 가. 사후규제 집행업무 관련

Ofcom 예산 및 조직 관련하여 담당자는 아래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 Ofcom 2007/8년도 예산집행: 130백만 파운드(예산액: 150백만 파운드)
- 총 인원: 총 812명(2008년 3월말 기준)

Ofcom은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를 필두로, 정책집행부(Policy Executive), 운영집행부(Operations Executive) 등이 존재하며, 정책집행부 산하에는 다음의 기능담당 부서가 존재한다.

- 전략 및 시장개발(Strategic and Market Development)
- 경쟁(Competition)
- 콘텐츠 및 표준(Content & Standards)
- 주파수 정책 그룹(Spectrum Policy Group)

운영집행부 산하에는 다음의 기능담당 부서가 존재한다.

- 정보화사회(Information Society)
- 인력자원(Human Resources)

- 재정(Finance)
- 주파수 정책 그룹(Spectrum Policy Group)
- 운영(Operation) – Central, Field로 구분

Ofcom의 규제 실무를 담당하는 정책집행부(Policy Executive)는 정책이슈 전반을 관장하고, 콘텐츠위원회와/소비자위원단/기타자문위원회 등과 연락, 전략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담당하고 있다.

- 정책집행부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정책이슈에 대한 결정, 콘텐츠위원회와/소비자위원단/기타자문위원회 등과 연락, 전략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담당
- 전략 및 시장개발(Strategic & market development) 그룹, 경쟁 및 시장(competition & market) 그룹, 콘텐츠 및 표준(content & standards) 그룹으로 구성
- 경쟁 이슈와 콘텐츠 이슈가 상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경쟁 및 시장’ 그룹과 ‘콘텐츠 및 표준’ 그룹이 긴밀한 협의하고, 수장이 내부적으로 조정 역할 담당

#### 나. 사후규제 체계 관련

Ofcom은 방송통신 분야에 대해 경쟁법의 집행권한을 보유하고 경쟁규제기관인 OFT와 관할권 구분이 모호한 사안에 대해서는 concurrency agreement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고 있다.

이처럼 기관간 규제관할권 조정에 대해 제도적으로 잘 정비되어 분쟁발생의 소지가 적다. 다만 방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발생시 당연히 Ofcom이 규제권한을 가지나 실제 방송사업자에 대한 경쟁법적 사후규제 사안은 이슈화된 사례가 별로 없다.

Ofcom은 방송통신과 관련된 사업자 행위에 있어 반경쟁적 계약이나 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하여 경쟁법을 집행할 권한이 있으며 경쟁법 집행 권한은 Ofcom과 OFT가 동시에 보유하나 방송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대체로 Ofcom이 권한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경쟁법상의 concurrency 절차에 따르면, OFT가 특정 분야의 사건을 접수받은 경우 이를 일단 해당 규제기관에 통보하고 규제기관이 OFT보다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이 규제기관으로 이관되고 사건 신청자에게

이 사실이 통보된다.

Ofcom은 다른 기관들과 MOU 및 concurrency agreement on competition act를 맺고 있으며 OFT와 업무를 잘 조정, 처리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특정 사건에 대한 규제권한 배분이 모호한 경우, Ofcom과 OFT는 사안별로 서로 협의하여 어느 기관이 사건 조사 및 경쟁법 집행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고 설명하였는데, 예컨대 Ofcom이 이미 검토한 이슈라면 Ofcom이 수행하고 다른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면 OFT가 수행한다고 하였다. M&A의 경우에는 CC와 OFT가 관할하고 있으며 시장지배력 이슈는 Ofcom이 수행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방송시장의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Ofcom이 규제권한을 갖고 분쟁조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방송시장 경쟁저해 관련 규제이슈는 여태까지 쟁점화된 사례가 거의 없으며 대체로 콘텐츠 자체나 공영방송의 운영과 관련된 비경쟁 이슈들에 대해 Ofcom이 주로 개입하여 왔다고 설명하였다.

### 3. 미국 법무부(Do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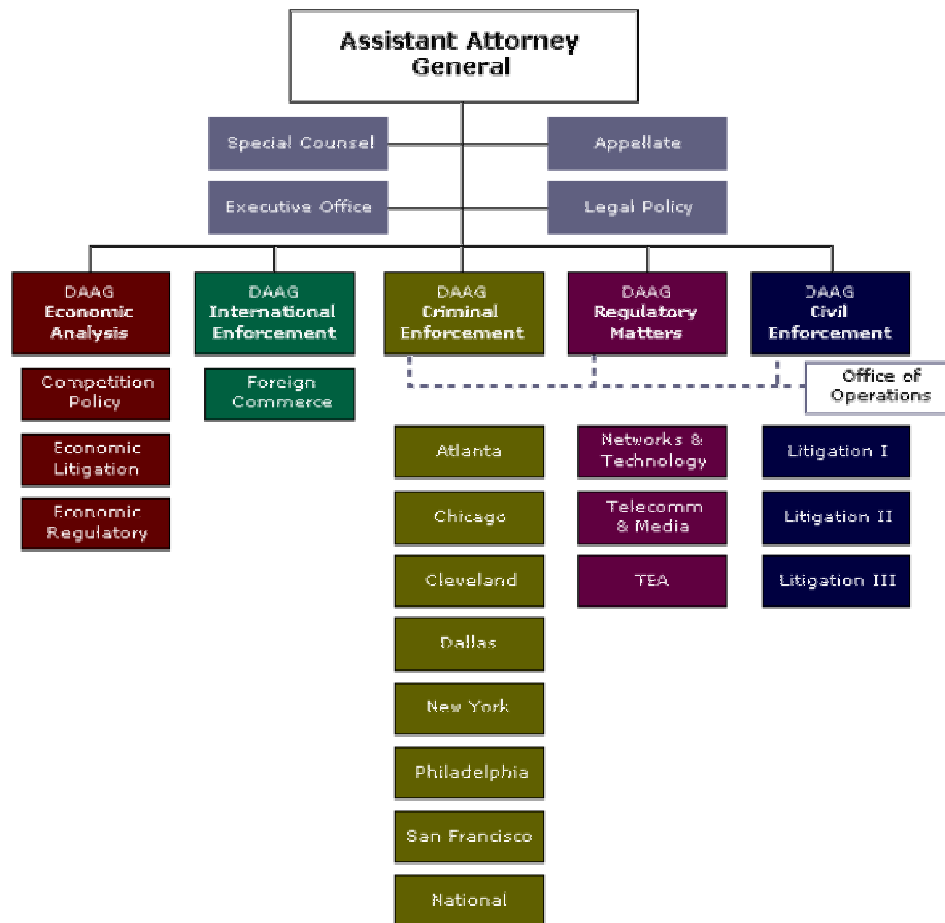
DoJ 반독점국 통신미디어팀 인터뷰를 하였으며 담당자는 아래와 같이 통신미디어팀의 업무를 소개하였다.

DoJ 통신미디어팀은 생긴지 얼마되지 않은 신설팀으로서 이전에는 커뮤니케이션 및 금융팀에서 컴퓨터, 통신, 소프트/하드웨어 등 모든 IT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곧 통신 및 컴퓨터로 업무를 분류, 각각 독립된 팀을 구성하였다.

DoJ 와 FTC와의 관계에 대하여 담당자인 Peter Gray는 아래에 본인의 의견을 소개하였다.

기본적으로 DoJ는 FCC와는 규제영역에 대한 다툼이 없으나 FTC(연방거래위원회)와는 다툼이 있다. FTC와 DoJ는 중복업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적 협의 후 업무를 추진하는데, 두 기관간의 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한 것은 없으며 업무 분장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2-1] DoJ 조직도



자료: DoJ 홈페이지

또한, 통신부문 사후규제정책 전반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규제정책의 집행은 정치적 영향을 받으며 집권당 및 대통령의 성향이 큰 변수로 작용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하는 경제학자와 변호사와의 긴장관계도 변수로 작용한다고 소개하였다.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객관적 상황을 조사하는데 목표를 두지만 변호사들은 규제집행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시장주의가 득세하며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더 반영

되며,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반대의 현상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DoJ 변호사 채용 또한 정치적 변수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데, DoJ는 상당한 punitive power, 즉 징벌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DoJ가 수행하는 조사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하였다.

DoJ의 정책적 방향에 대하여, 규제업무의 기본적 방향 및 업무량이 변하고 있는 바 점점 더 규제완화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FCC 및 DoJ의 기본 입장은 최소규제이지 규제집행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not aggressive in pursuing enforcement action”). 이에 대부분의 DoJ 케이스는 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DoJ 변호사 및 Attorney General은 정치적 고려 때문에 승소가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하지 않는다고 소개하였다.

DoJ 담당자는 FCC 담당자와 유사하게 인수합병 심사를 중심으로 DoJ와 FCC의 보완적 협력관계를 설명하였고 기본적으로 FCC의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규제영역을 상당히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다. DoJ는 미국내 정치적 환경에 따라 인수합병 심사 외에는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를 거의 집행하고 있지 않는다. Comcast의 P2P 방해행위에 대한 최근 FCC의 규제조치에 대해서는 FCC의 정책에 따른 규제영역임을 인정하고 DoJ의 개입 필요성이 없음을 밝혔다.

한편, DoJ는 Clayton Act 및 Hart-Scott-Rodino Act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인수합병에 대한 사전심사를 수행하는데, 96년 통신법 개정에 따른 통신시장 규제완화로 통신사업자 인수합병에 대한 DoJ의 규제기능이 강화되었음을 설명하였다. 합병심사시 FCC는 정보공개의무가 있음에 반해 DoJ는 비공개 하에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민원이 DoJ에 먼저 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DoJ와 당사자 간의 consultation이 상당히 많으나 DoJ가 공식적으로 케이스를 시작하는 것은 드문 현상이라고 설명하였다. DoJ는 30일간 1차 심사기간을 갖고 추가적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인수합병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외에도 담당자는 DoJ와 FCC와의 관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양 기관은 협력적 관계로서 상호보완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하였다. DoJ의 고유업무

인 시장 경쟁상황평가와 관련하여 FCC가 DoJ의 전문성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DoJ는 많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정보수집능력이 뛰어나 FCC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FCC는 방송통신 분야에 대해 상당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DoJ도 이를 인정할 뿐 아니라 FCC의 협력을 필요로 할 때가 많음을 시인하였다.

최근 Comcast의 P2P 트래픽 방해에 대한 FCC의 결정은 초고속인터넷 이용자의 이익저해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하면서, DoJ도 망중립성과 관련한 사업자행위가 경쟁저해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개입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Comcast 사례 역시 경쟁법 위반사항이 있다면 DoJ가 개입할 수도 있으나, 인수합병이 아닌 이러한 사건에서 실제 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였다. Comcast의 FCC 규제는 일단 FCC의 인터넷 정책에 근거한 조치로서 인정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DoJ의 개입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 제3 장 주요국 방송통신 규제기관 사후규제 제도

#### 제1 절 개 괄

주요국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국제협력 현황과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좀 더 심층적으로 이들 기관의 사후규제 관련 제도 및 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장에서는 FCC, Ofcom, BNetzA 등의 주요 규제기관 내부의 조직, 업무범위, 집행권한 및 절차에 대한 제도 분석을 한다. 미국은 집행국(Enforcement Bureau)의 주요 과(division)에서 집행 업무를 기능, 분야 별로 담당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조직 구성상 통합적인 특징으로 인해 기능 중심으로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정책집행부와 운영집행부가 있으나 이에 조직적으로 편제되어 있지 않고 기능상으로 집행팀(Enforcement Team)의 집행부서가 업무를 수행한다. 독일의 경우는 별도의 집행부서가 존재하지 않고 7개 규제부서 내에서 규제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표 3-1> 미국, 영국, 독일의 집행부서 업무 개괄

국가	주요 집행부서	해당 업무	본문 내 참고
미국	시장분쟁해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사업자 규정위반 조사</li> <li>- 민원제기 해결 및 중재 절차</li> </ul>	p.95, <표 3-13>
	통신소비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행태 조사 및 가이드라인 제시</li> <li>- 불공정마케팅 규제, 슬래밍 규제 등 통신이용자 보호</li> </ul>	p.105, <표 3-16>
	조사심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이슈, 외설 규제, 지역전화사업 경쟁 집행 등에 관한 업무</li> <li>- 사업자 규칙위반 조사 및 집행조치</li> <li>- 재판 지원 및 회계조사</li> </ul>	p.82, <표 3-8>
	주파수집행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인가 무면허 주파수 사용 규제 등 FCC 기술규정 위반 사안 처리</li> <li>- 면허권 이전 및 거래시 발행하는 허가 관여</li> </ul>	p.76

[그림 3-5],  
<표 3-6>,  
<표 3-7>,  
[그림 3-8]

국가	주요 집행부서	해당 업무	본문 내 참고
영국	주파수 집행팀	－ 라디오 주파수 스펙트럼 보호	pp.114~116
	방송게시판	－ 방송 관련 민원 해결 － 기업행태 조사 및 콘텐츠 표준팀 업무 기획	pp.114~116 [그림 3-16]
	경쟁 및 소비자 집행게시판	－ 사업자간 분쟁 해결 및 소비자 보호 － 경쟁그룹조사팀 업무 기획	pp.114~116
독일	통신경제규제부	－ 통신시장감독, 효율제안 검토, 시장획정 및 시장 분석	p.144
	통신법규 및 주파수규제부	－ 반경쟁행위 감독, 분쟁해결위원회, 주파수 활용 관련 국제업무, 방송위성 서비스 담당	p.144 <표 3-29>

미국, 영국, 독일의 집행업무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2절(FCC), 제3절(Ofcom), 제4절(BNetzA)에 설명되어 있다.

## 제2 절 미 국(FCC)

### 1. FCC 조직, 예산 및 인적 구성

#### 가. FCC 개요

역사적으로 민간기업(Western Union, Bell Telephone Company, AT&T, Westinghouse, GE등)의 주도하에 통신 및 방송 시장의 성장을 겪은 미국은 정부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거나 관여하기 보다는 규제기관을 통해 시장에 개입한다는 시장경제 선호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 1934년 이전까지 미국의 통신규제권한은 주간통상위원회(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 ICC, 유선통신), 연방무선위원회(Federal Radio Commission: FRC, 무선통신 및 방송)에 의해서 이원화되었으나, 이원화된 분리규제 방식이 산업의 효과적 규제에 한계를 노출하고 분산되어 있는 규제기능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수요가 생기면서 강력한 행정부를 지향하던 뉴딜시대의 정부기구개편의 일환으로 FCC로 통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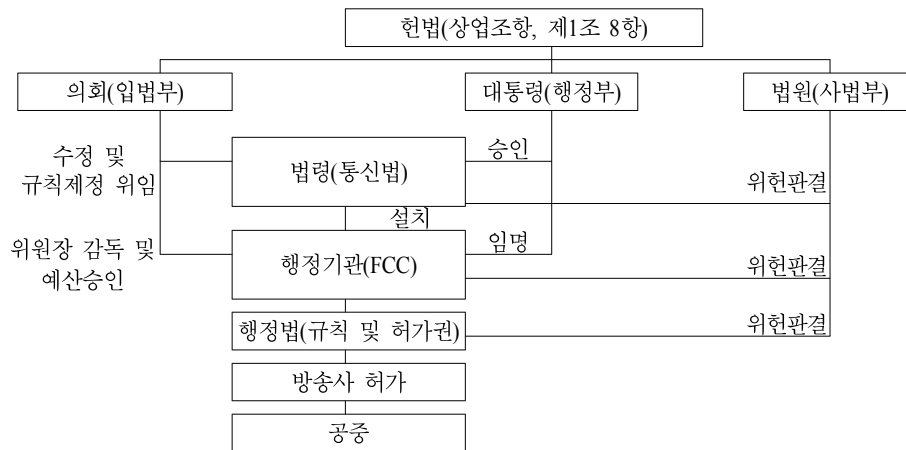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범국가적이고 범세계적인 유무선 통신 업무를 가능한 전미국민이 손쉽게 적절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간(州間) 또는 외국과의 상거래를 조정하기 위하여, 국가방위를 위하여,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전 법률에 의해 몇몇 기관에 허가된 권한을 집중하고 주간 및 외국과의 상거래에 관련된 추가 권한을 부여하여 이 정책의 더욱 효과적인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를 설립하며, 본 위원회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조직되어 이 법의 집행임무를 부여받는다.

— 미국 통신법(Communications Act) 제1편 1조

미국 FCC는 1934년 제정된 통신법 제1편(Title I)에 근거하고 있다. 미국 헌법 제1조 8항은 의회에 “외국 및 주간(州間) 상거래를 규제할 권한(power to regulate commerce with foreign nations and among other the several states)”을 부여하였는데, 의회에서는 당시 새로이 시작되고 있던 방송, 통신 모두를 전파(유무선 포함)를 이용한 상거래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이 상업조항(commerce clause)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통신 산업영역을 전문적으로 규제 감독할 ‘독립규제기관’이 필요하게 되었고, 기존의 무선 커뮤니케이션 법(Radio Act)을 확대 개편한 통신법에 FCC 설치를 명문화하여 그 권한을 위임하였다. 즉, FCC는 헌법에 근거하고 의회에 직접 책임이 있는 독립규제위원회(행정, 입법, 사법적 권한을 함께 독자적으로 행사하며 이러한 규제권한의 행사에 대해 행정부, 의회, 사법부가 직접적인 통제를 가하지는 못하는 규제기관)이며, 통신 분야의 행정적, 준입법적, 준사법적 권한을 행사한다.<sup>5)</sup>

- 5) 독립규제위원회의 위원들은 일반적으로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특정산업 또는 사안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며 의회에 직접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일반 행정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독립규제위원회는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 권한 즉 허가와 요율결정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정책결정절차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준입법적 권한, 개개사건의 위반여부결정과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다. 최초의 독립규제위원회는 1887년 철도산업의 규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이며 그후 계속적으로 독과점규제, 특정산업의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를 위해 다수의 독립

[그림 3-1] FCC 설치 및 권한의 법적 근거



자료: Head, Spann, & McGregor(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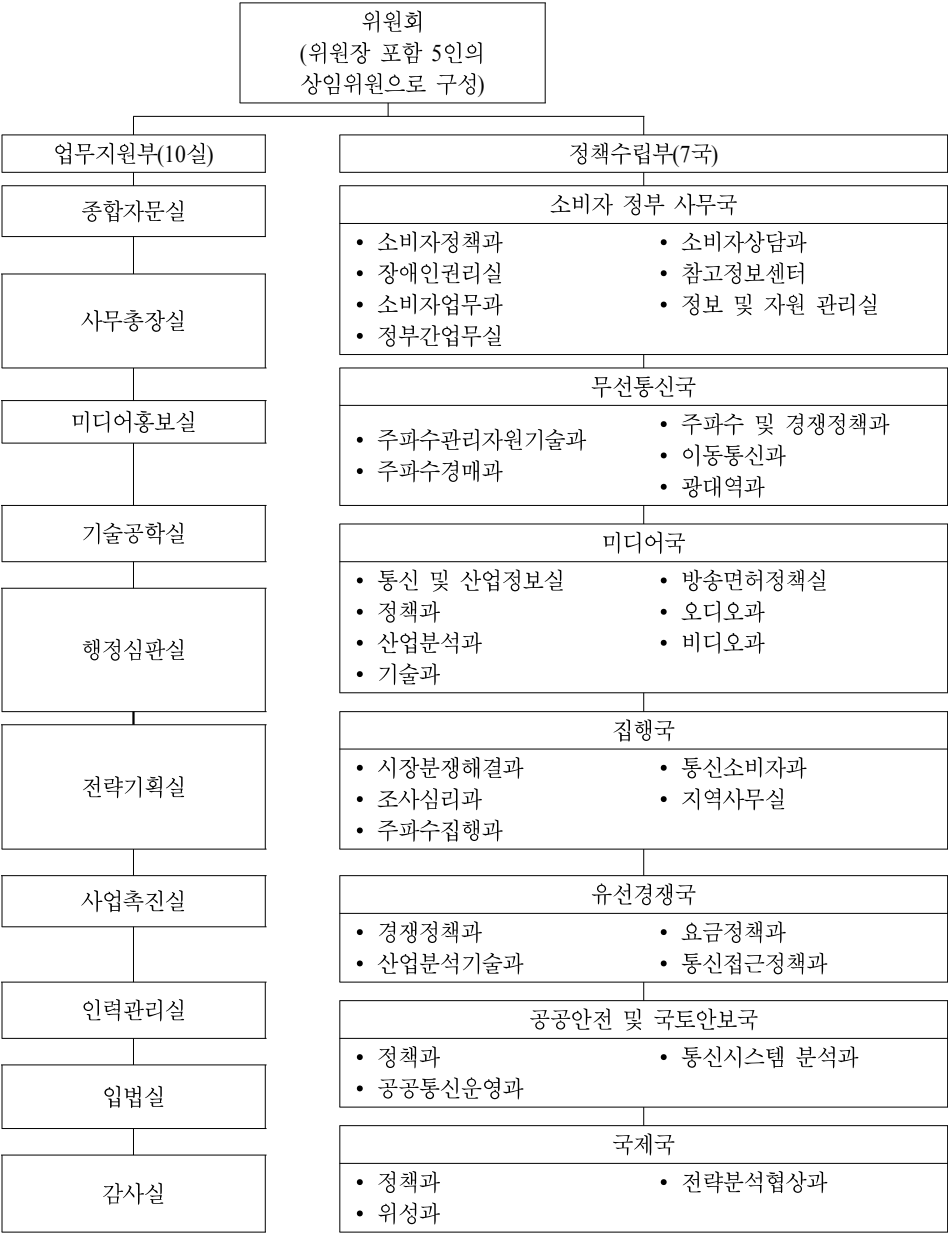
&lt;표 3-2&gt; FCC의 규제권한

구 분	주요 권한
행정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법의 집행, 해석 및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li> <li>- 면허 발급, 갱신, 요금 및 접속료 규제, 주파수 관리</li> <li>- 통신 및 방송 독점 규제, 인수합병 승인, 방송프로그램규제</li> <li>- 유선통신 서비스 정책 및 규제</li> <li>- 무선통신 서비스 정책 및 규제</li> <li>- 공중파 및 위성방송 정책 및 규제</li> <li>- 통신법 준수여부 확인 및 통신규제관련 정보제공</li> <li>- 국제통신 및 위성 관련 정책 및 규제</li> </ul>
준입법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CC의 결정(Report and Order, Rule and Regulation) 고시</li> <li>- FCC 법규를 해석한 정책보고서 발행</li> <li>- 통신법에서 위임된 통신방송 관련 규칙 제정 및 개정</li> </ul>
준사법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령 및 법규의 이행여부 조사 및 청문회 개최</li> <li>- 통신법규 위반에 대한 적법절차(통지·청문·결정)을 통해 제재조치</li> </ul>

규제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독립규제위원회는 전통적인 정부의 3권의 외부에 있다는 점에서 모든 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보호와 성원을 기대할 수 없으며 도리어 모든 기관이 이 독립규제위원회의 행동에 간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 FCC 조직

[그림 3-2] FCC 조직



2008년 현재, 최고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 산하에 “7국 10실”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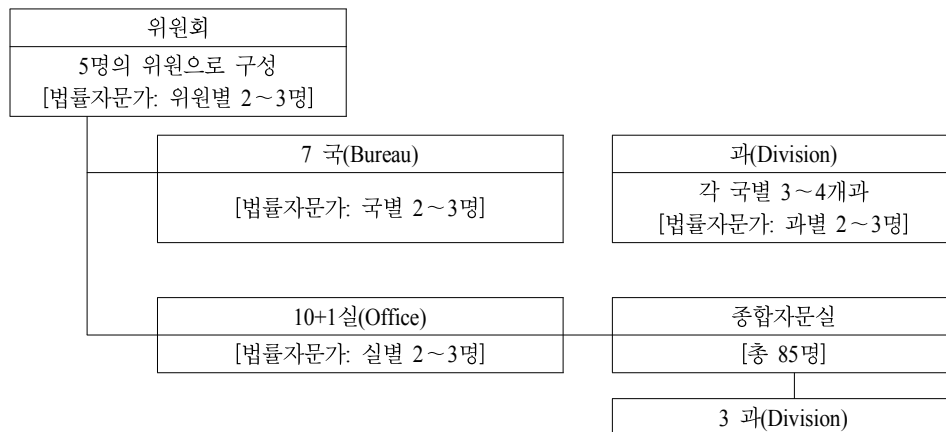
#### 다. FCC 예산

FCC는 연방의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며, FCC 예산은 매년 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FCC는 2008년도 예산으로 의회에 \$313,000,000을 요청하였으며, 이는 FCC의 전략목표 달성과 소비자의 디지털 TV전환관련 교육, 보편적 서비스 펀드감독 강화, 공공 매체의 모던화 등에 책정되었다. FCC는 2009년도 예산으로 전해 보다 증가된 \$338,874,783을 요청한 상태이며,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TV전환 및 소비자 보호강화, 핵심 라이선싱 시스템의 비용 절감, 효율성 증진, 위원회의 재무·회계 프로세스 감독 및 관리 강화, 내부감사 및 감사시스템 강화 등의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라. FCC 인적 구성

2008년 5월 현재 1,79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중 1/4이상인 510명은 변호사(attorney)이다. 변호사들은 대부분의 정책입안과정 및 문서 검토과정에 참여하여 FCC의 결정이 통신법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한다.

[그림 3-3] FCC 조직별 변호사 현황



이외에도 공학자(engineer) 273명, 경제학자 56명이 근무 중이며, FCC 조직 전체에 걸쳐서 경제학자를 배치하고 있다.

수석 경제학자는 전략기획실(Office of Strategic Planning and Policy)에 배치되어 있고, 개별 정책수립부서마다 수석 경제학자를 보유하고 있다. 변호사, 공학자, 경제학자 외에도 물리학자(physical scientist), 통신전문가(telecommunications specialist)와 같은 분야별 전문가가 있으며 정책수립부서의 개별과에 배치되어있다.

## 2. FCC 업무 범위, 내용 및 규제권한

### 가. FCC 미션

FCC는 다음의 4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첫째, 무선과 유선 통신에 있어서 주와 주간(州間) 또는 외국과의 상업 활동을 규제하고, 둘째, 모든 국민들에게 적절한 시설과 합리적인 요금 체계로 신속하고 능률적인 전국 및 국제적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며, 셋째, 유무선 통신의 활동을 통하여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증진하고, 다섯째, 중앙화된 권한에 의하여 상기 정책목표에 대한 집행효과를 제고한다.

### 나. FCC 업무 범위 및 내용

#### (1) 위원회(Commission)

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원의 인준을 거쳐 5명의 위원들(동일 정당에 속하는 위원은 3명 이내)중 1인을 대통령이 위원장(chairman)으로 지명 결정한다.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지고 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매년 위원 1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의회 및 타정부기관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Bureau Chief와 Office Chief를 임명하고, 일반적으로 기관의 업무를 조율하는 방식으로 FCC의 최고임원의 직책을 수행한다.

위원회(staff)는 위원장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법적 검토 및 자료 분석을 책임지고 있으며, 위원장은 8명의 staff 지원을 받는 한편 나머지 위원

들은 4~5명의 staff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표 3-3> 위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Office Staff 구성

소 속	직 위	담당업무
Chairman Kevin J. Martin (8명)	Chief of Staff	
	Senior Legal Advisor	Media Issues
	Legal Advisor	Wireline Issues
	Legal Advisor	Wireless and International Issues
	Administrative Officer	
	Confidential Assistant	
	Staff Assistants(2명)	
Commissioner Michael J Copps (5명)	Senior Legal Advisor	Media Advisor
	Legal Advisor	Competition and Universal Service
	Legal Advisor	Wireless and International Issues
	Confidential Assistant	
	Staff Assistant	
Commissioner Jonathan S. Adelstein (5명)	Senior Legal Advisor	Wireline Issues
	Legal Advisor	Media Issues
	Legal Advisor	Spectrum and International Issues
	Staff Assistant	
	Special Assistant	
	Confidential Assistant and Director of Outreach	
Commissioner Deborah Taylor Tate (4명)	Legal Advisor	
	Legal Advisor	
	Confidential Assistant	
	Staff Assistant	
Commissioner Robert M. McDowell (5명)	Chief of Staff and Senior Legal Advisor	Wireless and International
	Special Counsel	Wireline Issues
	Legal Advisor	Media Issues
	Deputy Chief of Staff	
	Staff Assistant	

자료: 권오상(2008)

주로 합의제로 수행되는 위원회의 업무는 비록 몇몇 정책결정 권한이 chief나 전문 staff에게 위임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모든 정책문제에 관하여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다.

위원회의(Board of Commissioners)에는 적어도 3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하여야 공식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sup>6)</sup> 회의의 의안은 위원장이 결정하고, 위원장은 의안의 목록을 적어도 일주일 전에 각 위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들은 각 위원들이 갖추고 있는 참모진의 도움을 받아 정보를 수집하고 의제항목을 평가함으로써 회의를 준비한다.

통상적으로 회의의 심리에는 당해 의안을 준비하는데 개입한 FCC 직원들이 참석하여 발언하며 위원들에게는 그러한 발언에 대해 질문할 기회가 주어지고, 그 문제에 관한 최종적인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공개토론을 한다.

연방회의공개법(Sunshine Act)<sup>7)</sup> 하에서, 위원회의 공식회의는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특정 의사결정은 공식적인 회의가 아닌 다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예컨대, 사고 내지 켄위로 인하여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위원장은 현직 위원들 가운데 활동 가능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주요 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의사정족수는 반드시 채워져야 한다. 특정유형의 청문 등과 같은

---

6) 최소한의 인원을 Quorum이라고 한다. Quorum은 위원회 정책입안 의사결정이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투표 혹은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최소 위원의 숫자를 말한다. 통신법은 FCC의 quorum을 세 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Conference call이나 다른 전자적인(electronic) 수단으로 참석하는 위원도 quorum에 포함할 수 있다. 참석한 위원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quorum은 유효하다.

7) Sunshine Notice “Commission Meeting Agenda”라는 제목이 부여된 Public Notice는 공개 혹은 비공개 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7일 전에 배포하여, 회의 날짜와 시간, 안건을 알려야 한다. Sun-shine Notice가 공개된 후 Federal Register로 인쇄된다.

Sunshine Period 위원회의 규칙으로 규정된 Sunshine Period는 안건을 Sunshine Agenda에 공지하였을 때부터, 안건이 정책으로 입안되었거나, 해당 안건이 Sunshine Agenda에서 삭제 또는 추가 검토를 위해 담당 직원에게 되돌아갔다는 것을 알리는 Public Notice가 배포되었을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Sunshine Period 동안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presentation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몇몇 사소한 문제들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각 위원들이 처리하며, 몇몇 경우, 위원회사무는 “회람(circulation)<sup>8)</sup>”이라 불리는 과정을 통해 수행된다. 이것은 문서나 의안이 위원들 사이에서 회람되고 그에 대한 승인 내지 거부가 공식적인 회의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별도의 투표에 의하는 것을 뜻한다.

## (2) 정책수립부서

FCC의 정책수립부(Policymaking Bureaus)는 총 7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에 각 국별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다.

### ① 미디어국(Media Bureau)

미디어국은 기존의 케이블서비스국(Cable Service Bureau)과 대중매체국(Mass Media Bureau)이 통합되어 탄생한 부서로서, 기본적으로 케이블방송, 지상파방송 그리고 라디오방송을 포함하는 모든 미디어서비스에 관한 정책과 면허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미디어국은 다채널방송배급(MVPD) 서비스와 직접위성방송(DBS) 서비스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여타의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미디어국의 주요 업무로는 AM, FM, 텔레비전, 중계유선방송과 같은 미디어서비스와 관련된 법률 입안, 행정상의 소원 해결 및 조정, 서비스 승인, 할당, 양도 등이 있다.

미디어국은 국장실을 비롯한 방송면허정책실(Office of Broadcast License Policy), 커뮤니케이션산업정보실(Office of Communications & Industry Information)과 오디오과(Audio Division), 비디오과(Video Division), 정책과(Policy Division), 산업분석과(Industry Analysis Division), 기술과(Engineering Division)로 구성되어 있다. 미디어국에는 FCC의 다른 국장급 간부보다 많은 4명의 보좌관과 3명의 부국장, 그리고 5명의 고문(Chief Economist, Chief Engineer, Legal Advisor, Special Advisor for Media Ownership, Media Relations Director)을 국장실에 두어 정책수립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오디오과(Audio Division), 정책과(Policy Division), 산업분석과(Industry Analysis Division)에도

8) Circulation은 agenda item을 공개 혹은 비공개 회의를 거쳐 토론하지 않고, 투표(notation votng)를 위해 위원들에게 전달되는 절차를 말한다. 투표는 일반적으로 위원 각자의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

자체고문이 있다. ‘Annual Assessment of the Status of Competition in the Market for the Delivery of Video Programming’이라는 보고서를 11년째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 ② 유선경쟁국(Wireline Competition Bureau)

기존 기간통신사업국(Common Carrier Bureau)의 새 이름으로 무선통신서비스를 제외한 공중통신매체와 보조적 산업에 대한 준칙제정, 권리포기청원 해결 및 조정, 전송채 관세법의 결정, 사업허가권신청의 처리, 지역교환 전화회사의 회계관련 의사사항을 집행하고, 전화회사의 사업활동을 심사하며, 보고관련 업무를 관리한다.

유선경쟁국의 업무 목적은 첫째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둘째 시장간, 사업간 진입장벽을 축소하며, 셋째 보편적서비스의 보장을 강화하며, 넷째 진보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입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위부서로 행정실(Administrative and Management Office)과 경쟁정책과(Competition Policy Division), 산업분석기술과(Industry Analysis and Technology Division), 가격정책과(Pricing Policy Division), 텔레커뮤니케이션 접근정책과(Telecommunications Access Policy Division)가 있다.

#### ③ 소비자 정부 사무국(Consumer and Governmental Affairs Bureau)

소비자정부사무국은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향상 도모와 다른 정부 기관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임무를 하고 있으며, 입법 및 공중,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정부 등의 다른 정부기관과의 상관업무를 담당하고, 소비자 및 장애인을 위한 통신권고위원회와 지역정부 및 주정부 권고위원회를 감독한다. 또한 청각, 시각장애인의 커뮤니케이션 기회제공을 위한 보조업무도 겸한다.

주요 하위부서로서 정보접근 및 사생활보호과(Information Access & Privacy Office), 소비자상담과(Consumer Inquiries & complaints Division), 소비자정책과(Consumer Policy Division), 장애인권리실(Disability Rights), 소비자업무과(Consumer Affairs & Outreach Division), 정부간업무실(Office of Intergovernmental Affairs), 참고정보센터(Reference Information Center) 등이 있다.

#### ④ 무선통신국(Wireless Communications Bureau)

FCC의 모든 국내무선 프로그램의 허가, 집행, 규제정책을 담당한다. 위성통신이

나 방송을 제외한 휴대폰, 호출기 등의 개인통신서비스와 기타 상업적 사적 무선서비스를 감독한다. 교육방송고정서비스(ITFS)와 다중배급서비스, 다채널다중배급서비스 등과 관련된 모든 규제 문제, 특히 서비스 업체들의 각종 면허권과 법적 사항에 대한 규제업무를 담당하며 1993년 발효된 포괄적 예산조정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에 의해 주파수 경매와 입찰을 담당한다.

국장실과 그에 부속된 참모진(Management and Resources Staff)을 두고 있으며, 주파수경매과(Auctions & Spectrum Access Division), 광대역과(Broadband Division), 이동통신과(Mobility Division), 공공안전 및 핵심시설과(Public Safety & Critical Infrastructure Division), 주파수 및 경쟁정책과(Spectrum & Competition Policy Division), 주파수관리자원기술과(Spectrum Management Resources & Technologies Division)로 구성되어있다.

#### ⑤ 집행국(Enforcement Bureau)

통신법과 위원회가 제정한 규칙, 명령을 시행하는 부서로서, 집행국은 소비자 보호, 지역경쟁, 공공의 안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법령과 규칙을 강제한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집행국은 국장실(Office of the Bureau Chief), 시장분쟁해결과(Market Disputes Resolution Division), 조사심리과(Investigations & Hearings Division), 주파수집행과(Spectrum Enforcement Division), 통신소비자과(Telecommunications Consumers Division), 3개의 지역사무실(Regional & Field Offices: 서부 지역, 남부 지역, 북동지역)로 구성되어있다.

#### ⑥ 국제국(International Bureau)

국제국은 국제 차원에서의 통신정책과 주파수에 관련된 입법 기능을 재정립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해외의 방송통신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포럼에서 미국의 정책을 알리고 국제적 규제논의를 주도한다. 국제국에는 국장실과 더불어 정책과(Policy Division), 위성과(Satellite Division), 전략분석협상과(Strategic Analysis and Negotiations Division)가 있다.

#### ⑦ 공공안전 및 국토안보국(Public Safety and Homeland Security Bureau)

9.11사태 이후 생겨난 부서로서 미국 국토내 안보 및 공공안전과 관련된 모든 방

송통신 정책을 담당한다. 911 긴급호출 서비스 정책, 사용자 정보의 공개 및 도청 이슈, 재난시 통신 대책, 방송통신 네트워크 안보 문제 등 공공안전과 안보와 연관되는 모든 FCC 정책 사안에 참여한다.

### (3) 업무지원실 업무 범위 및 내용

정책 부서의 업무를 지원 및 위원회의 정책, 절차, 그리고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11개(10개 + 비서실)의 업무지원실들이 존재한다. 이 중 대표적인 지원실은 종합법무실과 행정심판관실이다. 아래에 간단히 설명하였다.

#### ① 종합법무실(The Office of General Counsel)

위원회 및 각 국, 실에 대한 총괄 법률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소송문제에 관한 자문 및 법정에서 위원회를 대표하며, 입법에 대한 공식견해를 제출한다. 또한 국제 관련 법률 및 국제 협약의 유권해석을 담당하고, 각종 계약, 청원 및 내부적으로 야기되는 법률문제에 대한 판단을 한다. FCC 내 가장 많은 수의 변호사를 두고 있다.

#### ② 행정심판관실(Office of Administrative Law Judges)

FCC를 대표하여 연방법원 소송 시 소송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며, 연방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sup>9)</sup>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하여 FCC에 접수된 행정처분 관련 요청에 대해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중간 판결 역할을 수행한다.

### 다. FCC 규칙제정 절차

FCC의 규칙 제정 절차(Rulemaking Process)는 보통 연방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의 3가지 경우에 시작된다.

- 의무적 제정(Mandatory Trigger): 의회가 새로운 법을 제정 또는 기존 법을 변경할 경우 이에 부합되는 신규 규정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

9) APA(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연방행정절차법), 행정입법 제정절차(Rulemaking: 시행령, 규칙, 고시 등 제정)와 행정처분 발급절차(Adjudication: 허가, 과태료 부과 등)로 구분. 연방행정절차법(APA)에 따라 FCC는 행정법 판사를 두고 있음

- 선택적 제정(Optional Trigger): FCC에 대한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는 의회는 사안에 따라 FCC에 특정 사안에 대한 규제정책의 집행을 제의 또는 요청 할 수 있으며, FCC는 독립 규제기구이지만 의회를 비롯하여 대통령,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또는 기관(자문위원회, 산하기관 등)의 제언에 응하고 있다. 한편 FCC는 이러한 요청과 상관없이 새로운 규정을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다.
- 청원에 의한 규칙 제정(Petition for Rulemaking); 이해당사자들은 언제든지 FCC에 신규 규칙제정을 청원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들의 공식적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 전달되며, 접수 내용은 FCC 웹사이트 및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실린다. 이후 해당 부서에서 접수된 청원서를 검토한 후 청원을 거절할 경우 Memorandum Opinion and Order(MO&O)를 통해 공표하고, 기존 규정의 변경을 요하는 청원인 경우 Report and Order(R&O)를 통해 공표한다. 만약, 청원 내용이 신규 규정이 요구되는 사안인 경우, 공식적 규칙 제정 절차에 들어간다.

FCC 규칙 제정 절차는 기본적으로 3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의견수렴 단계

특정사안에 대한 규정의 변경 또는 신설을 예고하는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을 고지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보다 더 일반적 의견 및 제언을 구할 경우 Notice of Inquiry(NOI)<sup>10)</sup>로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슈를 제기하고 의견을 구한다. NOI 및 NPRM의 요약문은 연방관보에 실리게 되어 이해당사자 및 일반대중들이 FCC 규칙제정 절차의 초기 단계부터 사안의 파악이 가능하다.

NPRM은 새롭게 제정될 예정으로 있는 FCC의 규칙을 고지하는 역할을 한다. 최종 결정된 규칙은 아니며, FCC가 제안하는 형식이므로 관련사업자나 각 이해당사자는 발표된 NPRM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NPRM을 통해 수집된 의견 중

10) NOI는 주요 이슈는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질문사항들이 모호한 경우에 주로 이용하는 절차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Order가 나오기 위한 규칙 제정 절차의 운영 전략으로 이해 가능할 것이다.

새로이 제기된 이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Further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FNPRM)을 통해 이미 제기된 이슈 이외의 새로운 이슈에 대한 추가적 의견수렴 기회를 제공한다.

## (2) 규칙 제정 단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및 요청에 대하여 FCC가 기각 또는 거부 입장을 표명하고 자 할 경우 MO&O를 통해서 입장을 공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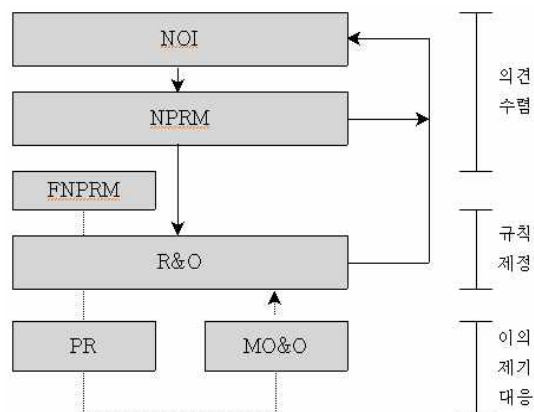
기존 규칙의 변경 또는 신설이 있는 경우 이를 R&O를 통해서 공표한다. R&O에는 그동안 수집된 의견과 자료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FCC의 결정 및 결정사유, 향후 규제방향을 수록한다.

FCC는 필요한 경우 특정사안의 세부 주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R&O를 공표하기도 한다. 각 R&O에는 FCC의 결정에 대한 사유 및 입장이 사안별로 정리되어 있다. 이는 FCC 결정 과정이 연방행정절차법에 부합되고 “자의적이거나 일관성이 없는” 결정이 되지 않기 위함이다.

## (3) 이의제기에 대한 대응

이해당사자들이 R&O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 연방관보에 R&O가 등록된 날로부

[그림 3-4] FCC의 의사결정절차



&lt;표 3-4&gt; FCC 의사결정절차와 설명

절 차	내 용
(a) PN(Public Notice) 혹은 NOI(Notice of Inquiry)	FCC는 특정 주제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거나, 구체적 정책이슈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Public Notice를 발표. PN은 위원회나 Bureau, Office에 의하여 대중에게 기존에 행하여진 정책이나 앞으로 하게 될 일들을 알리는 역할 수행 NOI는 단순하게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나, 혹은 정해진 주제에 대한 의견을 필요할 때 혹은 FCC Rule로 해결하고자 의도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자 할 때 발표함. NOI는 FCC Commissioner의 명령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외부의 요청에 의해서도 작성
(b) NPRM(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OI(또는 Public Notice)를 통해서 관련사업자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검토한 이후 FCC는 NPRM을 준비하여 발표. NPRM은 FCC Order에 대해서 변경을 제안하거나 혹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새로운 의견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FCC는 NOI를 통해서 제기된 이슈를 NPRM으로 정리하고 이와 동시에 제기된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NOI의 작성을 명령할 수도 있음. NPRM은 FCC Rule의 변경을 제안할 때 발표됨
(c) FNPRM(Further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을 통해서 수집된 관련 사업자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검토한 이후, 이들 의견 중 새로이 제기된 이슈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FNPRM을 준비하여 발표. 따라서, FNPRM은 NOI와 NPRM을 통해서 제기된 이슈들 이외의 새로운 이슈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수렴의 기회를 제공. FNPRM은 위원회에 제안된 건의사항들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대중으로부터 더 많은 자료를 얻기 위해 시행됨
(d) R&O(Report and Order)	NOI, NPRM, FNPRM을 통해서 수집된 관련사업자와 각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검토한 이후, FCC는 Report and Order를 준비하고 발표. Report and Order를 통해서 FCC는 새로운 규제방향을 도입하거나, 혹은 기존 규제방향을 그대로 고수한다는 입장을 밝힐 수도 있음. R&O를 통해서 FCC는 새로운 이슈에 대한 NOI의 작성을 요구할 수도 있음. 따라서, 기존 Rule을 개정하거나, 삽입하거나, 개정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하는 등의 rule making 과정에서 발표되는 것으로 2차, 3차, 4차의 R&O도 가능
(e) PR(Petition for Reconsideration)	이해당사자는 R&O에서 결정된 사항에 반론이 있는 경우, Federal Red연방 관보에 R&O가 등록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f) MO&O(Memorandum Opinion and Order)	MO&O는 Rulemaking 절차에 대한 청원을 거부하거나, decision을 변경하기 위해, 또는 재고려 청원을 승인, 거부하기 위해, 또는 decision에 대한 review를 거부하기 위해 시행됨.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MO&O가 발표될 수도 있으며, 이때는 Order on Reconsideration 혹은 Order on Review 등 다른 적합한 제목이 사용될 수도 있음

터 3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FCC는 이해당사자들의 청원을 거부하거나 결정을 변경하기 위해, 또는 재고려 청원을 승인, 거부하기 위해, 또는 결정에 대한 심사를 거부하기 위하여 MO&O를 발표한다. MO&O는 Order on Reconsideration 또는 Order on Review 등 다른 적합한 제목을 사용하기도 한다.

#### 라. FCC의 조사·분쟁해결 및 중재 기능

##### (1) FCC가 직접 개시하는 조사(FCC initiated investigation)

FCC는 통신법 제403조에 의하여 통신법 또는 FCC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폭넓은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FCC는 조사 방법과 기간 뿐 아니라 조사 여부와 조사 대상을 결정할 재량권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조사는 대부분 집행국에서 담당하는데, 집행국은 조사를 실시할 때 해당 기업에 질의서, 문서 제출 요청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집행국이 요청하는 질의서는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하는 심문 조서 형태일 수도 있다.

정보 수집 절차가 끝나면 FCC는 추후 진행 방식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하며, 사건의 실체가 법률 위반 가능성을 보이는 경우 다양한 집행 조치를 개시할 수 있으며, 보통 과징금 추징의 형태를 취한다. 극단적인 경우 집행국은 연방 통신 위원회에 면허 또는 인가 취소를 위한 공청회 개시를 권고할 수도 있다.

##### (2) 분쟁 해결(dispute resolution)

FCC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소하는 일이며, 통신법 제208조에 의거하여 누구든 일반 통신 사업자(유선, 무선 또는 국제선)를 대상으로 해당 통신 사업자가 통신법 또는 FCC 규정을 위배했다는 혐의로 공식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제208조 절차는 본문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FCC 집행국하의 시장분쟁해결과는 통신법 제208조에 의거 제기된 공식 민원만 취급한다. 기타 민원은 소비자정부사무국에서 다룬다.

##### (3) 중재(Mediation)

FCC가 선호하는 분쟁해소 방식은 당사자간 조정방식이다. 이를 위하여 FCC는 이행당

사자들의 분쟁사항을 조정하거나 의견 차이를 좁히는 중재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다. 집행국의 시장분쟁해결과는 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사자들은 분쟁 해소책에 집중하고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으로 불필요하게 자원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 FCC에 의하면 이러한 중재노력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 왔다고 하며 실제로 공식 민원이 제기되기 이전에 상당 수의 분쟁사항은 FCC의 중재로 종결된다.

#### 마. FCC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연방행정절차법하에서, 통신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FCC의 결정, 즉 Order<sup>11)</sup>에 불복하여 연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FCC Order에 대한 불복은 즉시 콜롬비아 순회지방법원 항소부(U.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에 배정된다. FCC Order를 제소한 당사자는 그가 Order로 인해 어떤 측면에서는 법적 불이익을 받았다는 뜻에서 원고적격을 갖추어야 하며, 원고가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법적 구제를 보장받지는 못한다. 제소 당사자는 FCC가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고, 적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관련사실을 제대로 참작하지 않았거나, 무관한 사실을 참작하였거나,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FCC 규칙을 파기하는 사법판결은 FCC로 하여금 사건 진행을 중단하고 법원의 명령을 충족하도록 규칙을 개정할 것을 명령한다.

### 3. 사후규제 관련 집행국 법적 권한

#### 가. FCC 집행국 개요

FCC의 7개 정책부서 중 하나인 집행국은 2000년에 새로 설립된 부서로서 이전에 산재되던 통신법의 집행관련 업무를 한곳에 모은 부서이다. 구체적으로 통신법과 위원회가 제정한 규칙, 명령, 조건 등의 집행 담당하는 부서이며, 크게 소비자 보호, 지역경쟁,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과 규칙을 강제한다.

11) Order는 기간연장 승인·거부, 규칙 제정 청원 기각, NPRM 없는 규칙 제정, 기타 위원회 활동이나 대리권한 이행시 작성된 규칙이다.

&lt;표 3-5&gt; 집행국의 주요 업무

- 
- ① 공익의 보호(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 ② 경쟁활성화를 위한 공정한 경쟁환경 유지(Level Playing Field to Promote Robust Competition)
  - ③ 공중파의 책임있고 효율적 활용(Efficient and Responsible Use of Public Airwaves)
  - ④ 경쟁환경하의 소비자 권익 보호(Consumer Protection in a Competitive Landscap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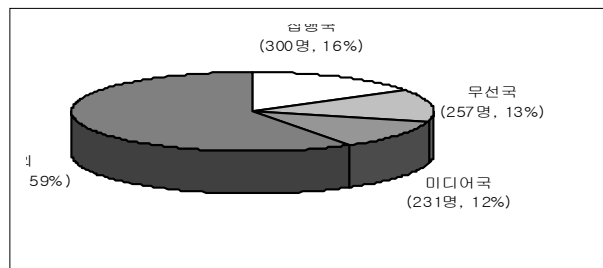
자료: 집행국 2006년 연차 보고서 발표자료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집행국은 국장실(Office of the Bureau Chief) 이하 4개의 과가 있으며(시장분쟁해결과, 조사심리과, 주파수집행과 및 통신소비자) 이외에 3개의 지역에 대표사무실을 두고 있다.

[그림 3-5] FCC 집행국 조직도



[그림 3-6] FCC 인력배치 현황(2008년 기준)



자료: FCC, FY 2009 Budget Estimates(Submitted to Congress; Feb.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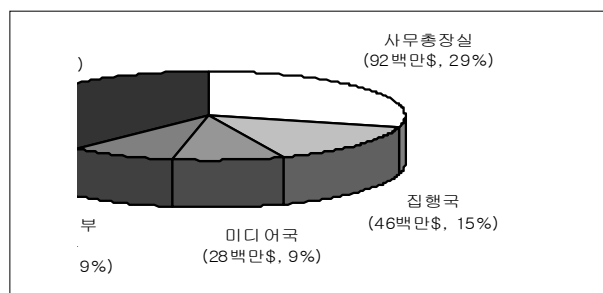
2008년 현재 집행국은 300여명의 정규직 인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FCC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으로 총 인원의 15.6%를 차지한다. 집행국의 대부분 인력은 조사심리과 및 통신소비자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약 45%가 변호사이다.

<표 3-6> 집행국의 각 과별 인력 배치 현황

부 서		인원(명)	비 고
집행국		313	312 + 비서
	조사심리과	55	50%가 변호사
	통신소비자과	53	40%가 변호사
	시장분쟁해결과	11	
	주파수과	24	
	총괄업무과	34	50%가 행정업무 담당
	지역사무실	135	

의회에 제출한 세출예산(appropriation cong. budget) 자료를 기준으로 집행국은 FCC 총 세출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사무총장실(Office of Managing Director)에 이어 FCC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그림 3-7] FCC 세출예산 현황(2008년 기준)



자료: FCC, FY 2009 Budget Estimates(Submitted to Congress; Feb. 2008)

실무집행을 담당하는 정책수립부를 기준으로 고려하면 집행국은 FCC에서 규모가 가장 큰 부서라 말할 수 있다.<sup>12)</sup>

#### 나. 집행국 업무

집행국은 음란, 외설, 불경 등 콘텐츠의 건전성 규제, 방송 규제, 통신소비자 보호, 고객전용망 보호, 장애인 정책, DTV 정책의 집행, 긴급경보시스템 관련 규정 마련, 장비 마케팅 위법행위 규제, 공공안전집행, 기술규정 위반 규제, 관로 접근권 집행, 보편적 서비스 기금 집행, 공청회 주최 및 지역사무소 운영 등 다양한 범주의 업무를 하고 있다. 아래 표에 집행국 업무를 요약·정리 하였으며, 각 업무의 세부내용은 이후에 기술하였다.

<표 3-7> 집행국 업무

집행국 담당 업무	내 용
음란, 외설, 불경 규제	－ 음란한 프로그램 방송은 연방법 위반이며, 외설 및 불경한 프로그램 또한, 일정한 시간에 방송하면 연방법 위반이기 때문에 FCC는 본건에 대한 집행(사건처리, 민원 접수, 벌금 부과 등)을 진행
방 송	－ 조사심리과: 방송의 비 기술적 이슈(음란물, 방송조작, licensee-conducted contests, 전화통화의 방송 등)에 대한 민원 및 집행 담당 － 주파수 집행과: 방송의 기술적 이슈(인터페이스, 과부하, 공사, 라디오 주파수 간섭, 면허국 범위 외 운영, 방송면허 미소지자의 운영 등)에 대한 민원 처리
통신소비자	－ 소비자를 위하여, 기업들의 행위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 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한 조치를 취함

12) 그런데, FCC가 2008년 2월에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소비자정부사무국과 관련하여 전년대비 약 170%를 인상한 44,981천달러를 요청하였으며, 이는 집행국의 예산안 46,385천 달러를 이어 정책수립부 중 2번째로 규모가 큰 액수이다. 다른 국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이 책정된 것을 감안하면, FCC 업무 중 소비자 정부사무국 업무가 크게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집행국 담당 업무	내 용
고객전용망 보호	－ 사용 중이거나 공개된 CPNI에 접속을 원하는 통신사업자 또는 상호접속한 VoIP제공자는 중앙 보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
장애인 이슈 및 응답	－ 미국 장애인들에게 TRS 등 이용 가능한 통신을 확보
DTV 집행	－ 소비자를 부적절한 TV장비의 구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DTV 관련 집행
긴급경보시스템 규정	－ 국가적 위급상황 시 미국 공중에게 방송 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통신권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경고 시스템으로 서비스제공자가 시스템 제공 의무를 지님
장비 마케팅 위법행위	－ 47 U.S.C. §302(b)에 의해 규정에 맞지 않는 기기, 가정용 전기 기기 시스템 등의 제조, 수입, 판매 등을 금지
지역 사무소 및 현장 사무소	－ 민원에 대처하고 연방 통신 위원회(FCC)의 사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현장 조사 및 검사 업무를 취급
공청회	－ 적절한 상황에서 면허 또는 기타 인가를 취소(47 U.S.C. §312) 하거나 갱신하지 않기(47 U.S.C. §309(k))로 결정
지역 전화사업 경쟁 집행	－ 특정 회사 또는 기업군이 통신법이나 FCC 규정을 위반하는지 조사 － 중재나 분쟁 해소 또는 공식 FCC 결정으로 이어지는 공식 분쟁을 통해 업계 참여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소하는 일
관로 접근권 집행	－ 분쟁 중재, 주의 인증, 관로 사용료 산출
공공안전집행	－ 파수 집행 분과는 지역 사무소 및 현장 사무소와 연계하여 안테나 구조물 등록, 조명 및 표기, 무선 911 및 첨단 911, 무선 주파수(“RF”) 안전 집행 그리고 공공 안전 교란 등 공공 안전 집행에 관한 사안을 처리
기술 규정 위반	－ 주파수 집행 분과는 지역 사무소 및 현장 사무소와 연계하여 무면허 사업 그리고 비인가 장소 또는 주파수 사용, FCC 규정 또는 기지국 인가 조건을 위반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간섭 현상, 과도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 그리고 안테나 구조 위반 등 FCC 기술 규정을 위반한 사안을 처리
보편적 서비스 기금 집행	－ 독자적 조사, 통신사업자의 법률 준수 여부 감사, 위반자 영업 정지 및 영업 금지 그리고 운용 면허 취소 공청회 등의 수단을 통해 통신법 제254조 및 FCC 관련 규정 위반자들을 적극적으로 추적
무선 911 및 E911 위반	－ 무선 통신 사업자가 첨단 911(“E911”) 서비스를 배치하도록 의무화

### (1) 음담, 외설, 불경(Obscenity, Indecency and Profanity)에 대한 규제

음란한 프로그램 방송은 연방법 위반이며, 외설 및 불경한 프로그램 또한 일정한 시간에 방송하면 연방법 위반이며, FCC는 의회를 통해 이러한 방송에 대한 행정적 법 집행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집행국은 연방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민사제재금(Civil monetary penalty)을 발행하거나, 면허 취소 또는 면허 갱신 거부를 할 권한을 보유하며, 법률 위반자에게는 형사적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부여된다.

### (2) 방송 이슈

집행국내 방송이슈와 관련하여 2개의 부서가 활동고 있으며, 조사심리과는 방송의 비기술적 이슈(음란물, 방송조작, 방송면허 소지자의 비기술적법위반행위, 전화 통화의 방송 등)에 대한 민원 및 통신법 위반의 규제집행을 담당한다. 주파수 집행과는 방송의 기술적 이슈(인터페이스, 과부하, 공사, 라디오 주파수 간섭, 면허국 범위 외 운영, 방송면허 미소지자의 운영 등)에 대한 민원 처리를 담당한다. 25개의 현장 사무소(Field Offices)를 통해 방송 기기 조사 및 감독을 수행한다.

### (3) 통신소비자 이슈(Telecommunications Consumers Division)

집행국은 통신 소비자를 위하여 기업들의 행위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 되도록 다양한 방법(기업 행위의 변화, 기업에게 가이드를 제공하는 정책선언문(Policy Statement), 특정 행위에 대한 對기업 벌금 및 형벌 등)을 통한 조치를 취한다. 주요 업무로 통신사업자들의 불공정 마케팅, 부당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 긴급전화 서비스 제공 실패, 사생활 침해, 통신사업자의 민원 무대응 문제 등을 다룬다.

### (4) 전용망(Customer Proprietary Network Information, CPNI)의 관리

사용 중이거나 공개된 CPNI에 접속을 원하는 통신사업자 또는 상호접속한 VoIP 제공자는 중앙 보고 시스템(<https://www.cpnireporting.gov>)을 통하여 미국비밀수사국 및 FBI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5) 장애인 정책

FCC는 통신법 제255조에 의해 미국 장애인들에게 TRS등 이용 가능한 통신을 확

보해주고 있으며, 동 법은 통신서비스 장비 사업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장애인이 접속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집행국은 동법에 불응하는 사업자에게는 벌금, 주문 정지, 설비 개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TRS: Telecommunications Relay Services의 약자로, 청각 및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임

#### (6) DTV 정책

FCC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TV전환을 위하여 DTV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DTV 정책에 의해 2009년 2월 17일을 시점으로 전국에 디지털 시그널만 전송될 예정이며 이후 안테나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디지털 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별도의 장비(셋톱박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집행국은 통합 디지털 튜너(integrated digital tuners)를 포함하지 않은 TV 수신기의 수입 금지, TV 수신기에 디지털신호 수신 가능여부에 대한 라벨표시 의무, 디지털 TV 수신기의 V-Chip 기능 보유 의무를 집행하고 있다.

#### (7) 긴급방송 정책

미국 연방고시 47 FCC 규정 Part 11에 의하면 방송사업자, 케이블TV시스템, 무선 케이블시스템, 위성 디지털 음성 라디오 서비스제공자 및 DBS 서비스제공자는 국가적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 대중에게 방송할 수 있는 경고 시스템(Emergency Alert System, EAS)을 제공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FCC는 EAS 시행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고 있다. EAS를 위한 기술표준 확립을 위한 법규 규정, EAS 시행시 따라야 하는 절차 규정, EAS 테스트 프로토콜 등을 규정하며, EAS 관련 산업계의 국가 및 지방차원의 계획이 FCC EAS 법규 및 규칙에 부합하도록 규제한다.

#### (8) 장비 마케팅 위반 문제

집행국은 통신법 제302조(2)에 의해 규정에 맞지 않는 기기, 가정용 전기기기 시스템 등의 제조, 수입,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주파수 집행과는 장비 허가 및 기술적 요건에 반하는 라디오 주파수 장비의 수입 및 마케팅에 대한 민원 해결을 담당하고 있다.

#### (9) 지역 및 현장 사무소 운영

집행국의 지역 및 현장 사무소는 민원에 대처하고 FCC의 사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현장 조사 및 검사 업무 취급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현장 인력은 통신법 제301조에 위배되는 비인가 사업이 있는지 검사하며, 무선 시설, 케이블 시스템 및 안테나 구조물을 현장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관련 FCC 규정 준수 여부를 판정한다. 현장 인력은 기타 국과 실의 조사 업무 뿐 아니라 집행국 내 기타 분과를 지원한다.

#### (10) 지역전화서비스 경쟁정책의 집행

지역전화 서비스 경쟁정책의 집행은 FCC 집행국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이다. 다만, 1996년 통신법 개정 및 경쟁친화적 정책의 집행으로 지역전화서비스 시장의 경쟁은 이미 정착되었으며, FCC 규제정책의 초점은 입법 보다는 시행 및 분쟁 해소로 옮겨가고 있다. 집행국의 지역 전화사업 경쟁 집행 조치는 주로 통신법 제271조(BOC의 지역간 서비스 진입에 대한 규정)의 집행, 통신사업자의 합병조건 준수, 설비병설 요건 준수 문제 등을 다룬다.

#### (11) 관로접근권

FCC는 통신법 제224조에 의하여 설비의 전주, 덕트, 관로 등 문제와 관련하여 케이블 TV 시스템 또는 원격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설비에 부과된 요율, 약정을 규제하여 해당 요율과 약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임을 보장하고 설비의 전주, 덕트, 관 및 관로권 접근에 차별 요소가 없도록 보장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집행국은 이에 관로 접근권과 관련한 인증, 관로 사용료 산출 문제 등을 다룬다.

#### (12) 공공안전집행

집행국내 주파수과는 지역 및 현장 사무소와 연계하여 안테나 구조물 등록, 조명 및 표기, 무선 911 및 첨단 911, 무선 주파수(RF) 안전 집행 그리고 공공 안전 교란 등 공공 안전 집행에 관한 사안을 처리할 책임을 지고 있다.

#### (13) 기술 규정 위반 문제

집행국내 주파수과는 지역 사무소 및 현장 사무소와 연계하여 무면허 사업 그리

고 비인가 장소 또는 주파수 사용, FCC 규정 또는 기지국 인가 조건을 위반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간섭 현상, 과도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 그리고 안테나 구조 위반 등 FCC 기술 규정을 위반한 사안을 처리할 책임을 지고 있다. 주파수과는 통신법 제 301조에 의해 면허권의 이전 및 거래시 발행하는 FCC 허가에도 관여한다.

#### (14) 보편적 서비스 기금 집행

집행국은 보편적 서비스 지원 메카니즘의 무결성을 보전하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집행국은 독자적 조사, 통신사업자의 법률 준수 여부 감사, 위반자 영업 정지 및 영업 금지 그리고 운용 면허 취소 공청회 등의 수단을 통해 통신법 제254조 및 FCC 관련 규정 위반자들에 대한 집행조치를 취한다.

#### 다. 집행국의 핵심 업무과

집행국의 핵심 업무는 조사심리과, 분쟁해결과, 통신소비자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아래에서 이들 부서의 업무 내역을 더 자세히 분석한다.

[그림 3-8] 집행국의 핵심 업무부서

Investigations & hearing Division	Market Disputes Resolution Division	Telecommunications Consumers Division
조사심리과	분쟁해결과	통신소비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 규칙위반 조사/집행 조치</li> <li>• 공식청문회 절차관련 재판 지원</li> <li>• 회계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소 해결</li> <li>• 중재 절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행태 조사/가이드라인 제시</li> <li>• 소비자 보호</li> </ul>

#### (1) 조사 심리과(Investigations & Hearings Division)

조사심리과는 집행국내에서 통신소비자과에 이어 가장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이다. 최근 들어서 통신부문의 규제집행은 감소되는 추세이나, 외설 규제 등 방송 및 콘텐츠 관련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조사심리와 업무는 크게 5개 분야로 구별된다. 첫째, 통신법 Title II 기간사업자 (common carrier)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의무의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적절한 집행 조치를 취한다. 둘째, 방송 관련사항 및 기타 Title III 허가사업자의 민원을 해결한다. 셋째, 연방행정절차법(5 U.S.C. §556)에 의거하여 FCC 공식 청문회(심리)절차 관련 재판 및 관련 업무에 대하여 지원한다. 넷째, 보편적 서비스 요건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집행조치를 취한다. 마지막으로 일반 사업자의 회계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조사심리과의 주요 업무는 아래 박스에 정리되어 있으며, 이중 핵심 업무 위주로 소개한다.

<표 3-8> 조사심리과 주요업무

주요 업무 내용	근거 주요 통신법(핵심법령만 기재)	공 통
① 지역전화사업 경쟁 집행(Local Telephone Competition Enforcement)	제251조(상호접속), 제252조(협정의 협상, 재정 승인), 제256조(상호접속을 위한 조정)	제403조 (조사권한)
② 통신법 제271조 집행권 (Section 271 Enforcement)	제271조(BOC의 LATA간 진입 등) 등 통신법 PART III	
③ 면허 취소(Revocations)	제312조(행정제제), 제309조(허가의 형식과 조건), 제310조(허가의 보유·이전의 제한)	
④ 일반 통신 사업자 합병 조건 준수(Compliance with Common Carrier Merger Conditions)	제252조(협정의 협상 재정 승인), 제214조(회선연장 승인), 제310조(허가의 보유이전의 제한)	
⑤ 보편적 서비스 기금 집행 (Universal Service Fund Enforcement)	제254조(보편적 서비스)	
⑥ 외설, 선정성, 저속한 언어에 대한 규제	제326조(저속한 언어 검열), 제222조(이용자정보 보호), 제223조(음란협박성 전화) 등, 그 외 18 U.S.C. 제1464조, 수정헌법 제1조도 적용	
⑦ 방송이슈	제507조, 제508조, 제509조, 제301조, 제399조 등	

## ① 지역 전화사업 경쟁 집행

FCC는 통신법 제403조에 의해 FCC “법규정의 집행에 관한 어떠한 사건이나 사안에 대하여서도 언제든지 스스로 조사 할 권한을 가진다.” 즉, FCC는 어떠한 사안을 조사할지, 조사 방법 및 조사 기간을 자발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정책적 유연성을 보유하고 있다. 집행국의 조사심리과는 제403조의 이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조사 절차는 보고서 앞부분에 기술한 FCC 규칙제정 및 조사 절차를 따른다.

지역경쟁(local competition) 집행 정책은 FCC가 1996년 통신법의 개정 이후 공정 경쟁 활성화 및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핵심 업무 중 하나이다. 다만, 지역 전화사업자간 시장 경쟁의 요건은 충분히 마련되었기 때문에 경쟁 집행 관련 업무는 줄었으나 분쟁해결 및 기타 법집행 업무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아래 표를 보면, 지역 전화사업자간 상호접속 관련 분쟁은 일어나고 있으나 그 빈도는 낮은 편이며 그나마 2004년 이후로는 발생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상호접속 관련 분쟁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간 분쟁이 FCC의 공식 분쟁해결/조정 절차까지 다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자간 분쟁 및 분쟁해결절차는 통신법 제208조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동 업무는 후술할 집행국의 시장분쟁해결과(Market Dispute Resolution Division)에서 다루고 있다.

&lt;표 3-9&gt; 미 통신법 제251조 및 제252조 관련 결정

날짜	제소자	피제소자 또는 피고	내용
05-04-2004	CoreComm Communications, Inc., and Z-Tel Communications, Inc.	SBC Communications Inc., Pacific Bell Telephone Company, et al.	이전 결정에 대한 재고청원 거부
04-21-2004	Starpower Communications, LLC	Verizon South Inc.	벌금
03-12-2004		Qwest Corporation	벌금
11-07-2003	Starpower Communications, LLC	Verizon South Inc.	벌금

날짜	제소자	피제소자 또는 피고	내용
04-23-2003	Core Communications, Inc.	Verizon Maryland Inc.	위반여부 및 관할권 재확인
04-17-2003	CoreComm Communications, Inc., and Z-Tel Communications, Inc.	SBC Communications Inc., Southwestern Bell Telephone Company, Pacific Bell Telephone Company, Nevada Bell Telephone Company, The Southern New England Telephone Company, Illinois Bell Telephone Company, Indiana Bell Telephone Company, Michigan Bell Telephone Company, The Ohio Bell Telephone Company, and Wisconsin Bell, Inc.	위반여부 재확인
10-09-2002		SBC Communications, Inc.	벌금
07-24-2002		Qwest Communications International, Inc.	합의판결(conse nt decree)
05-28-2002		SBC Communications, Inc.	합의판결
05-10-2002		Cox Virginia Telcom, Inc. v. Verizon South Inc.	위반여부 확인
04-08-2002	Starpower Communications, LLC,	Verizon South Inc.; Starpower Communi- cations, LLC, v. Verizon Virginia Inc.	위반여부 확인
02-28-2002	Global NAPs, Inc.	Verizon Communications, Verizon New England, Inc., and Verizon Virginia, Inc.	위반여부 확인
02-25-2002		SBC Communications Inc.	벌금
09-14-2001		Verizon Communications, Inc.	합의판결
02-16-2001	AT&T Corp. v. US West Communi- cations, Inc.; MCI Telecommuni- cations Corporation	US West Communications, Inc.	위반여부 확인
11-02-2000		BellSouth Corporation	합의판결

날짜	제소자	피제소자 또는 피고	내용
11-02-2000		BellSouth Corporation	합의판결
10-19-2000	MCI Telecommunications Corp.	Illinois, Indiana, Michigan & Ohio Bell Telephone Companies & Wisconsin Bell Inc. d/b/a Ameritech Operating Companies & Ameritech Communications, Inc.	위반여부 확인
08-01-2000		GTE Service Corporation	합의판결
08-01-2000		GTE Service Corporation	합의판결
03-09-2000		Bell Atlantic-New York	합의판결

&lt;표 3-10&gt; 미 통신법 제271조 및 제272조 관련

날짜	제소자	피제소자 또는 피고	내용
07-27-2004		Verizon Telephone Companies, Inc.	합의판결
06-29-2004		Qwest Communications International Inc.	Public Notice Seeking Comment
05-28-2004		Qwest Communications International Inc.	합의판결
03-25-2004		BellSouth Telecommunications, Inc.	벌금
10-01-2003		SBC Communications Inc.	합의판결
09-08-2003		Verizon Telephone Companies, Inc.	벌금
07-17-2003		BellSouth Corporation	합의판결
05-07-2003		Qwest Communications International Inc.	합의판결
04-23-2003	Core Communications, Inc.	Verizon Maryland Inc.	위반여부 및 관할권 재확인

날짜	제소자	피제소자 또는 피고	내용
04-17-2003	CoreComm Communications, Inc., and Z-Tel Communications, Inc.	SBC Communications Inc., Southwestern Bell Telephone Company, Pacific Bell Telephone Company, Nevada Bell Telephone Company, The Southern New England Telephone Company, Illinois Bell Telephone Company, Indiana Bell Telephone Company, Michigan Bell Telephone Company, The Ohio Bell Telephone Company, and Wisconsin Bell, Inc.	위반여부 재확인
03-04-2003		Verizon Telephone Companies	합의판결
03-04-2003		Verizon Telephone Companies	합의판결
10-09-2002		SBC Communications, Inc.	벌금
08-20-2002		Verizon Communications Inc.	합의판결
08-20-2002		Verizon Communications Inc.	합의판결
05-28-2002		SBC Communications, Inc.	합의판결
02-25-2002		SBC Communications Inc.	벌금
02-16-2001	Bell Atlantic-New York AT&T Corp.	U S West Communications, Inc.	위반여부 확인
	MCI Telecommunications Corporation	U S West Communications, Inc.	
10-19-2000	MCI Telecommunications Corp.	Illinois, Indiana, Michigan & Ohio Bell Telephone Companies & Wisconsin Bell Inc. d/b/a Ameritech Operating Companies & Ameritech Communications, Inc.	위반여부 확인
03-09-2000		Bell Atlantic-New York	합의판결

## ② 통신법 제271조의 집행권

1934년 통신법 제271조(d)와 개정 1996년 통신법은 FCC에게서 관할 지역(home region)에 대한 장거리 전화 서비스 사업 승인을 받은 Bell 사업자(Bell Operating Company, BOC)<sup>13)</sup>가 지속적으로 제271조의 시장 개방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권한을 FCC 집행 당국에 허용하고 있다. FCC는 해당 BOC가 “당해 승인 건에 필요한 조건 중 일부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 승인 이후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단지 문서 집행일 수도 있는 “공청회 고지(notice and an opportunity for hearing)” 이후 FCC는 (i) BOC에 결함 교정 명령서를 발급하고 (ii) Title V에 의거 해당 BOC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iii) BOC가 지닌 제271조상의 권한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미통신법 제271조는 BOC의 장거리 전화 서비스 제공 권한 전체를 취소할 수 있는 여러 권한을 FCC에 부여하였다. 특히 제271조(d)는 FCC에게 여러 집행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제271조(d)(6)(A)(iii)에서는 해당 BOC에 장거리 전화 서비스에 대해 추가 가입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장거리 전화 서비스 마케팅 및 홍보를 금지하는 “영업정지(stand-still)” 명령을 내릴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제271조(d)(6)(A)(ii)에 따라 FCC는 징계 명령(NAL)을 내려 제503조(b)에 근거, 미 준수 BOC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FCC는 법률 미준수 BOC에 대해 제271조(d)(6)(A)(i)에 준하여 제반 결함 교정을 요청하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또한 FCC는 법률 미준수 BOC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 경쟁사업자들이 제기한 공식 민

13) RBOC은 1983년 12월 31일에 미국 연방 법원 명령에 따라 AT&T(벨 시스템이라고도 알려져 있다)가 해체되면서 생겨난 미국 각 지역의 전화회사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원래의 지역 벨 운영회사들은 Ameritech, Bell Atlantic, BellSouth, NYNEX, Pacific Bell, Southwestern Bell, 그리고 US WEST 등 일곱 개였으며, 이 각각의 회사들은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벨 운영회사를 소유하고 있었다. AT&T가 장거리 전화 서비스권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BOC들에게는 시내 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가 주어졌다. RBOC과 산하의 BOC들은 LEC 등급의 전화회사에 속하는데, RBOC 외에도, LEC로 분류된 100개 이상의 또 다른 지역 독점 전화회사들이 있다

원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주장이 확인된 경우 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1934년 법 제206조-209조에 의거한 권한을 비롯하여 기존 권한 집행권을 보유하고 있다. FCC는 제271조(d)(6)(B)에 준하여 제271조 위반을 타당하게 주장하는 공식 민원을 90일 이내에 검토해야 한다.

※ 제271조 준수 여부 평가 프로그램 및 절차

1934년 통신법은 BOC에게 장거리 전화서비스 제공 권한을 주었으나 동시에 FCC에게 사업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지 심사/평가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였다. 통신법 제271조는 아래의 절차에 의해 집행되어 진다.

1) 제271조 준수여부 평가팀 구성

－ 제271조 신청건 접수

－ 제271조 신청 건 접수 후 집행국의 조사심리과는 소속 변호사, 감사자 그리고 기타 전문인력이 준수 평가팀을 구성한다. 준수 평가팀의 감독 책임은 BOC 지역에 따라 구분되며 전담 그룹이 각 지역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된다.

2) 사업자 자료 접수 및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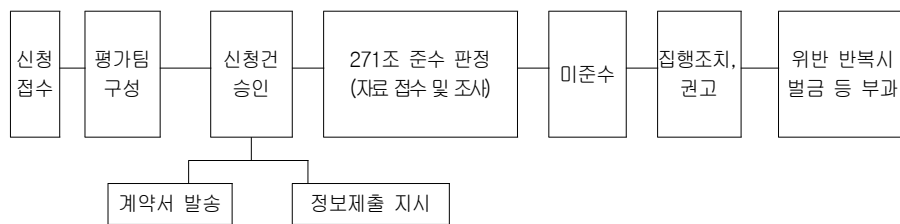
－ FCC의 제271조 신청 건 승인에 이어 준수 평가팀은 BOC의 사업 실적 자료와 기타 관련 정보를 세밀히 조사하여 해당 증빙을 통해 볼 때 해당 BOC가 제271조 조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판정하게 된다. 이 절차에는 승인 후 6개월차와 12개월차의 정기 준수 평가가 포함되며 BOC 제271조 권한 허여 명령을 통해 FCC가 제기한 특정 사안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평가팀원들은 또한 제271조 미준수 인지 사례를 비공식적으로 보고하고자 하는 주 위원회, 경쟁 통신 사업자 기타 이해당사자들에게 1차 접촉 창구(POE)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팀이 특정 BOC가 법률을 준수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경우 조사를 개시하여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적절한 집행 조치를 취하거나 권고하게 된다.

3) 준수 여부의 공개

－ 현재 진행 중인 개별 준수 평가 건 시작 시점에 평가팀은 해당 BOC에 제271조 준수 평가 절차를 설명하고 평가팀이 감시할 구체적인 준수 영역 점검목록을 강조한 계약서(engagement letter)를 발송한다. 평가팀은 FCC의 사업 허가 후 약 6개월과 12개월에 집행국에 이 분야와 관련된 정보를 제출하도록 BOC에 지시할 수 있다. BOC가 제출한 이 문서들은 평가팀이 해당 BOC가 제271조 승인 조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계약서에는 평가 대상 분야가 다수 명시되어 있지만 평가팀은 자체 관찰 또는 주 규제자, 경쟁 사업자 등등과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BOC의 법률준수 노력을 평가하기도 한다. 제271조 준수 평가팀은 이 계약서를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림 3-9] 미 통신법 제271조 준수평가 절차



### ③ 면허 취소

1934년 통신법 그리고 그 개정 조항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는 적절한 상황에서 면허 또는 기타 인가를 취소(통신법 제312조)하거나 갱신하지 않기(통신법 제309조 (k))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연방 통신위원회는 행정법 판결(ALJ) 이전에 사건의 실체를 기술하고 공청회에 맞추어 사건에 대해 판정하는 사전결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청회 동안 면허 사업자와 집행국은 면허 사업자의 면허 유지 적합성을 다룬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공청회 결과에 따라 행정법 판사(ALJ)는 소송 본안(merit)에 대한 결정서를 발급하는데 면허 사업자는 이에 대해 전원 출석 위원회(Full Commission)에 항소할 수 있다.

### ④ 보편적 서비스 기금 집행

통신법 제254조에 근거하여 FCC는 보편적 서비스 기금의 집행관련 독립적 조사, 기간사업자의 의무 수행여부 감독, 규정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공청회 개최 등 업무를 수행한다.

### ⑤ 일반 통신 사업자 합병 조건 준수

FCC가 Bell Atlantic 對 GTE(현재의 Verizon), USWest 對 Qwest, 그리고 SBC 對

Ameritech를 비롯한 전화 서비스 운용사의 여러 합병 건을 승인할 당시 FCC는 해당 통신 사업자들이 지역 시장에서 경쟁을 장려하는 조건 부과에 동의한 후에 승인하였다. 집행국의 합병 준수 감독팀은 일반 통신 사업자가 이 합의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한다. 이 팀의 책임으로는 주 위원회, 경쟁 사업자 그리고 미준수 개연성 있는 사례에 대해 보고하고자 하는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1차 접촉 창구(POE) 역할도 포함되어 있다. 이 비공식 절차는 FCC가 관련 당사자들이 분쟁을 신속히 해소하는 일을 돕는다. 마지막으로 이 팀은 또한 조건 미준수 행위에 대해 적절한 강제 집행을 권고한다. 사업자의 합병 승인은 통신법 제 310조(d), 214조등의 무선국 면허의 이전 관련 규정도 적용받는다. FCC 무선국 면허의 이전 승인 없이 사업가간 합병은 이루어질 수 없다.

#### ⑥ 외설, 선정성, 저속한 언어에 대한 규제

외설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일 및 저속한 언어를 방영하는 일은 연방법 위반이다. 의회는 FCC에 이 법률을 행정적으로 집행할 책임을 부여하였으며 방송국이 외설적, 선정적이거나 저속한 방송내용을 방송할 경우 FCC는 방송국 면허를 취소하고 벌금을 부과거나 경고를 내릴 수 있다. 외설 방송내용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지 않으며 시간대를 막론하고 방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방송내용이 외설 판정을 받으려면 아래 기술된 세 개의 검증테스트(three-pronged test)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 공동체적 기준을 적용하여 일반인이 해당 방송내용이 전체적으로 음란한 관심에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
- 방송내용이 저속한 방식으로 관련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구체적인 성적 행위를 묘사 또는 기술하고 있음이 분명한 경우
- 방송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지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 가치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FCC 홈페이지 참조)

외설 및 선정성 규제 근거법으로는 18 U.S.C. 제1464조, 통신법 제326조, 수정헌법 제1조 등이 있다. 18 U.S.C. 제1464조는 라디오 통신을 이용한 “외설적, 선정적 또는 저속한 언어”의 발화(utterance)를 금지하고 있다. FCC 규정은 후속 성문법 및 법원

판례에 부합하여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선정적 방송내용 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FCC 결정 또한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저속한 내용의 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상기 요건에 대한 민사 집행 권한은 FCC에 있으며 이는 FCC의 전반적 책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동시에 FCC는 FCC가 프로그램 내용을 검열하거나 방송업자의 언론 자유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수정 헌법 제1조 및 통신법 제326조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외설, 선정성, 저속한 언어 규제 관련 민원 절차

FCC가 밝히고 있는 외설 등 규제관련 민원 절차는 다음의 과정을 거친다.

① 민원 접수

FCC는 일반 대중에게서 접수한 외설적, 선정적 또는 저속한 방송에 대한 민원에 대응한다. 민원은 일반 우편, 전자우편, 팩시밀리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접수되며, 소비자 정부사무국 및 집행국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그 민원이 기록(log)된다. 직원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민원 이력을 추적하고 민원 검토를 담당하는 이들 사이에 민원 정보를 공유한다.

② 민원 채택 또는 기각 및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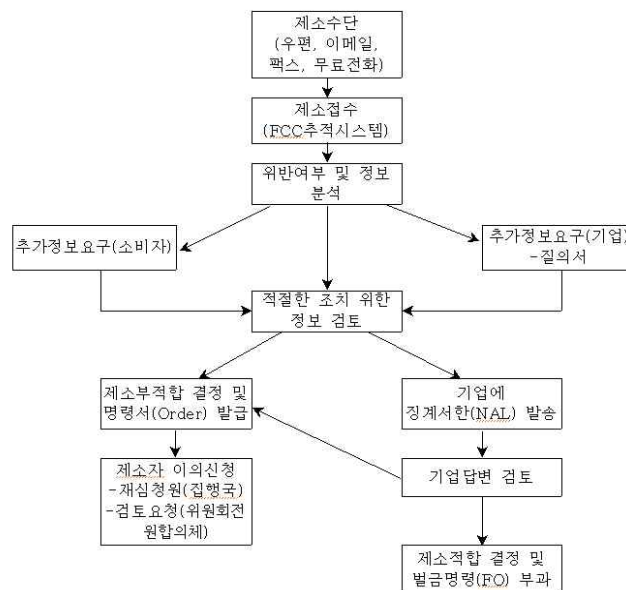
FCC 직원은 각 민원을 검토하여 거기에 외설, 선정성 또는 저속한 어휘 금지 위반 행위가 발생했음을 시사하는 충분한 정보가 담겨있는지 판단한다.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면 직원은 방송국에 질의서(ROI)를 발송하는 일을 포함한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 사례에 따라 ROI에는 방송국에 민원에 담긴 혐의의 확인 또는 부인을 요청하고 문제의 프로그램 테이프나 사본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

민원에 담긴 방송내용 설명이 외설적, 선정적이거나 저속한 방송내용으로 성문법 또는 FCC 규정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수도 있음을 판정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면 FCC 직원은 민원상의 결함 그리고 그 복구 방법을 설명하는 기각 결정서를 민원인에게 발송한다. 이 경우 민원인은 민원 재고 청원, 또는 직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경우 전원 합의체(Full Commission)에 심의 신청(항소)하는 길을 택할 수 있다. 민원에 담긴 사실과 정보가 외설, 선정성, 저속함 관련 성문법이나 FCC 규정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경우 FCC 직원은 민원인에게 민원 기각을 알리는 서한을 발송하거나 공공 명령(public order)을 통해 민원을 기각할 수 있다. 어느 경우이나 민원인은 민원 재고 청원, 또는 직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경우 전원 합의체에 심의 신청(항소)하는 길을 택할 수 있다. 민원을 서한으로 기각 처리한 경우 FCC 직원은 FCC 당국이 외설적, 선정적이거나 저속한 방송내용을 검토한 내용을 담은 선정성 조사서(Indecency Fact Sheet) 사본 또한 동봉한다.

## ③ FCC 판결

FCC가 민원 대상 방송내용이 외설적, 선정적 또는 저속하다는 판단을 내린 경우 FCC는 관련 법률 또는 FCC 규정 위반이 일어났다는 1차 판결(preliminary finding)인 징계 명령(NAL)을 내릴 수 있다. 그 후 이 1차 판결은 FCC가 벌금 명령을 내릴 때 확정, 수정 또는 무효 처리된다.

[그림 3-10] 선정성민원제소 해결과정



자료: FCC 홈페이지

이밖에 FCC는 외설, 선정성, 저속함 관련 민원을 처리, 검토 및 조사하는데 상당한 인력 자원을 할당해놓고 있다. 이 문제를 다루는 실무자 대다수는 소비자 정부사무국과 집행국에 포진하고 있다. 소비자정부사무국의 소비자 상담과, 정보 접근 및 개인정보보호과 그리고 참고정보센터는 민원을 접수하고 다양한 기타 문제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외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소비자정부사무국은 일반적으로 EB에 선정성 민원을 축탁(refer)한다. 집행국에는 외설, 선정성 그

리고 저속함의 문제를 처리하는 변호사 17명과 지원 인력 16명이 근무하고 있다. 집행국은 수요에 따라 인력을 증원한다. 조사심리과는 집행국에 할당된 대다수 민원 검토를 담당하나 집행국 소속 상급 직원은 조사 절차 중 전 과정에 관여한다. FCC는 매년 외설적, 선정적이거나 저속한 프로그램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진술하는 민원을 수십 만 건 접수하는데,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표 3-11> 선정성 민원제기 및 징계명령 통계(1993~2006)

기간	접수된 민원	서비스별 프로그램	징계명령	서비스별 징계명령	징계명령 액수	진행상황
2006 (1~6월)	327,198 (1191 프로그램)	라디오: 389 TV: 512 케이블: 290	7	라디오: 0 TV: 7	\$,962,500	계류중 7
2005	233,531 (1550 프로그램)	라디오: 488 TV: 707 케이블: 355	0	0	0	.
2004	1,405,419 (314 프로그램)	라디오: 145 TV: 140 케이블: 29	12	라디오: 9 TV: 3	\$7,928,080	지불완료 4, 지불동의 1, 계류중 7, 취소 1
2003	166,683 (375 프로그램)	라디오: 122 TV: 217 케이블: 36	3	라디오: 3	\$440,000	지불완료 4, 지불동의 1
2002	13,922 (389 프로그램)	라디오: 185 TV: 166 케이블: 38	7	라디오: 7	\$99,400	지불완료 2, 지불동의 3, 계류중 1, 취소 1
2001	346 (152 프로그램)	라디오: 113 TV: 33 케이블: 6	7	라디오: 6 TV: 1	\$91,000	지불완료 5, 취소 2
2000	111 (111 프로그램)	라디오: 85 TV: 25 케이블: 1	7	라디오: 7	\$48,000	지불완료 5, 지불동의 2
1999	.	.	3	라디오: 3	\$49,000	지불완료 3
1998	.	.	6	라디오: 6	\$40,000	지불완료 5, DoJ가 부과하지 않은 벌금 징수 1
1997	.	.	7	라디오: 6 TV: 1	\$35,500	지불완료 5, 취소 2
1996	.	.	3	라디오: 3	\$25,500	지불완료 1, 취소 2
1995	.	.	1	라디오: 1	\$4,000	지불완료 1
1994	.	.	7	라디오: 7	\$674,500	지불완료 4, 취소 3
1993	.	.	5	라디오: 5	\$665,000	지불완료 4, 취소 1

자료: FCC 홈페이지

## ⑦ 방송 이슈

방송이슈와 관련하여 조사심리과 및 주파수 집행과가 공동으로 업무를 한다.

## － 조사심리과:

- 방송의 비 기술적 이슈(음란물, 방송조작, 방송 면허 사업자가 주관하는 콘테스트, 전화통화의 방송 등)에 대한 민원 및 집행 담당
- FCC의 방송면허 소지자의 비 기술적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수행 또는 조사 보조
- 위원회 청문회에서 배심단원(trial staff)으로 활동

## － 주파수 집행과

- 방송의 기술적 이슈(인터페이스, 과부하, 공사, 라디오 주파수 간섭, 면허국 범위 외 운영, 방송면허 미소지자의 운영 등)에 대한 민원 처리

방송이슈는 앞에서 기술한 외설 및 선정성 규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띄고 있다. 아래 표는 FCC에서 담당하고 있는 방송부문의 다양한 이슈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관련 근거규정 또한 같이 정리하여 해당이슈에 대한 FCC의 조치권한을 쉽게 알게 하였다.

<표 3－12> 주요 방송이슈

내 용	근거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설, 선정성, 저속한 언어에 대한 규제</li> <li>▪ 허위 방송(Hoax) 규제</li> <li>▪ 콘테스트(사기성 프로그램) 규제</li> <li>▪ 전화 대화 방송의 공개 의무</li> <li>▪ 공공조사파일(public inspection file) 유지 요건</li> <li>▪ 파일에 담긴 내용 열람</li> <li>▪ 방송국 자체 점검 목록</li> <li>▪ 무단 사업 운용 규제</li> <li>▪ 면허 관리권 무단 양도/이전합병</li> <li>▪ 긴급 정보 시스템 정보 공개 관련 규제</li> <li>▪ 안테나 구조물 정보 공개 관련 규제</li> <li>▪ 방송 간섭(interference) 이슈</li> <li>▪ 비영리 방송국의 협찬 광고(enhanced underwriting)</li> <li>▪ FCC 집행국의 방송사업자 지침</li> </ul>	<p>47 CFR 73.1216～17</p> <p>47 U.S.C. §508, §509</p> <p>47 CFR 73.1206</p> <p>47 CFR 73.3526～7</p> <p>47 U.S.C. §507, §508</p> <p>47 U.S.C. §301</p> <p>47 U.S.C. §301(d)</p> <p>47 CFR Part 11</p> <p>47 CFR Part 17</p> <p>47 U.S.C. §309</p> <p>47 CFR 73.503～621</p>

## (2) 시장분쟁해결과(Market Dispute Resolution Division)

시장분쟁해결과는 통신시장의 활성화 완료 이후 활동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집행국 업무과 중 하나이다. 동 과는 통신법 제208조 절차에 의거 유/무선 기간사업자, 국제 전화사업자들이 제기한 FCC 규정위반에 대한 모든 제소를 담당한다. 이외에도 통신법 제224조에 의거하여 관로접근(pole attachment)의 합리적 요율 및 요건과 관련하여 케이블사업자, 통신사업자 및 기타 관련자가 제기한 소를 해결한다. 시장분쟁해결과는 기간사업자들이 제기한 소만 담당하며, 소비자 관련 민원 등 기타 분쟁사항은 통신소비자과에서 다룬다. 통신법 제208조에 의거한 소제기는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간 공식제소 이전에 사업자 및 FCC 당국 간의 비공식적 분쟁해결 단계에서 대부분 해결되기 때문이다. FCC는 공식 민원절차의 시간 및 비용을 감안, 공식적 제소절차 보다 민간 사업자간 자율적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을 강력히 권고한다. FCC 담당자에 의하면 FCC가 실제로 접수하여 진행하는 공식 민원은 비공식 민원의 십분의 일 정도라고 한다.

&lt;표 3-13&gt; 시장분쟁해결과의 주요 업무 및 근거법

주요 업무 내용	근거 주요 통신법(핵심법령만 기재)	공통
① 기간사업자의 규정위반 조사	제208조(FCC에 대한 신청)	제403조(자발적 조사권)
② 설비 등 접근 및 사용	제224조, 제251조(상호접속)	
③ 부당 요금 또는 차별	제201조(서비스와 요금), 제202조(차별과 선호), 제203조(약관)	

통신법 제208조는 유/무선 기간사업자, 국제 전화사업자들이 제기한 FCC 규정위반에 사항에 대한 모든 소를 해결해야 할 의무를 FCC에게 부여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간 분쟁이 공식화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집행국은 분쟁 당사자간의 중재(mediation)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FCC가 제공하는 중재 프로그램은 분쟁관련 시간 및 비용 측면의 절감을 통해 분쟁해결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특

히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신속 처리 절차(Accelerated Docket)”<sup>14)</sup> 시스템은 소송 제기 후 60일 이내에 서면절차로 결정하는 신속처리 절차로서 이해당사자간 분쟁을 신속히 처리한다. 신속 소송처리 절차를 채택한 민원인은 FCC 실무 담당자 또는 스태프 수준에서 내리는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 신속 처리절차 규칙상 FCC 담당자의 감독 하에 제소 이전에 분쟁 당사자 간의 논의 절차가 있어 실제 공식 소송 제기 이전에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본 제도는 매우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절차로 평가받고 있다. 다음은 제208조 상 일반 공식 민원제소 절차와 신속 민원제소 절차를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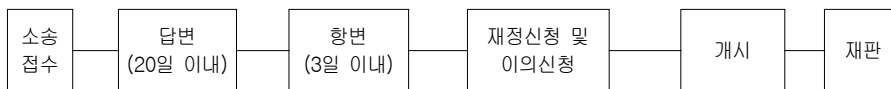
※ FCC 규정 제208조 절차

FCC 규정 제208조의 공식 민원제소 절차는 일반 절차와 신속심리 절차가 있다. 두 절차는 변론 및 절차법과 관련하여 일부 측면에서 다른 절차적 특성을 가진다.

(1) 일반절차(General Proceeding)

FCC 규정 제208조 공식제소의 절차는 일반적으로(민원)제소 접수, 답변, 항변, 재정신청, 개시, 재판의 단계로 진행된다. (아래그림 참조)이같은 순서는 신속심리 절차도 동일하게 진행된다. 공식제소의 일반 절차는 합의를 거친 사실, 분쟁 대상 사실 및 핵심 법적 사안의 병합 진술, 여기에 덧붙여 관련 선서문, 부속서 및 기타 첨부서로 구성된 서면 기록을 토대로 해결된다.

[그림 3-11] 공식제소 일반절차



① 제소(Complainant)

공식제소상 일반 변론(pleading) 요건은 다음과 같다.

14) 추가 정보는 section 1.730 of the Commission's rules, and the Formal Complaint Second Report and Order, which is published in the FCC Record at 13 FCC Rcd 17018(1998). 참조

- (a) 변론은 명확, 간결, 구체적이어야 함
- (b) 법률 위반 및 해당 위반 혐의에 대한 변호에 관한 충분한 사실이 포함되어야 함
- (c) 관련 문서나 선서문을 통해 사실을 뒷받침.
- (d) 법적 논증은 적절한 사법 당국, FCC 당국 또는 성문법적 기관을 통해 뒷받침
- (e) 이의신청 기관(opposing authority)을 구분
- (f) 비공개 결정 또는 법원이나 행정 기관의 판결 원본 등 국가 보고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모든 FCC 외의 실제 정부 기관에 사본을 제공해야 함
- (g) 당사자들은 제반 정보의 정확성과 완벽성, 정당성을 담보해야 하며 최신 정보를 제출하고 최신 정보로 갱신해야 함.
- (h) 클레임이나 변호를 위하여 근거로 삼는 제반 요금표 조항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여 첨부

- (i) 진술서는 FCC 규칙을 근거로 하여 작성

소송의 서식과 관련하여 소송장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각 건의 원고 및 피고 또는 변호인의 인적사항
- (b) 문제가 되는 FCC 법 또는 명령 또는 규정의 섹션 인용문
- (c) 진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위반 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완벽한 진술.
- (d) 클레임과 관련된 사실 인정안, 법의 결론 그리고 법적 분석 그리고 소송에 상술된 주장, 구제방안 및 클레임 손해액
- (e) 원고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식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각 건 피고와 분쟁 해소 가능성을 논의했거나 논의를 시도했다는 증명서

추가(supplemental) 소송이 가능한 바, 추가 소송은 본 조항 및 1.720조에 기술된 요건을 따라야 한다. 원고의 손해액산출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기재되어야 하며 관련 선서서 및 기타 문서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통신법, FCC 명령 또는 FCC 규칙을 위반한 방식과 시기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추가 소송에는 원고가 피고와 분쟁 해소 가능성을 논의했거나 논의를 시도했다는 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원고가 손해액(damages) 결정을 원하는 경우 소장에는 혐의와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한다. 성문법적 마감 시한이 적용되지 않는 제반 소송에서 FCC가 책임 소재 및 전향적 구제책 결정이 내려지는 소송과는 별도로 그리고 이 소송에 이어지는 소송에서 손해액을 결정하는 것이 최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경우 FCC는 최초 소송에서는 단지 책임 소재 및 전향적 구제책만을 결정하고 후속 소송에서 배상금을 결정할 수 있다.

원고가 배상액 결정을 위한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다음 절차가 적용 된다. 손해액 관련 사안은 집행국에서 공청회 방식을 지정할 수도 있고 당사자들이 동의한 경우 위원회 행정법 판사 앞에 중재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독자적 재량으로 사전 조사를 통해 배상액사안이 완벽한 논증을 거친 후에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판단하는 배상액에 상응하는 총액 또는 위원회가 몇가지 요인<sup>15)</sup>들을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해당 구제책 허용이 가장 합당하다고 판정한 경우 그보다 작지만 적절한 총액에 대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해당 금액을 이자가 붙는 에스스로 계좌에 예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위원회는 독자 재량으로 진행 중인 배상액 관련 재판을 14일간 중지시켜 쌍방에게 분쟁 해소 협상이나 기타 분쟁 해소 대안 절차를 모색할 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독자 재량으로 배상액 산출법 또는 공식의충분성 결정과 더불어 배상 재결을 종료할 수 있다. 쌍방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여 위원회가 지정한 방법이나 공식에 따라 배상액을 정확히 결정하는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배상 명령일 기준 30일 이내에 쌍방은 공동으로 위원회에 다음을 제출해야 한다.

- (a) 배상액에 대한 쌍방의 합의 내용을 상술한 진술서
- (b) 쌍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는 진술서 그리고 쌍방에게 협상 지속을 위해 시한 연장을 요구하는 요청서 또는 분쟁이 지속되는 근거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상술한 진술서

제소가 복수인 경우 병합(Joinder)이라는 방식이 상용될 수 있다. 개별 소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실 그리고 통신법 위반 혐의와 관계 되어 있는 경우 둘 이상의 원고를 한 소장에 병합할 수 있다. 단, 근거 병합의 경우에는 별도 진술 및 번호를 부여한다.

## ② 답변(Answers)

공식 소장 사본을 송달받은 통신 사업자는 원고가 공식 소송을 제기한 지 20일 이내 답변해야 한다. 답변서에는 클레임과 관련된 사실 인정안, 법의 결론 그리고 법적 분석 그리고 소송에 상술된 주장이 담겨 있어야 한다.

답변을 통해 원고 그리고 위원회에 피고의 변론 성격에 대해 완벽하게 고지해야 하며 소장에 담긴 중대한 제반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답변서에 사안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 피고는 각 클레임에 대한 변론을 간결하게 기술해야 하며 원고가 근거로 삼는 사실 진술을 인정 또는 부인하며 해당 인정 또는 부인 사유를 상세히 진술해야 한다. 포괄적부인은 금지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의 특정 사실 진술 또는 특정 paragraph에 대해 개별적으로 부인하는 방식으로 소송상 혐의를 부인할 수 있다.

- 15) (i) 해당 예치금이 없을 경우 원고가 입게 될 회복 불가능한 손해
- (ii) 배상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수준
- (iii)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충에 대한 균형을 잡음.
- (iv) 공익을 고려할 경우 보증금 납부가 나은가 은행 예치 명령이 나은가.

해당 재판의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인 통신 사업자에 대해 FCC 관할권 내에서 제반 구제책을 모색하는 교차소송(Cross-complaint)은 금지된다. 물론 별도의 소송은 가능하다. 여기에서의 교차소송의 의미에는 반소(counterclaim)가 포함된다.

### ③ 항변(Reply)

답변서 송달 후 3일 이내에 피고가 자신의 적극적 항변서 지지 차원에서 제시한 구체적 실체적 혐의 및 법적 주장에만 대응해야 하는 중대한 관련 사실 진술 및 법적 주장을 담은 Reply를 제출 및 송달 할 수 있다. 적극적 항변서에 대한 Reply를 하지 못할 경우 제반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Reply에는 주장과 관련된 사실 인정안, 법의 결론 그리고 법적 분석 그리고 Reply에 제시된 주장이 담겨 있어야 한다. 단, 신속심리절차에서 적극적 항변서에 답변하기 위해 별도 변론서를 제출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재정신청(Motion)

공식제소 절차 결과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서면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며, 모든 재정신청에는 사실 인정안과 법률 판단 그리고 변론 내용과 관련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정 신청측은 변론 관련 사실 인정안과 법률 판단을 비롯하여 논거를 타당하게 담고 있는 잠정 채택 명령서를 제공한다. 이의신청은 송달된 이후 5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대상은 해당 재정 신청에 담긴 구체적인 사안과 혐의로만 제한된다.

### ⑤ 개시(Discovery)

원고는 그 소장과 동시에 최대 10가지 서면 심문 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고에게 송달할 수 있다. 피고는 고소장 송달 시점에서 답변서 송달 시점에 이르는 기간 동안 최대 10개의 심문 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원고에게 송달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 송달일 기준 3개월 내에 최대 5개의 서면 심문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고에게 송달 할 수 있다.

제출 및 송달된 심문 요청서에는 요청한 심문 목록 그리고 개별 심문에서 추구하는 정보가 분쟁 해소에 필요한 이유 그리고 다른 출처에서 입수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피고측은 다음과 같이 심문 요청서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문 요청자측에 송달해야 한다.

- (a) 피고의 경우 고소장과 동시에 심문 요청서가 송달된 지 10일 이내에, 그리고 답변서 송달 이후 심문 요청서가 송달된 지 5일 이내에,
- (b) 원고의 경우 심문 요청서 송달 이후 5일 이내,
- (c) 어느 경우에도 최초 예비 재판일 이전 3일을 넘길 수 없다.

위원회 직원은 최초 예비 재판 시점에 심의요청서가 타당하게 제출 및 송달되었는지 확인하고 심문 요청서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타당하게 제출 및 송달되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당사자들이 답변해야 할 심문들을 결정하고 해당 답변 일정을 잡는다. 답변 명령이 내려진 심문에 대해 답변서를 송달하는 당사자는 선서 심문 또는 확인 심문 각각에 대해 완벽하게 서면으로 답변해야 하며 만약 당사자가 공기업이나 사기업 또는 파트너십이나 연합체인 경우 당사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간부나 대리인이 답변해야 한다. 답변서에는 답변서 작성자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소 제기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 ⑥ 재판(Status Conference)

제반 고소 재판에서 위원회는 독자 재량으로 변호사 또는 당사자들에게 위원회의 예비 재판에 참석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위원회가 별도 명령하지 않는 한 그리고 신속 심리 재판을 예외로 하고 위원회 직원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답변서제출 만기일 이후 근무일 기준 10일 이후에 최초 예비 재판이 열린다. 예비 재판에서 다음 사항을 논의한다.

- (a) 쟁점의 단순화 또는 쟁점 좁히기
- (b) 추가 변론 또는 증거 제출의 필요성이나 바람직함.
- (c) 당사자들 사이에 논쟁 사안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실 또는 조항에 대한 인정 확보.
- (d)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논쟁 사안 전부 또는 일부 해결
- (e) 개시 필요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 개시 범위, 유형 그리고 해당 개시 일정을 잡음.
- (f) 사안의 나머지 사항에 대한 일정 그리고 추가 예비 재판 일자를 잡음.
- (g) 소송 처리에 도움이 되는 기타 사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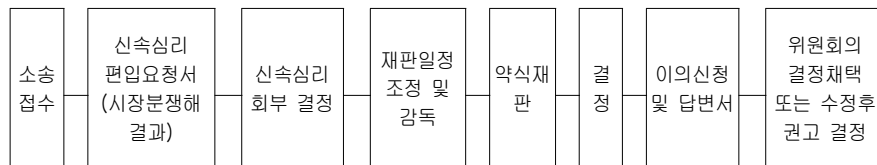
최초 예비 재판 외에도 어느 당사자든 소송이 제기된후 언제든지 예비 모임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예비 재판에서 위원회 직원은 특히 절차상문제, 개시 그리고 요약서류 및 기타 증거 자료 제출을 비롯하여 공식 재판 진행과 연관된 다양한 중간 재판 사안과 관련하여 구두 합의 규칙을 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예비 재판일에서 근무일기준 최소 3일 이전에 위원회와 모든 재판 당사자들에게 서면 통지하여 위원회 직원의 구두 합의 규칙 종합집을 녹취할 수 있다. 또한 예비 재판일에서 근무일 기준 최소 3일 이전에 모든 소송 당사자들의 합의를 거치고 위원회에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당사자들은 위원회 직원의 구두 합의 규칙 종합집뿐 아니라 해당 통신을 위원회 직원이 “공개 가능”으로 결정하는 한 참여 당사자들 사이에 구두 진술과 교환 내용을 녹취하거나 속기사를 동원하여 속기할 수 있다.

## (2) 신속심리절차(Accelerated docket)

신속심리절차는 상술한 바와 같이 일반절차의 진행과정을 거치나, 상대적으로 짧은 변론 기한과 기타 절차법을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신속심리절차의 구체적 과정은 아래와 같다.

[그림 3-12] 신속심리절차



공식 소송 제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당사자는 집행국의 시장 분쟁 해소 분과장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자신의 소송이 일단 접수되면 신속 심리 대상에 편입되는 길을 모색하는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피고는 송달된 소장을 수령한지 5일 이내에 팩스나 인편으로 집행국 시장 분쟁 조정 분과장에게 요청서를 제출한다.

한편, 특정 소송의 신속 심리절차 회부 여부를 결정할 때 위원회 직원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다.

- (a) 분쟁 당사자들이 직원이 감독하는 분쟁 조정 논의에서 통상적인 기회를 모두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가
- (b) 특정 분쟁 또는 분쟁 범주의 해소 촉진이 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 할 것으로 보이는가
- (c) 재판 사안이 신속 심리 제한 요건에 비추어 신속 심리 대상으로 적합해 보이는가
- (d) 원고가 통신법, FCC 규칙, FCC 관할 내에 드는 명령 위반에 관해 주장하고 있는가
- (e) 당사자들의 자원 면에서 압도적인 불일치가 존재하여 해당 소송이 신속 심리 대상에 회부되는 것이 어느 일방에 불공정할 수 있는가 이다.

피고 요청으로 신속 심리에 회부된 재판에서 위원회 직원은 적절한 방식으로 분쟁 해소 논의를 감독한다. 해당 소송의 신속 심리가 받아들여지면 위원회 직원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조정 논의를 감독하고 당사자들의 문서 자동 제출을 비롯하여 나머지 재판 일정을 잡는다.

신속 심리 재판에서 위원회는 당사자들에게 자신의 논거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대신에 약식재판(minitrial) 또는 공청회 유형의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약식 재판은 보통 제소가 이루어진 후 40~45일 사이에 처리된다. 위원회의 행정법 판사(“ALJ”)가 보통 약식 재판과 증인 선서를 주관하고 당사자들의 논거 제시 시한을 결정한다. ALJ는 위원회직원의 자문을 구해 약식 재판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의 신청 또는 절차상 문제를 처리한다.

이러한 신속 심리 재판에서 약식 재판 이후 발부된 직원의 결정은 위원회의 채택 또는 변경을 거쳐 권장 결정 방식이 될 것이다. 권고 결정 내용의 변경을 모색하는 재판 당사자는 위원회홍보국(Office of Media Relations)이 결정문을 발부한 이후 15일 이내에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그러한 길을 모색할 수 있다. 결정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의견서가 제출된 후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 신청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Reply 의견서는 그 이후 10일 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이의신청 의견서에서 제기된 사안으로 제한된다. 어느 당사자도 권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결정문발부 이후 45일 이내에 권고 결정을 채택 또는 변경하여 결정문을 발부한다. 재판 당사자들이 권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제출 할 경우 위원회는 최종 의견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에 권고 결정문을 채택 또는 수정하여 그 결정문을 발부한다.

상술한 신속심리절차는 그 성격상 요건이 면제된다. 208조에 기술된 요건 면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a) 실제적 주장은 신속 심리에 접수된 소송에 적용되지 않음
- (b) 클레임과 관련된 사실 인정안, 법의 결론 그리고 법적 분석 그리고 소송에 상술된 주장을 포함할 필요는 없으나 원고가 그 주장의 전제로 삼는 사실 및 법적 theory 가 완벽히 상술되어야 함.
- (c) 피고와 분쟁해소 가능성을 논의했거나 논의를 시도했다는 증명서를 포함시킬 의무가 없음.
- (d) 원고가 소유, 관리 또는 통제하고 있는 제반 관련 문서에 대한 설명이 포함될 필요는 없음
- (e) 원고가 분쟁과 관련된 지식을 지닌 자 그리고 분쟁 관련 문서를 파악한 방법에 대해 기술 할 필요는 없음.

시장분쟁해결과 자료에 의하면 2008년 현재 제208조에 의하여 처리된 제소 취소 및 화해명령 등 사례가 12건이 있으며, 2001년 1월 이후 집행국 분쟁해결과에 계류 중인 제소 건은 15개가 된다.

&lt;표 3-14&gt; 진행중인 제208조 공식 제소

제소번호	원고	피고	제소일	관련규정
EB-03-MD-012	NewSouth Comm.	BellSouth Telecomm.	2003. 7. 25	47 U.S.C. §201(b), §251(c)(3), §252(d)(1)
EB-04-MD-006	Earthlink, Inc.	SBC Advanced Solutions SBC Communications	2004. 8. 31	47 U.S.C. §201(b), §202(a)
EB-05-MD-013	MAP Mobile Comm.	Ameritech Pacific Bell Comm. SBC Comm. Southwestern Bell	2005. 7. 12	47 U.S.C. §201, §251, §415
EB-06-MD-003	Bright House Networks	Tampa Electric Company	2006. 2. 27	47 U.S.C. §224
EB-06-MD-005	Comcast Cable Comm.	Georgia Power Company	2006. 6. 2	47 U.S.C. §224
EB-06-MD-007	North County Comm.	MetroPCS California LLC	2006. 9. 5	47 U.S.C. §251(b)(5), §201(b), §202(a)
EB-07-MD-001	Qwest Comm.	Farmers and Merchants Mutual Telephone Co.	2008. 1. 30	Discovery ordered pursuant to 47 C.F.R. §08-§29
EB-07-MD-003	Comcast Cable Comm.	Georgia Power Company	2007. 9. 26	47 U.S.C. §224
EB-07-MD-005	Broadwing Comm.	AT&T Inc.	2007. 12. 28	47 U.S.C. §201, §202, §203
EB-08-MD-003	Fiber Technologies	Narragansett Electric Co. Verizon New England	2008. 5. 2	47 U.S.C. §224
EB-08-MD-004	Verizon	Embarq Corporation	2008. 7. 28	47 U.S.C. §201, §203
EB-08-MD-006	APCC Services, Inc.	Next-G Comm.	2008. 8. 11	47 U.S.C. §201(b), §276(b).
EB-08-MD-007	APCC Services, Inc.	Matrix Management Network Management USP Communications Zcom Networks	2008. 8. 13	47 U.S.C. §201(b), §276(b).

제소번호	원고	피고	제소일	관련규정
EB-08-MD-008	North County Comm.	Cricket Comm.	2008. 8. 15	47 U.S.C. §201(a), §201(b)
EB-08-MD-009	Armstrong Utilities Inc.	Embarq PA	2008. 8. 21	47 U.S.C. §224

\*EB: 집행국, MD: 중재프로그램(MDRD)

자료: FCC 홈페이지

<표 3 - 15> 제208조 공식 제소 관련 공개 허용된 자료 목록

분 류	건 수	비 고
취소 명령(Order of Dismissal)	10	
재고 명령(Order of Reconsideration)	10	
명령의 수정(ERRATUM)	8	
명령(Order)	245	
정관 및 명령(M.O.&O.)	70	
심리(Hearing)	1	
재검토 명령(Order of Review)	10	
...		

\*MO&O: Memorandum Opinion and Order

자료: FCC 홈페이지

### (3) 통신소비자과(Telecommunications Consumer Division)

FCC의 소비자 관련 이슈를 담당하는 부서는 소비자정부사무국(Consumer and Governmental Affairs Bureau)과 집행국의 통신소비자과이다. 통신소비자과는 아래의 업무 기능을 가진다.

- － 공중사업자, 통신장비제조업자, 통신판매자 및 통신장비 이용 광고 사업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통신관련 활동을 하는 기업의 행태 조사
- － 소비자의 공식 민원 해결(장애인의 통신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등)
- － 소비자에게 통신서비스 선택과 관련, 충분한 정보 제공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가이드라인 제시
- － FCC 규정이 소비자 보호를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내외부 조직과 협의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소비자 관련 민원은 연간 수천만 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인 관계로 FCC의 업무는 이중적 구조 하에 진행된다. 일단 민원인은 소비자정부사무국에 민원을 제기한다. 이 중 FCC가 자체적으로 조사 및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항은 집행국의 통신소비자과가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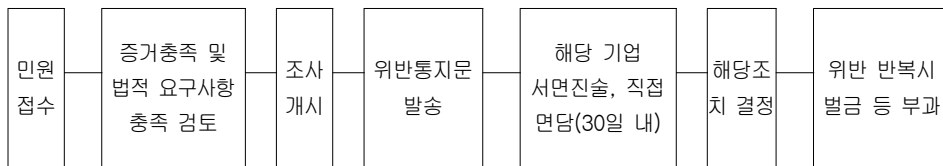
<표 3-16> 통신소비자과의 주요 업무 및 근거법

주요 업무 내용	근거 주요 통신법(핵심법령만 기재)	공 통
① 규정위반 통고	제502조(규칙위반) 제503조(몰수)	제403조 (자발적 조사권한) 제501조 (일반적 벌칙) 제502조 (명령, 규칙 위반시 벌금) 등 Title V
② 과징금 부여	제206조(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503조, 제504호(과징금관련)	
③ 불공정 마케팅 규제	제201조(서비스와요금)	
④ Slamming	제258조(가입전화사업자의 불법변경), 제201조(서비스와요금)	
⑤ 스팸 팩스	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 (TCPA, 전화소비자보호법) 제227조; FCC 규정 제64.1200조	
⑥ Do Not Call	제201조(서비스와요금)	

즉, 모든 소비자관련 민원은 일차적으로 소비자정부사무국이 접수하여 처리하고, 이 중 특정 민원사항에 대하여 집행국의 통신소비자과가 통신법 또는 FCC규정에 위반여부를 조사한다. 통신소비자과는 Slamming, 스팸, do-not-call 위반, 공중통신사업자 및 기타 통신사업자의 소비자 관련 의무사항에 대하여 통신법 및 FCC규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린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집행국은 위반사항 통고 및 충고, 정지 명령, 소환, 동의판결, 형사 및 민사 처벌, 기기 압류, 면허 취소 등 다양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통신법 제503조는 기간사업자가 아닌 면허 미소지 사업자들에게도 FCC 규정 위반에 대하여 통지하고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sup>16)</sup> 통신소비자과의 업무 및 민원 해결 절차는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민원이 접수되면 집행국 직원은 수령된 민원이 FCC의 증거충분 및 법적 요구사항에 맞는지 검토하며, 이를 충족시킬 경우 조사를 시작한다. 집행국은 통신법 제 503조(b)(5)에 따라 해당 기업에게 위반통지문(citation)을 발송한다. 해당기업은 FCC가 정하는 기간(30일)내에 서면 진술 또는 직접면담으로 응해야 한다. 집행국은 이에 따라 해당 조치를 결정한다. 한편, Citation 발행 이후, 동일한 위반을 행할 경우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림 3-13] 통신소비자과의 민원해결절차



최근 FCC 통신소비자과에 접수되는 민원은 대부분 불공정하고 과장된 마케팅, slamming 및 불법 팩스와 같은 이용자 보호 관련 이슈들이다. 아래 표에 최근 몇 년 간 통신소비자과에 접수된 민원의 종류 및 해결 건 수를 정리하였다. 이외에도 통신 소비자과는 매분기 마다 소비자 민원 종류 및 해결내용에 대한 통계보고서를 내고 있다(소비자 질의 및 민원 제기에 관한 분기보고서 “Quarterly Report on Informal Consumer Inquiries and Complaints Release” 참고할 것).

16) 통신법 제503조(b)(5)(authorizing the Commission to issue citations to persons who do not hold a license, permit, certificate or other authorization issued by the Commission or an applicant for any of those listed instrumentalities for violations of the Act or of the Commission's rules and orders).

&lt;표 3-17&gt; 이용자 보호 관련 조치 대상

대상	내용
불공정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법규: 통신법 제201조(b): 서비스와 요금<sup>17)</sup></li> <li>○ 조치 사례: 2000. 3~2003. 10 관련 벌금 총1건, 동의판결 총3건</li> </ul>
Slamm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법규: 통신법 제201조(b): 서비스와 요금, 통신법 제258조: 가입 전화사업자의 불법적 변경,<sup>18)</sup> FCC 규정 제64.1120조: 통신 서비스 신청 확인</li> <li>○ 조치사례: 관련 벌금제안 총 벌금 제안 총 3건, 벌금 총 17건, 동의판결 총10건</li> </ul>
스팸팩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법규: 통신법 제227조(b)(1)(C): 전화장비의 사용 제한,<sup>19)</sup> FCC 규정 제64.1200조(a)(3): 전달 금지</li> <li>○ 조치사례: 2008년 한해 벌금제안 총 43건</li> </ul>
Do Not C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내용: National Do-Not-Call 목록에 등록된 전화에 광고 전화 등 금지</li> <li>○ 관련 법규: FCC 규정 제64.1200조(c)(2)</li> <li>○ 조치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9. 12~2008. 6 간, 관련 위반통지문 발행 총 50건, 벌금제안 총 6건, 동의판결 총 4건, 벌금부과 총 1건</li> <li>— Timeshare Register, Do-Not-Call 위반 관련 \$20,000 벌금 제안 (2008. 6. 11) 등</li> </ul> </li> </ul>
전화 판매 (Telephone Solici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내용: 사전동의없이 녹음된 광고전화 전송 등 금지</li> <li>○ 관련 법규: 47 U.S.C. §227(b)(1)(B), 47 C.F.R. §64.1200(a)(2)</li> <li>○ 조치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 12~2008. 6 간, 관련 위반통지문 총 136건 발행</li> <li>— So Clean Inc., 주거용 전화에 녹음 광고전화 전송 벌금 \$18,000 (2008. 6. 6)</li> <li>— Warrior Custom Golf, Inc., 주거용 전화에 녹음 광고전화 전송 관련 범위반 가능성에 대한 동의판결(2006. 6. 23) 등</li> </ul> </li> </ul>
기타, TCPA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치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위반통지문 총 1건 발행</li> <li>— 1-800 Contacts, Draper, Utah, 자동 전화 다이얼링 시스템 사용 관련 위반 위반통지문 발송(2005. 1. 29)</li> </ul> </li> </ul>
Operator Service Providers (OSP)/Operator Service Disclosu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내용: Operator Service 제공자 및 서비스 공개 등</li> <li>○ 관련 법규: 47 U.S.C. §226(b)(1), 47 C.F.R. 64.703(a)</li> <li>○ 조치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 11~2004. 3 간, 관련 동의판결 총 2건</li> <li>— ASC, OSP지원 전화 관련 고객에게 OSP 명시(branding<sup>20)</sup>) 및 요금공개 위반 가능성 관련, 동의판결 \$125,000(2004. 3. 19) 등</li> </ul> </li> </ul>

대상	내용
Lifeline/Link-Up Outrea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내용: 저소득층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 관련</li> <li>○ 관련 법규: 47 U.S.C. §214(e)(1)(B); 47 C.F.R. §54.405(b), §54.411(d)</li> <li>○ 조치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 5~2005. 11간, 관련 벌금제안 총 2건, 동의판결 총 2건, 훈계 총 1건</li> <li>— CenturyTel, 저소득층을 위한 적절한 Lifeline 및 Link-Up 제공 실패 관련 동의판결 \$75,000(2005. 11. 17) 등</li> </ul> </li> </ul>
긴급정보 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내용: 장애인 대상 긴급정보 접근성 확보 관련</li> <li>○ 관련 법규: 47 U.S.C. §713, 47 C.F.R. §79.2(b)(1)(i)</li> <li>○ 조치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 2~2007. 3간, 관련 벌금제안 총 7건, 동의판결 총 4건</li> <li>— Waterman, Montclair Communications, 청각장애인의 긴급정보 접근성 확보(Closed Captioning Rules) 관련 동의판결 \$36,000 (2007. 3. 7) 등</li> </ul> </li> </ul>
전화 사생활보호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내용: 고객소유네트워크정보(customer proprietary network information, CPNI) 보호 등</li> <li>○ 관련 법규: 47 U.S.C. §222, 47 C.F.R. §64.2009(e)</li> <li>○ 조치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 1~2008. 2 간, 관련 가이드라인 공고 3건, 벌금제안 28건, 위반통지문 발행 7건, 동의판결 5건</li> <li>— CTC Communications Corp., CPNI 관련 동의판결 \$100,000 (2008. 2. 19)</li> <li>— 집행국 공고—연간 고객소유네트워크정보 확인서(CPNI Certifications) 제출 가이드라인 제공(2008. 1. 29)</li> </ul> </li> </ul>

- 17) 제201조(b)는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요금, 운영, 분류, 규칙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18) 제258조는 “모든 통신사업자는 FCC가 규정해야 하는 확인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가입자가 한 시내전화서비스나 전화통화서비스 선택의 변경을 제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19) 제227조(b)(1)(C)에서는 “전화팩스기에 무단광고를 보내기 위하여 전화팩스기, 컴퓨터기기 및 기타 기기 사용을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 OSP는 각 통화 시작단계에, 자신에 대하여 고객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하며, 이 때 요금부과를 하면 안된다.

대상	내용
응답 실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내용: FCC 소비자정부사무국(CGB) 등의 비공식적 민원에 대한 응답 실패 등</li> <li>○ 관련 법규: 47 C.F.R. §1.717</li> <li>○ 조치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2.19 관련 벌금제안 총 10건</li> <li>－ AT&amp;T, Inc., FCC의 비공식적 민원에 대한 응답 실패<sup>21)</sup> 벌금제안 \$96,000;(2008.2.19) 등</li> </ul> </li> </ul>

### 제3 절 영 국(Ofcom)

#### 1. Ofcom 조직, 예산 및 인적 구성<sup>22)</sup>

##### 가. Ofcom 개요

영국의 통합 규제기구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은 2003년 12월 29일 공식 출범하였다. Ofcom은 기존의 5개 규제기구가 통합되어 출범된 조직으로, 방송내용 기준 규제를 맡았던 방송기준위원회(BSC, 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 상업 방송 규제를 담당했던 독립텔레비전위원회(ITC, 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통신규제를 담당했던 통신위원회(Ofcom: Office of Telecommunications), 상업라디오 규제를 맡았던 라디오위원회(Radio Authority) 및 주파수 규제정책을 담당했던 라디오커뮤니케이션위원회(Radiocommunications Agency)의 규제권한을 전부 인계받아 출범된 통합 규제기구이다. 2003년 7월 17일 6장 411조로 구성된 영국 통신법이 제정됐는데, Ofcom의 목적 및 설립과정이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Ofcom은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기업의 조직원리를 상당부분 적용하며 조화시키는 형태를 추구하고 있으며, 크게 위원회와 집행부(Board and Executive), 권고기구(advisory bodies), 기타위원회(Committees)로 구성되어 있다. Ofcom 위원회

21) CGB에서 AT&T에 대한 총 24건의 비공식적 민원 제기

22) kbs 보도자료, 유럽언론보고5－영국의 방송 통합 규제기구 Ofcom, 김석 기자. 2007. Ofcom 홈페이지.

및 집행부는 세부적으로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를 필두로, 정책집행부(Policy Executive), 운영집행부(Operations Executive)로 구성되어 있다.<sup>23)</sup>

<표 3-18> 규제기관 통합

과거 통신 및 방송 분야의 규제기관	통합 단일 규제기관
OFTEL Radiocommunications Agency	OFCOM
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Radio Authority 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	

<표 3-19> Ofcom의 주요 정책 분야 및 전략(2008/09)

항목	주파수의 시장기반 접근	경쟁 및 혁신 증진	공익목적의 전달	소비자 권리 강화 및 규제순응 증진	규제를 위한 법·경제적 프레임워크 전개 지원
최우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전파 배당 검토 (Digital Dividend Review, DDR)</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선통신을 위한 Ofcom 전략 이행</li> <li>NGN 준비</li> <li>유료TV의 경쟁 증진</li> <li>Ofcom의 모바일 관련 접근방법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접속 및 inclusion 증진</li> <li>공중서비스 방송을 위한 모델 검토</li> <li>라디오 진화를 위한 접근방법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디어 문해성 (media literacy) 증진</li> <li>소비자 보호 정책 개발 및 집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 EU법 제정에 참여</li> </ul>

23)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s)에는 소비자자문위원회, 노인장애인자문위원회, 영연방자문위원회, 주파수 자문회의가 있다. 기타 위원회(Board Committees)에는 콘텐츠징가위원회(The Content Sanctions Committees), 공정위원회(The Fairness Committee), 선거위원회(The Election Committee), 감사위원회(The Audit Committee), 재정집행위원회(The Remuneration Committee), 비상임 재정집행위원회(The Non-Executive member remuneration committee)가 있다.

항목	주파수의 시장기반 접근	경쟁 및 혁신 증진	공익목적의 전달	소비자 권리 강화 및 규제순응 증진	규제를 위한 법·경제적 프레임워크 전개 지원
현재 진행 중인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파수 자유화 및 주파수 거래 장려</li> <li>• 국제적 주파수 목표 장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선통신을 위한 Ofcom 전략 이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속 및 inclusion 증진</li> <li>• 디지털 전환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디어 문해성 증진</li> <li>• 소비자보호 정책 개발 및 집행</li> <li>• 경쟁 집행 및 분쟁 해결</li> </ul>	
정책 개발 현황 (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파수를 새로운 서비스에서 가능하게 제공 (DDR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GN 준비</li> <li>• 유료TV의 경쟁 증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중서비스 방송을 위한 모델 검토</li> <li>• 라디오 진화를 위한 접근방법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 정보 증진 및 고객의 사업자 전환 지원</li> <li>• 방송관련 신뢰성 증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시대의 콘텐츠 규제 접근방법 개발</li> <li>• 신 EU법 제정에 참여</li> </ul>
향후 고려할 점 (2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fcom의 모바일 관련 접근방법 개발</li> <li>• 새로운 경쟁 이슈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프레임워크의 융합에 대한 효과 검토</li> <li>•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제도적 변화</li> </ul>

자료: Ofcom Annual Plan 2008/09

Ofcom은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제도의 틀을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5개 분야를 주요 분야로 선정하여 각 항목에 대한 3개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 주파수의 시장기반 접근
- 경쟁 및 혁신 증진
- 공익목적의 전달(delivery of public interest objectives)
- 소비자 권리 강화 및 규제순응(regulatory compliance) 증진
- 규제를 위한 법·경제적 프레임워크 전개 지원

#### 나. Ofcom 인적구성

Ofcom의 수장은 정부에서 임명하지만,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조직 내부 구성이나

예산 등에 있어서 완전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Ofcom의 요직은 통신과 방송 부문을 다양하게 경험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아니다. 단, 조직의 형태는 공기업(Public Corporation, 공적인 분야를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임직원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Ofcom 위원회(Board of Ofcom)는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고, 이외에 CEO를 포함한 3명의 상임위원이 있다. 6명 비상임 위원(이사(Members))은 상공부(DTI) 장관과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장관이 공동으로 임명하며 임기는 3~5년이다. CEO는 위원장이 임명하고, 그 밖의 다른 상임위원들은 CEO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가 임명한다.<sup>24)</sup> Ofcom은 설립 당시 일반 기업체에서 대다수 인력들을 영입하여, 이사의 85% 이상이 일반 기업체 출신이다. Ofcom에 근무하는 총 인원은 2008년 3월 기준으로 812명이다.

Ofcom은 다양한 재원으로 운영되는데, 우선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인가비, 그리고 네트워크 및 시설 이용과 관련한 행정비 등이 있고, 전파 관리 비용은 상공부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Ofcom 2007/8년도 예산집행은 130백만 파운드(예산액: 150백만 파운드)였다.

#### 다. 사후규제 업무 담당 부서 조직

Ofcom의 규제업무는 집행부(Executive)에서 담당한다. 집행부는 Ofcom의 운영조직 및 활동관리, 정책수행 관리를 담당한다. 집행부는 정책집행부와 운영집행부로 나뉘고, Ofcom의 규제 실무를 담당하는 ‘정책집행부(Policy Executive)’는 정책이슈 전반을 관장하고, 콘텐츠위원회와 소비자위원단, 기타자문위원회 등과 협력, 전략자

---

24) 이사회는 Ofcom의 일반적 의무와 법적 책임의 수행에 대한 감독, Ofcom의 전반적 재정에 대한 감독, 2003년 통신법에 적시된 내용들을 구체화하는 주된 기관으로서 Ofcom의 전략적 방향 수립

– 3명의 상임이사(Staff Members)는 the Ofcom Executive에서 선발

- 집행국장(the Chief Executive of Ofcom), 정책집행부의 경쟁 및 콘텐츠 그룹 수장, 정책집행부의 ‘전략 및 시장개발’ 그룹 수장

원의 효율적 배분을 담당한다. 통신법 집행 등 사후규제 전반을 담당하는 주부서는 정책집행부 산하 ‘경쟁그룹(competition group)’이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타 부서 및 과와 협조체제가 가동되거나 팀이 신설되어 사안에 대응하기 때문에 경쟁그룹만 사후규제를 독점적으로 수행한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집행부 산하 정책집행부와 운영집행부에 주파수정책 그룹은 혼재되어 있다.

정책집행부(Policy Executive) 산하에는 다음의 기능담당 부서가 존재한다.

- 전략 및 시장개발 그룹(Strategic and Market Development Group)
- 경쟁정책 그룹(Competition Policy Group)
- 콘텐츠 및 표준 그룹(Content and Standards Group)
- 주파수 정책 그룹(Spectrum Policy Group)

이 중 사후규제 관련 핵심 그룹인 경쟁정책그룹은 조사, 번호관리, 규제관련 자금 관리 등을 포함하여 방송통신 모든 경쟁정책과 경제적 규제를 담당하며, 전략시장 개발 그룹은 통신분야 전략적 의사결정과 향후 5년 이후의 규제 변화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

운영집행부는 Ofcom의 운영, 업무, 인력 관리를 담당(500명)하며, Ofcom 연락센터 관할, 면허 행정, 현장 운영, 주파수 실행업무 등을 주관한다. 운영집행부 (Operations Executive) 산하에는 다음의 기능담당 부서가 존재한다.

[그림 3-14] Ofcom 정책집행부 조직도



-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s)
- 인력자원(Human Resources)
- 재정(Finance)
- 주파수 정책 그룹(Spectrum Policy Group)
- 운영(Operation) – Central, Field로 구분

[그림 3-15] Ofcom 운영집행부 조직도



## 2. Ofcom 규제권한 및 규제집행 경향

### 가. Ofcom의 규제집행 권한

Ofcom의 방송통신 통합규제기관으로 다음의 6가지 임무를 지닌다.

- 전자기장 주파수의 최적 이용 확보
- 광범위한 전기통신서비스가 국내 전역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확보
- 광범위한 고질의 TV 및 라디오 서비스 확보
- 방송에 있어서 다양성의 유지
- 시청자들을 유해내용으로부터 적절히 보호
- 시청자들을 불공정성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보호

단, 영국은 통신과 방송 정책을 서로 다른 정부부처가 관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별도의 정부부처가 존재한다. 통신 정책은 통상산업부(DTI)가 담당하며 규제는 과거에 Oftel이 수행하였다. 방송 정책은 문화매체스포츠부(DCMS)의 방송정책국이

담당하며, 과거 방송 관련 규제기구로는 ITC(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RA(Radio Authority), BSC(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 등이 있었다.

Ofcom은 통신 및 방송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집행권한을 행사한다. Ofcom의 집행권은 라디오주파수 집행, 방송 및 통신분야 집행 등 통신법 2003, 무선전신법 2006, 방송법 1990, 경쟁법 1998 등 관련법으로부터 나온다. 일단 통신법 및 방송법의 규제집행 권한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통신분야에 있어서의 경쟁법(그리고 EC조약 제81조, 제82조) 및 기업법의 규제집행권한은 일반 경쟁규제기관인 OFT와 공동으로 관할(concurrent jurisdiction)하고 있다. 관할 형식은 다음과 같다.

- 관련 규제이슈가 제기되면 각 규제기관은 해당 규제기관에 제기된 이슈를 고지하고 상호협의 하여 해당 사안을 담당할 규제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 통상적으로 통신과 관련된 사안은 Ofcom이 담당한다.

경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경쟁적 합의 금지 및 지배력남용 금지는 통신법에서도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통신사업자의 면허 조항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면허사업자는 경쟁법 뿐 아니라 통신법에 따른 면허조항도 준수해야 한다.

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가 경쟁법과 면허조항(통신법)을 위반하게 됨에 따라 규제기관은 해당사안에 적용할 법률(경쟁법 또는 통신법)을 결정해야 한다. Ofcom은 위반사항별로 적용 법률을 검토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Ofcom은 면허조항 위반시 통신법에 따라 규제집행권한을 행사할 의무를 지니게 되지만, 경쟁법 적용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신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시말해 면허조건을 위반한 경우, 경쟁법 위반을 추정할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통신법 보다는 경쟁법을 준용한다.

Ofcom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주요 부서는 3개이다. 주파수 집행팀, 방송게시판, 경쟁 및 소비자 집행게시판 등이다. 주파수 집행팀은 국내외적으로 행해지는 주파수 침해행위로부터 라디오 주파수를 보호하여, 라디오 주파수가 합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도록 한다. 방송게시판은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위해, 공격, 공정성 및 편파성 등에 대한 민원에 대해 대응하고 결정하는 등 방송관련 민원을 다루며 방송

법규 준수를 보장한다. 경쟁 및 소비자 집행게시판은 통신법, 소비자보호법, 경쟁법 하의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 등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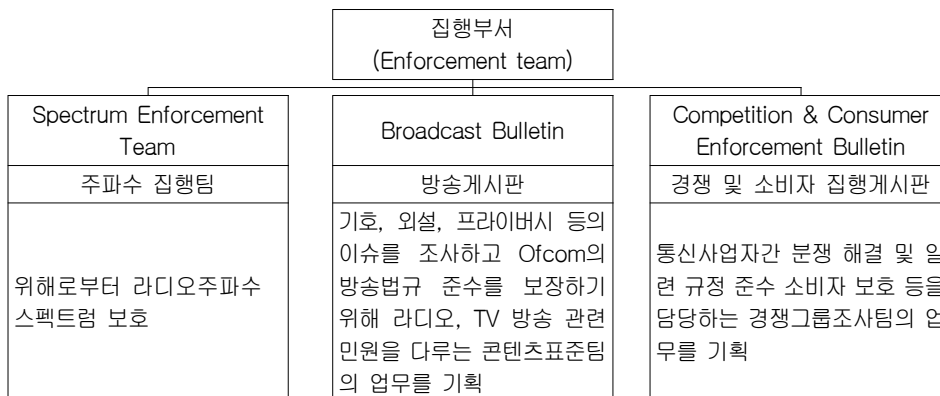
<표 3-20> 영국 통신분야에 대한 규제기관의 규제집행 권한

구분		경쟁법1998	통신법2003	기업법2002
주요내용		－ 개별 기업의 반경쟁 행위: 사후적 성격 － 제Ⅰ 장 반경쟁적 합의 금지 － 제Ⅱ 장 지배력 남용 금지 － EC조약 제81조 및 제82조와 대응	－ 경쟁법상의 금지행위는 통신법에서도 동일하게 금지행위(대개 면허조건에 포함) － 일반적으로 경쟁법과 면허 조항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 경쟁법 우선 적용	－ 사전규제성격 － 시장의 독점여부 (경쟁상황 평가) 및 합병 심사 ※ 규제기관의 제소에 따라 CC는 구조분리 규제 가능
조사 및 규제집행 권한(1차)	일반산업	－ OFT	－ 해당사항 없음	－ OFT
	통신산업	－ OFT와 Ofcom	－ Ofcom	－ OFT와 Ofcom
appeal		－ CC	－ CC	－ CC

주: CC(Competition Commission)은 1998년 경쟁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규제기관으로 기존의 MMC를 대체

자료: 비대칭 규제(2001), 진입장벽(2004)

[그림 3-16] Ofcom 집행부서 구조



#### 나. Ofcom 규제집행 경향

Ofcom이 2007/8년에 행한 주요 결정(decision)을 살펴보면, 규제를 완화하는 결정이 강화하는 결정보다 훨씬 많다. 총 42건의 결정 중, 규제를 강화하는 결정은 7건인 반면, 완화하는 결정은 22건이나 되었다. 특징을 살펴보면, 시장에 대한 영향력 기준, 전체적인 순 효과와 관련한 규제를 상당히 완화하였지만, 소비자 및 시민 보호와 관련된 규제는 강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용자보호는 강화하되 시장경쟁관련 규제는 완화하는 사후규제의 전형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sup>25)</sup>

<표 3-21> 주파수 규제 경향

규제 완화 분야	규제 강화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디오 주파수 사용의 자유화</li> <li>• 주파수 거래의 확장</li> <li>• 주파수의 시장 추가 개방</li> <li>• 상업 라디오국에 대한 규제 완화</li> <li>• 소매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oIP의 긴급서비스 접속 의무화</li> <li>• 통신서비스의 불완전 판매(mis-selling)에 대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한 규제 도입 등</li> </ul>

규제완화 부문은 주파수 관련 규제에 대한 결정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총 42건의 결정 중, 주파수 관련 결정이 21건을 차지하였다(5건은 방송, 통신과도 관련됨). 총 21건의 결정 중, 단 1건만이 규제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공영방송인 지상파 방송 주파수의 미래 가격과 관련된 사안이다.

방송 관련 결정도 다수가 규제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총 9건의 결정 중, 4건이 규제를 완화시키고, 2건이 규제를 강화시키도록 결정되었다. 강화된 규제사항은 지상파 방송 주파수의 미래 가격, TV Part1 참여(시청자 및 소비자 보호)이다.

25) 집행가이드라인 초안에서도 소비자 보호가 Ofcom 임무의 최우선순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lt;표 3-22&gt; 방송 규제 경향

효율화 및 공동규제 분야	혼재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T OSS 분리</li> <li>• 라디오의 미래: 아날로그 상업 라디오의 로컬니스(localness) 및 DAB의 스테레오 및 모노 방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lf-help TV relay와 디지털 전환</li> <li>• 독립 프로듀서로부터 주문되는 PSBs를 위한 가이드(Guidance for PSBs commissioning from independent producers)</li> </ul>

통신관련 규제는 이용자보호 측면에서 규제강화와 서비스시장경쟁 관련 규제완화의 경향이 혼재되어 있다. 총 18건의 결정 중, 6건이 규제를 완화, 5건이 규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규정되었다.

&lt;표 3-23&gt; 통신 규제 경향

규제 완화 분야	규제 강화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복가능성(BT의 소매 교환선 서비스 규제)</li> <li>• 공중전화 보편적 서비스 관련</li> <li>• BT의 재정상황 보고 의무</li> <li>• UK브로드밴드의 면허변경</li> <li>• Digital Dividend Review</li> <li>• 기내 휴대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화번호의 신뢰(confidence) 강화</li> <li>• 번호이동성</li> <li>• VoIP 서비스 규제(긴급서비스 연결)</li> <li>• 요금규제의 이행 감시</li> <li>• 서비스 수준 보장</li> </ul>

&lt;표 3-24&gt; Ofcom의 주요 결정 - 규제변화의 방향

주요 결정	해당 분야	조치방향
전화번호의 신뢰성(confidence) 향상(General Condition 17 수정)	통신	강화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소비자를 위한 번호이동성	통신	
VoIP 서비스 규제: 긴급서비스 접속	통신	
요금규제 관련 이행사항 점검	통신	
서비스 수준 보장	통신	
TV Part 1 참여: 시청자와 고객 보호	방송	
지상파 방송용 주파수의 미래 가격	주파수+방송	

주요 결정	해당 분야	조치방향
BT OSS 분리	방송	효율화/ 공동 규제
라디오의 미래: 아날로그 상업 라디오의 로칼니스(Localness) 및 DAB의 스테레오 및 모노 방송	방송	
반복가능성(Replicability): BT의 소매 비즈니스 교환선 서비스 관련 규제	통신	완화
공중전화박스 관련 지역별 차별적인 요금부과 관련 동의(Public Call Boxes Consent for non-uniform charging for geographic tariffing trials)	통신	
BT의 2006/7 회계보고 의무에 대한 변화	통신	
방송관련 사례의 인가 절차	통신	
UK Broadband의 면허 확인 신청	통신+주파수	
기내 이동전화 사용(MCA)	통신+주파수	
무선전신면제: 라디오 주파수 확인 장치	주파수	
WRC-07 어젠다 1.4	주파수	
주파수 부여: 10, 28, 32 및 40GHz Bands	주파수	
무선전신면제: 울트라와이드밴드 장치	주파수	
10, 28, 32 및 40GHz Bands 부여 관련 규제	주파수	
면허 면제 프레임워크 검토	주파수	
주파수 부여: 1452~1492MHz	주파수	
주파수 사용 권리	주파수	
주파수 프레임워크 검토: 공공부문	주파수	
2008 무선전신(면제) 규제를 위한 결정	주파수	
1452~1492 MHz 부여 관련 규제 설립	주파수	
169MHz Ex-ERMES Band의 미래 사용	주파수	
2003 무선전신(면제) 규제 수정	주파수	
라디오의 미래: 차기단계	방송	
텔레비전 사인	방송	
디지털 배당 검토	통신+주파수 +방송	Mixed
지역번호 보존 조치	통신	
통신서비스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소비자 보호	통신	
BT의 규제적 회계보고 및 감사 의무에 대한 변화	통신	
BT의 면제	통신	
번호 가용성: 09프리미엄 요율 서비스를 위한 번호 제공	통신	

주요 결정	해당 분야	조치방향
PhonepayPlus 시행령 수정 승인	통신	Mixed
무선전신면허 요금 - 수정	주파수	
무선전신면허요금 규제 설립을 위한 결정	주파수	
2008 무선전신(자동단거리레이다)(면제)(no.2) 규제 설립을 위한 결정	주파수	
Self-help TV relay와 디지털 전환	주파수+방송	
독립 프로듀서로부터 주문되는 PSBs를 위한 가이드(Guidance for PSBs commissioning from independent producers)	방송	

자료: Ofcom Annual Report & Accounts 2007/8

### 3. 사후규제 관련 법령, 법적 권한

#### 가. EU 규제 프레임워크와 사후규제

2002년 EU의 새로운 규제틀인 New Framework(New Regulatory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nd Associated Services)는 미디어 융합에의 대응, 진입규제 완화, 그리고 사전규제로부터 사후규제로의 이행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담고 있다.

이러한 EU 신규체계 도입의 목적은 경쟁 원칙을 전자통신 시장의 주된 규제수단으로 삼기 위함이다. 단, 시장의 완전한 경쟁성 확보 이전에는 분야별 사전규제가 바람직하고, 향후 사전규제는 점차 개선하여 경쟁법 수단보다 효과적인 경우에 이용한다. 이러한 EU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입법화하였고, 2003년 영국은 새로운 통신법을 제정하였다.

신규체계의 규제권한 배분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자통신분야를 대상으로 경쟁법 원칙을 반영하여 규제하되, 유효경쟁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사전규제를 유지한다. 통신시장에 유효경쟁이 없는 경우 통신규제기관이 사전규제와 사업자간 분쟁조정을 담당(경쟁원칙을 동일하게, 집행은 별도로)한다. 단, EU차원의 지배적 지위의 남용/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통신규제 적용 조항은 없다(⇒ EC조약 제81, 제82조를 통신시장에 적용).

신규체계에는 원칙적인 규제기관간의 협력 규정은 있지만, 규제기관간 역할 배분 문제는 회원국 자율에 맡기고 있다.

나. 2003년 통신법<sup>26)</sup>하 규제권한

## (1) 규제집행권

통신법은 Ofcom의 권한과 전자통신서비스, 콘텐츠서비스, TV 및 라디오 서비스에 대한 규제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통신과 방송의 개념을 아우르는 ‘전자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IPTV와 같은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Ofcom은 Oftel, ITC, BSC, RA, Rau 등 5개 기관의 기능을 통합한 단일 규제기구로서 적절한 수준의 경쟁을 촉진하여 시민 또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활동한다.

방송의 경우 지상파방송과 기타 플랫폼을 구분하여 규제한다. 지상파의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되지만, 기타 플랫폼은 인프라와 콘텐츠로 구분되어 규제한다. 콘텐츠 규제도 linear service는 EU의 ‘국경없는 TV지침’에 근거해 Ofcom이 방송코드를 정하여 규제하지만, VOD 등의 non-linear 서비스는 자율규제시스템(ATVOD: The Association for TV On-Demand)을 적용한다.

사후규제 관련 법조항은 경쟁 및 분쟁해결 관련 조항으로 나뉜다.

- 경쟁관련 조항: Part 5(통신시장의 경쟁) 제1장 경쟁법하 Ofcom의 기능
- 분쟁해결 조항: Part 2(네트워크, 서비스, 라디오주파수) 제3장 분쟁 및 제소
- 기타 규제

※ 관련 법조항 첨부 참조

## (2) 강제집행절차

통신법상 집행절차의 근거규정은 통신법 제94조—제104조에 명시되어 있다. 소비자로부터의 민원의 제기에 의해 Ofcom의 조사가 개시되고, 사업자의 조건(condition) 위반에 대한 결과에 따른 고지 및 강제집행이 수행된다. 이외에 행정제재금(penalty), 서비스 공급 정지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집행절차의 내용 및 절차상의

26) 한남대학교, 주요국의 통신규제 동향 및 개편성과, 2007.

Ofcom 권한은 아래와 같다.

① 신고(민원, Complaint)

1998 경쟁법 위반 또는 2003 통신법의 사전규제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민원가 들어올 경우 Ofcom의 정식조사권이 발동한다. 접수되는 민원은 다음의 요건을 갖출 의무가 있다.

민원요건 <sup>27)</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반행위가 관련된 사전규제 의무 또는 경쟁법상 의무를 명확히 적시</li> <li>• 경쟁법 등을 위반했다는 구체적이고 관련있는 증거 제출</li> <li>• 제출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는 민원회사의 임원 진술서</li> </ul>
---------------------	---

② 조사절차

Ofcom의 조사범위는 분쟁해결절차와 달리 경쟁저해적 행위의 증거를 발견할 경우 범위의 구속이 없다. 분쟁해결절차와 다른점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초안에서 상술한다.

민원가 접수된 후 사건의 처리기한은 경쟁법 위반 조사와 통신법 위반 조사의 경우에 따라 다르다. 경쟁법 위반 조사의 경우 ‘아무런 조치 취할 필요 없음’ 결정은 6개월이며, ‘법위반결정’은 12개월 내에 사건이 처리되어야 한다. 반면 통신법상 사전규제 의무 위반의 경우 4개월 내에 위반혐의가 없을시 ‘조사종료’ 결정 또는 ‘조건 위반 고지’를 한다.

Ofcom은 조사권한과 관련하여 정식정보조사권한을 갖고 있다. 이는 2003 통신법 제135조-제146조 및 1998 경쟁법 제25조-제3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식정보권한 (경쟁법 및 통신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제공 지연 방지</li> <li>• 정식정보제공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제권한 행사 가능</li> <li>• 개방적이고 투명한 조사진행으로, 조사진행상황 게시판에 공표</li> </ul>
-----------------------	--

27) 2004 Ofcom Guidelines for the handling of competition complaints and disputes  
‘Annex 1: Format for submitting a complaint to Ofcom’

## ③ 조건위반 고지: 제94조

Ofcom은 사업자의 사전규제조건 위반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결정하면, 위반여부에 대한 Ofcom의 판단 내용, 위반한 조건 및 위반내용, 이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 존재 사실, 일정 기한 내에 위반으로 초래된 결과를 제거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Ofcom은 위반행위에 대해 1998년 경쟁법 제41조에 근거한 더 적절한 절차가 있다고 결정하고 또한 공표하는 경우 2003 통신법상 고지절차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 ④ 조건위반에 대한 강제집행 고지: 제95조

조건위반을 고지 받은 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기간이 만료된 경우, Ofcom은 사업자에게 조건준수를 위한 조치와 조건위반 결과 제거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고지를 한다. Ofcom의 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 내용에 대한 준수 의무가 있으며, 민사소송절차를 통한 금지명령이나 기타 적절한 구제수단을 강제집행 가능하다.

## ⑤ 조건위반에 대한 행정제재금: 제96조

Ofcom은 상기한 법집행 고지와 함께 행정제재금(penalty)을 부과할 수 있다. 고지를 받은 자는 제재금은 Ofcom에 납부해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된다. 이러한 제재금의 액수는 사업자의 총매출액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위반행위에 비례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 ⑥ 조건위반을 이유로 한 서비스 공급 정지: 제100조

Ofcom은 사전규제조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자에 대해 행정제재금 부과나 강제집행 고지를 통해 조건의 충실한 준수 확보에 실패할 경우, 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 권리를 정지 또는 특정한 방식으로 제한하는 명령(direction)을 부과할 수 있다. Ofcom의 공급정지 명령은 효력의 시간적 제한이 없다. 단, 당해 사업자에게 명령안 내용 고지 및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 제안 등의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고 난 후에만 정지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관련시설을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약식판결에 의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기소하여 판결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제103조).

⑦ 사전규제조건 또는 법집행고지의 위반시 민사책임

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위반 행위가 그 결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것일 경우 위반 사업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 사업자는 의무 위반을 피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 조치 및 정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항변이 가능하다.

⑧ 긴급사건 처리권한: 제98조

조건위반 고지를 할 대상으로서 당해 사안이 긴급한 사건이라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긴급사건처리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긴급사건’이란, 위반행위가 공공 안전, 건강 및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 통신사업자 또는 관련설비의 이용을 제공하는 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운영상의 문제를 초래하거나 통신망, 서비스, 관련 설비를 이용하는 자들에 대한 경제적, 운영상 문제를 초래하거나 위험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긴급사건 처리권한과 관련하여 Ofcom은 제94조에 의한 고지 상 기간을 1월 이하로 단축할 수 있는 권한, 사업자에게 통신망 서비스, 시설 대여 등 사업권을 정치할 권한, 사업권의 제한을 명할 권한을 가진다.

(3) 분쟁해결 권한<sup>28)</sup>

Ofcom의 분쟁해결 권한의 법령 근거는 2003 통신법 제185조에 두고 있다. Ofcom에게 분쟁해결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 당사자들 간의 상업적협상이 실패한 경우, 당사자들이 이를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면 Ofcom은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를 확인 또는 분쟁 해결 명령을 발하게 된다.

분쟁해결에 해당되는 대상은 망접근의 제공, 서비스, 주파수와 관련하여 Ofcom이 부과한 규제 의무에 관한 것들로 제한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28) 이원우 편, 정보통신법연구 2(통신법의 집행절차 및 불복제도), 2008.

- EU의 기준에 부합되고 분쟁의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해결에 이를 수 있는 ‘대안적 수단’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 일방당사자가 지배적 사업자이거나 당사자들의 합의 실패로 경쟁 또는 소비자 이익에 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4) 분쟁해결 절차

##### ① 분쟁해결 신청요건

분쟁해결의 신청시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관련 사전규제조건 적시
- 분쟁의 범위 명확히 서술
- 요청할 구제수단 및 이유 적시
- 모든 쟁점에 대해 상사협상을 했다는 서면 증거
- 당해 분쟁을 상사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모든 노력을 했다는 사업자 임원의 진술서

##### ② 분쟁해결 신청

분쟁해결 신청이 접수되면 Ofcom은 스스로 자기해결의 적합성을 결정한다(통신법 제186조). 즉, 이용가능한 다른 수단이 있고 동 수단이 EU 통신법에 부합하며 신속하고 만족스럽게 해결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된다. 절차상 시한과 관련하여 Ofcom은 신청 후 15일 이내에 분쟁해결 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분쟁의 범위 규정 및 공표 이후 5일 동안 이해관계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 ③ 분쟁해결 집행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경우 10일간 해결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consultation)를 갖는다. 동 절차가 끝나면 최종결정으로 당사자의 권리, 의무 확인 및 명령(direction)을 부과한다. 최종결정 및 결정이유는 공표된다.

한편, 분쟁해결시 통신법상 규제 의무와 조화 의무. 즉, 사전규제조건과 일치하도록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사전규제조건으로 부과되어 있는 내용이 아

닌 새로운 형태의 망접속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새로운 권리, 의무 부과가 불가능하다. 이는 Ofcom에 의한 분쟁해결이 규제집행의 일부라는 의미이다.

### (3) 기타 규제권한<sup>29)</sup>

Ofcom의 사후규제 권한과 관련하여, 위의 주요 권한 외에 다음과 같은 기타 규제 권한이 존재한다.

#### ① 기술규제

기술규제는 공급자들에게 일정한 기술표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할 권한을 말한다. 사회적 위해방지를 위한 규제의 일종으로, 개인들이 전기통신망으로 인해 형성되는 전자기장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 또는 회피함으로써 일반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정하는 것이다.

#### ② 사업영역규제

사업자의 역무간 이동은 경쟁법이나 기업법 규정상 규제되는 경우가 아니면 자유이다.

#### ③ 가격규제

가격규제는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요금규제와 SMP 규제가 있다. 보편적서비스 요금 규제는 서비스 제공받는 자가 이를 이유로 불필요한 추가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 금지한다(제68조).

SMP 규제는 최종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요금규제(제91조), 망접속료에 대한 가격 규제(제88조), 사업자선택 또는 사업자 사전선택시의 관련 가격규제(제90조), SMP 시설조건에서 전기통신망에 hard-wired 전화사용에 관한 가격규제(제93조) 등이 포함된다.

한편, 가격통제 관련결정 시 Ofcom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있어 특별 규정이 존재한다. 결정으로 영향을 받은 자가 경쟁이의심판소에 불복을 제기한 경우, 경쟁

29) 이원우 편, 정보통신법연구 1(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2008.

이의심판소는 가격통제에 관한 쟁점은 경쟁위원회에 회부하여 판단을 구하고, 동심판소도 그 판단에 구속된다.

#### ④ 품질규제

품질 규제는 주로 시장 경쟁 원리에 의거한다. 단, 시장에서의 소비자 선택이 실질적으로 품질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공급자들이 자신의 서비스 품질에 대해 최종이용자들을 위한 명확하고 비교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한다.

#### 4. 규제기관 내부규제 규칙: 집행가이드라인

Ofcom은 상술한 내용에서와 같이 2003년 통신법에 의거하여 서비스 사업자에게 부과된 선행 조건 위반 관련 민원을 조사할 권한 그리고 EU 지침(EU Directive)에 의거하여 부과된 선행 조건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에 2004년 ‘EU지침상 요건의 위반에 관한 민원 및 분쟁과 경쟁관련 민원에 관한 가이드라인’<sup>30)</sup> 그리고 2006년 ‘집행가이드라인(초안)’<sup>31)</sup>을 발표하였다. Ofcom은 2004년 2월 6일 가이드라인(2004)의 초안을 공표하였으며 3월 19일까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2006년 7월 6일 집행가이드라인(2006)을 공표하고 9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였다. Ofcom은 많은 의견을 접수하여 가이드라인 확정 과정에 이를 고려 대상으로 삼았다. 아래에서는 상기한 두 개의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Ofcom의 분쟁 및 민원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를 설명하였다.

##### 가. Ofcom의 집행력

규제관련 규칙 및 경쟁법을 집행하고, 분쟁을 해결할 조치를 취할 권한은 2003년

30) Guidelines for the handling of competition complaints, and complaints and disputes about breaches of conditions imposed under the EU Directives, July 2004.

31) Draft Enforcement Guidelines, July 2006.

통신법, 1998년 경쟁법, 2002년 기업법, 1996년 방송법에 근거하며, Ofcom은 소제기 및 분쟁의 조사, 통신법이나 방송법에 부과된 조건의 집행, 분쟁 해결, 정보수집 등의 집행권한을 행사한다.

#### <표 3-25> Ofcom의 규제원칙

##### <Ofcom의 규제원칙>

- 규정된 정책목표에 근거하여 공표되고 문서화된 계획을 통해 규제
- 시장 스스로 달성할 수 없는 공공정책 목표를 위해 특정 규정에 근거한 의무가 존재할때 개입
- 원칙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니나, 요청시에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입
- 개입은 증거에 기초하고 적절하고 일관되며 투명하도록 노력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 메커니즘이 방해되는 조치가 안되도록 노력
- 시장을 지속 연구하고 기술적 부분에서 최전선을 선도
- 시장을 규제하기 이전에 충분한 협의와 규제조치의 영향을 평가

자료: 집행가이드라인 초안

분쟁당사자 및 민원제기자는 조치를 취하기 전 다음과 같은 Ofcom의 조언을 고려해야 한다.

- 관련 문제에 대해 Ofcom에 먼저 협의
- 상업적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
- 가이드라인의 규칙을 철저히 숙지
- 이전에 결정된 유사 사례를 점검
- 가능한 충분히 많은 증거와 정보를 취합
- 대안을 고려할 것
- 가이드라인이 통신법, 경쟁법 등 규제 관련법이나 EU법 등을 대체하거나 해결해 준다고 단정해서는 안됨

나. Ofcom 집행권한 및 관련 절차

##### (1) Ofcom의 집행활동 관련 권한

Ofcom의 집행력은 Ofcom 경쟁그룹 내의 ‘조사(investigation)’라는 특정적인 지위

에 의해 행사된다. 조사팀의 업무는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방송과 통신 모두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융합’의 성격을 지닌다.

※ 방송콘텐츠 이슈 및 주파수 관련 개입 문제는 조사에서 제외  
집행활동의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분쟁 및 소제기는 전용부서인 운영팀(Operations Team)이 담당하며, 제기된 안은 담당자(case leader)에게 전달되고 case 관리자(Case Director, 보통 조사팀장)의 감독에 들어가게 됨
- 2) Case가 승인되면, 15일간의 문의단계(Enquiry Phase)에 들어감. 동 단계는 조사를 개시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분쟁의 범위나 조사의 성격을 마련하는 단계임
- 3) 문의 단계의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세부사항을 적시한 경쟁게시판(Competition Bulletin)을 공개함
- 4) 조사 단계에는 조사팀 멤버가 이끄는 case team이 case를 관리하고, 변호사, 경제학자, 기술고문, 회계금융 분석가 및 정책자문가 등의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들어가며, 외부인사들이 들어가기도 함
- 5) 조사 시작시에는 case 마다 목표 종료일이 포함된 특정 일정표(timetable)가 마련되고, Ofcom은 당사자에게 진행과정을 적절하게 통지함
- 6) 조사가 종료되면 경쟁게시판 개시를 종료하고 필요한 경우 결정 등의 관련 문서를 마련함
- 7) 6개월마다 리포트를 발간하여, 가이드라인의 적용이나 조사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및 종료된 조사와 관련된 결정 등을 공개함

이 밖에 Ofcom은 경쟁법에 의거하여 다음의 정보수집권한을 가진다.

- 개인에게 특정 문서 또는 특정 정보를 요구할 권한
- 영장없이 사업자 건물 출입하거나, 영장을 가지고 어떤 형태의 사업장을 출입할 권한

※ 조사 대상목록

- 경쟁법 금지조항(1장, 2장) 위반에 대한 제기
- 통신법 조항 및 통신법에 근거한 규제조건 위반에 대한 제기
- 통신법하 Ofcom의 관할권 내의 분쟁
- 기업법(Part 8) 위반에 대한 제기
- 소비자보호법과 불일치하는 것에 대한 제기
- 방송전자프로그램가이드(Broadcasting Electronic Programme Guide) 조건이나 코드의 위반에 대한 제기
  - ※ 통신법 및 방송법에서 부과된 조건의 집행
- Ofcom은 다음 같이 다양한 규제 규칙 및 조건들의 합치를 보장하기 위해 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일반요건(general conditions)
  - 보편적서비스요건(universal service conditions)
  - 지배적사업자요건(SMP conditions)
  - 접속요건(access conditions)
  - 주파수거래요건
  -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송 경쟁 보장 요건

또한 일반적인 집행 지시 및 조치권을 갖는 바 경쟁법에 근거하여 Ofcom 스스로 위반행위를 종료시키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지시 및 조치를 내릴 권한을 가진다.

- 일반요건이나 SMP요건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결정하는 통지(notification)(제94조)
- 서비스 및 기기 공급을 중지하는 지시(direction)(제100조, 제101조, 제124조)
- 개인이 지속적으로 전자통신네트워크 서비스를 악용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결정하는 통지(제128조)

Ofcom의 권한은 규정에 명시된 권한에 국한되지 않으며, 경찰과 같은 여타 기관과 병행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벌금부과권한을 보유한다. 통신법 제39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

- 제139조에 규정된 절차 이후 제135조에 규정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벌금 부과

- 제140조, 제141조의 절차 이후에 발생된 심각하고 반복되는 위반에 대해 서비스 공급을 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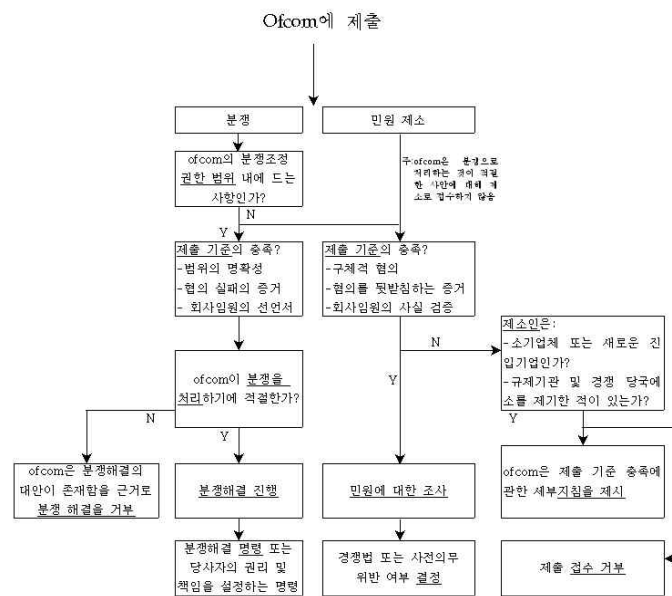
또한 경쟁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권한도 가진다.

## (2) 세부집행 절차

Ofcom의 집행 절차는 2006년 공표된 집행가이드라인(초안)에 설명되어 있다. 분쟁 및 민원제기와 관련하여 ‘문의단계’가 시작되고, 사안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는 ‘조사단계’가 이어지며,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가 적용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령, 경쟁법 등 법 집행이 진행된다. 집행 이후에는 ‘compliance 단계’가 이어지며, Ofcom의 결정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다.

분쟁과 민원 각각의 유형에 따른 절차는 아래의 세부내용 및 표와 같다.

[그림 3-17] 분쟁 및 민원의 집행절차



자료: Ofcom 가이드라인

### ① 민원 또는 분쟁의 접수(Receiving Complaints and Disputes)

Ofcom은 접수되는 모든 민원을 고려한다. 그러나, 문의 단계를 개시하기 전에 민원을 제기시에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해당 주장이 충분한 근거가 없거나 소 자체가 부적절할 경우 Ofcom은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민원 접수가 되지 않는 가장 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민원 제기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특정 규제 조항에 적용되지 않거나, 만약 적용 된다면이라도 어떠한 증거도 없거나 위반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없을 경우 2) 민원 제기가 반경쟁에 관하여 논쟁중인 행위(예를 들어 불법 차별, 가격 초과)에 대해 불법적인 이유 및 민원 당사자의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에 피해 정도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 없이 접수 될 경우 3) 논쟁이 된 문제가 조직 간의 영리적 혹은 계약적 불일치에서 온 결과 이거나 규제 관련 문제가 아닌 경우(통신법 제185조에 적용되지 않는 소의 경우) 4) 민원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가 Ofcom의 contact center에 의해 더 효과적으로 처리 될 경우 5) 민원 내용이 다른 기관의 관할임이 명백하거나 다른 기관이 그 민원을 다루는데 있어 더 적합하다고 명확히 판단 될 경우

<표 3-26> 분쟁 및 민원의 접수 조건

접수 조건	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쟁에 관한 상업적 배경을 명확하고 총괄적인 설명을 포함해야 함</li> <li>- 관련된 사전 규제 혹은 다른 규제 조건을 포함해야 함</li> <li>- 분쟁 범위에 관한 명확한 진술서</li> <li>- 분쟁의 모든 자세한 사항과 이유 그리고 선호하는 구제방안</li> <li>- 분쟁 범위안의 모든 쟁점에 관한 통상 교섭의 서면 증거</li> <li>- 회사 임원이나 간부에 의한 진술서</li> </ul>
	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사전 규제, 위반한 법, 혹은 주장된 경쟁법 위반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 함(and/or Articles 81 and 82 of the EC Treaty)</li> <li>- 실제 이용 가능한 증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잠재적 증거 혹은 상대방 기업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와 같은 민원 당사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충분한 사실적 증거를 제출해야 함</li> <li>- 제시한 증거가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회사 임원이나 간부에 의한 진술서 가 급적이면 CEO의 진술서로 보증해야 함</li> </ul>

한편, Ofcom은 다음과 같이 분쟁 세부 사항과 관련한 명확한 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만 분쟁을 받아들인다. 1) 관련 사전 조건(즉, 접근 요청에 부합하는 요건을 부과하는 선행 조건) 2) 분쟁 범위에 대한 명확한 진술 3) 선호 규제책에 대한 상세 기술과 그 사유 4) 분쟁 영역이 포괄하고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상업적 협상을 진행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5) 회사가 상업적협상을 통해 분쟁을 조정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회사 임원의 진술

### ② 문의단계(Enquiry)

문의 단계는 Ofcom이 민원의 본질 및 분쟁의 범위를 이해하고 조사를 실행 할 것인지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문의 단계 동안, Ofcom은 민원 혹은 분쟁의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 문의 단계 동안 Ofcom은 조사에 착수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즉, 민원을 조사할 것인지, 분쟁을 접수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다. 시간적인 제한과 관련하여 민원이나 분쟁 접수 후 문의 단계는 15일 이상 지속 될 수 없다. Ofcom은 15일 안에 조사단계로 나아 갈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타당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문의 단계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 ③ 조사단계(investigation)

조사는 Ofcom의 조사개시 결정으로 시작된다. Ofcom이 조사 개시를 결정하면 민원 제기자, 기타 관련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경쟁게시판(Competition Bulletin Entry)을 만든다. Ofcom은 조사 개시후 경쟁게시판을 만드는 목적을 조사 대상의 명확한 범위 설정으로 두고 있다. ‘분쟁’ 발생시 조사 단계에서 분쟁의 범위를 확정하는 경쟁게시판을 공고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조사기간 동안 범위를 수정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이해 당사자에게 분쟁의 범위에 대해 이의 제기할 5일의 시간을 부여한다. 이의 제기내용에 당사자간 상업적 협의가 없었다거나 협의를 위한 합리적 시도가 없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한 이슈는 동 범위에서 배제되며 ofcom의 해결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원’의 범위는 ‘분쟁’과 달리 민원 제기자를 확인한 후 조사대상을 확정하는 경쟁게시판을 공고함으로써 정해진다. 단, 분쟁의 범위 또는 조사대상의 내용이 Ofcom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위반이 일어나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 Ofcom은 스스로 개시하는 조사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

경쟁 게시판은 Ofcom의 조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통로로, 게시판을 통해 드래프트 결정사항 또는 절차상의 주요 변화 등을 업데이트 하게 된다. 조사의 개시 및 종료시에 모든 조사내용의 세부사항을 게시판에 공표한다. 단, 조사의 진행에 위해가 있을 경우에는 공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조사기간 중 조사의 정확성 및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사례팀(case team)과의 연락을 제공한다. 민원제기자 및 분쟁 당사자와 조사대상자는 조사중인 사례팀과 정기적인 연락 및 조사 진행과정에 대한 내용 공지를 받게된다. 매 4주마다 공지받게 되나 더 짧은 기간안에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 ④ 결정(decision) 및 해결(resolving)

분쟁의 결과가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와 결부되어 있을 경우 Ofcom은 그 결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Ofcom은 일반적으로 분쟁 조정에 대해 근무일 기준 10일간 자문을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그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다. Ofcom은 모든 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 그리고 결정의 사유를 공표한다. Ofcom은 분쟁 영역을 공표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Ofcom에 연락을 취하여 관련 정보와 근거를 제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Ofcom의 민원 관련 결정은 두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 적용해야 할 합의 사항에 대한 지시라기보다는 경쟁법 또는 구체적인 사전(事前) 선행 조건 위반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위반이 없었다는 결정에 도달하면 Ofcom은(경쟁법 또는 EC 협정 제81조 및 제82조에 의거하여) ‘민원제기 근거 없음’ 결정이나(통신법에 의거하여) 사안 종료 선언서를 발표하고 그러한 결정에 이르게 된 사유를 제시한다. 반면 선행 조건 또는 경쟁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 Ofcom은 경쟁법 또는 통신법에 상술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한편, Ofcom은 긴급한 경우요청에 의해 또는 자신의 결정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보유하고 있다. 경쟁법 또는 통신법에 근거한 긴급 및 잠정조치는 다음과 같다.

- 통신법하 긴급조치<sup>32)</sup>: 제94조 상의 통지(Notification) 시간을 단축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복구할 수 있음. 또한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음
- 경쟁법하 잠정조치<sup>33)</sup>: 조사 완료 이전에 경쟁법 규정이 위반되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면, 특정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35조 상 잠정조치를 명령할 권한을 가짐

#### ⑤ 분쟁해결(Resolving disputes)

통신법에 따른 Ofcom의 분쟁해결 개입은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이므로 분쟁해결 자체가 규제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중재, 조정, 전문가결정 등 대안적 해결 장치(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ADR)와 달리 통신법에 의거하여 Ofcom에 회부되는 분쟁은 ‘규제상의’ 분쟁(regulatory disputes)으로 불린다.

이같은 규제상 분쟁을 가이드라인은 4가지로 열거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다.

<표 3-27> Ofcom이 다루는 분쟁의 유형

분쟁의 4가지 유형	근거조항
－ 네트워크 접속 공급과 관련 분쟁	통신법 185조 1항
－ 배제된 분쟁 <sup>34)</sup> 이 아닌 분쟁으로, 통신법 2부에 기재되지 않은 무선주파수 관리와 관련된 법규나 통신법 2부에 의해 부여된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된 분쟁	통신법 185조 2항
－ 기타 회원국과 관련된 185조 1항, 2항 하의 분쟁(국경간 분쟁)	통신법 189조
－ 2003년 7월 25일 이전에 통신장관에게 회부된 상호접속과 관련된 분쟁	통신법 부칙 18(22(2))

32) 통신법 제98조(2)

33) 경쟁법 제35조

34) 통신법 185조 7항에 특정된 4가지 유형의 배제된 분쟁(excluded disputes)은 i) MP 요건에 의한 통신사업자에 부과된 의무 ii) 125조-127조의 위반 iii) 128조-13조에 의해 사업자에 부과된 의무 iv) 134조에 기재된 사업자의 운영에 대한 분쟁을 말한다.

규제상의 분쟁은 통신법 45조에 기재된 조건의 저촉에 관한 집행조치와 다른 성격을 가진다. 규제상 분쟁 해결시 Ofcom은 스스로 다룰 분쟁을 고려할 의무가 있으나, 사전 요건과의 일치를 보장하는 집행조치는 통상 자의적인 조치의 성격을 띤다. 또한 절차상으로도 전자는 규정상의 시간표가 존재하나, 후자는 행정적인 시간표를 정할 수는 있으나 규정상으로 명시된 시간표는 없다. 마지막으로 권한 및 결정의 결과 측면에서, 집행조치시 Ofcom은 상기한 바와 같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민사소송에서 시행되는 집행 통지, 벌금부과, 서비스 공급중지 명령, 민사소송으로의 이행에 대한 동의 등의 세부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분쟁해결의 경우는 반대인바, 비록 Ofcom의 결정은 분쟁당사자들을 구속하나 집행조치와 유사한 규정상의 권한있는 조치는 취할 수 없다.

분쟁해결시에는 EU 프레임워크지침 8조상의 정책목적에 부합해야 하는 바, 통신법 4조에서도 6가지 공동체 요건(community requirements)을 적시해놓고 있다. 1) 통신시장의 경쟁 증진 2) 유럽역내시장의 발전에 기여 3) EU 회원국 시민의 이익 증진 4) 기술중립적인 조치 5) 네트워크 접속 공급 및 서비스 상호이용성 제고 6)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서비스 상호이용성 촉진에 필요한 국제적 표준과의 일치 제고

분쟁 관련 Ofcom의 주요 권한은 주파수 관련 분쟁에서는 분쟁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설정하는 선언에 국한되는 것과 달리 광범위하다. 주파수 관련 분쟁 이외의 모든 분쟁 해결을 위한 결정을 내릴 때 Ofcom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 분쟁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설정하는 선언
- 분쟁 당사자들 간의 기간이나 화해 조건을 확정하는 지침
- 분쟁 당사자가 행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지침, Ofcom에 의해 확정된 기간과 조건에 놓여있는 당사자들 간에 화해를 시작하는 것
-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 지불하는 Ofcom에 의한 적절한 의무를 부과하는 결정에 효력을 부여하려는 목적상 불충분 지불이나 과도 지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총액을 지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총액을 지불해야 하는 분쟁 당사자

에게 당사자가 행할 수 있는 지침을 부여

분쟁을 다룰 경우 Ofcom이 고려하는 것에는 관할권 문제 및 분쟁의 회부 요건이 있다. 먼저, 관할권 문제와 관련하여 185조 ‘하의’ 분쟁인지 여부는 Ofcom은 회부된 분쟁이 상기한 4가지 유형의 규제 분쟁 범위 안에 있는지 고려하고 판단하는 것에 달려있다. 분쟁 주체 및 객체에 대한 관할권을 말한다. 회부된 분쟁의 내용이 Ofcom 관할권 범위 밖이거나 분쟁의 주체(예를 들면 통신사업자가 아닌 경우)가 범위 밖인 경우 Ofcom은 분쟁을 다루지 않는다. 분쟁 회부 요건과 관련하여 185조와 ‘일치하는’ 분쟁인지 여부에 대하여 Ofcom은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다룰지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의 신청서를 고려한다. 이것은 위의 관할권 문제와 연결되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분쟁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충분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Ofcom은 요건 불충분이라는 근거하에 분쟁 접수를 거부한다. 이 경우 통신법 185조 5항의 요건통지(notice of requirements)로 절차가 이동한다.

Ofcom은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분쟁 처리 또는 해결을 통상적으로 거부한다. 185조에 따라 분쟁이 회부되었음이 입증되면, Ofcom은 분쟁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결정해야만 한다. 통신법은 다음을 고려한 경우 자신에게 회부된 분쟁의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분쟁 해결에 대체수단이 있는 경우(ADR 또는 기타 수단);
- 이들 수단에 의한 분쟁 해결이 통신법 4조의 공동체요건(community requirements)에 부합하는 경우
- 이들 수단이 분쟁 해결에 즉각적이고 만족할 만한 해결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

Ofcom은 사안별로 ADR(또는 기타 수단)이 이들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선택인지 고려한다. 특히, Ofcom은 분쟁당사자의 신청문에 기재된 분쟁의 역사를 고려한다. 그리고 타방 당사자나 당사자들에 의해 Ofcom이 접수한 쟁점에 대한 논평도 고려한다.

결국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는 Ofcom의 분쟁해결 처리 여부와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Ofcom은 자신에게 회부된 개별 분쟁에 대한 대체 수단의 존재 문제를 사안별로 고려할 것이다. 단, ADR의 이용가능성은 Ofcom이 분쟁을 처리할 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유일한 “대체 수단”은 아니다. 대체수단이 당사자의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Ofcom이 결정하면, 진행에 있어 최상의 방법을 찾기 위해 분쟁 당사자들과 긴밀히 협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Ofcom이 the Office of the Telecommunications Adjudicator(“OTA”)을 설립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OTA는 Ofcom 및 산업으로부터 독립적이다. OTA의 역할은 OTA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기업들 가운데 그러한 범위에 의해 다뤄지는 쟁점의 해결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OTA에 의한 중재(mediation) 또는 촉진(facilitation)은 Ofcom이 특별한 사안에서 고려할 수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한 대체 수단의 예이다. 게다가, Ofcom은 통신 산업이 사업자 대체수단 서비스(Communications Providers’ ADR Service)를 설립하였다.

Ofcom은 대체 수단이 통상적으로 분쟁의 해결에 이를 가능성이 적은지를 고려한다. 다만, 모든 당사자가 가장 적절한 수단라는 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Ofcom의 일반적인 지위는 그러한 사건을 다루는 것이 자신에게 적절한 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 —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

Ofcom이 분쟁을 다루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실제적인 결정을 내린 후 곧바로 당사자에게 결정과 결정의 이유를 알려준다. Ofcom의 통지에는 결정이 내려진 날짜가 명기된다.

#### — 분쟁을 Ofcom에 다시 회부

Ofcom이 분쟁을 다루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Ofcom의 결정이 있는 후에 4개월째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대체 수단에 의해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분쟁은 분쟁 당사자 일방 또는 복수에 의해 Ofcom에 다시 회부될 수 있다. Ofcom은 일체의 재회부에는 대체 수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당사자들이 취한 단계의 모든 세

부 내용, 이들 대체 수단에 의해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에 관한 정보 및 분쟁 상태로 남아있는 사항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당초 분쟁에 포함된 정보들이 관련있는 상태로 남아있는지에 관한 확인도 포함되어야 한다.

분쟁 해결을 위한 4개월의 시간은 Ofcom에 분쟁이 다시 회부된 일자부터 개시된다. Ofcom은 그 때 분쟁 처리의 범위와 계획을 세우게 된다.

통상적으로 Ofcom은 결정 초안에 대해 의견 진술이 가능하도록 10일을 부여한다. 몇 가지 사안에서는, Ofcom은 개별 사안의 상황에 맞추어 10일이라는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Ofcom은 10일(또는 그 이하)이 촉박한 기간(challenging timetable)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며 가능한 한 사전 경고를 빨리 한다. 그러나 아래 그림 에서 보는 것처럼 의견 수렴의 보다 긴 기간은 4개월 내에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Ofcom의 규정 의무를 감안할 때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188조 7항 (a)에 따라, Ofcom은 모든 분쟁 당사자에게 결정 이유에 대한 완전한 설명과 함께 최종 결정서의 복사본을 송부한다. 게다가, Ofcom은 보통 웹사이트에 최종 결정의 비밀버전이 아닌 버전을 공개한다. 공포는 이해관계자(분쟁당사자 이외)가 Ofcom의 결정 초안에 대한 논평을 개진하도록 허락받지 않은 경우에도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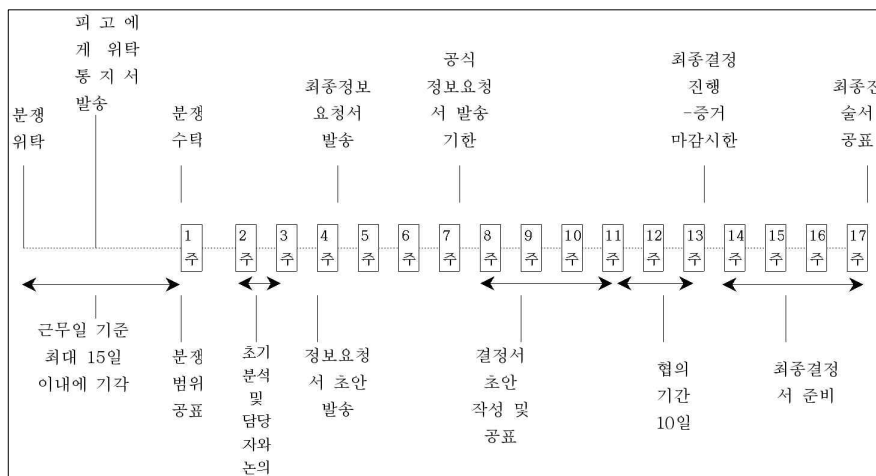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Ofcom은 규정된 시일 내에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예외적인 상황이나 법원이 Ofcom이 분쟁을 다루는 것을 중지시키거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Ofcom은 분쟁을 다루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4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때때로, Ofcom이 4개월 안에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통신법은 명백히 예외적으로 4개월을 넘길 수 있음을 고려하고 있다.

분쟁 해결에 4개월 이상 필요한 상황에는 정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Ofcom에 의해 고려되거나 고려되려고 하는 분쟁의 쟁점이 포함된다. 이들 경우에, Ofcom은 정책 프로젝트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분쟁을 해결하지 않았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Ofcom은 가능한 한 빨리 4개월을 넘긴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며 이러한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다룬다.

아래 그림은 정상적인 규정 시간 내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걸리는 시간을 보여준다.

[그림 3-18] 분쟁 해결 일반 과정



## 제4절 독일(BNetzA)

### 1. BNetzA 조직, 예산 및 인적 구성

#### 가. BNetzA 개요

독일의 통신관련 규제기구인 BNetzA(Bundesnetzagentur für Elektrizität, Gas, Telekommunikation, Post und Eisenbahnen, 연방전기·가스·정보통신·우편·철도통신망청(연방통신망청))<sup>35)</sup>은 기본적으로 독일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며, 이

35) 영문명칭: Federal Network Agency

외에도 전기, 가스, 철도, 우편 등 공공망을 필요로 하는 시설에 관한 통합규제행정청(Regulierungsbehörde)의 기능을 수행한다.<sup>36)</sup> 과거 연방 우편통신부(BMPT) 및 연방우편통신국(BAPT)으로부터 유래되었던 1996년 통신법에 의한 연방통신우편규제청(Regulierungsbehörde für Telekommunikation und Post, RegTP)이 2005년 7월 BNetzA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BNetzA는 통신법상 규제행정청으로 연방 경제노동부의 업무영역에 속해있는 독립된 연방상급행정청으로(연방망규제청법(BNetzAG) 제1조), 통신법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와 권한을 행사한다(통신법(TKG) 제116조).

#### 나. BNetzA 조직 및 인적 구성

BNetzA는 연방대통령이 임명하는 청장과 2인의 부청장으로 구성된 위원 아래 9개의 결정위원회, 7개의 부서,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위원(präsident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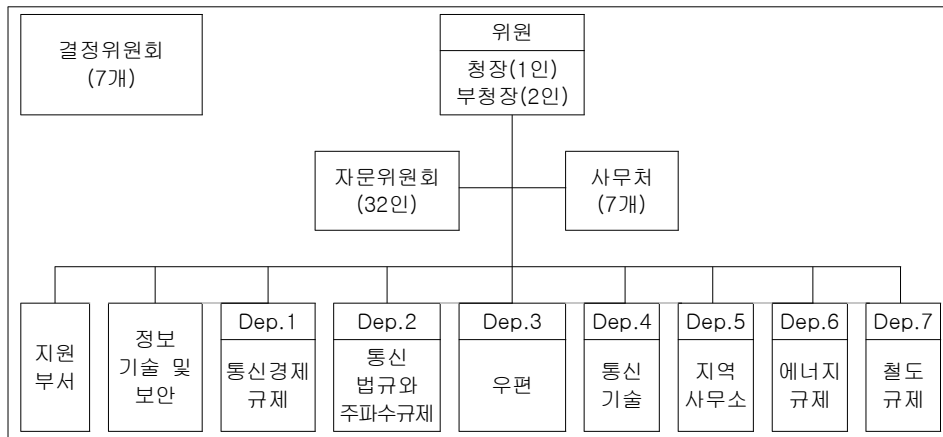
BNetzA 위원은 청장 1인, 부청장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sup>37)</sup> 청장의 임기는 5년이며 한번 연임이 가능하고, 대내적인 사무수행 및 대외적인 대표 등에 대한 통할권을 지닌다. 부청장은 BNetzA 직무규칙(Geschäftsordnung der BNetzA)에 따라 각 상이한 사무영역을 관할한다. 청장 및 부청장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연방대통령이 지명하며, 위원회의 추천에 연방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4주내에 새로운 추천이 가능하다.

36) 연방전기·가스·정보통신·우편·철도통신망청에 관한 법률은 제2차 에너지경제법(Energiewirtschaftsrecht)개정법률 제2조로 공포되었음(BGBl. I 2005, S. 1970).

37) <BNetzA 임원 현황 (2008년 8월 기준)>

청장	Matthias Kurth
부청장	Dr. Iris Henseler-Unger-담당 부서: Department IS, 1, 2, 4, 7(통신관련 담당)
	Johannes Kindler — 담당 부서: Department Z, 3, 5, 6

[그림 3-19] BNetzA 조직도



## (2) 결정위원회

결정위원회(Ruling Chamber, Beschlußkammern)는 사법에 준하는 형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준사법적 조직으로, 1인의 위원장과 2인의 부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연방경제·

&lt;표 3-28&gt; BNetzA 결정위원회

구 분	담 당 분 야	관련 시장 <sup>38)</sup>
제1 결정위원회 (President's chamber)	시장획정 및 시장 분석, 보편적서비스 (10 ff TKG)	
제2 결정위원회	통신 소매시장 규제 도매 전용선, 이용자 정보, Collection 서비스, Porting 규제	1-7, 광대역 서비스, 이동통신 13,14
제3 결정위원회	통신 도매시장, 유무선 규제	8-12, 15-18
제4 결정위원회	전기 이용 시스템(System Charges Electricity)의 개인활용 Pipe to pipe 경쟁, 가스	
제5 결정위원회	우편시장 요금 규제 및 반경쟁 행위 감독	—
제6 결정위원회	전기 공급망 규제	—
제7 결정위원회	가스 공급망 규제	—
제8 결정위원회	use of system charge(전기)	—
제9 결정위원회	use of system charge(가스)	—

기술부(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의 규정에 따라 연방정부(연방 대통령)가 임명한다.<sup>39)</sup> 각종 규제결정(Entscheidungen)은 결정위원회에 의해 행정행위 형식으로 이루어진다(TKG 제132조 제1항).

결정위원회는 복수로 존재하며, 현재는 아래의 표와 같이 9개의 결정위원회(BK 1~BK9)가 존재한다. 각 결정위원회 별 구체적인 담당 분야는 아래 표와 같다.

통신관련 결정위원회의 결정 사안은 다음과 같다.

- ① TKG 제2장에 의한 ‘시장규제’(그밖에 진입규제와 요금규제, 특별한 권한남용의 감독 및 그밖의 의무)
- ② ‘주파수부족시 그 교부절차’에 관한 결정(TKG 제55조 제9항) 및 그 교부절차의 형성(TKG 제61조)<sup>40)</sup>
- ③ ‘주파수거래’의 형성(TKG 제62조)
- ④ ‘보편적서비스의무’의 부담(TKG 제81조)
- ⑤ 정보통신법 또는 동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공적 정보통신망을 운영하거나 공공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간에 각종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TKG 제133조)

정보통신영역에 있어서는 ‘결정위원회’ 및 의장과 그 직무대행자들로 구성된 이른바 ‘의장단위원회’(Präsidentenkammer)가 있다. 의장단위원회는 정보통신법 제132조 제3항에 의거 주파수 부족시 그 교부절차(TKG 제55조 제9항), 주파수거래의 형성(TKG 제62조) 및 동법 제81조 소정의 보편적서비스부담에 대하여 관할권을 보유한다. 시장규제의 영역에 있어서 의장단위원회는 규제를 요하는 시장과 기업을 확정하는 시장획정 의무를 지니지만, 반면 ‘구체적 규제처분’을 행하는 업무는 각 시장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 결정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sup>41)</sup>

38) <붙임 1> 참고

39) 청장과 부청장은 정치적인 사유로 임명이 취소될 수 있는 계약직 공무원임에 반해, 결정위원회(Ruling Chamber) 위원은 정규직 공무원이다.

40) ‘주파수교부’는 우리 실무상 ‘주파수할당’으로 사용됨이 일반적이다.

## (3) 규제 부서

BNetzA에는 7개의 규제부서가 있으며 각 규제부서에서는 1. 통신관련 경제 규제 2. 통신법규 및 주파수 규제 3. 우편 4. 통신기술 5. 지역 사무소 6. 에너지 7. 철도규제 등을 구분하여 담당하고 있다. 이중 통신과 관련된 규제를 담당하는 곳은 ‘통신경제규제부(department)’와 ‘통신법규 및 주파수 규제부’이다. ‘통신경제규제부’는 통신규제의 경제적 측면을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신관련 경제 및 정치적 이슈를 담당하고, 통신시장감독, 요금 제안 검토, 인터넷 경제, 통신관련 국제업무, 시장획정 및 시장 분석, 번호 관련 정책 및 행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통신법규 및 주파수 규제부’는 통신규제의 법적 측면, 허가 주파수 관리를 다루고 있다. 반경쟁 행위를 감독하고, 주파수 활용 관련 계획을 수립·검토 및 할당하며 보편적 서비스, 소비자 관련 이슈, 분쟁해결 위원회, 주파수 활용 관련 국제업무, 방송, 위성 서비스 등을 담당한다.

&lt;표 3-29&gt; BNetzA 조직 구성 및 담당 업무

조 직	구성 및 담당 업무
결정위원회(9개) (Ruling Chamb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기술부 장관에게 구성권이 있음</li> <li>- 면허, 주파수 배분, 보편적 서비스 의무부과, 요금규제, 반경쟁행위 특별규제, ONP/상호접속 등에 대한 규제내용을 결정</li> </ul>
자문위원회 (Advisory Counc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NA법 제5조(1)항에 의거</li> <li>- 연방 및 주대표 각 16인으로 구성되며, 연방정부가 임명</li> <li>- FNA법, 통신법, 에너지법 등에 근거해 자문 수행</li> </ul>
7개 사무처(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장 및 부청장 사무실, 법무실, 국제실, 공보실, 결정위원회실, 심의회실, 감사실로 구성</li> </ul>
지원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와 일반법무,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li> <li>- 별도로 마련된 ‘정보기술 및 보안’관련 부서에서는 IT 솔루션 개발, 범죄 예방 정보 요구, 전파정책 연구,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li> </ul>
규제부서(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관련 경제 규제, 통신법규(주파수 규제 포함), 우편, 통신기술, 지역 사무소, 에너지, 철도규제를 담당</li> </ul>

41) § 132 Abs. 4 Satz 2 TKG.

## (4)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Beirat)는 연방하원(Bundestag)과 연방상원(Bundesrat)에 소속된 각 16인, 총 32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방정부는 연방하원 및 연방상원의 추천으로 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한다. 자문위원회의 책임과 권한(TKG 제120조)은 다음과 같다.

- ① ‘주파수교부(할당)절차’의 범위에 있어서 주파수이용계획의 고려하에 적용되어야 하는 물적 및 공간적으로 중요한 시장(TKG 제61조 제4항 제2호)에 관한 결정에 관여
- ② ‘보편적서비스의무’의 부담(TKG 제81조)에 관한 결정에 관여
- ③ ‘규제목표의 실행’ 및 ‘보편적서비스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조치를 신청할 권한 보유
- ④ BNetzA에게 ‘정보제공’ 및 ‘입장표명’을 요청할 권한 보유
- ⑤ TKG 제122조 제2항의 따른 거시계획 수립, 특히 시장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수립에 자문 제공
- ⑥ ‘주파수이용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의견 개진(TKG 제54조)

## 다. BNetzA 예산

2007년 회계 연도 기준, BNetzA 운영 비용은 총 147,418천 유로이며, 2008년 예산은 소폭 증가한 148,975천 유로이다.<sup>42)</sup>

&lt;표 3-30&gt; BNetzA 예산(2007~2008)

(단위: 1,000유로)

구 분	2007년 예산	2007년 집행액	2008년 예산
인건비	102,679	100,703	103,518
일반행정비 및 경비	35,084	34,688	34,578
투자	9,787	12,027	10,879
총 합	147,550	147,418	148,975

자료: BNetzA 연차보고서

42) 비용은 산업별로 별도로 구분되지 않음

BNetzA의 소득을 살펴보면, 2007년 기준 통신비, 출자, 관련 행정비 등 통신과 관련한 소득이 총 53.9백만 유로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BNetzA 총 소득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표 3-31> BNetzA 소득(2007~2008)

(단위: 1,000유로)

구 분	2007년 목표	2007년 실수령액	2008년 목표
통신관련	172,635	53,896	66,457
우편 관련	111	79	109
철도 관련	254	93	576
에너지 관련	500	351	6,218
기타 행정적 소득	1,106	2,148	1,164
행정적 소득 총합	174,606	56,567	74,524

자료: BNetzA 연차보고서

2007년 현재 기준 약 2,300명이 BNetzA에 근무, 이 중 총 약 450명이 전기통신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 2. BNetzA 업무 범위, 내용 및 규제권한

### 가. 개 요

통신시장이 민영화 된 이후에도 기존 독점기업이었던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 AG)은 오랫동안 시장지배적 위치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통신부문 규제의 주요 임무는 단순한 ‘사후규제’적 반경쟁 행위의 제어를 넘어서 도이치 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규 진입자들에게도 같은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다.

BNetzA는 다음과 같은 9개의 ‘규제목표’를 실제로 부합시키도록 하는 것을 그 책무로 한다(TKG 제2조): ① 정보통신 영역에서의 ‘이용자의 이익’, 특히 소비자의 보호 및 통신비밀의 보장 ② ‘기회균등적 경쟁’의 담보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망의 영역 및 그에 속한 시설과 서비스, 모든 지역의 영역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경

쟁지향적 정보통신시장의 지원 ③ 효과적인 ‘기간시설투자’의 지원 및 ‘혁신’의 지원 ④ EU의 역내시장 발전의 지원 ⑤ ‘모든 지역’에서 적정한 가격에 의한 기본적인 정보통신서비스(보편적서비스급부) 공급의 보장 ⑥ 공공시설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의 지원 ⑦ 주파수의 효과적이고 방해 없는 이용의 담보/방송의 이해도 고려할 것 ⑧ 번호부여 수단의 효과적 이용의 보장 ⑨ 공적 안전의 이익의 보장.

이러한 규제목표를 위하여 BNetzA는 정보통신법, 관련 법규명령 및 그에 따라 제정된 각종 부담과 명령 및 조치 등의 준수 여부를 감시한다. BNetzA의 과제를 크게 구분하면 규제형성, 분쟁발생시 조정, 시장 감시 등 3개의 책무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43)</sup>

BNetzA의 구체적 사무와 권능은 각 ‘직무에 관련된 법적 근거’에서 나온다(제2조).<sup>44)</sup> BNetzA의 설치와 함께 신설된 정보통신법(TKG) 제116조는 BNetzA의 사무와 권능을 다음과 같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연방전기·가스·정보통신·우편·철도통신망청은 이 법률 소정의 규제행정청이며, 이 법률에 따라 동 규제행정청에 속한 사무와 권능을 수행한다. BNetzA의 지위는 연방경제·기술부의 업무영역에 있어서 독자적인 ‘연방상급관청’(Bundesoberbehörde)<sup>45)</sup>에 해당한다.

<표 3-32> BNetzA 주요 기능

구 분	내 용
통신 및 우편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하고 작동가능한 경쟁 보호</li> <li>- 보편적 서비스 실현</li> <li>- 공공기관의 통신서비스 이용촉진</li> <li>- 주파수의 효율적이고 자유로운 이용</li> <li>- 공공의 안전 보호</li> </ul>

43) 공법연구

44) BNetzA의 설치에 의해 정보통신 분야의 규제에 대하여 특별히 달리 적용되는 사항은 전혀 없으며, 다만 기존의 ‘정보통신·우편규제청’에서 ‘BNetzA’으로 그 명칭이 변경된 것 정도만이 문제될 뿐임

45) 연방상급관청은 물적으로는 그에 속한 일정한 행정사무를, 지역적으로는 연방전체영역을 관할하게 되는, 장관 다음 서열의 관청에 해당

구 분	내 용
통신 및 우편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편사업자 허가(면허발급)</li> <li>- 표준화 촉진</li> <li>- 주파수 및 번호 관리</li> <li>- 전파장애 방지</li> <li>- 번호의 부당한 이용 방지</li> <li>- 시장 감시</li> <li>- 신 규제 관련 대국민 정보 제공</li> </ul>
에너지(가스 및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에 대한 전력 및 가스 공급(유선) (안전성, 비용효과성, 이용자 친화성, 친환경성 고려)</li> <li>- 전력 및 가스 공급시장의 작동가능한 경쟁 보호 및 왜곡 해소,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의 효율성 보장</li> <li>- 에너지공급에 있어 EU법(Community law)의 집행 및 이행강제</li> </ul>

자료: BNetzA 홈페이지

BNetzA는 중요한 권한으로서 가장 핵심인 개입 및 조사권한을 가지며(TKG 제126조, 제127조), 결정위원회 및 법원의 심결 및 재판절차에 있어 영업 및 거래상의 비밀의 처리에 관한 정보통신 고유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TKG 제136조, 제138조). 더불어 서비스 공급의 부족과 서비스품질에 대한 민원 처리 기능을 보유하는 데, BNetzA는 이의가 제기된 사정을 조사해야 하며, 필요시 보편적 서비스가 적절히 공급되기 위한 적절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한 BNetzA는 주파수 이용계획의 수립과 관련 주파수 규정 임무를 지니며, 이 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임무도 수행한다.<sup>46)</sup>

#### 나. BNetzA 규제 권한

전력, 가스, 통신, 우편 및 철도에 관한 규제당국인 BNetzA는 통신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권한을 보유한다(TKG 제116조). 특히 정보통신법은 BNetzA에 속한 책무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게 일련의 개입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BNetzA의 구체적인 권한은 다음과 같다.

- 금지(TKG 제126조): 통신사업자가 법규범에 의해 부여된 의무를 중대하게 또

46) 정보통신법연구Ⅱ, p.238

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규제기관이 명령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규제기관은 사업자의 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음

- 정보제공 요구(TKG 제127조): 공중통신망 및 일반공중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통신법 집행을 위해 필요 시 규제기관에 요청에 의하여 정보 제공의무를 보유, 이 법에서 BNetzA에 위임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BNetzA는 기업들로부터 ①경제적 관계에 관한 정보, 특히 매상수치에 관한 정보와 ②일상적인 운영·영업시간 이내에 영업 관련 서류를 열람 및 심사할 수 있는 권한 보유
- 조사(TKG 제128조): 규제기관은 필요시 모든 조사를 수행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음
- 압류(TKG 제129조): 조사를 위한 증거자료로서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압류할 수 있으며, 압류사실은 당사자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 가명령(TKG 제130조): 규제기관은 최종 결정 이전까지 가명령 발령 가능, 본가명령은 요금 승인결정, 접속관련 결정, 분쟁해결 관련 결정을 포함함
- 절차의 종결(TKG 제131조): 결정 이유 및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성에 대한 고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함

### 3. 사후규제 관련 법령, 법적 권한

#### 가. 통신규제 관련 법령

2004년 6월 22일 전면 개정되고 2007년 2월 18일 최종개정된 정보통신법(TKG)은 통신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전파관리의 기본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규제내용은 시장규제, 접속규제, 요금규제, 사업자의무, 남용금지, 고객보호, 방송전송, 주파수질서, 번호관리, 보편역무, 통신비밀, 정보보호, 공공의 안전, 연방망청, 벌금 및 과태료 등이다. 정보통신법의 관련 부속법으로는 「통신고객보호명령」, 「통신-비상전화명령」, 「통신-번호부여명령」, 「통신-번호부여수수료명령」, 「통신감독을 위

한 조치의 기술적·조직적 전환에 관한 명령」, 「통신법에 따른 법규명령을 발령할 권능을 위탁하기 위한 명령」, 「통신—안전확보령」, 「통신수수료에 관한 명령」등이 존재한다.

#### 나. 사후규제 관련 BNetzA의 법적 권한

##### (1) 시장획정, 시장 감독 관련

BNetzA는 독일 통신시장의 시장획정(TKG 제10조) 및 시장분석(TKG 제11조)에 대한 법적 책임 및 권한을 가진다. BNetzA는 시장획정 절차와 시장분석절차에 기초하여 연방카르텔청의 동의하에(TKG 제123조 1항) 해당 시장에 유효경쟁이 존재하는지 및 이에 따라 시장규제를 받아야 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획정 및 분석 결과가 나오면 BNetzA는 이해당사자에게 확정된 기간 내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기회를 제공한다.

시장 획정 및 분석 결과에 대한 규제처분은 독일 국내 차원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차원에서 복잡한 심의 절차의 표결과 통제에 놓이게 된다. 시장분석은 규제처분을 위한 근거로 활용되며, 이를 통해 BNetzA는 시장지배적 기업에게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를 통해 그러한 의무를 변경, 유지, 철회한다(TKG 제13조). 이러한 규제처분에 따라 관련 기업은 일정한 법적 의무를 지니게 된다. 시장 획정 및 분석은 매 2년마다 실시되며, 필요시에도 심사된다(TKG 제14조). 시장 획정에는 절차 시작으로부터 최종 결정까지 평균 18개월이 소요된다.<sup>47)</sup>

##### (2) 기업의 불공정행위

정보통신법을 통해 독일은 특별남용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남용이란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통신서비스 사업자 및 공중통신망 운영자가 시장에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타기업이 직간접적으로 부당하게 장애를 받거나, 경쟁환경조성에 큰 영향

47) 2번째 시장획정 기간은 훨씬 더 적은 시간일 걸림 시장. 그 예로 11의 2번째 시장 획정의 경우 약 1년 소요됨

을 미칠 경우를 말한다. 정보통신법에 의거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통신서비스제공자는 BNetzA에 남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BNetzA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해당 기업의 시장지위의 남용을 종결하게 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BNetzA는 해당 기업이 일정행위를 금지하거나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한 것으로 선언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보통 절차가 개시된 이후 4개월의 기간내에 행해지도록 정해져 있다(TKG 제42조).<sup>48)</sup> 한편, 해당 기업이 기업 남용행위에 대한 BNetzA의 처분 또는 정보통신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그에 의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BNetzA는 이러한 경제적 이익의 환수를 명할 수 있다.<sup>49)</sup>

또한, 사업자가 통신관련법 및 규범에 의해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BNetzA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이에 관한 입장을 표시하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한다(TKG 제126조). 이때, BNetzA는 사업자에게 자체 문제해결 시한 설정한다. 설정된 시한내 사업자가 의무 불이행시, 규제기관은 의무 이행을 위한 필요조치 명령이 가능하다. 사업자가 해당 의무를 중대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위의 BNetzA 명령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BNetzA는 해당 사업자에게 통신망 운영자 또는 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다.

### (3) 이용자 보호, 이용자 권익 증진<sup>50)</sup>

연방정부는 통신법에 의해 최종이용자, 특히 소비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연방 하원과 연방 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법규 명령으로, 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그리고 요금계산의 정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규정을 제정하도록 수권을 받았다(TKG 제45조). 이 경우, 장애인의 이해관계는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명령에는 규제기관의 권한이 개별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며, 특히 EU의 보편적 서비스 지침(2002/22/EG) 제21조와 제22조가 고려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48) 실질적으로 일부 경우에는 기간이 연장되기도 함

49) 경제적 이익은 평가에 의해 산정되며, 이익의 박탈은 위반행위 종료 후 5년 내에, 그리고 최장 5년으로 명해질 수 있음

50) BNetzA 홈페이지

BNetzA의 이용자 서비스는 통신시장 민영화 이후 최종 소비자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BNetzA는 최종 소비자에게 통신시장 관련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며, 통신 제 공자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을 해준다. 2007년 2월 통신법 개정을 통하여 BNetzA는 통신 부문 최종소비자의 권리를 법에 적시하였다. 이를 통해 BNetzA는 통신서비스 제공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왜곡된 통신요금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 하고자 하고 있다(TKG 제39조). BNetzA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용자 관련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 서비스
- 전화번호 남용, 스팸, 다이얼러
- 중재(수수료)
- EMF 모니터링, EMF-데이터베이스
- 무선 장애
- 국제로밍 등

#### (4) 분쟁해결-심결지원

##### ①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절차

독일은 종래의 규제결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사법심사 이전단계에서 ‘특별한 분쟁조정·결정메카니즘’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보다 신속한 분쟁해결을 하고자 노력하는 등, 행정절차의 갈등해소기능 또는 분쟁처리기능 및 행정청의 분쟁조정기능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sup>51) 52)</sup> 기업들간 분쟁을 법원에 계류하게 된 경우, 소송절차 진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어, 규 제의 실효성에 관한 논란이 있어 왔다.

결정위원회는 주파수 할당, 주파수 교부절차, 주파수 거래, 보편적 서비스 의무 부

51) 개별 영역별로 각 관련 규정들이 규제실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것은 vgl. Holznagel/Schulz, CR 2003, 567ff. m.w.N. 참조

52) 신봉기(2007)

과 관련, 의결형식에 의하여 결정하며,<sup>53)</sup> 결정은 행정행위 형식으로 발령한다. 결정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2인의 위원의 참여하에 결정한다(TKG 제132조).

‘방송중계’ 관련 분쟁발생, 즉 TV 호환성, 디지털TV 신호중계의 호환성, 접근권한 시스템 등과 관련한 분쟁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기관으로 ‘중재기관(Streitschlichtungsstelle)’을 둔다. 중재기관은 연방법과 주법 사이의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방송중계 사건에 책임을 지낸다. 중재기관은 2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서면 신청에 따라 제기된 문제에 관하여 결정하며, 중재기관은 개별 주법에 의해 권한을 보유한 기관에게 해당 절차내에서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개별주법에 의해 권한을 보유한 기관이 미디어법상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중재기관은 주어진 시한 내에 상응하는 결정을 내린다(TKG 제51조).

기업간 그 밖에 분쟁(규제기관 권한, 결정위원회, 절차의 개시 및 참가인, 청문 및 구술절차, 업무상 비밀, 권리구제수단 관련)이 관련한 경우(TKG 제133조), BNetzA는 망 운영자와 서비스제공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결정위원회 절차에서 ‘구속적 결정권한’을 가진다. 통신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결 소위원회는 법률이 달리 규정함이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참가자들로부터의 의견 청취절차를 거친 후에 구속력 있는 결정을 발령하게 된다. 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의 참가인 중 한쪽 당사자로부터의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해당 분쟁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외국에서 행한 주문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를 대비, 그에 관련된 국내 규제관청의 관할 및 해당 사건에 대한 표결에 관한 규정도 한다(TKG 제133조 제2항).

정보통신법에 의해 발생한 민사적 분쟁에 대해서는(TKG 제139조) 공정거래법 제

53) 제3항의 경우를 제외, 연방경제노동부의 결정에 의하여 구성됨

※ 제3항: 제55조(주파수 할당) 제9항(주파수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거나, 특정 주파수 수요가 높은 경우), 제61조(주파수, 번호, 도로권) 교부절차, 제81조(보편적 서비스 의무 부과)의 경우 의결소위원회는 위원장으로서의 의장 및 2인의 부위원장의 참여하에 결정됨

90조 제1항과 제2항<sup>54)</sup>이 적용된다. 이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연방카르테청 및 그 의장 자리는 BNetzA 및 그 의장이 대체한다.

한편, TKG 제134장 2조에 의거, 분쟁조정절차에 신청자 및 상대방인 외,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인 및 법인도 BNetzA에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다.

## ② 중재(conciliation) 절차

BNetzA가 중재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정보통신법<sup>55)</sup>에 ‘중재’에 대한 내용을 새로이 삽입함으로써 본 논란을 일단 종식하였다(TKG 제124조). 본 조항에 의하면 BNetzA는 통신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상호협약에 의한 합의절차(조정절차), 즉 ‘협약에 의한 합의도출의 시도’를 제안할 수 있다.<sup>56)</sup> 이제까지 행정법 분야, 특히 계획법 및 환경법 분야에 있어서도 그 합의 형성과정을 지원하고 협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중재인이 많이 임명되어 소장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sup>57)</sup> 여기서 중재인은 절차중계자로서의 역할을 넘겨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재인은 합의형

54) Section 90 Information to and Participation of the Federal Cartel Office

(1) The court shall inform the Federal Cartel Office of all legal actions arising from this Act or from cartel agreements and cartel decisions. The court shall, upon request, transmit to the Federal Cartel Office copies of all briefs, records, orders and decisions.

(2) The President of the Federal Cartel Office may, if he considers it to be appropriate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 appoint from among the members of the Federal Cartel Office and, if the legal action concerns one of the undertakings referred to in Section 29, also from among the members of the competent supervisory authority, a representative authorised to submit written statements to the court, to point out facts and evidence, to attend hearings, to present arguments there, and to address questions to parties, witnesses and experts. Written statements made by the representative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parties by the court.

55) 규제기관은 통신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상호협약에 의한 합의절차(조정절차)를 권고할 수 있다.

56) 신봉기(2007)

57) Vgl. Holznagel/Schulz, CR 2003, 567ff.

성과정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중재임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게 된다. 이른바 ‘데이터－중재’(Data-Mediation)를 통하여 사안의 쟁점해설을 단순화하는 것도 그 임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복잡한 기술적·경제적인 쟁점을 중재인의 투입을 통하여 사안에 합당하게 마무리하게 되는 이점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사례로서 번호부여 영역에서의 절차의 촉진이나 융합의 기술적 문제에 있어서 그 진행경과의 촉진 등이 존재한다. 반면, 합법적인 결정위원회 절차에 따르도록 법률에서 열거하고 있는 분쟁해결 대상은 중재절차를 통한 해결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58)</sup>

1999년에 설치된 중재위원회(arbitration board)를 통해 BNetzA는 이용자와 통신사 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여, 사법절차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또한, 2005년 전자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중재 서비스가 팩스, 메일 외에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되어 더욱 빠르고 간단한 방법으로 중재위원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재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전제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첫째, 통신소비자보호규정(Telecommunication Customer Protection Ordinance)에 준거하여 최종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둘째, 같은 내용을 다룬 재판(court case)이 현재 미결중이거나, 열렸던 적이 없는 경우

셋째, 같은 내용을 다룬 중재(councilation) 절차가 현재 미결중이거나, 열렸던 적이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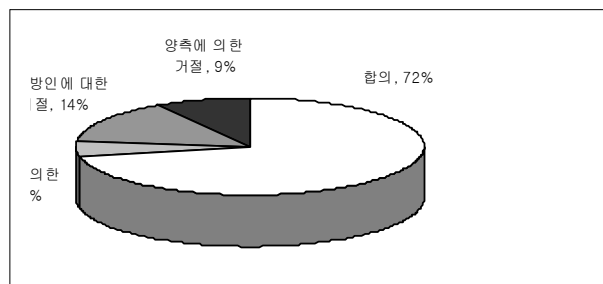
넷째, 최종소비자가 신청 전 사업자와 분쟁해결을 시도했던 경우

중재절차는 다음과 같다. 중재위원회는 최소 3인의 중재인(conciliator) 및 1인의 보고인(rapporteur)로 구성되며, 모두 BNetzA 직원으로 구성된다. 중재에 대한 신청 일로부터 약 4주내로 사업자로부터 응답을 받는다. 이 때 사업자는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최종소비자의 의견이 제출되며, 이어 사업자의 의견도 다시 받는 등 의견 교환 과정을 가진다(각 2주). 중재절차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일

58) BT-Drs. 15/2316, 100.

반적으로 4~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만일 시장분석이 요구될 경우 1년이상으로 기간이 연장된다.

[그림 3-20] 조정절차 결과(2005년 기준)



자료: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Electronic Communications”, 발표자료, Enrico Maria Cotugno, 2006<sup>59)</sup>

중재절차는 기본적으로 무료이나, 절차에 대한 수수료는 TKG 제145조에 의해 재산 분쟁의 가치에 따라 부과될 수 있다. 절차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액수는 법원비용법 제11조 제2항 제2문과 제3문의 기준에 따라 정하여지며, 소송물 액수의 확정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3조에서부터 제9조가 준용된다. 분쟁조정기관이 조정안을 제출하게 되면 이 조정기관은 대상 및 분쟁의 내용을 고려하여 비용을 결정하게 되고, 결정된 비용은 분쟁조정안과 함께 발령된다.

### ③ 요금규제

공중통신망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접속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원칙적으로 사전허가 대상(TKG 제30조 1항 1문)이나, TKG 제21조 2항 7호에 의거, 부과된 것이 아닌 접속서비스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접속서비스에 대한 요구의 정산과 관련한 요금, 서비스에 대해 요구한 요금 등은 사후규제의 대상이 된다(TKG 제 30조 2항-4항).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부터의 최종이용자 급부에 대한 요금이 요금허가를 받게 되어있지 않은 경우, 이도 사후규제의 대상이 된다(TKG 제39조).

59) [http://www.agcom.it/eventi/twinning/COTUGNO-Alternative% 20Dispute%20Resolution.pdf](http://www.agcom.it/eventi/twinning/COTUGNO-Alternative%20Dispute%20Resolution.pdf)

이에 따라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의 접속에 대한 요금이 TKG 제28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추정을 정당화하는 사실이 BNetzA에게 알려지게 되면, BNetzA는 지체없이 요금심사를 개시하게 되어 있다(TKG 제38조). 요금이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경우, BNetzA는 정보통신법에 의거 확인 시점부터 해당 요금을 무효로 선언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BNetzA는 적정한 요금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가 그 후 스스로 요금안을 제시하는 경우, BNetzA는 1개월 이내 해당 요금을 심사하게 된다.

#### ④ 집행관련 기타 사항

BNetzA는 TKG 126조에 의거, 최대 50만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 4 장 결 론

### 제 1 절 바람직한 방송통신규제기관간 국제협력 방안

본 연구에서 조사한 미국, 영국의 방송통신규제기관은 공통적으로 국제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방송통신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양국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OECD 및 ITU와 같은 방송통신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논의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 FCC의 국제협력 업무의 상당 부분은 국가간 공조가 필요한 위성, 주파수 정책 분야에서 자국 사업자의 해외 서비스 시장진출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미행정부에 대외 무역협상에 필요한 방송통신 전문성을 제공하고 개도국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행정부의 대외 통상교역 정책과 공조를 취하고 있는 점에서 확인된다.

반면, 영국은 통상업무 보다는 전문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충실한 국제 컨퍼런스의 기획 및 참여를 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Ofcom이 통상업무를 하지 않는 이유는 EU 회원국인 영국이 대외교역 정책을 EU 집행위에 위임하였기 때문이다. 대신 EU 역내의 다양한 방송통신분야 이슈에 대한 컨퍼런스를 기획하고 해외 컨퍼런스 및 국제기구회의에 참여하는 등 규제논의를 활발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영국이 EU 규제 프레임워크 수용 등 수평적 규제체제를 도입 및 조직 개편을 가장 먼저 한 방송통신규제 선진국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Ofcom이 추진하는 컨퍼런스는 많은 경우 EU 차원으로 참여자의 폭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가 이러한 논의의 장에 참여할 여지는 커 보이지 않는다.<sup>60)</sup>

60) 보통 국제 컨퍼런스는 주최자의 초청에 의해 참여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주최자측이 한국측 규제담당자의 참여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초청을 하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결국 가장 바람직하고 실효성이 높은 국제협력 강화방안은 방송통신 사안별 국제 컨퍼런스 및 국제기구 회의에 적극적·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다소 원론적인 제언이다. 융합환경 하의 가변적 시장 및 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규제집행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규제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해외 방송통신규제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그들의 규제경험을 참고해야 하는데, 이는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구축된 인적 및 지적 네트워크를 통해 가능할 뿐이다.

한편, 우리나라도 영국 Ofcom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규제이슈에 대한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주최하여 규제이슈에 대한 외부 의견을 수집하고 전문성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Ofcom의 예를 보면, 해외 규제기관 뿐만 아니라 국내외 학계, 사업자 등 민간부문에게까지 참여의 문을 열어 심도 있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규제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다. 다양한 사후규제 이슈들에 대하여 전문성을 내부적 노력만으로 키우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 국내외 업계, 학계 및 전문가들과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전문성의 외연확대 및 축적은 중장기적으로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본문에서 제시하는 컨퍼런스 기획안과 같이 충분한 사전검토와 준비를 거친 탄탄한 국제 규제세미나의 주기적 개최를 기대해본다.

## 제2 절 해외사례로 본 효과적 사후규제 방안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를 구별하여 각각의 영역을 가르는 일은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매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방송통신 융합 및 All-IP 환경에서의 시장 행위 유형이 다양화, 복잡화되면서 규제당국이 사전적으로 특정 행위를 규율하는 일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행위 발생 이후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규제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사후규제로 본다면, 세계의 주요 통신 선진국들은 전통적 사전규제체계에서 사후규제체계로 진입한지 오래되었다. 미국의 1996년 통신법 개정 및 EU의 2003년 규제프레임워크 제정 및 개별 EU회원국의 통신법 제정을 통해 많은 선진국들은 사후규제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하였다.

이제 통신 산업의 경우 필수설비라고 인정되는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규제는 사후규제에 치중되어 있으며, 이전에 사전규제를 적용받던 분야(예컨대 요금 규제)도 점점 사후규제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EU의 경우, 이미 2006년에 사전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18개 서비스 중 7개 소매분야에서 2개 분야만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를 사후규제로 전환하였다.

작금의 통신규제기관들이 사후규제체계로의 전환에는 2가지 동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시장 경쟁의 활성화이다. 유선시내전화를 제외한 나머지 통신서비스 분야의 자유화 및 경쟁도입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사전규제의 필요성이 감소되었다. 다른 하나는 대체가능한 망 및 설비의 등장이다. 기존 통신망 이외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경쟁적인 망이나 플랫폼이 등장하게 되면서 사전규제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졌다. 사전규제의 중요성이 감소되면서 통신규제기관들이 직면하게 되는 규제 이슈는 경쟁제한적 행위를 규율하는 공정경쟁관련 문제, 통신서비스 사업자간 발생하는 분쟁해결 문제, 그리고 통신서비스 이용자(소비자)들의 권익 보호 문제로 요약된다.

위에서 기술한 규제이슈들은 통신규제기관에게 기존과 다른 규제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통신규제기관의 규제목적이 통신사업자의 지배력 규제 위주에서 시장경쟁 활성화로 이동하게 되면서 시장의 경쟁상황을 적절히 평가하고 관련시장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실 방송통신 융합 및 All-IP 환경하에서의 시장적, 기술적 변화는 시장경계의 모호화, 시장지배력의 이동, 새로운 지배력의 등장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방송통신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신법, 방송법, 경쟁법 및 절차법적 이론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관련시장 확정이나 경쟁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할 수 있는 고도의 경제적 전문성이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파악됐듯이, 미국은 2000년도 조직개편을 통해 규제집행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집행국을 신설하였고, 시장조사를 전담하는 팀을 두고 있는데, 유선경쟁국 등 타 국과의 공조를 유지하면서도 통신법 및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 세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및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집행국은 다수의 변호사, 경제학자,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사안별 전문적 대처가 가능하다. 영국 Ofcom은 미국보다 조직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규제사안별 대응 팀이 조성되면 필요한 전문 인력을 내외부에서 충분히 충원을 하여 규제당국의 결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를 높이고 있다.

둘째, 융합환경에서 규제기관들은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 해결하는 능력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규제당국의 사전적 규제가 감소하고 시장 참여자의 수 및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당연히 예견되는 문제이다. 사후규제 체제하의 분쟁은 되도록이면 이해당사자간 자율조정에 의해 해소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규제당국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분쟁조정의 절차 및 결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이해당사자들이 규제당국의 조정 방식 및 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승복하지 않는다면, 규제당국의 공신력의 훼손은 물론이고 규제비용의 비효율이 더 확대될 것이다. 미국, 영국 및 독일은 투명한 분쟁해결 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해당사자들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이후부터의 모든 절차 및 관련 논의 및 결정은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분쟁해결 절차 제반의 모든 절차 및 요건은 통신법 또는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규제당국은 법규정에 입각한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분쟁조정을 할 수 있으며, 이해당사자들은 예측 가능한 환경 하에서 이해 조율이 가능하다. 한편 투명하고 원칙적인 분쟁해결 제도는 분쟁조정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데, 미국의 제208조 절차 및 영국의 집행가이드라인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해당사자들이 제소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법적요건은 매우 엄격하여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분쟁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융합환경에서는 통신 및 비통신사업자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한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어지면서 규제당국의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집행은 강화되어야 한다. 사후규제체계 아래에서 공공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규제당국의 의무는 더욱 중요해진다. 경쟁 활성화 및 공정경쟁의 미명하에 일반 소비자들의 복지가 훼손되어선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규제당국이 불공정 마케팅, 과도한 이용요금, 부당한 이용자 차별, 개인정보 악용 등 문제들을 철저히 규제하지 않는다면 사업자

간 경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안 좋은 결과가 초래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제당국의 법규정 및 제도의 운영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영국과 같은 경우 규제당국이 사후규제 집행에 있어 최소규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이용자 보호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방송통신 규제당국들은 이용자 보호 문제와 같은 공익의 구현을 시장 메커니즘에만 의지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관련 민원의 접수, 조사 및 해결 등을 전담하는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통신소비자과의 인력이 집행국 전체 인력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전문 인력은 소비자 민원 접수, 조사 등을 진행 할 수 있는 전문적 트레이닝을 받아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 관련 법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 제3 절 국내 사후규제 업무 개선관련 시사점

현재 우리나라는 방송, 통신, IPTV분야에 대한 사후규제체계 정비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는 해외 주요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사후규제체계에 대한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각국의 고유의 방송통신 규제역사 및 시장적 상황, 규제철학적 특징 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국내제도 개선 시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도입을 하려한다면 오히려 또 다른 규제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 융합의 진행단계, 통신 및 방송시장의 특성, 규제목적 등을 고려하여 고유의 규제제도 정비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바람직한 사후규제제도는 융합환경에 적합하면서도 시장별 불공정행위 규제, 공정경쟁 제고, 이용자보호 강화 등의 규제목적을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바람직한 사후규제체계 정비방향에 대한 전체적 검토를 바탕으로 분야별 규제체계의 개선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바람직

한 사후규제체계의 방향성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영국 및 독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규제당국의 조직적, 업무적 특성은 곧 규제체계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해외 사례들은 우리나라 방송통신 규제당국의 규제권한(행정적, 준입법적 및 준사법적 권한)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규제집행 행위의 전문성, 투명성, 및 절차적 합리성이 담보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규제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업무절차의 합리성 개선을 위하여 검토해야 할 부분들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법적으로 심의권한을 확보하고, 조사영역을 확대하며,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겠다. 업무절차의 합리성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전문인력(변호사, 회계사, 법학전문가 등)을 통한 분석능력의 강화, 불공정행위 심사 지침의 세분화, 업무공개 프로세스의 투명성 제고 등을 고려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기관의 판단을 요하는 중요한 규제사안에 대하여는 규제기관의 역량을 집중하지만, 그 외의 사안은 시장 이해당사자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 해결하는 규제문화가 자리 잡는 것이다. 이외에도 미국 및 영국의 민원 및 재정처리 절차에서 보여주었듯이, 규제사안에 대하여 업무 절차, 정보 공개, 이해당사자의 의견제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정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진행한 국제 컨퍼런스 세미나와 같은 해외 방송통신규제담당자간의 정례적 교류를 통해 규제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해외사례 조사를 목적으로 하여 상기 사안에 대한 구체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에 한계가 있었으나, 추후 각 사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들이 진행되어 우리나라 사후규제체도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기대해 본다.

## 참 고 문 헌

### <국 문>

- 권오상, 『위원회조직으로서 FCC에 관한 고찰』, KISDI 정보통신정책 제20권14호 통권444호, 2008.
- 김원식 외, 『유럽 주요국의 통신방송융합 대응사례 분석』, KISDI, 이슈리포트 04-11, 2004.
- 김정현 외, 『통신시장 규제효과분석 및 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수탁연구 06-10, 2006.
- 김희수 외, 『새로운 통신환경 하에서의 효과적인 통신시장 사후관리체계 연구』, KISDI, 수탁연구 07-67, 2007.
- 변정욱 외, 『주요국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제도 현황 분석』, KISDI, 이슈리포트 06-07, 2006.
- 신봉기, 『독일 연방통신망청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36집 제3호 2007. 2
- 이상우 외,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법제도 개선 및 산업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 02-38, 2002.
- 이원우, 『정보통신법연구』, 경인문화사, 2008.
- 장범진 외,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연구』, KISDI, 수탁연구 06-42, 2006.
- 조향숙 외,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제도 및 정보제공: 미국,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KISDI, 이슈리포트 08-10, 2008.
- 한남대학교, 『주요국의 통신규제 동향 및 개편성과』, 2007
- 한동대학교, 『통신산업 경쟁에 대한 사후 규제방안』, 199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요국 규제기관 현황, 공정경쟁정책연구실 연구자료, 2008.  
미국 통신법 1934/1996.  
영국 통신법 2003.  
독일통신법, 법원사.

#### <영 문>

Briefing Paper, Competition and Sectoral Regulation Interface, CUTS Centre for Competition, Investment & Economic Regulation, 2003.  
Competition Group, Ofcom Investigations Programme, 2008.  
FCC News Media Information, 'QUARTERLY REPORT ON INFORMAL CONSUMER INQUIRIES AND COMPLAINTS RELEASE', 2008. 7. 2일자.  
FCC, FY 2009 Budget Estimates(Submitted to congress), Feb. 2008.  
Laurence J.E. Dunbar, Leslie J. Milton(2005), COMPARATIVE STUDY ON INTERACTION BETWEEN COMPETITION LAW AUTHORITIES AND TELECOMMUNICATIONS REGULATORS IN AUSTRALIA,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COMPETITION BUREAU  
Ofcom, Draft Enforcement Guidelines(Ofcom's draft guidelines for the handling of competition complaints, and complaints and disputes concerning regulatory rules, 2006.  
Ofcom, Guidelines for the handling of competition complaints, and complaints and disputes about breaches of conditions imposed under the EU Directives, 2004.

#### <웹사이트>

FCC 홈페이지 <http://www.fcc.gov/>  
Ofcom 홈페이지 <http://www.ofcom.org.uk/>  
BNetzA 홈페이지 <http://www.bundesnetzagentur.de/>

ITU 홈페이지 <http://www.itu.int/>

IICOM 홈페이지 <http://www.iicom.org/>

OECD 홈페이지 <http://www.oecd.org/>

agcom 홈페이지 <http://www.agcom.it/>

<첨부 1>

## 미국 의사결정절차 관련법규: 행정절차법<sup>61)</sup>

### 제553조 규칙제정

(a) 이 조문은 다음 사항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적용된다.

- (1) 합중국의 육해공군 및 외교상 기능
- (2) 관청의 내부관리 · 인사 · 공공재산 · 대부금 · 보조금 · 부조 또는 계약에 관련된 사항

(b) 제안된 규칙안에 대한 일반적 통지는 연방관보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단, 그 규칙에 관계되는 자가 지명되고 있고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통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개규칙제정절차가 행하여질 시간 · 장소 및 그 성질에 관한 설명
- (2) 규칙안제안의 근거가 되는 관청의 권한
- (3) 규칙안의 전문 도는 주요골자 또는 당해 규칙안의 주제와 문제가 되는 사항에 관한 설명  
법률에 의하여 통지와 청문이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항은 다음 사항에  
는 적용되지 않는다.

(A) 해석적 규칙, 정책에 관한 일반적 설명, 관청의 조직 · 절차 · 사무에 관한 규칙

(B) 관청이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 및 공개절차가 현실불가능 · 불필요 또는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이 경우에는 제정하는 규칙 중에 그 사실과 그 이유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61)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f 1946, 5 U.S.C. 553 [CITE: 5USC553]

- (c) 이 조에 의하여 정하여진 통지가 행하여진 후 관청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구술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와 더불어 따로 문서에 의한 참고자료·의견 또는 변론의 제출에 의하여 규칙제정에 참가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관청은 제출된 모든 사항을 검토한 후, 제정하는 규칙 중에 규칙의 근거 및 목적의 개요를 간략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법률에 의하여 청문의 기회를 부여한 후, 그 기록에 의하여 규칙을 제정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항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본 편 556조와 제557조를 적용한다.
- (d) 실체적 규칙에 대하여 요구된 공고와 송달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늦어도 시행일 30일 전에 행하여져야 한다.
- (1) 법규의 적용의 면제를 허용하거나 승인하는 실체적 규칙 또는 제한을 해소하는 실체적 규칙
  - (2) 해석적 규칙 및 정책에 관한 설명
  - (3) 관청이 정당한 사유로 다르게 정하고, 그것을 당해 규칙과 함께 공고한 경우
- (e) 각 관청은 이해관계인에게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청원을 행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56조 청문: 청문주재관: 권한과 의무: 입증책임, 증거: 결정의 기초로서의 기록**

- (a) 이 조는 이 조에 따라서 수행되어지는 이 편 제553조 또는 제554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청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 (b) 증거조사는 다음의 자가 주재하여야 한다.
- (1) 관청
  - (2) 당해 관청을 구성하는 합의체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구성원
  - (3) 이 편 제3105조에 의하여 임명된 1인 또는 그 이상의 행정법판사.
- 그러나 이 절은 특히 다른 법률에 의하여 마련되거나 또는 지명된 위원회나 기타의 직원이 특정한 종류의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 청문주재관 및 이 편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에 참여하는 직원은 공

평하게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이들 직원은 언제든지 회피할 수 있다. 이들 직원의 개인적 편견 또는 결격사유에 대하여 시기에 맞고 또한 충분한 선서진술서가 제출된 때에는 관청은 사건의 기록 및 결정의 일부로서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c) 청문을 주재하는 직원은 공고된 관청의 규칙에 따라, 그리고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1) 선서 및 확약의 집행
- (2) 법률에 의하여 확정된 소환장의 발부
- (3) 증거의 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행하고, 관련 있는 증거를 수리하는 것
- (4) 정의의 목적에 공헌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서를 받거나 받아진 조사를 제출받는 것
- (5) 청문의 진행을 지휘하는 것
- (6)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쟁점의 해결 또는 단순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것
- (7) 절차상의 신청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
- (8) 이 편 제557조에 따라 결정을 행하거나 결정의 권고를 행하는 것 그리고,
- (9) 이 절에 합치하는 범위 안에서 관청의 규칙에 의하여 인정된 기타의 행위를 행하는 것

(d)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규칙 또는 명령의 제안자(Proponent)는 입증책임을 진다. 구술증언이나 증거서류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기관의 정책상 관련이 없거나 중요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하게 반복하는 증원은 배제하여야 한다. 제재는 과할 수 없으나 이미 발한 규칙이나 명령은 당사자가 인용하고, 증거를 제공하는 믿을 만한 실질적 증언에 의하여 지지되고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참작하여 제외한다. 기관은 재판의 이익과 그 관항하는 중요명령의 정책에 일치하는 범위 안에서, 이 편 제557조 제(d)항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위반을 야기시킨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로 볼 수 있다. 당사자는 구술증언이나 증거서류에 의하여 자기의 주장이나 답변을

제시하고, 반증(rebuttal evidence)을 제출하며, 사실을 충분히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반대신문(cross-examination)을 행할 수 있다. 기관은 규칙을 만들거나, 금전 또는 급여에 대한 청구 또는 최초의 면허신청을 재정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손해를 주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절차를 택할 수 있다.

- (e) 증언의 조사, 증거물 및 절차 중에 제출된 모든 문서 및 신청은 이 편 제557조에 따라 결정을 행함에 있어서는 배타적인 기록이 된다. 당사자는 법이 정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관청의 결정이 기록 중의 증거에 나타나지 아니한 실제적 사실을 인정한 것에 의존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 없이 신청에 의하여 반증을 제시할 기회를 갖는 권리가 있다.

<첨부 2>

## 미국 통신법<sup>62)</sup> 사후규제 관련 조항

TITLE—기간통신 사업자

PART I—기간통신 사업자 규제

### 제201조 [47 U.S.C. 201] 서비스와 요금

- (a) 유무선에 의한 주간 또는 국제 통신에 종사하는 모든 기간통신 사업자는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그러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또한 청문의 기회를 가진 후 연방통신위원회가 그러한 조치가 공익에 비추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방통신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타 사업자와 물리적 접속을 하거나 일정 요금이나 요금의 분담을 대가로 접속 루트를 설정하거나 접속 루트 운영을 위한 시설과 규칙을 제공하고 설정할 의무를 부담한다.
- (b) 그러한 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요금, 운영, 분류, 규칙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요금, 운영, 분류 또는 규칙은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 법에 따른 유무선 통신은 주간, 야간, 반복, 비반복, 문자, 상업용, 언론, 정부 등으로 분류될 수 있고 이러한 분류에 대하여 연방통신위원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면, 서로 다른 분류에 속하는 통신에 다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이 법 또는 어느 법 규정상으로도 만일 연방통신위원회가 어떠한 계약이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한 이 법의 규제를 받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이 법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기간통신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들의 서비스를 상호 교환하는 것을 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이 법 또는 어느 법 규정상

---

62) Communication Act of 1934

으로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통신 사업자의 명칭이 선박위치 보고와 함께 표시된다면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신문에 향해중인 선박의 위치보고를 명목적인 비용 또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이 법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규칙과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 제202조 [47 U.S.C. 202] 차별과 선호

- (a) 기간통신 사업자가 유사한 통신 서비스에 대하여 요금, 운영, 분류, 규칙, 시설, 서비스에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불공정하거나 비합리적인 차별을 하거나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부류의 자들 혹은 지역에 불공정하거나 비합리적인 혜택을 주거나 반대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 (b) 이 법에서 언급되는 요금이나 서비스는 유선 또는 무선 시설을 이용한 기간통신 사업자의 통신 회선의 사용에 관한 것이거나 동시방송(chain broadcasting) 또는 종류에 관계없이 무선통신에 부수적인 서비스 또는 그 요금을 포함한다.
- (c) 이 조를 고의로 위반하는 사업자는 위반이 계속되는 한 일당 300달러의 과징금과 개별 위반 건당 총 6,000달러의 과징금을 연방에 납부해야 한다.

#### 제203조 [47 U.S.C. 203] 요금 스케줄

- (a) 접속통신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기간통신 사업자는 연방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다음과 같은 요금 스케줄을 연방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출간하며 일반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한 요금 스케줄은 그 자신의 시스템내의 여러 지점 간 및 자신의 시스템내의 지점과 접속통신 사업자의 시스템의 지점 간 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자와의 접속 루트가 설정된 경우 그 사업자 시스템의 지점간의 주간 및 국제 유무선 통신에 부과하는 자신 또는 접속통신 사업자의 모든 요금을 공통요금이든 분리요금이든 모두 표시해야 하며, 또한 그러한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분류, 운영 및 규칙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한 요금 스케줄은 연방통신위원회가 규칙으로 정

하는 기타 정보를 포함하고 특정 형태로 출간되어 특정 장소에 일반의 열람을 위하여 공개되어야 하며, 각 요금 스케줄에는 시행일이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연방통신위원회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특정의 기간통신 사업자는 특정의 요금 스케줄을 자신의 접속통신 사업자 각각에 제공하고 그 접속통신 사업자는 특정의 요금 스케줄을 특정 장소에 일반의 열람을 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b) (1) 연방통신위원회에 일단 제출되고 출간된 요금, 분류, 규칙 또는 운영의 변경은 연방통신위원회가 규칙으로 규정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특정 형태로 출간되어 연방통신위원회 및 일반에 120일간 공지한 후에 비로소 이뤄질 수 있다.
- (2) 연방통신위원회는 그 재량으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조 또는 이 조의 권한에 의하여 부과된 요건을 개별적인 경우 또는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명령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연방통신위원회는 (1)항에 규정된 공지 기간을 120일을 초과하여 요구할 수 없다.
- (c) 어떠한 사업자도 이 법에 의하거나 이 법의 권한에 따라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 규정 및 관련 연방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라 요금 스케줄을 제출하지 아니하고서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어떠한 사업자도 (1) 어느 요금 스케줄에 규정된 지점간의 서비스나 그러한 통신을 위하여 부과하는 대가에 있어서 당시 유효한 요금 스케줄에 규정된 것과 많거나, 적거나, 또는 다른 보상을 부과하거나 요구하거나 징수하거나 또는 수령할 수 없고, (2) 요금 스케줄에 특정된 요금의 어느 부분을 어떠한 수단과 장치로 환급 또는 반환할 수 없으며, 또한 (3) 그러한 요금 스케줄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분류, 규칙 또는 운영을 적용 또는 집행하거나 그러한 통신에 혜택 또는 편의를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 (d) 연방통신위원회는 시행일을 적법하게 통지하지 아니한 스케줄이 신고를 위하여 제출된 경우에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연방통신위원회가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스케줄은 무효이고 그 사용은 불법이다.

- (e) 이 조 또는 이 조에 의한 연방통신위원회 규칙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준수를 거부한 사업자에 대하여 연방통신위원회는 위반이 계속되는 한 일당 300달러의 과징금을 그리고 각 위반에 대하여 6,000달러까지의 과징금을 징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킨다.

#### **제206조 [47 U.S.C. 206]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기간통신 사업자가 이 법에서 금지 또는 불법인 것으로 규정한 행위나 대상을 하거나, 유발하거나, 또는 하도록 한 경우, 또는 이 법에서 요구된 행위나 대상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도록 한 경우, 그 사업자는 그에 따라 손해를 입은 자에게 이 법 규정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 전부와 함께 각 건마다 법원이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이라고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 비용은 각 사건 비용의 일부로서 세금이 부과되고 징수된다.

#### **제208조 [47 U.S.C. 208] 연방통신위원회에 대한 이의 신청**

- (a) 누구든지, 어느 정치적 또는 지방조직, 주 위원회라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어느 기간통신 사업자가 이 법 규정을 위반하여 어떤 것을 하였거나 하지 아니한 사실을 간략히 기술하여 연방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연방통신위원회가 이의 신청 내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하면 사업자는 연방통신위원회가 지정한 합리적 기간내에 위 이의 신청을 충족하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동 이의 신청에 응답하도록 요구된다. 이 기간통신 사업자가 주어진 기간내에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손해에 배상을 할지라도 사업자는 신청의 대상이 된 특정 법 위반에 대하여서만 신청인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그 사업자가 주어진 기간내에 신청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신청내용을 조사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연방통신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과 수단으로 신청 내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신청자에 대하여 직접손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은 기각되지 아니한다.

- (b) (1) (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통신위원회는 이 조에 의한 요금, 분

류, 규칙, 운영의 조사와 관련하여 신청 제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 (2) 이 항의 시행일 이전에 개시된 조사와 관련하여 연방통신위원회는 동 시행 일 후 12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 (3) (1) 또는 (2)에 의하여 조사를 종결하는 명령은 최종적이고 제402조(a)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14조 [47 U.S.C. 214] 회선 연장

- (a) 어느 사업자도 추가 회선이나 회선 연장의 건설, 운영, 또는 건설과 운영이 현재 또는 미래의 공공 편의(public convenience)나 필요(necessity)상 요구된다는 증명서를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사전에 받지않는 한, 신규 회선이나 회선의 연장 건설을 하거나, 이를 획득 또는 운영하거나, 기타 그러한 회선을 통한 연장을 할 수 없으며, 추가적 또는 연장 회선을 통하여 송신을 할 수 없다. 단, 다음 회선의 건설, 획득, 운영을 위해서는 이 조에 따른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주간 회선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이 아닌 한 단일 주내에서의 회선(2) 연장 10마일 이하의 시내선(local), 지선(branch), 가입자선(terminal) 또는 (3) 이 법 제221조에 의해서 획득된 회선. 단 적절한 요청이 있을 경우 연방통신위원회는 이 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임시 또는 비상 서비스 또는 기존 시설의 보충을 승인할 수 있다. 어떠한 사업자도 지역사회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서비스 중단, 감축, 저하가 현재 및 미래의 공공편의나 필요에 해를 주지 않는다는 증명서를 사전에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얻지 않는 한 지역사회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감축하거나 저하시킬 수 없다. 단, 적절한 요청이 있을 경우 연방통신위원회는 이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또는 비상조치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단, 감축, 저하를 승인할 수 있다. 이 조에서 “회선(line)”은 적절한 장비의 사용에 의하여 설정되는 통신 채널을 의미하며, 둘 이상의 기존 채널의 상호 접속에 의하여 설정되는 하나의

통신 채널을 제외한다. 또한 이 조의 어느 부분도 제공되는 서비스의 적절함이나 질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한 새로운 건설 이외의 플랜트, 운영, 장비의 설치, 교체, 기타 변경에 대하여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증명서 기타 승인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b) 그러한 증명서의 신청을 접수할 때, 연방통신위원회는 신청서 사본을 국방부장관, 국무부장관(외국 지점에 대한 서비스를 포함하는 신청의 경우), 회선의 건설, 연장, 획득, 운영 또는 서비스 중단, 감축, 저하가 제안되고 있는 각 주의 주지사에게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통지와 함께 송부하도록 한다. 연방통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공시하도록 할 수 있다.
- (c) 연방통신위원회는 신청된 회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청서에 기술된 서비스의 중단, 감축, 저하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연방통신위원회가 판단하는 바의 공공의 편익과 필요상 요구되는 조건을 그러한 증명서에 첨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한 증명서 발급 후 사업자는 증명서 이외의 승인을 얻지 않고도 그러한 증명서의 발급시 포함되거나 첨부된 조건을 준수하면서 해당 건설, 확장, 운영 또는 서비스 중단, 감축, 저하를 시행할 수 있다. 이 조 규정에 반하는 어떠한 건설, 확장, 획득, 운영, 서비스 중단, 감축, 저하도 연방의 적법한 관할권 있는 법원에 대한 제소, 연방통신위원회, 주 위원회, 이에 영향을 받는 주 또는 이해당사자에 의해 금지될 수 있다.
- (d) 연방통신위원회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개시된 절차에서 청문의 기회를 가진 후 그러한 절차의 당사자인 사업자에게 사업자로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거나 회선을 연장하거나 공공의 사무소를 개설할 것을 명령으로 승인 또는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통신위원회는 그러한 시설의 공급, 회선의 연장, 공공의 사무소의 설치가 공공의 편익과 필요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거나 관련되는 비용이 사업자의 공중에 대한 의무이행 능력을 손상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그러한 승인이나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른 연방통신위원회 명령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과실로 준수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그러한 거부 또는 과실로 인한 불이행이 계속되는 한 일당 1,200달러의 과징금을 연방으로부터 징수당한다.

(e)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의 제공

(1) 자격 있는 통신 사업자—(2) 또는 (3)에 의해서 자격 있는 통신 사업자로 (eligible telecommunications carrier) 지정된 기간 통신 사업자는 제254조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지정된 서비스 지역에 대하여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A) 제254조(c)항에 의한 연방 보편적 서비스 지원 시스템에 의해 지원되는 서비스를 자신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또는 자신의 시설과 타 사업자의 서비스 (다른 자격 있는 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 재판매를 조합하여 제공하고;

(B) 그러한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그에 따른 요금을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미디어를 통하여 광고한다.

(2) 자격 있는 통신 사업자의 지정—주 위원회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1)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주 위원회가 지정하는 서비스 지역의 자격 있는 통신 사업자로 지정한다. 신청이 있고 공공의 이익, 편의, 필요에 부합하고, 각 추가적인 신청 사업자가 (1)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교외 전화회사에(rural telephone company) 의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주 위원회는 둘 이상의 기간통신 사업자를 주 위원회가 지정하는 서비스 지역의 자격 있는 통신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교외 전화회사 이외의 경우에는 주 위원회는 둘 이상의 기간통신 사업자를 주 위원회가(State commission) 지정하는 서비스 지역의 자격 있는 통신 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 교외 전화회사 서비스 지역의 경우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주 위원회가 그러한 지정이 공공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3) 미서비스 지역을 위한 자격 있는 통신 사업자의 지정—어떠한 기간통신 사

업자도 제254조(c)항에 의한 연방 보편 서비스 지원 시스템에 의하여 지원되는 서비스를 그러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주간 통신에 대하여는 연방통신위원회가 또는 주내 통신에 대하여는 주 위원회가 그러한 지역에 어떠한 사업자가 서비스를 최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 절에서 그러한 서비스 제공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1)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자격 있는 통신 사업자로서 지정된다.

- (4) 보편 서비스의 포기—주 위원회는 둘 이상의 통신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에서 자격 있는 통신 사업자가 사업자 지정을 포기하고자 할 때 이를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에서 자격 있는 통신 사업자 지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의사를 주 위원회에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한 포기를 허용하기 전에 주 위원회는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고객들에게 나머지 자격있는 통신 사업자가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또한 나머지 자격 있는 통신 사업자가 적절한 시설의 구매 또는 건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공지를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주 위원회는 이 절의 포기를 주 위원회가 승인한 후 1년 이하의 기간을 설정하여 이 기간내에 그러한 구매나 건설이 완료되도록 해야 한다.

- (5) 서비스 지역의 정의—“서비스 지역(service area)”은 보편적서비스 의무와 지원 시스템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 위원회가 지역적으로 설정한 지역을 의미한다. 교외 전화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경우의 “서비스 지역”은 연방통신위원회와 주가 제410조(c)항에 의하여 설립된 연방과 주의 공동 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그러한 회사의 서비스 지역에 대한 다른 정의를 설정하지 아니하는 한 “연구 지역(study area)”을 의미한다.

**제221조 [47 U.S.C. 221] 전화회사에 대한 특별규정**

[(a) 공법 104-104;110 Stat. 143에 의하여 폐지]

- (b) 제225조 및 제301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선, 이동 또는 점대 점 무선 전화 교환 서비스(point-to-point radio telephone exchange service) 또는 이들의 조합이 주간 또는 국제 통신을 구성한 다고 할지라도 이에 관한 요금부과, 분류, 운영, 서비스, 시설, 규칙이 주 위원회나 지방정부의 규제를 받는 경우에는, 이 법의 어떤 부분도 적용되거나 연방통신위원회에게 관할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c) 유선전화 통신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방통신위원회는 유선전화 통신에 사용되는 사업자의 자산을 분류하고 사업자의 어떠한 자산이 주간 또는 국제전화 톨(toll) 서비스에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분류는 사업자의 자산이 소재하고 있는 주의 주 위원회(주 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주지사) 및 연방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자들에게 통지하여 청문후 설정되어야 한다.
- (d) 유선전화 사업자의 자산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연방통신위원회는 이 조에서 인정된 분류를 한 후 주간 또는 국제전화 톨 서비스에 사용되는 것으로 결정된 사업자의 자산만을 평가할 수 있다.

**제222조 [47 U.S.C. 222] 고객 정보의 보호**

- (a) 총칙－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통신사업자를 포함하여 모든 통신 사업자는 다른 통신 사업자, 장비 제조자, 고객에 속하는 또는 이와 관련된 사적인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 (b) 사업자 정보의 비밀－어떠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자로 부터 그에 귀속되는 사적인 정보를 받거나 얻는 통신 사업자는 오로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그 정보를 사용하고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 (c) 고객의 사적인 네트워크 정보에 대한 비밀

- (1) 통신 사업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요건—법에 의해 요구되거나 고객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신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하여 고객의 사적인 네트워크 정보를 받거나 얻은 통신 사업자는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고객의 사적인 네트워크 정보의 사용, 공개, 접근 허용을 오로지 (A) 그러한 정보가 연원된 통신 서비스나 (B) 전화번호부의 출판을 포함하여 그러한 통신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하거나 사용되는 서비스 제공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2) 고객의 요청에 따른 공개—통신 사업자는 고객의 적극적인 서면 요청이 있을 때 고객이 지정하는 자에게 고객의 사적인 네트워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3) 집합적 고객정보(aggregate customer information)—통신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하여 고객의 사적인 네트워크 정보를 받거나 얻은 통신 사업자는 (1)에 기술된 것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집합적인 고객정보를 사용, 공개하거나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 시내전화사업자는 합리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다른 사업자나 타인에게 그러한 집합적 고객정보를 제공한다면 (1)에 기술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집합적 고객정보를 사용, 공개하거나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

## (d) 예외—이 조의 어떤 부분도 통신 사업자가 그 대리인을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신의 고객으로부터 다음의 것을 위하여 얻은 고객의 사적인 네트워크 정보를 사용, 공개, 또는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1) 통신 서비스의 개시, 제공, 요금부과 및 징수
- (2) 사업자의 권리 또는 자산을 보호하거나 서비스 이용자나 타사업자를 불법적이거나 사기적인 또는 남용적인 사용 또는 가입으로부터 보호
- (3) 만일 그 통화가 고객에 의해 개시되었고 고객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 그 통화가 지속되는 동안 고객에게 텔레

마케팅, 소개, 관리 서비스를 제공.

(e) 가입자 명단 정보—(b), (c), (d)항에도 불구하고 시내전화 교환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사업자는 그러한 서비스 제공자로서 수집된 가입자 명단 정보를 어떠한 형태의 전화번호부를 출간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요청할 경우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요금과 조건으로 적시에 그리고 개별적 가격으로 가입자 명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f) 정의—이 조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객의 사적인 네트워크 정보(Customer Proprietary Network Information)—“고객의 사적인 네트워크 정보”는 다음을 의미하나 가입자 명단 정보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A) 통신 사업자의 고객이 가입한 통신 서비스의 양, 기술정보, 유형, 목적지, 사용량에 관한 정보로서 오로지 사업자—고객의 관계로 인하여 가입자로부터 사업자가 얻은 정보

(B) 사업자의 고객이 이용한 시내전화 교환 서비스나 전화통 서비스에 관한 요금에 속하는 정보.

(2) 집합적 정보—“집합적 고객 정보”는 개별적 가입자의 정체나 특징이 제거된 일단의 서비스 그룹이나 범위에 속하는 집합적 데이터를 의미한다.

(3) 가입자 명단 정보—“가입자 명단 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의미한다.

(A)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입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요 광고 분류(서비스 설정 당시 할당된 분류에 따른) 또는 가입자 이름, 번호, 주소, 분류 등의 조합

(B) 사업자 또는 계열사가 어떠한 형태로든 안내명부로 출간하였거나 출간하도록 하였거나 출간에 동의한 정보.

## 제223조 [47 U.S.C. 223] 워싱턴 D.C.내, 주간 또는 국제간의 음란 또는 장난 전화

(a) 누구든지

(1) 주간 또는 국제 통신에서

- (A)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고의로 타인을 괴롭히거나 학대, 위협, 협박할 의사를 가지고 음란, 외설, 오로지 성적인, 저주스럽거나, 불온한 진술, 요청, 제안, 이미지 기타 통신을, ( i ) 하거나, 만들거나 강요하고, ( ii ) 그 전송을 개시하거나;
- (B)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누가 먼저 개시하거나 전화를 걸었는지에 관계없이, 음란하거나 온건하지 아니한 진술, 요청, 제안, 이미지 기타 통신을 그 수령자가 18세 미만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 i ) 하거나, 만들거나 강요하고, ( ii ) 그 전송을 개시하거나
- (C) 수신번호의 자나 그 통신을 받는 자를 괴롭히거나, 학대, 위협, 협박할 의사로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대화나 통신을 하든지 그렇지 않은 전화를 하거나 통신 장비를 이용하거나
- (D) 수신번호의 자를 괴롭힐 의사로서 타인의 전화가 반복적으로 또는 계속하여 울리도록 하거나
- (E) 수신번호의 자나 그 통신을 받는 자를 괴롭힐 목적만으로 반복하여 전화를 하거나 통신 장비로 통신을 반복적으로 개시하여 통화 또는 통신을 하거나 또는
- (2) 정을 알면서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통신시설이 (1)항에 의해 금지되는 활동에 사용되도록 할 의사를 가지고 그 통신 시설이 그렇게 사용되도록 한 경우에는, 미국 연방 법전 Title 18에 의해서 벌금(fine)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한다.
- (b) (1) 누구든지 그 정을 알면서
  - (A) 미국내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먼저 전화를 걸었는지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음란한 통신을 하거나(직접 또는 녹음 장치에 의하여) 또는
  - (B) (A)에 의하여 금지되는 활동에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전화 시설이 이용되도록 허용한 경우, 미국 연방 법전 Title 18에 의해서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한다.

- (2) 누구든지 그 정을 알면서
  - (A) 미국내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먼저 전화를 걸었는지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누구에게든지 그 자의 동의 없이 또는 18세 미만의 자에게 이용될 수 있는 온건하지 아니한(indecent) 통신을 하거나(직접 또는 녹음 장치에 의하여) 또는
  - (B) (A)에 의하여 금지되는 활동에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전화 시설이 이용되도록 허용한 경우, 50,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한다.
- (3) 피고인이 이 조(c)항과 연방통신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금지된 통신에 대한 접근을 18세 이상의 자로 한정할 경우에는 위 (2)의 기소에 대한 항변사유가 된다.
- (4) (1)의 벌칙에 추가하여 미국내에서 누구든지 (1) 또는 (2)를 고의로 위반한 자는 각 위반마다 50,000달러의 벌금형(fine)에 처한다. 이 호의 목적상 각 위반일은 별개의 위반으로 간주된다.
- (5) (A) (1), (2) 및 (5)의 벌칙에 추가하여 미국내에서 누구든지 (1) 또는 (2)를 고의로 위반한 자는 각 위반마다 50,000달러의 과징금(civil fine) 처벌을 받는다. 이 호의 목적상 각 위반일은 별개의 위반으로 간주된다.
  - (B) 이 (5)의 벌금은 ( i ) 연방통신위원회 또는 연방통신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용하는 변호사에 의하여 제기되는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결정하거나 ( ii ) 적절한 행정절차를 거쳐 연방통신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
- (6) 법무부장관은 (1) 또는 (2)를 위반하는 행위나 운영을 금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연방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금지처분은 연방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 (c) (1) 워싱턴 D.C.내 또는 어느 주 내의 사업자 또는 주간 또는 국제 통상에 종사하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자신의 가입자로부터 (b)항에 특정된 통신의 대가로 구분되는 요금을 징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그러한 통신의 제공자

에게 지급하는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서면으로 자신에게 그러한 통신에 대한 접근 제공을 요청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그러한 통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2) (3)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행위에 대하여 그 임직원, 이사, 대리인, 또는 승인된 대표 등을 포함하여 기간통신사업자나 그 계열사는 어느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제소될 수 없다.

(A) 사업자의 행위가 선의로 위 (1)에 따라 접근을 제한하기 위하여 취해졌을 때, 또는

(B) 허용된 접근이 (i) 그 제공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통신이 (b)항에 특정된 통신이라고 그 통신의 제공자가 사실을 밝히지 못함에 선의로 의존한 것이거나, (ii) 제공자의 구체적 대표가 사업자로 하여금 선의로 (b)항에 특정된 통신에 대한 접근 제한을 행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 경우.

(3) 위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에 의하여 접근이 거부된 가입자에 대한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법원에서 선언적 판결(declaratory judgment)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한 소송은 제공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통신이 사업자가 그러한 접근을 이전에 요구하였던 가입자에게만 접근을 제공하여야 하는 범주의 통신인지에 대한 질문에 한정되어야 한다.

(d) 누구든지

(1) 주간 또는 국제 통신에서 그 정을 알면서,

(A) 특정인 또는 18세 미만의 자에게 보내기 위하여 쌍방향 컴퓨터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또는

(B) 18세 미만의 자에게 이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는 쌍방향 컴퓨터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서비스 이용자가 먼저 전화를 걸거나 통신을 개시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당시의 지역사회 기준(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에 따라 비추어 볼 때 음란한 행위나 성적 배설 행위나 조직(sexual or excretory activities or organs)을 전적으로 공격적인 방법으로(patently

- offensive) 묘사하거나 기술하는 진술, 요청, 제안, 이미지 기타 통신을 하거나,
- (2)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통신 설비가(1)에 따라 금지되는 활동에 이용되도록 할 의사를 가지고 이를 알면서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미국 연방 법전 Title 18에 의하여 벌금형에 처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이들을 병과한다.
- (e)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다른 항변사유에 추가하여,
- (1) 누구든지 통신 콘텐츠의 창조를 포함하지 않는 그러한 접근 또는 접속을 제공하는데 부수되는 전송, 저장, 중간 저장, 접근 소프트웨어 기타 관련 능력을 포함하여 자신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시설, 시스템, 네트워크에 접근 또는 접속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 (a)항 또는 (b)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2) 위 (1)의 항변은 이 조를 위한 통신의 창조나 그 정을 알고 이를 분배하는데 적극 참여한 자의 공모자나 그러한 통신의 이용가능성을 알고 광고한 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위 (1)의 항변은 자신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시설, 시스템, 네트워크가 이 조에 위반되는 접근 또는 접속을 제공하는 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 (4) 종업원 또는 대리인의 행위가 그들의 고용 범위에 포함되고 고용주가 (A) 그러한 행위를 알고 있었거나 이를 승인하였거나, 또는 (B) 그러한 행위를 무모하게 무시한 것이 아니라면, 고용주는 이 조에 의하여 종업원 또는 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5) 다음은 (a)항(1)호 (B) 또는 (d)항, 또는 (a)항(1)호 (B)의 활동을 위한 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a)항(2)호의 기소에 대한 항변사유가 된다.
- (A) 위 조항들에 특정된 통신에 대한 미성년자의 접근을 제한 또는 금지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기술에서 적절한 방법을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며 상황에 적절한 미성년자의 통신접근 제한 조치를 선의로 취하였거나 또는
- (B) 인증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성인접근코드 또는 성인 개인 식별번호의 사용

을 요구함으로써 그러한 통신의 접근을 제한한 경우.

- (6) 연방통신위원회는 (d)항에 의해서 금지된 통신을 제한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이 조의 어떤 부분도 연방통신위원회로 하여금 그러한 조치를 승인, 제재, 허용할 권한을 부여하거나 부여를 의도하거나 집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연방통신위원회는 그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집행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연방통신위원회는 그러한 조치와 관련된 구체적 결과물을 보증할 수 없다. 그러한 조치의 이용은 (d)항에 의해서 발생하는 행위에서 (5)의 목적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노력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이 조의 어느 부분도 쌍방향 컴퓨터 서비스를 기간통신 사업자 또는 통신 사업자로 간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f) (1) 누구도 이 조에 의해서 허용된 항변사유를 선의로 이행하였거나 이 조하에 특정된 통신의 전송이나 접근을 선의로 제한 또는 금지한 경우 형벌이나 민사적 제재에 의하여 벌할 수 있는 법 위반이 아닌 활동을 이유로 어느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제소될 수 없다.
- (2) (a)항(2)호 또는 (d)항에 기술된 활동이나 행위와 관련하여 영리 단체, 비영리 도서 관, 고등 교육기관의 영리활동 또는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주나 지방정부도 이 조에 따른 활동이나 행위의 처리와 부합되지 아니하게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단, 이 조의 어떤 부분도 오로지 주 내에서의 서비스만을 규제하고 주간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부합되지 않는 권리, 의무를 부과 하는 것이 아닌 한 주 또는 지방정부가 보완적인 감독, 책임, 규제 시스템, 절차, 요건을 부과하여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항의 어떤 부분도 이 조가 담당하지 않는 행위를 주 또는 지방정부가 규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 (g) (a), (d), (e) 또는 (f)항의 어느 부분도 또는 (a)항 또는 (d)항에 의한 기소에 대한 항변의 어떤 부분도 다른 연방법의 적용이나 집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h)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1) 이 조의 “통신장비(telecommunications device)”라는 용어의 사용은,

(A) 이 법의 다른 곳에서 음란 및 불온 제한 규정에 의하여 커버되는 방송국 면허 소유자 및 케이블 운영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B) 쌍방향 컴퓨터 서비스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쌍방향 컴퓨터 서비스”는 제230조(e)항(2)호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3) “접근 소프트웨어”는 통신의 콘텐츠를 창조하거나 제공하지 않지만 사용자로 하여금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또는 서버 소프트웨어를 포함) 기타 도구를 의미한다.

(A) 내용을 거르고 허용, 불허;

(B) 내용을 선택, 분석, 요약;

(C) 내용을 전송, 수신, 표시, 임시저장, 검색, 조직, 재조직, 번역

(4) “고등교육기관”은 1965년 고등교육법 제1201조(20 U.S.C.1141)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5) “도서관”은 도서관 서비스 및 건설법 Title 111(20 U.S.C.355e 이하)하에서 주에 기초한 기금계획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도서관을 의미한다.

#### **제224조 [47 U.S.C. 224] 관로의 공동사용(Pole Attachment)**

(a) 이 조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공공서비스사업자(utility)”는 시내 전화 사업자, 전기, 가스, 수도, 증기, 기타 공공서비스 사업자로서 유선 통신에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될 수 있는 전주, 도관 기타 관로, 우선 통행권(right-of-way)을 소유 또는 통제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철도, 조합으로 구성된 자, 또는 연방정부나 주에 의해 소유되는 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연방정부”는 연방과 연방기관을 의미한다.

(3) “주”는 미국의 각 주, 속령, D.C. 또는 그 이하의 지방정부 및 각각의 기관을

의미한다.

- (4) “관로의 공동사용”은 공공서비스 사업자가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전주, 도관 기타 관로를 케이블 TV 시스템 또는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공동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5)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이 법 제3조에 정의된 바의) “통신사업자”는 제251조 (h)항에 정의된 ‘기존 시내전화 사업자’(incumbent local exchange carrier)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b) (1) 이 조(c)항 규정의 제약을 받으면서 연방통신위원회는 관로의 공동사용을 위한 요금, 조건, 기타 조건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되도록 이를 규제해야 하고 이 요금, 조건에 관한 신청을 듣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절차를 채택하여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설정되는 신청 절차로부터의 어떤 결정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방통신위원회는 이 법 Title III 제312조(b)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금지 명령을 포함하여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연방통신위원회는 이 조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규칙으로 정한다.
- (c) (1) 이 조의 어떤 부분도(f)항에 규정된 전주, 도관 기타 관로에 대한 요금, 조건, 접근에 관하여 관로의 공동사용 문제가 주에 의하여 규제되는 경우 이들에게 적용되거나 연방통신위원회에게 그에 관한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2) 관로의 공동사용에 대한 요금, 조건을 규제하는 각 주는 연방통신위원회에게 다음을 증명 하여야 한다.
  - (A) 그 주가 그러한 요금, 조건을 규제하고 있고
  - (B) 그러한 요금, 조건의 규제에 있어서, 그 주가 공공서비스 소비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관로의 공동사용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가입자의 이익도 고려하거나 고려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 (3) 이 항의 목적을 위하여 주는 다음을 행하지 아니하면 관로의 공동사용을 위한요금, 조건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A) 관로의 공동사용에 대한 주의 규제 권한을 시행하는 효과적인 규칙과 명령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 (B) 개별사안에 대하여 주가 신청에 대한 최종조치를 ( i ) 신청이 주에 접수된 후 180일 이내에 취하지 않거나, 또는 (ii) 신청이 주에 접수된 후 3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최종 조치가 주법에 따라 취해지지 아니하는 경우.
- (d) (1) 이 조(b)항의 목적을 위하여, 요금이 공공서비스 사업자로 하여금 관로의 공동사용 제공을 위한 추가비용보다 작지 않고 총관로의 공동사용에 의한 사용 공간 비율 또는 전체 전주, 도관, 관로, 또는 우선 통행권에 대한 공동사용의 운용비용 및 실제 자본비용인 총 관로 용량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이면 그 요금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 (2) 이 항에 사용되는 “사용 공간(usable space)”은 전선, 케이블과 관련 장비의 접속에 사용될 수 있는 최소 단위 이상의 공간을 의미한다.
- (3) 이 항은 케이블 TV 시스템에 의하여 오로지 케이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서만 사용되는 관로의 공동사용 요금에 적용된다. (e)항에서 요구되는 규칙의 시행일까지 이 항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사업자(그러한 사업자가 관로의 공동사용 계약 당사자가 아닌 한)나 케이블 시스템에 의한 관로의 공동사용 요금에 적용된다.
- (e) (1) 연방통신위원회는 1996년 전기통신법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사업자에 의한 관로의 공동사용요금에 대한 분쟁을 당사자가 해결하지 못할 때 이 항에 따라 규제하는 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규칙은 관로의 공동사용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요금을 공공서비스 사업자가 부과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2) 공공서비스 사업자는 사용 공간 이외의 전주, 도관, 관로, 우선 통행권 제공 비용을 사업자간에 배분하여 그러한 배분이 사용공간 이외의 공간에 대한

제공 비용의 3분의 2와 같도록 하고, 그 비용은 접속하는 모든 사업자간에 균등하게 배분된다.

- (3) 공공서비스 사업자는 사용 공간 제공 비용을 각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사용 공간 비율에 따라 모든 사업자에게 배분해야 한다.
- (4) (1)에 의하여 요구되는 규칙은 1996년 전기통신법이 제정된 이후 5년이 지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항에서 요구되는 규칙의 채택으로 야기되는 관로 공동사용 비용의 증가는 그러한 규칙의 시행일로부터 시작하여 5년 동안 연간 균등한 액수로 계상되어야 한다.
- (f) (1) 공공서비스 사업자는 케이블 TV 시스템이나 통신 사업자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는 전주, 도관, 관로에 대한 비차별적인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사업자는 용량 부족이나 안전, 신뢰성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학적 목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케이블 TV 사업자나 통신 사업자의 전주, 도관, 관로에 대한 접근을 비차별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 (g) 통신 서비스나 케이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사업자는 이 조에서 부담 할 관로의 공동사용 요금과 동일한 금액을 그러한 서비스 제공 비용에 계상(또는 그러한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계열사, 자회사, 제휴사 들에게 요금을 부과) 해야 한다.
- (h) 전주, 도관, 관로 또는 우선 통행권의 소유자가 이들을 변경 또는 교체하고자 할 때는 그 소유자는 이들 관로의 공동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하여 그 자가 기존의 공동사용에 추가 또는 변경을 할 합리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지를 받은 후 기존의 공동사용에 추가 또는 변경을 하는 자는 그러한 전주, 도관, 관로, 또는 우선 통행권에 접근하는데 소유자가 지출한 비용을 비례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 (i) 전주, 관로, 또는 우선 통행권의 공동사용권을 가진 자는 타인(그전주, 도관,

관로, 또는 우선 통행권의 소유자를 포함)에 의한 기존 공동사용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자신의 공동사용의 재조정이나 재배치가 요구되는 것일 경우 그러한 재조정이나 재배치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 제226조 [47 U.S.C. 226] 전화 교환원 서비스

(a) 정의—이 조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1) “접속 번호(access code)”는 이를 돌렸을 때 통화자를 특정순서에 연관된 교환원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결시켜주는 특정 순서의 번호를 의미한다.
- (2) “재과금사업자(aggregator)”는 공중이나 가입자 건물 내의 일시적 사용자가 교환원 서비스 제공자를 사용하는 주간 전화 통화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을 일반적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한다.
- (3) “콜 스플래싱(call splashing)”은 하나의 교환원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전화를 다른 제공자에게 연결함에 있어서 후자가 그 전화의 발신지를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후자가 그러한 발신지에 근거한 요금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방식의 통화 이전을 의미한다.
- (4) “소비자”는 교환원 서비스를 사용하여 주간 전화통화를 개시하는 자를 의미한다.
- (5) “동등 접속(equal access)”은 이 조항이 제정되기 전 법원이 내린 명령들에 의하여 개정된 1982년 8월 24일의 U. S. v. Western Electric 사건, 사건 번호 82-0192의 최종 결정의 수정(Modification of Final Judgment)(연방 지방법원, 워싱턴 D.C.)의 부록 B에 주어진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 (6) “동등 접속 번호”는 공중이 그 번호와 연관된 사업자에게 동등한 접근의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접속 번호를 의미한다.
- (7) “교환원 서비스”는 재과금사업자 소재지로부터 개시된 주간통신 서비스로서 주간 전화통화의 요금 청구나 종료 또는 양자 모두를 위한 자동 또는 교환원의 직접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되, 다음과 같은 방식 이외의 것을 의미

한다.

- (A) 통화발신 전화에 대한 요금청구와 함께 자동종료 또는
- (B) 소비자가 그 사업자에게 이미 설정한 계좌로 요금을 청구하면서 소비자가 사용하는 접속 번호를 통하여 종료.
- (8) “사전지정 교환원 서비스 제공자(prescribed provider of operator services)”는 소비자가 교환원 서비스를 사용하여 전화를 할 때 접속 번호를 돌리지 않고 직접 소비자가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 교환원 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한다.
- (9) “교환원 서비스 제공자”는 교환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 사업자 또는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하여 교환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결정된 자를 의미한다.
- (b) 교환원 서비스 제공자의 요건.
  - (1) 총칙— 이 조항의 제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시하여 각 교환원 서비스 제공자는 최소한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 (A) 각 전화통화를 시작할 때 그리고 소비자가 그 전화 통화요금 지출 행위를 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들을 수 있고 구별될 수 있게 자신을 밝히고,
    - (B) 통화가 연결되기 전에 소비자가 그 전화통화를 비용부담 없이 끊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 (C)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 소비자에 대하여 비용을 부과함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즉시 공개하고, ( i ) 통화요금 또는 요금의 견적 ( ii ) 요금 또는 요금의 징수방법 ( iii ) 요금, 요금, 또는 요금 징수에 대한 신청의 해결방법
    - (D) 계약 또는 관세에 의하여 그 제공자가 사전지정 교환원서비스 제공자인 재과금사업자가 (c)항 또는 해당하는 경우 (e)항(1)호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해야 하고,
    - (E) 그 제공자가 만일 재과금사업자가 ( i ) (c)항(1)호 (B)를 위반하여 950 또는 800 번호에 의한 주간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접속을 막고 있거나, ( ii ) (e) (1)에 의하여 연방통신위원회가 규정하는 규칙을 위반하여 동등 접속

- 번호에 대한 접속을 막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 재과금사업자에 대하여 커미션을 포함한 보상의 지급을(각 해당 지정별료) 보류하고,
- (F) 동등 접속이 제공되는 지역에서 응답이 없는 전화통화에 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 (G) 동등 접속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응답이 없는 전화통화에 그 정을 알면서 요금을 청구하지 않으며,
- (H) 소비자가 사전에 다른 교환원 서비스 제공자에게로 이전을 요청하고 그 소비자에게 통화요금의 발생행위 이전에 그 통화 요금이 실제 발신지로부터의 요금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그 후 소비자가 그 이전에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콜 스플래싱을 운영하지 아니하며, 또한
- (I) (H)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의 발신지를 반영하지 않는 통화요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 (2) 초기 3년간의 추가적 요건—(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이외에 이 조항의 제정일 후 90일이 되는 날로부터 3년간 각 사전지정교환원 서비스 제공자는
- (1) (A)에 요구되는 것뿐만 아니라 통화를 연결하기 전에 그리고 소비자에게 어떤 요금이 발생하기 전에 재차 들을 수 있고 구별될 수 있게 소비자에게 자신을 밝혀야 한다.
- (c) 재과금사업자에 대한 요건
- (1) 총칙—이 조항의 제정일 후 90일 이내에 각 재과금사업자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전화기 또는 그 근방에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내용을 게시하고, (i) 교환원 서비스 제공자의 성명, 주소, 수신자 요금 부담 전화번호 (ii) 요청시 교환원 지원 통화의 요금 정보가 제공되며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주간 기간통신 사업자에 접근할 권리가 있고 그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주간 기간통신사업자에 접근하여 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서면 공개 (iii) 소비자가 교환원 서비스

에 관하여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연방통신위원회내 기간통신 사업자  
국 집행과의 이름과 주소.

(B) 소비자가 교환원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전가입한 전화를 통하여 800 및 950  
접속 번호를 사용하여 원하는 교환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접근을 하도록  
허용하고,

(C) 소비자의 800 또는 950 접속 번호 사용에 대한 재과금사업자의 요금 부과  
가 이 사전지정 교환원 서비스 제공자를 사용하는 통화에 대하여 재과금사  
업자가 부과하는 요금보다 많지 않도록 한다.

(2) 주 법령의 효과—(1)호 (A)의 요건은 (1)호 (A)에 요구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  
일한 조치를 재과금사업자가 취하도록 주 법령에 요구하는 경우에 재과금사  
업자에게 적용되지 아니 한다.

(d) 일반적인 규칙제정의 요구

(1) 규칙제정 절차—연방통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규칙의 제정을 위하여 이  
Title에 따른 절차를 수행한다.

(A) 소비자가 주간 전화통화를 하기 위하여 교환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서 부당하고 사기적인 운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B) 소비자들이 그러한 통화를 하는데 있어서 관련 정보를 주지한 가운데 선택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

(2) 규칙의 내용—이 조에 의하여 규정된 규칙은,

(A) 접근과 보상에 관하여 (e)항의 규칙제정으로 설정되는 요건 이외의 것으로  
서, 이 조의 각 요건을 집행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B) 이 조 및 이 조의 목적과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방통신위원회가 필요  
하다고 결정하는 기타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3) 규칙에 의해 시행될 추가 요건—이 조에 의해서 규정될 규칙은 최소한,

(A) 비상 전화통화의 전달 및 취급에서 사용되는 교환원 서비스 제공자와 재과  
금사업자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B) 교환원 서비스의 최근 변경과 소비자가 그러한 시장에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공공 정보를 교환원 서비스 제공자가 갖추도록 정책을 설정하여야 한다.

(e) 접근과 보상에 대한 별도의 규칙제정

(1) 접근—연방통신위원회는

(A) 교환원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전지정된 각 전화가 소비자에게 동등 접속 번호의 사용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교환원 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할 수 있도록 각 재과금사업자가 합리적인 기간내에 보장하도록 요구하거나,

(B) 합리적인 기간내에 모든 교환원 서비스 제공자가 미국내 어느 곳으로부터도 교환원 서비스 요청 전화를 하는데 사용되는 950 또는 800 번호를 그들의 고객에게 이용가능하도록 요구하거나,

(C) (A) 또는 (B)에 규정된 요건이 적용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2) 보상—연방통신위원회는 사전지정된 교환원 서비스 제공자 이외의 교환원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통화에 대하여 경쟁적 공중전화의 소유자에 대한(소비자의 선납금 이외의) 보상을 정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 조항의 제정일 후 9개월 이내에 연방통신위원회는 그러한 보상을 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최종결정을 해야 한다.

(f) 장비의 기술적 능력—이 조항의 제정일로부터 18개월 후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재과금사업자가 설치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소비자가 동등 접속 번호를 사용하여 주간 교환원 서비스 제공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g) 사기—이 조항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서 연방통신위원회는 재과금사업자가 사기에 부당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수단을 요구해야 한다.

(h) 요금 준수의 결정

(1) 정보제공차원의 요율 신고<sup>11</sup>

- (A) 총칙－각 교환원 서비스 제공자는 이 조의 제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커미션, 부가요금,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제 비용, 교환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통화에 관하여 각 요금별 평가 통화량의 합리적 추산치를 포함하여 요금 및 조건을 구체화하는 정보제공적 요율을 신고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항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요금 또는 조건의 변경은 변경 요금 또는 조건의 발효일 이전에 신고되어야 한다.
- (B) 면제권한－연방통신위원회는 이 조의 제정일로부터 4년 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이 항의 요건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 (i) (3) (B) (iii)에 의한 최종보고에서 연방통신위원회의 결정과 결론이 (d)항 (1)호 (A) 및 (B)에 구체화된 규제목표가 달성되었다고 기술하는 경우; 그리고
- (ii) 연방통신위원회가 그러한 면제가 그러한 규제목표의 계속적인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
- (2) 정보제공적 요율의 검토－(1)에 의하여 교환원 서비스 제공자가 신고한 요금에 대하여 연방통신위원회가 검토하여 부당하거나 또는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연방통신위원회는 그러한 교환원 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 각각 또는 모두를 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A) 그 요금이 공정하고 합리적임을 증명하고,
- (B) 각 통화를 개시할 때 요청시 통화요금을 알 수 있음을 고지.
- (3) 요구되는 절차
- (A) 총칙－이 조의 제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방통신위원회는 (d)항(1)호 (A)와 (B)에 특정된 규제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그 절차는 (i) 교환원 서비스 요금을 감시하고, (ii) 교환원 서비스 제공자의 제공이 그 시장에 신규 교환원 서비스 제공자가 진입하기 이전에 비하여 서비스 질, 가격, 혁신, 기타 요소의 견지에서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결정하고, (iii) (개별 및 전체 제공자에 대한) 교환원 서비스

요금, 서비스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율,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하고, (iv) 커미션, 부가료, 요금 청구 및 인증 비용, 및 기타 영업비용이 소비자에 부과되는 전체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v) 재과금사업자 소재지로부터의 주기적인 통화를 포함하여 이 조 규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한다.

(B) 보고

- (i) 연방통신위원회는 그러한 절차가 계류중인 동안 그리고 그 개시 후 5개월 이내에 그 당시까지의 연방통신위원회활동 및 진도에 대한 중간보고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 (ii) 그러한 절차의 개시 후 11개월 이내에 연방통신위원회는 그 절차의 결과로서 잠정적인 결정을 의회에 보고하고,
- (iii) 그 절차의 개시 후 23개월 이내에 연방통신위원회는 그 결정과 결론에 대하여 의회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4) 시행을 위한 규칙

(A) 총칙－연방통신위원회가 (B)에 규정된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연방통신위원회는 (3)호 (B) (iii)에 의하여 요구되는 보고의 제출 후 180일 이내에, 교환원 서비스 요금과 효율이 공정하고 합리적일 것을 요구하는 이 Title의 요건(그리고 이 항의 (1), (2))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설정하기 위하여 이 Title에따른 제정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 그러한 규칙은 교환원 서비스 제공자가 재과금사업자에게 제공한 커미션 또는 기타 보상액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여야 한다.

(B) 제한－(A)의 요건은 (3)호 (A)에 의한 절차를 근거로 하여 만일 연방통신위원회가 요금수준, 비용, 신청, 서비스 질 및 다른 상관 요소에 의하여 입증되듯이 시장 메커니즘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을 보장하는 것으로 사실 판단을 하는 경우(그리고 이를 (3)호 (B) (iii)에서 요구되는 보고서에 포함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i) 법률 해석－이 조의 어느 부분도 이 법의 다른 조항에서의 연방통신위원회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책임, 권한, 임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227조 [47 U.S.C. 227] 전화장비 사용의 제한

(a) 정의—이 조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1) “자동 전화 다이얼링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춘 장비를 의미한다.
  - (A) 무작위로 또는 순차적인 번호 생성장치를 사용하여 수신되는 전화번호를 저장 또는 산출해 내고,
  - (B) 그러한 번호로 전화하는 것.
- (2) “전화팩스기”는 (A) 문서상의 텍스트나 이미지 또는 양자를 전자신호로 전환하여 이 신호를 일반 전화선으로 모사하거나, (B) 일반 전화선을 이용하여 수신된 전자신호로부터 텍스트나 이미지 또는 양자를 문서로 모사하는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의미한다.
- (3) “전화 권유”는 자산, 상품 혹은 서비스의 구매, 임차,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누구에게든지 전송되는 전화나 메시지의 개시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A) 사전에 명시적인 요청이나 승낙을 한자, (B) 발신자와 이미 성립된 사업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것이거나, 또는 (C) 조세를 감면받는 비영리기관에 의한 통화나 메시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4) “무단 광고”는 어느 자의 명시적인 사전 요청이나 승낙 없이 그 자에게 전송되는 자산, 상품, 서비스의 상업적 이용가능성이나 질을 광고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b) 자동 전화 장비의 사용 제한

- (1) 금지—미국내에서 누구도 다음을 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 (A) 어떠한 자동 전화 다이얼링 시스템 혹은 인공 또는 미리 녹음된 음성을 사용하여 다음에 전화를 하거나(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얻거나 비상 목적을 위하여 행해진 통화를 제외)
    - (i) 어느 비상 전화선(911선과 병원, 의사, 의료기관, 보건시설, 방독기관, 소

- 방기관, 경찰기관의 비상전화선을 포함),
- (ii) 병원, 보건시설, 양로원, 기타 유사한 시설의 입원실 또는 내방객실의 전화선, 또는
- (iii) 호출 서비스, 휴대전화 서비스, 특정 이동 무선 서비스, 기타 무선 기간통신 사업자 서비스, 또는 수신자 부담서비스에 할당된 전화번호.
- (B) 당해 통화가 비상 목적으로 개시되거나 (2)호 (B)에 의한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이나 명령으로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 없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인공 또는 미리 녹음된 음성을 사용하여 어느 가정용 전화선에 전화통화를 개시하거나,
- (C) 전화팩스기에 무단 광고를 보내기 위하여 어느 전화팩스기, 컴퓨터 기타 장치를 사용하거나, 또는
- (D) 복수의 전화선을 가진 사업계의 전화선 중 두 개 이상이 동시에 점유되도록 자동 전화 다이얼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 (2) 규칙, 면제, 기타 규정 등—연방통신위원회는 이 항의 요건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 항의 요건을 시행함에 있어서, 연방통신위원회는
- (A) 일반 사업체가 명시적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이들에게 인공 또는 사전에 녹음된 음성을 사용하는 통화의 수신을 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의 설정을 검토해야 하고;
- (B) 다음의 대상에 대하여 연방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그 규칙이나 명령에 의하여 이 항(1)호 (B)의 요건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 (i) 영리 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통화
- (ii) 연방통신위원회가
- (I) 이 조가 보호하도록 의도한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고, 또한
- (II) 무단 광고의 전송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그러한 종류나 범주의 영리목적 통화

- (C) 수신자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휴대전화 서비스에 할당된 전화번호에 대한 통화에 대하여, 이 조가 보호하도록 의도한 프라이버시권의 이익상 필요하다고 연방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1) (A) (iii)의 요건 적용을 규칙 또는 명령에 의하여 면제할 수 있다.
- (3) 사적 제소권—주 법이나 주 법원 규칙에 따라 달리 허용되지 않는 한, 누구든지 그 주의 적절한 법원에 다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A) 이 항 또는 이 항에 의하여 규정된 규칙의 위반에 대하여 그 위반을 금지하는 소송,
- (B) 그러한 위반에 의해 야기된 실제의 금전적 손해배상이나 각 위반시의 손해배상으로 500달러 중 다액을 청구하는 소송, 또는
- (C) 위 양자의 소송. 법원은 피고가 이 항이나 이 항에 규정된 규칙을 고의 또는 그 정을 알고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그 재량으로 손해배상액을 이 항(B)에서 허용된 손해배상액의 3배 이하의 금액으로 증액할 수 있다.
- (c) 가입자의 프라이버시권 보호
- (1) 규칙제정 절차의 요구—이 조의 제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연방통신위원회는 가정용 전화가입자들이 거부하는 전화 권유의 수신을 피할 수 있는 가정용 전화가입자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의 필요성에 관하여 규칙제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절차는
- (A) 그러한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있어서 대안적 방법과 절차들(전자 데이터베이스, 전화 네트워크 기술, 전화번호부예의 특정표시, 산업별 또는 회사별 “전화 사절” 시스템, 기타 대안, 이들의 개별 또는 조합)의 효과성에 대하여 이를 비교 및 평가해야 하고,
- (B) 그러한 방법과 절차를 설정하고 시행할 능력을 가지는 공적, 사적 기관의 범주를 평가하고,
- (C) 소기업이나 2중 우편 허가 보유자의 지역 전화 권유와 같은 지역 전화 권유

에는 별도의 방법과 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 (D) 이 조의 (a)항 (3)호에 의하여 제외된 통화를 포함하여 전화 권유를 보다 제한하기 위하여 연방통신위원회에게 추가적인 권한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만일 그러한 필요성이 기록에 의하여 입증된다면 의회에 구체적인 제한을 제안하여야 하며, 또한
  - (E) 이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방통신위원회가 가장 효율적이며 효과적이라고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시행하기 위한 규칙 안을 개발하여야 한다.
- (2) 규칙— 이 조의 제정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연방통신위원회는 (1)에 의하여 개시된 규칙제정 절차를 종결하며 (1)에 기술된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 전화가입자에게 추가적 요금 부담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 (3) 데이터베이스의 사용 허용—(2)에 의하여 요구되는 규칙은 전화 권유의 수신을 거부하는 가정용 전화가입자의 전화번호 리스트를 편집한 전국적으로 단일한 데이터베이스의 설치와 운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편집된 리스트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구입이 가능하다. 만일 연방통신위원회가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요구하기로 결정하면 그러한 규칙은
- (A) 연방통신위원회가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구체화하고,
  - (B) 시내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기간통신 사업자가 연방통신위원회가 규정하는 규칙에 따라 시내 전화 서비스 가입자에게 이 항에 따라 설정된 규칙에 따라 그러한 가입자가 전화 권유의 수신에 거부를 통지할 기회가 있음을 알리도록 요구해야 하고,
  - (C) 각 전화가입자에게 시내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그 가입자에게 ( i ) 가입자가 (A)에 의한 거부통지를 하거나 취소할 권리와, ( ii ) 그러한 권리를 가입자가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하고,

- (D) 그러한 거부가 수집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는 방법을 구체화하고,
  - (E) 가정용 전화가입자가 그러한 통지나 통지의 취소 또는 이 조하에 편집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에 요금을 징수당하지 않도록 하고, (F) 누구든지 그러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가입자의 전화 번호로 전화 권유를 하거나 전송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 (G) ( i ) 전화권유를 하거나 전송하고자 하는 자가 그러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가입자의 전화번호에 통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바의 지역번호나 시내 전화번호별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과 ( ii ) 그러한 자료부터 회수해야 할 비용을 구체화하고,
  - (H) 그러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자료부터 데이터베이스의 확인, 수집, 갱신, 배포, 판매, 기타 데이터베이스 운영 관련행위를 위해 그러한 행위자가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을 구체화하고,
  - (I) 그러한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되는 빈도를 구체화하고 또한 그러한 갱신이 이 항에 의하여 규정된 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효되는 방법을 구체화해야 하고,
  - (J) 주 법을 적용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연방통신위원회가 선정하는 데이터베이스 메커니즘을 각 주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K) 이 조 및 주 법에 의한 요건 준수 이외의 목적으로 그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을 금지하고, 그러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전화번호를 가진 자의 프라이버시권이 보호되는 방법을 구체화하며, 또한
  - (L) 전화 권유 목적으로 어떤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기간통신 사업자가 이 조 및 이 조 이하의 규칙에 따른 요건을 통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4) 데이터베이스 방법의 사용을 위해 요구되는 고려사항—만일 연방통신위원회가 (3)에 규정된 데이터베이스 메커니즘을 요구하기로 결정하면, 연방통신위원회는
- (A)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함에 있어서 전국, 지역, 주 혹

은 지방수준에서 영업을 하는 텔레마케터들의 상이한 수요를 고려해야 하고,  
(B) 그러한 상이성을 인지하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베이스의 비용회수를 위한  
요금 스케줄 또는 가격 구조를 개발해야 한다.

- (i) 전화 권유를 거부하는 가입자 전화번호의 전국, 지역, 주, 지방단위 리스트를 제공하는데 드는 각각의 비용을 반영하고,
  - (ii) 그러한 리스트들을 지면으로 또는 전자매체로 제공하는데 드는 각각의 비용을 반영하고,
  - (iii) 중소기업에 비합리적으로 과도하게 재정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고, 또한
- (C) (i) 지방 단위에서 텔레마케터 활동의 필요성이 지역 인명 전화번호부의 특별한 인식과 충족될 수 있는지 여부와 (ii) 만일 그러한 전화번호부가 지역번호와 시내 전화번호별로 준비된 데이터베이스 리스트의 부속물로서 필요한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5) 사적 제소권—이 항에 규정된 규칙을 위반하는 자나 그를 대리하는 자로부터 12개월의 기간 이내에 두 번 이상의 전화통화를 받은 자는 그 주 법이나 주 법원 규칙에 달리 허용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소송을 그 주의 적절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A) 이 항에 의하여 규정된 규칙의 위반에 대하여 그 위반을 금지하는 소송,
- (B) 그러한 위반으로부터의 실제의 금전적 손해배상이나 각 위반시 손해배상으로 500달러 중 다액을 청구하는 소송, 또는

(C) 위 양자의 소송

피고가 이 항에 의하여 규정된 규칙을 위반하는 전화 권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운영과 절차를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설정하고 이를 시행한 것은 이 항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에 대한 적극적 항변사유가 된다. 피고가 이 항의 규칙을 고의로 또는 그 정을 알고 위반하였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그 재량으로 손해배상액을 이 항 (B)에 의해 허용되는 손해배상액의 3배 이내의 금액에서 증액할 수 있다.

(6) (b)항에 대한 관계－이 항 규정은 (b)항에 의해 금지되는 통신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d) 기술 및 절차적 기준

(1) 금지－미국내에서 누구든지 다음을 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A) 이 항에 의하여 규정된 기술 및 절차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전화팩스기를 사용하는 통신을 개시하거나 자동 전화 다이얼링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거나, 또는 그러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화팩스기 또는 자동 전화 다이얼링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B) 송신자가 전송하는 메시지의 각 페이지 상단 또는 하단의 여백이나 전송하는 첫 페이지에 송신일과 시간, 송신하는 사업자, 단체 또는 개인의 신원과 송신기 또는 그러한 사업자, 단체 또는 개인의 전화번호를 명시하지 않는 한, 전화팩스기를 통하여 메시지를 보내기 위하여 컴퓨터 또는 기타 전자 장치를 사용하는 것.

(2) 전화팩스기－이 조의 제정일로부터 1년 후부터 제조되는 전화팩스기는 각 전송 페이지의 상단 또는 하단 여백에 또는 전송 페이지의 첫 페이지에 메시지 전송일과 시간 및 메시지를 전송하는 사업체, 단체, 개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송신기 또는 그러한 사업체, 단체, 개인의 전화번호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기 위하여 연방통신위원회는 전화팩스기의 기술 및 절차적 기준을 설정하는 규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3) 인공적 또는 사전 녹음된 음성 시스템－연방통신위원회는 전화를 통하여 인공적으로 또는 사전에 녹음된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시스템의 기술 및 절차적 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기준은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A) 모든 인공 또는 사전 녹음된 전화 메시지는 ( i ) 메시지의 초기에 통화를 개시한 사업체, 개인, 또는 기타 자의 신원을 분명히 밝히고, ( ii ) 메시지 도중 또는 후에 그러한 사업체, 개인, 기타 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분

명히 밝혀야 하며,

- (B) 그러한 시스템은 수신자의 통화종료 통지가 그 시스템에 전달된 후 5초 이내에 수신자 라인을 자동적으로 단속하여 수신자 라인이 다른 전화를 하거나 받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 주 법에 대한 효과

- (1) 주 법의 비배제—(d)항에 의하여 규정된 기준 및 이 항(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 또는 이 조에 의하여 규정된 규칙의 어느 부분도 보다 엄격한 주 내 요건 또는 규칙을 다음 행위에 부과하거나 다음 행위를 금지하는 주 법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A) 무단 광고를 보내는 전화팩스기 또는 다른 전자 장치의 사용,  
(B) 자동 전화 다이얼링 시스템의 사용,  
(C) 인공 또는 사전 녹음된 음성 메시지의 사용, 또는  
(D) 전화 권유.

- (2) 주의 데이터베이스 사용—만일 (c)항(3)호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가 전화 권유의 수신을 거부하는 가입자 전화번호를 모은 전국적으로 단일의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주나 지방 당국은 전화 권유에 대한 규칙으로 그러한 전국적으로 단일의 데이터베이스 중 그 주 관련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 리스트, 리스팅 시스템의 사용을 요구할 수 없다.

(f) 주의 조치

- (1) 주의 권한—누구든지 이 조 또는 이 조에 의한 규칙을 위반하여 그 주의 주민에게 전화를 하였거나 전송을 하였거나 그러한 전화 또는 전송을 한다고 주의 법무장관 또는 주가 지정하는 공무원 또는 기관이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그 주는 그 주민을 대신하여 그러한 전화를 금지하는 민사소송이나 실제의 금전손실이나 각 위반에 대하여 500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나 이 양자의 소송을 모두 제기할 수 있다. 만일 법원이 피고가 그러한 규칙을 고의 또는 그 정을 알고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그 재량으로 손해배상액을 위에서 허용된 손해배상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 (2) 연방법원의 전속적 관할—이 항에 의하여 제소된 모든 민사소송에 대하여 연방 지방법원, 속령의 연방법원, 워싱턴 D.C.의 연방 지방법원이 전속적 관할권(exclusive jurisdiction)을 가진다. 적절한 신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법원은 피고가 위반의 위험을 제거하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조나 이 조에 의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명령하는 것과 같은 구제와 비슷한 명령, 또는 직무집행명령(writs of mandamus)을 발할 관할권도 가진다. 적절한 입증이 있으면, 항구적 또는 임시적 금지처분 또는 금지명령이 보증금(bond) 없이 부과된다.
- (3) 연방통신위원회의 권리—주는 연방통신위원회에게 그러한 민사소송의 사전 서면통지를 하고 소장 사본을 연방통신위원회에게 제공해야 하나, 그러한 사전통지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소후 즉시 그러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연방통신위원회는 (A) 그러한 소송에 참가하여, (B) 이 소송상의 모든 변론 행위를 할 수 있고, 또한 (C) 상소할 권리를 가진다.
- (4) 재판적, 송달—이 항에 의하여 연방 지방법원에 제소되는 민사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나 거주지, 거래지, 위반지의 지방법원에 제소될 수 있고, 그러한 사건의 소장은 피고의 거주지나 피고가 발견된 지점으로 송달될 수 있다.
- (5) 조사 권한—이 항에 의한 민사소송 제기의 목적을 위해 이 조에 의한 어느 부분도 주의 법무장관이나 주가 지정하는 공무원 또는 기관이 주 법에 따라 법무장관이나 그러한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조사, 선서, 확인, 증인 출석이나 서증 기타 증거의 제출 강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의 행사를 금지하지 아니한다.
- (6) 주 법원 절차에 대한 효과—이 항의 어느 부분도 권한 있는 주 공무원이 주의 일반 민사 또는 형사 법률의 위반 주장에 근거하여 주 법원에서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7) 제한—연방통신위원회가 이 조에 의하여 규정된 규칙의 위반에 대하여 민사

소송을 개시한 경우 연방통신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이 계류 중일 때에는, 어떠한 주도 연방통신위원회의 소장에 주장된 위반에 대하여 연방통신위원회의 소장에 거명된 피고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8) 정의—이 항에 사용되는 “법무장관”은 주의 법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자를 의미한다.

## PART II — 경쟁시장의 발전

### 제251조 [47 U.S.C. 251] 상호접속

- (a) 통신 사업자의 일반적 의무—각 통신 사업자는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다른 통신 사업자의 시설과 장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상호 접속하고,
  - (2) 제255조 또는 제256조에 따라 설정되는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네트워크 특성, 기능 혹은 가능 출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
- (b) 모든 시내 전화 사업자의 의무—각 시내 전화 사업자는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재판매—자신의 통신 서비스 재판매를 금지하거나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조건이나 제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의무.
  - (2) 번호 이동성(Number Portability)—연방통신위원회가 설정하는 요건에 따라 기술적으로 타당한 한도 내에서 번호 이동성을 제공할 의무.
  - (3) 다이얼링 패리티(Dialing Parity)—시내 전화 서비스 및 전화 톨 서비스의 경쟁적 제공자에게 동등 다이얼링을 제공할 의무와 모든 그러한 제공자가 비합리적인 다이얼링 지연 없이 전화번호, 교환원 서비스, 전화안내 서비스, 전화번호부에 비차별적으로 접근하도록 허용할 의무.
  - (4) 우선 통행권에 대한 접근—제224조에 부합되는 요금 및 조건으로 통신서비스의 경쟁 제공자에게 당해 사업자의 전주, 도관, 관로, 그리고 우선 통행권에 접속을 제공할 의무.
  - (5) 호혜적 보상—통신의 전송과 종료에 대한 호혜적 보상 장치를 설정할 의무.

(c) 기존 시내 전화 사업자의 추가적인 의무－(b)항에 규정된 의무에 추가하여 각 기존 시내 전화 사업자는 다음 의무를 진다.

(1) 협상 의무－(b)항(1)호 내지 (5)호 및 이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계약조건에 관한 제252조에 따라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 또한 요청하는 통신 사업자 역시 그러한 계약조건을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상호 접속－요청하는 통신 사업자의 시설과 장비를 위해서 시내전화 사업자의 네트워크에 다음을 위하여 상호 접속을 제공할 의무.

(A) 시내 전화 서비스와 중계 접속의 전송 및 경로 처리,

(B) 당해 사업자의 통신 네트워크내에 기술적으로 타당한 지점에서,

(C) 그러한 지점은 시내 전화 사업자가 상호 접속을 제공하는 자회사, 계열사 기타 자 또는 자신에게 제공하는 것과 최소한 동질의 것이어야 하며, 또한

(D) 이 조와 제252조의 요건 및 계약 조건에 따라 공정하고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요금 및 조건이어야 한다.

(3) 요소별 분리접속(Unbundled Access)－통신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하는 통신 사업자에게 이 조 및 제252조의 요건과 계약 조건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요금과 조건으로 기술적으로 타당한 지점에서 분리된 네트워크 요소별로 비차별적 접근을 허용할 의무. 기존 시내 전화 사업자는 요청 사업자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네트워크 요소들을 결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분리된 형태로 네트워크 요소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재판매

(A) 사업자가 통신 사업자가 아닌 가입자에게 소매로 공급하는 그러한 통신 서비스를 재판매하기 위하여 도매가격으로 제공할 의무.

(B) 그러한 통신 서비스의 재판매를 금지하거나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하지 않을 의무. 단, 주 위원회는 이 조에 의하여 연방통신 위원회가 규정하는 규칙에 따라 일정 범주의 가입자에게만 소매로 이용될 수 있는 통신 서비스를 도매가격으로 공급받는 어느 재판매업자가 그러한

서비스를 다른 범주의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 (5) 변경의 통지－ 시내 전화 사업자의 시설이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서비스의 전송 및 경로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그러한 시설이나 네트워크의 상호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경과 함께 합리적인 공개 통지를 제공할 의무.
- (6) 병치(Collocation)－ 시내 전화 사업자의 시설에서 분리된 네트워크 요소에 대하여 상호 접근 또는 접근에 필요한 장비의 물리적 병치를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요금과 조건으로 제공할 의무. 단, 사업자는 시내 전화 사업자가 주 위원회에 물리적 병치가 기술적 이유 또는 공간의 제약으로 비현실적임을 주 위원회에 입증하면 가상 병치(virtual collocation)를 제공할 수 있다.

(d) 시행

- (1) 총칙－ 1996년 통신법의 제정일 후 6개월 이내에 연방통신위원회는 이 조의 요건을 시행하기 위한 규제를 설정하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2) 접속 기준－(c)항 (3)호의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네트워크 요소가 이용가능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연방통신위원회는 최소한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 (A) 성질상 사적인 그러한 네트워크 요소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지 여부.
  - (B) 그러한 네트워크 요소에 대한 접속 제공의 실패가 접속을 요청하고 있는 통신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을 저해하는지 여부.
- (3) 주의 접속 규정의 유지－ 이 조의 요건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정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연방통신위원회는 다음에 관한 주 위원회의 규칙, 명령, 정책의 집행을 금지할 수 없다:
  - (A) 시내 전화 사업자의 접근 및 상호 접속 의무를 설정하고,
  - (B) 이 조의 요건에 부합하고,
  - (C) 이 Part의 목적과 이 조의 요건 시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

## (e) 번호 관리

- (1) 연방통신위원회의 권한과 관할—연방통신위원회는 통신 번호를 관리하고 그러한 번호를 공평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중립적인 단체를 조직 또는 지정해야 한다. 연방통신위원회는 북미번호계획중 미국에 관한 부분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 이 호의 어느 부분도 연방통신위원회가 그러한 관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 위원회 또는 다른 단체에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 (2) 비용—통신번호 관리체제 및 번호 이동성을 설정하기 위한 비용은 연방통신위원회가 결정하는 바대로 경쟁적이며 중립적으로 모든 통신 사업자들이 부담하여야 한다.

## (f) 면제, 정지 및 변경

## (1) 교외 전화회사(Rural Telephone Companies)에 대한 면제

- (A) 면제—이 조의 (c)항은 ( i ) 교외 전화회사가 상호접속, 서비스 또는 네트워크 요소에 대하여 선의의 요청을 받고, ( ii ) 주 위원회가(B)에 의하여 그러한 요청이 부당하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기술적으로 타당하고 또한 제254조에(단, (b)항(7)호, (c)항(1)호 (D)를 제외) 부합된다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교외 전화회사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B) 주에 의한 면제 종료 및 시행일정—교외 전화회사에게 상호접속, 서비스 또는 네트워크 요소에 대하여 선의의 요청을 한 자는 주 위원회에 그 요청의 통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 위원회는 (A)에 의한 면제를 종료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한 요청의 통지를 접수한 후 120일 이내에, 주 위원회는 그 요청이 부당하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고 또한 기술적으로 타당하며((b)항(7)호, (c)항(1)호 (D)를 제외한) 제254조에 부합된다면 그 면제를 종료하여야 한다. 면제를 종료할 때, 주 위원회는 시간과 방법에 있어 연방통신위원회 규칙에 부합되는 요청을 준수하는 시행일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C) 면제의 제한—이 호에 의해 제공되는 면제는 비디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외 전화회사가 비디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에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케이블 운영자로부터 (c)항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호에 규정된 제한은 1996년 통신법의 제정일 당시 비디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외 전화회사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교외 사업자를 위한 정지 및 변경—전국적으로 설치된 가입자선의 2% 미만 을 가지는 시내 전화 사업자는 신청에 특정된 시내전화 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b)항 또는 (c)항의 요건 적용의 정지 또는 변경을 위하여 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주 위원회는 그러한 정지 또는 변경이 다음과 같을 경우 필요한 정도와 기간을 결정하여 그러한 한도내에서 신청을 허용할 수 있다.

(A)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i) 통신 서비스의 사용자에게 대한 중대한 경제적 악영향을 일반적으로 피하거나,

(ii) 부당하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요건의 부과를 방지하거나,

(iii)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요건의 부과를 피하고, 또한

(B) 공공의 이익, 편의 및 필요에 부합할 것.

주 위원회는 그러한 신청을 접수한 후 180일 이내에 이 항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치의 계류 중 주 위원회는 신청 사업자에 대하여 신청이 적용되는 요건의 시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g) 중계접속 및 상호접속 요건의 계속적인 시행—1996년 통신법의 제정일로부터 각 시내 전화 사업자는 유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1996년 통신법 제정일 이전에 법원의 명령, 합의 명령,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명령, 정책에 의하여 그 사업자에게 적용되던 것과 같은 동등 접속 및 비차별적인 상호 접속 제한 및 의무(보상의 수량을 포함하여)가 위법 제정일 이후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에 의하여 명백히 변경되지 않는 한 그에 따라 중계 사업자 및 정보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중계 접속, 정보 접속 및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한

제정일로부터 그러한 제한과 의무가 위와 같이 변경될 때까지의 기간에는 그러한 제한과 의무가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과 동등하게 적용된다.

(h) 기존 시내 전화 사업자의 정의

(1) 정의—이 조의 목적상 “기존 시내 전화 사업자”는 어느 지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시내 전화 사업자를 의미한다.

(A) 1996년 통신법의 제정일 현재 그 지역에서 시내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B) ( i ) 그러한 제정일 현재, 연방통신위원회 규칙 69.601(b)(47 C.F.R. 69.601(b))에 따라 전화 교환 사업자 협회의 구성원인 것으로 간주되거나, ( ii ) 제정일 이후 ( i )에 규정된 구성원의 승계자 또는 양수인이 된 자.

(2) 기존 시내 전화 사업자의 의제—연방통신위원회는 그 규칙에 의하여 어느 시내 전화 사업자(또는 그의 분류 또는 범주)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조의 목적상 기존 시내 전화 사업자로 취급할 수 있다.

(A) 그 사업자가 어느 지역의 시내 전화 서비스 시장에서 (1)호에 규정된 사업자가 차지하는 지위에 상응하는 지위를 차지하고,

(B) 그 사업자가 (1)호에 기술된 기존 시내 전화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대체하였으며,

(C) 그러한 의제가 이 조의 목적상 공익, 편의, 필요에 부합할 때. ( i ) 유보 규정—이 조의 어느 부분도 제201조에 의한 연방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52조 [47 U.S.C. 252] 협정의 협상, 중재, 및 승인의 절차**

(a) 협상을 통한 협정 체결

(1) 자율적인 협상—제251조에 따라 상호접속, 서비스 또는 네트워크 요소에 대한 요청을 접수하면, 기존 시내 전화 사업자는 제251조의 (b)항과 (c)항에 규정된 기준과는 무관하게 요청하는 통신사업자와 협상하여 구속력 있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 협정은 협정에 포함된 상호접속과 각 서비스 또는 네

트위크 요소에 대하여 항목별 요금의 명세를 포함하여야 한다. 1996년 통신법 제정일 이전에 협상된 상호접속 협정을 포함하여 위 협정은 이 조 (e)항에 따라 주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 (2) 조정－이 조에 의하여 협정을 협상하는 당사자는 협상의 어느 시점에서든 주 위원회가 협상에 참여하여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쟁점사항도 조정해 줄 것을 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b) 강제적 중재를 통한 협정

- (1) 중재－기존의 시내 전화 사업자가 이 조에 의하여 협상 요청을 접수 한 날로부터(접수일을 포함하여) 135일 이후 160일까지의 기간 동안, 그 사업자 또는 협상의 어느 당사자는 주 위원회에 어떠한 현안에 관하여서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인의 의무.

- (A) (1)호에 의하여 주 위원회에 신청하는 자는 신청 제출과 동시에 주 위원회에 다음에 관한 모든 관련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i) 이해결 사안,
- (ii) 그러한 사안에 대한 각 당사자들의 입장,
- (iii) 당사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해결된 다른 사안들.

- (B) (1)호에 의하여 주 위원회에 신청하는 자는 늦어도 주 위원회가 위 신청을 접수한 날까지 다른 당사자들에게 신청서와 관련 문서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 (3) 답변의 기회－이 항에 의한 협상의 당사자가 아닌 자는 주 위원회가 신청을 접수한 후 25일 이내에 신청 당사자의 신청에 답변할 수 있으며, 원하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4) 주 위원회의 조치

- (A) 주 위원회는 (1)호에 의한 신청(또는 그에 대한 답변)에 대한 고려를 (3)호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과 답변에 기술된 사안에 한정해야 한다.

- (B) 주 위원회는 미해결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신청 또는 답변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주 위원회의 합리적인 요구에 대하여 어느 당사자가 시의적절하게 응답하기를 거부하거나 비합리적으로 응답하지 못한 경우, 주 위원회는 그 출처에 관계없이 주위원회가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근거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C) 주 위원회는 협정 당사자에게 (c)항의 요건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요건을 부과함으로써 신청과 답변에 기술된 각 사안을 해결하여야 하며, 시내 전화 사업자가 이 조에 의한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미해결 사안의 해결을 종료하여야 한다.
- (5) 협상의 거절－협상 당사자가 협상에 더 이상 참여하기를 거부하거나, 주 위원회가 중재인으로서의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협조를 거부하거나, 주 위원회의 참여나 지원하에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속 협상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하게 협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 (c) 중재 기준－(b)항에 의한 중재에 따라 어떤 현안을 해결하고 협정 당사자에게 조건을 부과함에 있어서, 주 위원회는
- (1) 그러한 해결과 조건이 제251조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규칙을 포함하여 제251조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하고,
  - (2) (d)항에 따라 상호접속, 서비스 또는 네트워크 요소에 대한 요금을 설정하여야 하며,
  - (3) 협정 당사자가 위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 (d) 요금 기준
- (1) 상호접속과 네트워크 요소 요금－제251조(c)항(2)호의 목적을 위하여 시설과 장비의 상호접속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과 동조(c)항(3)호의 목적을 위하여 네트워크 요소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을 주 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은,
- (A) (i) (각각 해당하는 경우) 상호접속 또는 네트워크 요소의(투자수익을 방

식 또는 기타 요금에 근거한 절차에 관계없이 결정되는) 제공 비용에 근거하고(어느 쪽이든 적용가능하면), (ii)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또한

(B) 합리적인 이윤을 포함할 수 있다.

(2) 통신의 전송과 종료에 대한 요금

(A) 총칙－기존의 시내 전화 사업자가 제251조(b)항(5)호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호혜 보상의 조건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i) 그러한 조건이 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네트워크 시설에서 발신되어 자신의 네트워크 시설로 전송되고 종료되는 것과 관련된 비용을 상호간에 호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ii) 그러한 조건이 그러한 통화를 종료시키는 추가비용의 합리적인 근사치를 토대로 비용을 결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B) 해석원칙－이 호는 다음과 같이 해석되지 아니한다.

(i) 상호적인 징수를 포기하는 약정을 포함하여 상호적 의무를 상계하여 비용의 상호 징수를가능하게 하는 약정을 금지하거나(상호 무정산 협정 같은 경우),

(ii) 연방통신위원회 또는 주 위원회가 통화의 전송 또는 종료의 추가적 비용을 특정하게 설정하는 어떠한 요금 규제 절차를 진행하거나 사업자에게 그러한 통화의 추가비용에 관하여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3) 통신 서비스의 도매가격－제251조(c)항(4)호의 목적상, 주위원회는 요청된 통신 서비스의 가입자들에게 부과되는 소매요금을 근거로 해서 영업, 과금, 징수 기타 시내 전화 사업자가 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도매요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e) 주 위원회에 의한 승인

(1) 요구되는 승인－협상에 의하거나 중재에 의하여 채택된 협정은 주 위원회의

승인을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협정을 제출받은 주 위원회는 승인하거나 아니면 흠결사항을 서면으로 지적하여 승인을 거절하여야 한다.

(2) 거절의 사유—주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만 거절할 수 있다:

(A) (a)항에 의한 협상을 통해 채택된 협정이(또는 그 일부가) 다음과 같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i) 협정이(또는 그 일부가)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차별하는 경우, 또는

(ii) 그러한 협정 또는 그 일부의 집행이 공익, 편의, 그리고 필요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또는

(B) (b)항에 의한 중재를 통하여 채택된 협정이(또는 그 일부가) 제251조에 따라 제정된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과 이 조(d)항에 기술된 기준을 포함하여 제251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권한의 유지—(2)에도 불구하고, 이 조의 어느 부분도 주 위원회가 제253조에 의거하여 주내 통신 서비스의 질 기준이나 요건의 준수 요건을 포함하여, 협정의 검토에 있어서 주 법에 따른 요건을 설정하거나 이를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4) 결정기간—주 위원회가 (a)항에 의한 협상을 통하여 채택된 협정의 당사자가 제출한 후 90일 이내에 또는 (d)항에 의한 중재를 통하여 채택된 협정의 당사자가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동 협정을 승인 또는 거절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그 협정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어떠한 주 법원도 이 조에 의한 주 위원회의 협정승인 또는 거부 조치를 심리할 관할권을 가지지 못한다.

(5) 주의 부작위시 연방통신위원회의 조치—주 위원회가 이 조에 의한 어떠한 절차나 사안에서 이 조에 의한 책임을 이행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연방통신위원회는 그러한 부작위가 통보된 후(또는 인지한 후) 90일 이내에 그러한 절차나 사안에 대한 주 위원회의 관할권을 선취하는(preempting) 명령을 내려야 하고, 그 절차나 사안에 관하여 이 조에 의한 주 위원회 책임을 인수

하여 주 위원회 대신 조치하여야 한다.

- (6) 주 위원회 조치의 심사—주 위원회가 (5)호에 기술된 대로 조치하지 못한 경우, (5)호에 의한 연방통신위원회의 절차와 연방통신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사법심사는 주 위원회의 부작위에 대한 유일한 구제조치이다. 주 위원회가 이 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우에 그러한 결정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협정이나 문구가 이 조 및 제25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연방 지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f)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조건(terms) 문구

- (1) 총칙—Bell 운영회사(BOC)는 그 회사가 제251조 및 그 규칙과 이 조에 의한 적용기준과 요건을 그 주 내에서 준수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조건 문구를 작성하여 이를 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2) 주 위원회의 심사—주 위원회는 그러한 조건 문구가 이 조(d)항 및 제251조와 그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한 그 조건 문구를 승인할 수 없다. 제25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의 어느 부분도 주 위원회가주내 통신서비스의 질 기준이나 요건의 준수 요구를 포함하여, 조건 문구를 심사함에 있어 주 위원회가 다른 요건을 설정하거나 이를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 (3) 심사 기간—위 조건 문구의 제출을 받은 주 위원회는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 (A) 제출 사업자가 심사 기간의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2)호에 의한 조건 문구 심사를 종료하거나(재심을 포함), 또는
  - (B) 그러한 조건 문구의 발효를 허용하여야 한다.
- (4) 계속적 심사 권한—(3)호는 주 위원회가 (3) (B)에 의해서 발효가 허용된 조건 문구를 계속 심사하거나 (2)호에 의하여 조건 문구를 승인 또는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 (5) 협상 의무에 대한 무영향—이 항에 의한 조건 문구의 제출 또는 승인은 BOC가 제251조에 의하여 협정의 조건을 협상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지 아

니한다.

- (g) 주 절차의 통합—이 법의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주 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주 위원회의 책임 이행에 있어서 통신 사업자, 절차의 당사자, 주 위원회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214조(e)항, 제251조(f)항, 제253조 및 이 조에 의한 절차를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합할 수 있다.
- (h) 요구되는 신고—주 위원회는 (e)항에 의하여 승인된 각 협정과 (f)항에 의하여 승인된 각 조건 문구의 사본을 그 승인 후 10일 이내에 일반이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 위원회는 협정의 당사자나 조건 문구 신고자에게 당해 협정이나 조건 문구를 승인하고 공개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 (i) 타 통신 사업자의 이용 가능성—시내 전화 사업자는 자신이 당사자로서 이 조에 의해서 승인된 협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상호접속, 서비스, 네트워크 요소를 협정에서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요청하는 여타의 통신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j) 기존 시내 전화 사업자의 정의—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기존시내 전화 사업자”는 제251조(h)항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 **제253조 [47 U.S.C. 253] 진입 장벽의 제거**

- (a) 총칙—어떠한 주나 지방 법령 또는 기타 법적 요건도 주간 또는 주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능력을 금지하거나 금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없다.
- (b) 주의 규제 권한—이 조의 어느 부분도 주가 경쟁적이며 중립적으로 그리고 제254조와 부합하게 보편 서비스(universal service)를 유지하고 진작시키고,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고, 통신 서비스의 지속적인 품질 보호, 및 소비자 권리의 보호에 필요한 요건을 부과할 권한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c) 주와 지방정부의 권한—이 조의 어느 부분도 주나 지방정부가 비차별적으로 공공의 우선 통행권을 관리하거나, 요구되는 보상이 주나 지방정부에 의해 공개되는 한, 공공의 우선 통행권의 사용을 위하여 경쟁적이며 중립적이고 비차

별적으로 통신 제공자로부터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d) 우선 선취권(preemption)－통지 및 의견 제시의 기회를 가진 후 연방통신위원회가 판단하기에 주나 지방정부가 (a) 또는 (b)항을 위반하는 법령 또는 기타 법적 요건을 허용하거나 부과하였다면, 연방통신위원회는 그러한 위반이나 불일치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그러한 법령이나 법적 요건의 집행을 배제할 수 있다.
- (e) 상업적 이동 서비스 제공자－이 조의 어느 부분도 상업적 이동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332조(c)항(3)호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f) 교외 시장(rural market)－주가 교외 전화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에서 시내 전화 서비스나 중계 접속을 제공하고자 하는 통신사업자에게 그러한 서비스의 제공을 허용하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한 자격 있는 통신 사업자로써의 지정을 위하여 제214조(e)항(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 조의 위반이 아니다. 이 항은 다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1) 경쟁자가 제214조(e)항(1)호의 요건을 사실상 충족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251조(c)항(4)호의 면제, 정지, 또는 변경을 허락받은 교외 전화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 (2) 상업적 이동 서비스 제공자.

#### 제254조 [47 U.S.C. 254] 보편 서비스

##### (a) 보편 서비스 요건 심사 절차

- (1) 보편 서비스에 관한 연방과 주의 합동 위원회－1996년 통신법 제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방통신위원회는 연방과 주의 합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제410조(c)항에 의하여 연방의 보편 서비스 지원 장치에 의해 지원되는 서비스의 정의와 권고 내용의 완수를 위한 구체적 일정을 포함하여 이 조 및 제214조(e)항을 시행하기 위한 연방통신위원회 규칙의 변경의 권고 절차를 동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410조(c)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합동 위원회의 구성

원에 추가하여, 주 공공 서비스 소비자 보호단체에서 지명하여 주가 지정하는 공공 서비스 소비자 보호론자가 위원회의 일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합동 위원회는 통지 및 청문의 기회를 가진 후, 1996년 통신법 제정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연방통신위원회에 그 권고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 (2) 연방통신위원회 조치—연방통신위원회는 (1)호에 의하여 요구되는 합동 위원회로부터의 권고를 시행하기 위한 단일의 절차를 개시하여, 1996년 통신법 제정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그러한 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그러한 절차에 의해 설정된 규칙은 연방 보편 서비스 지원 장치에 의해 지원되는 서비스의 정의와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 후 연방통신위원회가 보편 서비스에 대한 합동 위원회의 추가적인 권고를 접수한 경우, 권고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러한 권고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 (b) 보편 서비스 원칙—합동 위원회와 연방통신위원회는 보편 서비스의 유지와 진작을 위하여 다음의 원칙에 기초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품질과 요금—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부담가능한(affordable) 요금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2) 진보된 서비스의 접근—진보된 통신이나 정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미국 내 전역에 제공되어야 한다.
- (3) 교외 및 고비용지역에서의 접근—저소득 소비자와 교외(rural), 고립(insular), 고비용(high cost) 지역 주민들을 포함하여 미국 전역의 모든 소비자가 장거리 통신 서비스나 진보된 통신 및 정보 서비스를 포함하여 도시지역에서 제공되는 것과 합리적으로 유사하고 도시지역에서 유사한 서비스에 부과되는 요금에 합리적으로 상응하는 효율로 이용 가능한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4) 공평하고 비차별적인 출연(contribution)—모든 통신 서비스제공자는 보편 서비스의 유지와 진작을 위하여 공평하고 비차별적인 출연을 하여야 한다.

- (5)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한 지원 메커니즘—보편 서비스 유지 및 진작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하며 충분한 연방 및 주의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 (6) 학교, 의료기관, 도서관의 진보된 통신 서비스 접근—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및 교실, 의료기관, 도서관들은 (h)항에 기술된 대로 진보된 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7) 추가 원칙—합동 위원회와 연방통신위원회가 결정하는 다른 원칙은 공익, 편의, 필요에 필수적이며 적절하고 또한 이 법에 부합한다.
- (c) 정의
- (1) 총칙—보편 서비스는 연방통신위원회가 통신 및 정보 기술과 서비스의 진보를 고려하여 이 조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설정하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통신 서비스이다. 합동 위원회가 권고하고 연방통신위원회가 설정할 연방 보편 서비스 지원 메커니즘에 의해 지원되는 서비스의 정의는 그러한 통신 서비스의 다음에 관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 (A) 교육, 공중 보건, 공공 안전에 필수적인 정도,
    - (B) 소비자들의 시장선택을 통하여 가정용 소비자의 상당 다수가 가입한 정도,
    - (C) 통신 사업자들에 의하여 공공 통신 네트워크에 확산된 정도, 그리고
    - (D) 공익, 편의, 필요에 부합하는 정도.
  - (2) 변경과 수정—합동 위원회는 때때로 연방 보편 서비스 지원 메커니즘에 의해 지원되는 서비스 정의의 변경을 연방통신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 (3) 특별 서비스—(1)호에 의한 보편 서비스의 정의에 포함되는 서비스에 추가하여, 연방통신위원회는 (h)항의 목적을 위하여 학교, 도서관, 의료기관들에 대한 지원 메커니즘을 위하여 추가적인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다.
- (d) 통신 사업자의 출연(contribution)—주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통신 사업자는 보편 서비스를 유지하고 진작하기 위하여 연방통신위원회가 설정하는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하며 충분한 메커니즘에 공평하고 비차별적으로 출연을 하여야 한다. 만일 보편 서비스의 유지 및 진작을 위한 사업자의 출연이 미미

할 정도로 어느 사업자의 통신 활동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연방통신위원회는 위 요건으로부터 그 사업자 또는 사업자 그룹을 면제할 수 있다. 주간 통신의 기타 제공자들은 공익상 요구되면 보편 서비스의 유지 및 진작을 위하여 출연 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 (e) 보편 서비스 지원—이 조를 시행하기 위한 연방통신위원회 규칙의 발효일 이후에는, 제214조(e)항에 의하여 지정된 자격 있는 통신사업자만이 구체적인 연방 보편 서비스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한 지원을 받는 사업자는 지원이 의도하는 시설과 서비스의 제공, 유지, 개량을 위해서만 그러한 지원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한 지원은 이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며 또한 충분하여야 한다.
- (f) 주의 권한—주는 보편 서비스를 유지하고 진작하기 위하여 연방통신위원회 규칙에 부합하는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주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통신 사업자는 그 주 내의 보편 서비스 유지와 진작을 위하여 주가 정하는 방식으로 공평하고 비차별적으로 출연을 하여야 한다. 각 주는 그 주 내의 보편 서비스를 유지하고 진작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의와 기준을 설정하는 규칙을 채택할 수 있으나, 그러한 규칙은 연방 보편 서비스 지원 메커니즘에 의존한다든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 정의나 기준을 지지하는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하며 충분한 메커니즘을 채택하는 것이어야 한다.
- (g) 장거리 및 주간 서비스—1996년 통신법의 제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방통신위원회는 교외 및 고비용 지역 가입자들에 대하여 장거리 서비스 제공자들이 부과하는 요금이 도시지역 가입자들에게 그 제공자가 부과하는 요금보다 고율이 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채택하여야 한다. 또한 그러한 규칙은 주간 장거리 서비스 제공자가 어느 주의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요금보다 고율이 아닌 요금으로 타주의 가입자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h) 특정 기관에 대한 통신 서비스

(1) 총칙

(A) 교외 지역의 보건기관—통신 사업자는 선의의 요청(bona fide request)이 있을 경우, 보건 서비스에 관한 지시사항을 포함하여 어느 주의 보건기관에 필요한 통신 서비스를 그 주의 교외 지역 주민들에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또는 비영리 보건기관에게 그 주의 도시지역에서 유사한 서비스에 대하여 부과되는 요금에 합리적으로 상응하는 요금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호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사업자는 그 주의 교외 지역 보건기관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요금과 그 주의 유사한 교외 지역의 다른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보편 서비스 유지 및 진작을 위한 메커니즘 참여 의무의 일부로서 서비스 제공을 하는 유사한 서비스 사이에 요금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을 자격이 있다.

(B) 교육기관과 도서관—지역적 범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통신 사업자는 (c)항(3)호에 의하여 보편 서비스 정의에 포함되는 어떤 서비스에 대하여 선의의 요청을 받는 경우, 다른자에 대한 유사한 서비스 요금보다 낮은 요금으로 초등학교, 중등학교, 및 도서관에 교육 목적을 위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할인되는 정도는 주간 서비스에 관하여는 연방통신위원회가, 주내 서비스에 관하여는 각 주가, 그러한 기관들이 그러한 서비스를 사용하기에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금액이 된다. 이 호에 의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사업자는

- (i) 할인되는 정도만큼 보편 서비스 유지 및 진작을 위한 메커니즘에 출연할 자신의 의무를 상계하거나,
- (ii) 이 조(e)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편 서비스 유지 및 진작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상을 받는다.

(2) 진보된 서비스—연방통신위원회는 다음을 위하여 경쟁적이고 중립적인 규칙을 설정하여야 한다.

(A) 기술적으로 타당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모든 공공 및 비영리

초등학교, 중등학교, 보건기관과 도서관에 진보된 통신 및 정보 서비스 접근을 제공하는 것,

(B) 통신 사업자가 그러한 공공기관 통신 이용자에게 자신의 통신네트워크를 접속하도록 요구되는 조건에서 그러한 상황을 정의하는 것.

(3) 조건—이 항에 의해서 공공기관 통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통신 서비스 및 네트워크 용량은 그러한 이용자가 금전이나 기타 경제적 가치를 대가로 판매, 재판매, 기타 이전될 수 없다.

(4) 이용자 자격요건—이 항에 열거된 어느 자도 영리적으로 운영되거나 (5) (A)에 기술된 바의 50,000,000달러를 초과하는 기부금을 받은 학교이거나, 또는 도서관 서비스 및 건설법(Library Services and Construction Act)의 Title III(20 U.S.C. 335c 이하)에 의해서 주에 기초한 기금 계획에 참가자격이 없는 도서관인 경우 이 항에서 요구되는 우대 요율이나 우대 취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

(5) 정의—이 항의 목적을 위하여,

(A)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초등학교 및 중등학교”는 1965년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제14101조(20 U.S.C. 8801)의 (14)호 및 (25)호에서 각각 정의되는 바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를 의미한다.

(B) 보건기관—“보건기관”은 (i) 보건 교육을 제공하는 고등 교육기관, 대학 병원, 의과대학, (ii) 지역 보건기관 또는 이주자에 대하여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기관, (iii) 지방 보건부서 또는 기관, (iv) 지역 정신 요양기관, (v) 비영리 병원, (vi) 교외 보건기관, 및 (vii) (i) 내지 (vi)에 규정된 하나 이상의 자로 구성되는 보건기관 컨소시엄.

(C) 공공기관 통신 이용자—“공공기관 통신 이용자”는 이 호에서 정의되는 바의 초등학교, 중등학교, 도서관, 보건기관을 의미한다.

(i) 소비자 보호—연방통신위원회와 각 주는 보편 서비스가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부담가능한 요금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j) 저소득자 지원(Lifeline Assistance)－이 조의 어느 부분도 미국연방 규칙(Code of Federal Regulation) Title 47의 제69.117조에 규정된 규칙과 그 Title의 다른 조항들에 의해서 연방통신위원회가 제공하는 저소득자 지원 프로그램의 징수, 분배 또는 관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k) 경쟁적 서비스의 보조 금지－통신 사업자는 경쟁적인 서비스를 보조하기 위하여 경쟁적이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주간 서비스에 대하여는 연방통신위원회가, 주내 서비스에 대하여는 주가, 보편 서비스의 정의에 포함된 서비스에 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의 공동비용의 합리적인 부담을 초과하여 비용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비용 배분 규칙, 회계장치 및 기타 지침을 설정하여야 한다.

#### 제255 [47 U.S.C. 255] 장애인의 접근 보장

- (a) 정의－이 조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장애－“장애”는 1990년 장애 미국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3(2)(A)(42 U.S.C. 12102(2)(A))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 (2) 즉시 달성가능한－“즉시 달성가능한(readily achievable)”은 위 법 제301조(9)항(42 U.S.C. 12181(9))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 (b) 제조－통신 장비 또는 소비자 옥내 장비의 제조자는 즉시 달성 가능하다면, 그 장비가 장애인에 의해 접근 및 사용가능하도록 설계, 개발, 및 제조되도록 하여야 한다.
- (c) 통신 서비스－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달성가능하다면, 그 서비스가 장애인에 의해 접근 및 사용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d) 호환성－(b), (c)항의 요건이 즉시 달성가능하지 못한 경우, 그러한 제조자나 제공자는 즉시 달성가능하다면, 장비나 서비스가 장애인에 의해 통상 사용되는 기존의 주변 장치나 특수화된 소비자 옥내 장비에 호환이 되도록 해야 한다.
- (e) 지침－1996년 통신법의 제정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건축 및 수송 장벽 준수

위원회(Architectural and Transportation Barriers Compliance Board)는 연방통신 위원회와 연계하여 통신 장비와 소비자 옥내 장비의 접근성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그 지침을 심사하여 갱신하여야 한다.

- (f) 추가적인 사적 권리의 불허—이 조의 어느 부분도 이 조 또는 그에 따른 규칙 요건을 집행하기 위한 사적 제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이 조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전속적 관할권을 가진다.

#### **제256조 [47 U.S.C. 256] 상호접속을 위한 조정**

- (a) 목적—다음은 이 조의 목적이다.

- (1) 통신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최대한의 이용자와 판매자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공중 통신 네트워크에 다음을 통하여 비차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 (A) 통신 사업자 및 다른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공중통신 네트워크의 기획과 설계의 조정
  - (B) 공중 통신 네트워크의 상호접속성과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의 그러한 네트워크와의 상호접속성, 그리고
- (2) 이용자와 정보 제공자가 통신 네트워크간에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정보를 전송하고 수신하도록 해주는 능력을 보장하기.

- (b) 연방통신위원회의 기능—이 조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연방통신위원회는

- (1)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공중 통신 네트워크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상호접속을 위하여 통신 사업자와 기타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통합된 네트워크 기획에 대하여 연방통신위원회가 감독하는 절차를 설정하여야 하고,
- (2) 이 조의 제정일 이전 그 권한과 운영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다음의 접근을 증진하는 공중 통신 네트워크 상호접속성을 수립하는 적절한 산업표준 설정기구가 수행하는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 (A) 통신 서비스에 사용되는 공중 통신 네트워크의 접근,
- (B) 장애인에 의한 네트워크 능력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
- (C) 교외 전화회사의 가입자에 의한 정보 서비스의 접근. (c) 연방통신위원회의 권한—이 조의 어느 부분도 연방통신위원회가 1996년 통신법 제정일 이전의 법에 의하여 가질 수 있는 권한을 확장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d) 정의—이 조에 사용되는 “공중 통신망 상호접속성”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2개 이상의 공중 통신 네트워크가 상호간에 변질 없이 통신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조화롭게 상호 작동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제257조 [47 U.S.C. 257] 시장 진입장벽 절차

- (a) 장벽의 제거—1996년 통신법의 제정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연방통신위원회는 이 법(이 조를 제외)에서의 권한에 따른 규칙으로 통신서비스 및 정보 서비스의 제공과 소유 또는 통신 서비스 및 정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부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기업가 및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장벽을 식별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의 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 (b) 국가정책—(a)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연방통신위원회는 미디어 주장의 다양성, 활력 있는 경제의 경쟁, 기술 진보, 공익, 편의, 및 필요의 증진에 부합하도록 이 법의 목적과 정책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c) 주기적 심사—(a)항에 의해 요구되는 절차의 종료 후 매 3년 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심사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a)항에 의하여 식별되고 공익, 편의, 필요성에 부합되도록 규정될 수 있는 그 관할권내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규정된 규칙,
  - (2) 연방통신위원회가 (a)항에 의하여 식별되고 공익, 편의, 필요에 부합되도록 연방통신위원회가 제거를 권고한 법적 장벽.

### 제258조 [47 U.S.C. 258] 가입자의 사업자 선택의 불법적 변경

- (a) 금지－어떠한 사업자도 연방통신위원회가 규정하는 확인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가입자가 한 시내 전화 서비스나 전화 톨 서비스 선택의 변경을 제출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이 조의 어느 부분도 주 위원회가 주내 서비스에 관하여 그러한 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 (b) 요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a)항에 기술된 확인절차를 위반하고 가입자로부터 시내 전화 서비스나 전화 톨 서비스 요금을 징수한 통신사업자는 연방통신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러한 위반 이후 그 가입자가 지급한 모든 요금과 동일한 금액의 배상책임을 가입자가 이전에 선택한 사업자에게 부담한다. 이 항에 기술된 구제수단은 법에 의해 허용되는 기타 구제조치에 추가적인 것이다.

### 제271조 [47 U.S.C. 271] 벨 운영회사의 LATA간 서비스 진입

- (a) 일반적 제한－벨 운영회사 또는 그 계열사는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LATA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 (b) 이 조의 적용을 받는 LATA간 서비스
  - (1) 지역내 서비스(In-region services)－벨 운영회사 또는 그 계열사는 연방통신위원회가 (d)항(3)호에 의하여 지역내 주에 대한 그 회사의 서비스 신청을 승인한 경우 (i)항에 정의된 바의 지역내 주들의 어느 지점에서 발신되는 LATA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2) 지역외 서비스(Out-of-region services)－벨 운영회사 또는 그 계열사는 1996년 통신법의 제정일 이후 지역내 주들 외부로 발신되는 LATA간 서비스를 (j)항의 적용을 받으면서 제공할 수 있다.
  - (3) 부수적인 LATA가 서비스－벨 운영회사 또는 그 계열사는 1996년 통신법 제정일 이후 어느 주내에서 발신되는((g)항에 정의되는 바의) 부수적인 LATA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 종료(Termination)－이 조의 어느 부분도 벨 운영회사 또는 그 계열사가 (j)항의 적용을 받으면서 LATA간 서비스를 위하여 종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c) 특정한 지역내 LATA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건

(1) 협정 또는 진술문(statement)－벨 운영회사는 승인을 구하는 각 주에 대하여 이 호의 (A) 또는 (B)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된다.

(A) 설비를 보유한 경쟁자의 존재－벨 운영회사가 가정용 및 업무용 가입자에 대하여 비계열사인 하나 이상의 경쟁적 시내전화 서비스( 제3조(37)호(A)에 정의되는 바의, 그러나 중계접속을 제외) 제공자의 네트워크 설비를 위하여 자신의 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접속과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건을 구체화하여 제252조에 의하여 승인된 하나 이상의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 된다. 이 호의 목적을 위하여 그러한 시내 전화 서비스는 그러한 경쟁사업자가 전적으로 자체 시내 전화 서비스 설비에 의하여서 또는 자체 시내 전화 서비스 설비를 주로 제공하되 다른 사업자의 통신 서비스 재판매와 조합하여 제공할 수 있다. (A)의 목적을 위하여 연방통신위원회 규칙 Part 22의 subpart K(47 C.F.R.22.901 이하)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는 시내 전화 서비스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B) 접속 요청이 없는 경우－1996년 통신법의 제정 후 10개월이 경과한 후 벨 운영회사가 (d) (1)에 의한 신청을 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전까지 어떠한 제공자도 (A)에 기술된 접속과 상호접속을 요청하지않았고, 그 벨 운영회사가 그러한 접속과 상호접속을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진술문이 제252조(f)항에 근거하여 주 위원회에 의해 발효되도록 허용되거나 승인된 경우, 벨 운영회사는 이 (B)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 된다. 이러한 (B)의 목적을 위하여, 당해 주 위원회가 그러한 요청을 한 하나 이상의 경쟁사업자들 전부 가 ( i ) 제252조에 의해 요구되는 바대로 신의성실에 기초한 협상을 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 ii ) 제252조에 의하여 승인된 협정에 포함된 시행 일정

을 합리적인 기간내에 준수하지 못함에 따라 협정의 조건을 위반하였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 벨 운영회사는 접근과 상호접속에 대한 어떠한 요청도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2) 구체적인 상호접속의 요건

(A) 협정의 필요성－벨 운영회사는 승인을 구하는 주내에서다음의 경우 이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i) (I) 그 회사가 (1) (A)에 기술된 하나 이상의 협정에 따라 접속과 상호접속을 제공하거나, 또는 (II) 그 회사가 (1) (B)에 기술된 진술문에 따라 일반적으로 접속과 상호접속을 제공하고,

(ii) 그러한 접속과 상호접속이 이 호 (B)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B) 경쟁 점검목록－벨 운영회사가 다른 통신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적으로 제공을 제의하는 접근이나 상호접속이 다음 각각을 포함하면 이 (B)의 요건을 충족한다.

(i) 제251조(c)항(2)호 및 제252조(d)항(1)호의 요건에 따른 상호접속,

(ii) 제251조(c)항(3)호 및 제252조(d)항(1)호의 요건에 따라서 네트워크 요소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

(iii) 제224조의 요건에 따라 벨 운영회사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전주, 도관, 관로, 또는 우선 통행권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비차별적 접근,

(iv) 시내 교환이나 다른 서비스들로부터 분리된(unbundled) 상태에서 전화국에서 가입자 옥내로 지역 환상(loop) 전송,

(v) 교환이나 기타 서비스들로부터 분리된, 유선 시내 전화사업자의 간선(trunk side)으로부터 시내 전송,

(vi) 전송, 지역 환상 전송, 기타 서비스들로부터 분리된 시내 교환,

(vii) 다음에 대한 비차별적인 접속: (I) 911 및 E911 서비스, (II) 타 사업자의 고객이 전화번호를 알도록 허용하는 안내 서비스, (III) 교환원의 통화 완료 서비스, (viii) 타 사업자의 시내 전화 서비스 고객에 대한 인명 전화

번호부 등재, (ix) 통신번호 관리 지침, 계획, 규칙이 설정되는 날까지 사업자의 시내 전화 서비스 고객들에게 할당된 전화번호의 비차별적 이용. 그러한 설정 이후에는 그러한 지침, 계획, 규칙의 준수, (x) 통화 경로 처리 및 완료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신호에 대한 비차별적 접속, (xi) 연방통신위원회가 제251조에 따라 번호 이동성을 요구하는 규칙을 제정하는 날까지 기능, 품질, 신뢰성, 편리성을 가능한 한 적게 손상하도록 하면서 원격 착신 통화전환, 직접적인 내부 다이얼링 중계, 기타 상응한 장치들을 통하여 잠정적으로 통신번호 이동성을 요구. 그러한 날 이후에는 위 규칙의 준수, (xii) 요청 사업자가 제251조(b)항(3)호의 요건에 따라 시내 동등 다이얼링의 시행을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나 정보에 비차별적 접근, (xiii) 제252조(d)항(2)호의 요건에 따른 호혜 보상 약정, (xiv) 제251조(c)항(4)호 및 제252조(d)항(3)호의 요건에 따른 통신 서비스의 재판매.

(d) 행정적 규정

(1) 연방통신위원회에 대한 신청—1996년 통신법 제정일 이후 벨 운영회사 또는 그 계열사는 지역내 주에서 발신되는 LATA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승인을 연방통신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그 신청은 승인을 구하는 각 주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협의

(A) 법무부장관과의 협의—연방통신위원회는 (1)호에 의한 신청을 법무부장관 (Attorney General)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항에 의한 결정을 하기 전에 연방통신위원회는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만일 법무부장관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그러한 의견은 연방통신위원회의 결정 및 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A)에 의해서 연방통신위원회와 협의하고 의견을 제출함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사용하여 그 신청의 평가를 연방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방통신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평가에 상당한 비중을 두어야 하지만, 그러한 평가는 (3)호에 의한 연방통신위원회 결정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 (B) 주 위원회와의 협의—이 항에 의한 어떠한 결정을 하기전에 연방통신위원회는 (c)항의 요건을 벨 운영회사가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의 대상인 주의 주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 (3) 결정—(1)호에 의한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연방통신위원회는 신청에서 요청한 승인을 각 주별로 승인 또는 거부하는 결정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연방통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만 (1)호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에 대하여 요청된 승인을 할 수 있다.
  - (A) 신청을 하는 벨 운영회사가 (c)항(1)호 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또한
    - (i) (c)항(1)호(A)에 따라 제공되는 접근과 상호접속에 대하여 (c)항(2)호(B)의 경쟁 점검목록을 충분히 시행하였거나, 또는
    - (ii) (c)항(1)호(B)에 의한 진술문에 따라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접근과 상호접속에 관하여 그러한 진술문이 (c)항(2)호(B)의 경쟁 점검목록에 포함된 모든 항목을 제공하였 을 때, 그리고
  - (B) 요청된 승인이 제272조의 요건에 따라 시행될 것이고,
  - (C) 요청된 승인이 공익, 편의, 필요에 부합되는 경우. 연방통신위원회는 신청에 대한 그 승인 또는 거부의 판단 근거를 기술하여야 한다.
- (4) 연방통신위원회에 대한 제한—연방통신위원회는 규칙이나 기타 방식으로 (c)항(2)호(B)에 기술된 경쟁 점검목록에 사용된 용어를 제한하거나 또는 확장할수 없다.
- (5) 공표—(3)호에 의한 결정을 내린 후 10일 이내에 연방통신위원회는 결정의 내용을 요약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6) 조건의 집행.
  - (A) 연방통신위원회의 권한—(3)호에 의한 신청을 승인한 후 언제라도 벨 운영회사가 그러한 승인에 요구되는 조건 중 어느 것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

다고 연방통신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연방통신위원회는 통지와 청문의 기회를 가진 후 ( i ) 그 회사에 위반의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 ii ) Title V 에 따라 그 회사에 벌칙을 과하거나, 또는 (iii) 승인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B) 이의신청의 접수와 심사— 연방통신위원회는 벨 운영회사가 (3)호에 의한 승인에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의신청의 심사 절차를 설정 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달리 동의 하지 않는 한 연방통신위원회는 90일 이내에 그러한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 제한

(1) 시내 전화 및 장거리 전화의 공동 마케팅— 벨 운영회사가 (d)항에 따라 어느 지역내 주에서 LATA간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되거나 또는 1996년 통신 법 제정일 후 36개월이 되는 날 중에서 빠른 날에 전국적으로 사전가입 접속 회선의 5%를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사업자는 그 주에서 제251조 (c)항(4)호에 따라 그 회사로부터 획득한 시내 전화 서비스를 그 통신 사업자 에 의해 제공되는 LATA간 서비스와 함께 판매할 수 없다.

(2) LATA내 톨 동등 다이얼링

(A) 요구되는 제공—(d)항에 의하여 LATA간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부여받 은 벨 운영회사는 그 주내에서 그 권한의 행사와 부합되도록 LATA내 톨 동등 다이얼링을 제공하여야 한다.

(B) 제한— 단일한 LATA주인 경우와 벨 운영회사에게 LATA내 톨 동등 다이얼 링을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1995년 12월 19일까지 내린 주들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각 주는 벨 운영회사가 이 조에 의하여 그 주에서 발신되는 LATA간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부여받거나 또는 1996년 통신법 제정일 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중에서 빠른 날에 벨 운영회사에게 그 주에서 LATA 내 톨 동등 다이얼링을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이 (B)에서 어느 부분 도 주가 그러한 명령이 빠른 날짜 이후에 비로소 발효하는 한 그러한 빠른

날짜 이전에 그 주내에 서 LATA 내 톨 동등 다이얼링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 (f) 이미 승인된 활동에 대한 예외—(a)항 또는 제273조는 벨 운영회사 또는 그 계열사가 1996년 통신법 제정일 이후 어느 때든지 그러한 명령이 상소되어 무효화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리고 AT&T 합의 명령 VII조 또는 VIII(C)에 따라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이 내린 명령이 위제정일 이전에 내려졌으면, 그 조건에 따라 허용된 범위내의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항의 어느 부분도 벨운영회사가 이 조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활동을 제한하거나 어떠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g) 부수적 LATA간 서비스의 정의—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부수적 LATA간 서비스”는 벨 운영회사 또는 그 계열사에 의한 다음의 LATA간 제공을 의미한다.
  - (1) (A) 오디오 프로그램, 비디오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 서비스를 벨 운영회사 또는 그 계열사의 가입자에게 제공,
  - (B) 그러한 가입자가 오디오, 비디오, 기타 프로그램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반응하는 상호작용 능력의 제공,
  - (C) 벨 운영회사 또는 그 계열사가 소유 또는 통제하거나 저작권자(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배포의 허가를 받은 그러한 오디오, 비디오 프로그램을 배포자에게 제공,
  - (D) 정보 감시 서비스의 제공, 또는
- (2) 전용 설비를 통하여 제254조(h)항(5)호에 정의된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쌍방향 상호작용 서비스 또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 (3) 이 법 제332조(c)항 및 그 조(8)호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 상업적 이동(mobile) 서비스를 제공,
- (4) 어느 LATA내에 위치한 고객이 다른 LATA내에 위치한 그 회사의 정보 저장 시설로부터 저장된 정보를 인출하거나 또는 그 회사에 저장을 위하여 정보

- 를 제출하도록 허용하는 서비스,
- (5) 시내 전화 사업자에 의한 시내 전화 서비스나 중계접속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신호 정보, 또는
- (6) 그러한 벨 운영회사가 시내 전화 서비스나 중계접속을 제공하는 지역내의 어느 지점에서 LATA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네트워크 통제 신호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그러한 신호 정보를 수신.
- (h) 제한-(g)항의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g)항(1)호의 (A), (B) 또는 (C)에 의하여 제공되는 LATA간 서비스는 벨 운영회사 또는 그 계열사가 일반에 제공하는 비디오, 오디오, 기타 프로그램 서비스의 제공에 부수적인 LATA간 전송에 한한다. 연방통신위원회는 벨 운영회사 또는 그 계열사가 (g)항에 의하여 승인된 서비스 제공이 어느 통신 시장에서 시내 전화 서비스 요금 부담자나 경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i) 추가적인 정의-이 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지역내 주-“지역내 주”는 1996년 통신법 제정일 현재 AT&T 합의 명령에 의하여 승인된 구조 개편 계획에 따라 벨 운영회사 또는 그 계열사가 그 안에서 유선 시내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된 주를 의미한다.
- (2) 오디오 프로그램 서비스-“오디오 프로그램 서비스”는 라디오 방송국에 의해 제공되거나 일반적으로 그에 의하여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상응한 것으로 인정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 (3) 비디오 프로그램 서비스, 기타 프로그램 서비스-“비디오 프로그램서비스”와 “기타 프로그램 서비스”는 이 법 제602조에 의하여 규정된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 (j) 지역 내 서비스 신청으로 간주되는 특정 서비스 신청-이 조의 목적상, 벨 운영회사가,
- (1) 그 벨 운영회사의 지역내 주에서 종료되고, 또한

- (2) 수신자가 LATA간 사업자를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경우를 위한 800번 서비스, 사설 라인 서비스 혹은 그에 유사한 것을 제공하기 위한 신청은 (b)항(1)호의 요건 적용을 받는 지역내 서비스로 간주된다.

#### 제276조 [47 U.S.C. 276] 공중전화 서비스의 제공

- (a) 무차별 안전장치—(b)항에 따라 규정되는 규칙의 시행일 이후 공중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벨 운영회사는,
- (1) 그 시내 전화 서비스 운영이나 중계접속 운영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의 공중전화 서비스를 보조할 수 없으며, 또한
  - (2) 자신의 공중전화 서비스에 유리하게 선호 또는 차별할 수 없다.
- (b) 규칙
- (1) 규칙의 내용—공중전화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경쟁을 촉진하고 일반의 편익을 제공하는 공중전화 서비스의 광범위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6년 통신법 제정일 후 9개월 이내에 연방통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정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재심사를 포함하여)를 취해야 한다.
    - (A) 모든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신들의 공중전화를 사용하여 완료 및 모든 그리고 각각의 주내 및 주간 통화에 대하여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화 당 보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단, 비상통화 및 청각장애자를 위한 통신 중계 서비스 통화는 그러한 보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 (B) 그러한 제정일 현재 유효한 공중전화 서비스 항목에 대한 주내 및 주간 사업자 접속요금 및 지불을 중단하고, 또한 (A)항에 구체화된 보상계획을 선호하는 기본 시내전화 및 중계접속수입으로부터 모든 주내 및 주간 공중전화 보조를 중단하며,
    - (C) (a)항의 (1), (2)호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벨 운영회사의 공중전화 서비스에 대한 일련의 비구조적 안전장치를 규정한다. 이 안전장치는 최소한 컴퓨터 질의 III(Computer Inquiry III)(CC Docket No. 90-623) 절차에 채택된 것과 동일한 비구조적 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하며,

- (D) 독립적인 공중전화 제공자들이 장소 제공자들의 공중전화로부터 LATA간 통화를 전송하는 사업자를 선택하고 계약을하기 위하여 협상하고 장소 제공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갖는 권리와 같은 권리를 벨 운영회사 공중전화의 서비스제공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연방통신위원회가 이 조에따른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이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그리고
- (E) 모든 공중전화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장소 제공자들이 자신의 공중전화부터 LATA간 통화를 전송하는 사업자를 선택하고 계약을 하기 위하여 협상하고 장소 제공자들과의 협정조건에 따라 그 LATA간 사업자를 선택하고 그와 계약을 하는 권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 (2) 공익성 전화—(1)호에 따라 수행되는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연방통신위원회는 공중전화의 달리 있을 수 없는 지역에 공중보건, 안전, 복지를 위하여 제공되는 공익성 공중전화의 유지되어야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만일 유지되어야 한다면 그러한 공익성 공중전화의 정당하고 공평하게 지원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3) 기존의 계약—이 조의 어느 부분도 1996년 통신법의 제정일 현재 유효하게 성립되어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장소 제공자와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사업자 또는 LATA간 또는 LATA내 사업자간의 기존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c) 주 규제의 배제—어느 주 요건이 연방통신위원회 규칙과 부합되지 않는 한도에서, 그러한 사안에 대한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제는 그러한 주의 요건을 배제한다.
- (d) 정의—이 조에 의하여 사용되는 “공중전화서비스”는 공공 또는 유사 공공의 유료 전화의 제공, 교정기관에서 수감자 전화 서비스의 제공, 기타 부수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 TITLE III - 무선 관련 규정

## PART I - 총 칙

**제301조 [47 U.S.C. 301] 무선통신 또는 에너지 전송의 면허**

이 법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모든 무선 전송의 채널에 대하여 미국연방의 통제를 유지하고, 연방 당국이 부여하는 면허(license)를 받은자가 한정된 기간 동안 그러한 채널을 소유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면허는 면허된 조건과 기간을 넘어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이 법 및 이 법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면허에 의거하지 않고는 (a) 미국의 어느 주, 속령, D.C.로부터 미국의 당해 주, 속령, D.C.로, (b) 미국의 어느 주, 속령, D.C.로부터 미국의 다른 주, 속령, D.C.로, (c) 미국의 어느 주, 속령, D.C.내의 어느 지점에서 외국의 어느 지점 또는 어떠한 선박으로, (d) 그러한 사용의 효과가 미국의 주의 경계를 넘어 확장될 때 어느 주내에서, 또는 그 사용이나 운영에 의해 그러한 에너지의 전송, 통신, 신호와 간섭(interference)이 발생할 때는 주내의 어느 지점에서 그 경계를 넘는 어느 지점으로, 혹은 주의 경계를 넘는 어느 장소로부터 그 주내의 어느 지점으로, 또는 그러한 에너지, 통신, 신호의 전송 혹은 수신에 대하여 그 주의 경계를 넘는 지점 사이, (e) 미국의 어느 선박이나 항공기에(제303조 (t)항의 경우를 제외); 또는 (f) 미국의 관할권내에 있는 기타 이동 무선국에 에너지의 전송이나 무선(radio)에 의한 통신 또는 신호를 위한 장치를 사용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302조 [47 U.S.C. 302] 전파수신 간섭 장치**

(a) 연방통신위원회는 공익, 편의, 필요성에 부합되도록 (1) 장치들의 사용에 있어서 방사, 전도, 기타 수단에 의해 무선통신에 해를 주는 간섭을 야기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장치의 잠재적 간섭을 규제하고, 또한 (2) 가전 설비와 시스템이 무선 주파수 에너지로부터의 간섭에 의하여 고장이 감소되도록 이들 설비와 시스템의 최소한의 작동기준을 설정하

- 기에 합리적 규칙을 정할 수 있다. 그러한 규칙은 장치 및 가전 설비와 시스템의 제조, 수입, 판매, 판매 제의, 운송 및 그러한 장치의 사용에 적용되어야 한다.
- (b) 누구든지 이 조에 따라 공포되는 규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장치 또는 가전 설비나 시스템을 제조, 수입, 판매, 판매 제의, 운송하거나 그러한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 (c) 이 조의 규정은 그러한 장치나 가전 설비 및 시스템을 거래하지 않고 이들을 운송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며, 오로지 수출을 위해 제조되는 장치나 가전 설비 및 시스템, 그리고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종사하는 공공 서비스 회사가 자신의 사용을 위한 설비나 가전 설비 및 시스템의 제조, 조립, 설치, 또는 미국 연방정부나 그 기관의 사용을 위한 장치나 가전 설비 및 시스템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미국 연방정부나 그 기관의 사용을 위한 장치나 가전 설비 및 시스템은 국방 및 안보의 독특한 필요를 고려하여 무선 수신과 가전 설비 및 시스템에 대한 간섭을 완화하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안되는 미국 연방정부 기준, 표준, 기타 사양에 의하여 개발 또는 해외 조달을 포함하여 조달되고 획득되어야 한다.
- (d) (1) 이 항의 제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연방통신위원회는 다음을 행할 수 있는 스캐닝 리시버(scanning receiver)의 장비 인증을 부인하는 규칙을(연방 규칙집의 Title 17, Part 15 또는 그 Title 하의 다른 Part하에서) 규정하고 발표시켜야 한다.
- (A) 국내 셀룰러(cellular) 무선 통신 서비스에 할당된 주파수들의 전송을 수신할 수 있거나,
- (B) 그러한 주파수의 전송을 수신하는 사용자가 즉시 변경할 수 있거나, (C) 디지털 셀룰러 전송을 아날로그 음성으로 전환하는 해독기(decoder)를 갖춘 것.
- (2) (1)호에 따라 채택된 규칙의 제정일 1년 후부터, 위 규칙에 정의되는 바의 (1)호의 (A), (B), (C)에 기술된 능력을 갖춘 어떤 리시버도 미국내에서 제조되거나 미국내에서 사용을 위하여 수입될 수 없다.

(e) 연방통신위원회는,

- (1) 이 조에 의하여 공포된 규칙으로 장치나 가전 설비 및 시스템이 준수되는지 시험하고 입증하기 위하여 그러한 장치나 설비, 시스템을 사적 단체가 이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고,
- (2) 그러한 단체에 의한 인증을 위 준수의 일응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으며,
- (3) 그러한 사적 단체, 시험, 인증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격과 표준을 설정할 수 있다.

#### **제309조 [47 U.S.C. 309] 신청의 처리절차, 면허의 형식과 조건**

- (a)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는 제308조가 적용되는 자신에게 제출된 각 신청에 대하여 면허의 부여가 공익, 편의, 필요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신청의 검토 및 연방통신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기타 문제를 검토한 후 그러한 판단이 서면 면허를 부여하여야 한다.
- (b) 이 조(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위한 어떠한 신청이나 상당한 정도의 변경 신청 제출에 대하여도 연방통신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였음을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이전에는 부여될 수 없다.
  - (1) 방송 또는 기간통신 서비스 무선국 허가서, 또는
  - (2) 다음 종류의 무선국 허가서;
    - (A) 주파수가 배타적으로 할당되는 산업 무선 위치 무선국,
    - (B) 항공로 무선국,
    - (C) 항공 자문 무선국,
    - (D) 공항 통제 무선국,
    - (E) 항공 고정 무선국, 및
    - (F) 연방통신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며, 방송이나 기간통신 사업자 서비스 무선국을 제외한, 기타의 무선국 또는 특정 분류의 무선국.

(c) 이 조(b)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 (b)항이 적용되는 신청의 경미한 변경, 또는

(2) 다음의 어느 신청:

(A) 허가된 무선국 시설의 경미한 변경,

(B) 제310조(b)항에 의한 비자발적인 양도나 이전에 대한 동의, 또는 소유권이  
나 지배권에 상당한 변경을 포함하지 않는 양도나 이전에 대한 동의,

(C) 제319조(b)항에 의한 면허, 그러한 면허의 신청이 계류중 승인된 건설의 완  
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시적 운영을 허용하거나, 또는 그러한 면허에 의  
해 승인될 서비스와 실제적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특별 또는 임  
시 승인,

(D) 승인된 시설의 건설을 완성하기 위한 기간의 연장,

(E) 원격 중계(remote pickup) 시설, 스튜디오 링크 시설, 그리고 방송국 운영에  
사용되는 유사 시설의 승인,

(F) 전송되는 프로그램이 계속적 성격의 것이 아닌 특별 사항일 때 제325조(c)  
항에 따른 승인,

(G) 제출된 정규 운영 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 60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정규운  
영 신청이 제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비  
방송 운영의 특별 임시승인,

(H) 제308조(a)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승인.

(d) (1) 이해당사자(any party in interest)은 연방통신위원회에 이 조의 (b)항이 적용  
되는 신청(원래의 신청이든 변경 신청이든)에 대하여 청문회 없이 연방통  
신위원회가 승인하기 전까지 또는 정식의 청문회를 지정하기 전까지 언제  
라도 이를 거부하는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단, 특정 분류의 신청에  
대하여 연방통신위원회는 신청 처리에 통상 소요되는 합리적 기간을 고려  
하여 규칙으로 보다 단기의 기간(그러한 신청 또는 상당한 정도의 신청 변  
경이 접수되었음을 연방통신위원회가 공지한 후부터 30일 이상의 기간이

어야 한다)을 구체화할 수 있다. 이의 신청자는 그러한 이의 신청의 사본을 신청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의 신청은 이의 신청자가 이해당사자이며 신청의 승인이 (a)항(방송국 면허 갱신의 경우에는 (k)항)에 명백히 위반됨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사실 주장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실 외에는 개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의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사실의 주장이나 부인에 관하여 마찬가지로 진술서를 첨부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가진다.

- (2) 연방통신위원회가 신청, 제출된 변론서, 또는 기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중요하고 실질적인 사실문제가 없으며 신청의 승인이 (a)항(방송국 면허 갱신의 경우에는 (k)항)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을 승인하고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의 신청에 의해 제기된 모든 중요 문제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의 신청 기각사유를 기재한 요약문을 발급하여야 한다. 어떤 중요하고 실질적인 사실문제가 있거나 연방통신위원회가 어떤 이유로든지 신청의 승인이 (a)항(방송국 면허 갱신의 경우에는 (k)항)에 부합함을 발견할 수 없다면 (e)항에 규정된 대로 처리되어야 한다.

- (e) 이 조의 (a)항이 적용되는 신청의 경우에 중요하고 실질적인 사실문제가 제시되거나 연방통신위원회가 어떠한 이유로든 (a)항에 구체화된 발견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연방통신위원회는 신청인에게 해당 이유나 사유로 청문회를 지정하고 신청인 및 연방통신위원회가 알고 있는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즉각 청문회 개최사실과 일반적으로 표현된 요건이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을 특정하여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연방통신위원회가 위와 같이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였을 때, 청문회 개최에 관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이해당사자가 있다면 관보에 청문회 개최 사실이 공지되거나 그 상당한 변경이 있는 후 30일 이내에 이해관계의 근거를 제시하여 참가신청을 제출함으로써 청문회 당사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러한 신청 후 개최되는 청문회는 신청인과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허용되는 완전한 청문회이어야 한다. 증거 제출과

입증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단, 신청의 거부를 요청하는 이의 신청이나 이슈를 확대하는 이의 신청에 의해 제시되는 이슈에 관하여는 연방통신위원회가 그러한 책임을 결정한다.

- (f) (b)항이 적용되는 신청이 있을 때 (b)항에도 불구하고 연방통신위원회는 그러한 신청의 승인이 법에 의해 달리 허용되거나 연방통신위원회가 공익을 위하여 임시적 운영을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러한 임시적 운영의 지연이 공익을 심각하게 손상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연방통신위원회는 임시승인에 대한 이유서와 함께 임시승인을 부여하여 18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적 운영을 허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판단에 근거하여 추가적으로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승인을 연장할 수 있다.
- (g) 연방통신위원회는 이 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신청의 합리적인 분류와 수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 (h) 연방통신위원회가 부여하는 무선국 면허는 연방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그러한 일반적 양식을 가지나 각 면허는 다른 조항에 추가하여 그러한 면허가 따라야 할 다음의 조건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 그 무선국 면허는 면허 소유자에게 면허장에 부여된 기간과 방식을 초과하여 면허 소유자에게 무선국을 운영할 어떠한 권리 또는 주파수 사용 권리도 부여하지 않으며, (2) 면허장에 부여된 허가나 권리는 이 법을 위반하여 양도 또는 이전될 수 없으며, (3) 이 법에 따라 발급된 모든 면허는 이 법 제706조에 의해 부여된 사용과 통제의 권리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 (i) 무작위 선택
  - (1) 일반적 권한—만일
    - (A) 전자 스펙트럼의 사용을 포함하는 최초의 면허 또는 건설 허가에 둘 이상의 신청이 있고, 또한
    - (B) 연방통신위원회가 그 사용이 (j)항(2)호(A)에 서술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연방통신위원회는 무작위 선정(random selection) 시스템을 사

용하여 하나의 자격 있는 신청자에게 그러한 면허나 건설허가를 부여할 권한을 가진다.

- (2) 신청자가 (a)항 및 제308조(b)항에 따라 자격 있는 것으로 연방통신위원회가 판단하지 않는 한 어떠한 면허나 건설 허가도 (1)에 따라 선정된 신청자에게 부여될 수 없다. 그러한 자격에 관하여 중요하고 실질적인 사실문제가 존재할 때 연방통신위원회는 그러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러한 결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방통신위원회는 규칙으로 어느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행할 수 있다.

- (A) 서면 형식으로 모든 또는 일부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의 채택,
- (B) 행정 사법 보좌관(administrative law judge) 이외의 연방통신위원회 직원에게 서면 증거의 채증에 대한 주재 기능을 위임, 그리고
- (C) (1)에 따라 선정된 신청 이외의 신청에 대하여 (a)항에 의해 요구되는 결정을 생략.

- (3) (A) 연방통신위원회는 매스 미디어를 위한 면허나 건설 허가를 부여하는데 이용되는 이 항에 의한 무작위 선정 시스템의 관리에서 특정 신청인들이나 신청 그룹에게 면허나 건설 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매스 미디어의 소유권 다양성을 강화시킬 경우, 이들에게 상당한 우선권이 부여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매스 미디어의 소유권 다양성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하여 소수 그룹의 구성원에 의하여 통제되는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우선권이 부여되도록 해야 한다.

- (B) 연방통신위원회는 (A)에 의하여 현저한 우대(significant preference)를 받고자 하는 각 신청자로 하여금 그러한 신청자에게 그러한 우선권이 부여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연방통신위원회가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연방통신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한 정보는 연방통신위원회가 요구하는 절차, 시기, 양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 (C) 이 호의 목적상:

- (i) “매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는 텔레비전, 라디오, 케이블 텔레비전, 다지

점 분배 서비스(multipoint distribution service), 직접 방송 위성 서비스(direct broadcast satellite service), 기타 서비스, 그리고 면허 소유자의 편성 통제권내에서 프로그램 기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히 전속되는 허가 시설을 포함한다.

(ii) “소수 그룹”은 흑인, 히스패닉, 아메리칸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 태평양 군도민을 포함한다.

(4) (A) 연방통신위원회는 그 재량(discretion)으로 (1)에 따른 면허나 건설 허가를 부여하기 위해 무작위 선정 시스템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지와 청문의 기회를 가진 후 이 항에 의하여 연방통신위원회가 사용할 무작위 선정 시스템을 설정하는 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B) 연방통신위원회는 이 항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규칙을 때때로 수정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한 수정은 통지와 청문의 기회를 가진 후 이루어져야 한다.

(C) 이 세호의 제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연방통신위원회는 이 항에 의한 면허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의 결과로서 면허 또는 건설 허가의 수혜자가 부당이득을 얻지 않도록 방지 하는데 필요한 허가 이전의 공개 및 불법행위 금지 및 지불 스케줄을 정해야 한다.

(j) 경쟁 입찰의 이용

(1) 일반적 권한—(2)호에 기술된 전자 스펙트럼의 사용을 포함하는 최초의 면허나 건설 허가에 대한 신청을 위하여 서로 양립될 수 없는 신청이 접수되면, 연방통신위원회는 (10)호의 적용을 받으면서 이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쟁 입찰 시스템의 이용을 통하여 자격 있는 신청인에게 면허나 건설 허가를 부여할 권한을 가진다.

(2) 입찰이 적용되는 사용—이 호에 기술된 전자 스펙트럼 스펙트럼의 사용은 연방통신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A) 그러한 스펙트럼의 주된 사용이 면허 소유자가 다음을 하도록 하는데 대한

대가로 가입자들로부터 보상을 받는 면허 소유자를 포함하거나 합리적으로 포함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i) 면허 소유자가 운영 허가를 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송되는 통신 신호를 가입자가 수신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 (ii) 면허 소유자가 운영 허가를 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가입자가 직접 통신 신호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B) 경쟁 입찰 시스템이 (3)호에 서술된 목적을 증진시킬 경우.

- (3) 경쟁 입찰 시스템의 설계—연방통신위원회가 경쟁 입찰 시스템의 사용을 통하여 부여하는 면허나 허가의 각 분류에 대하여, 연방통신위원회는 규칙으로 경쟁 입찰 방법론을 설정하여야 한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적절한 상황에 따라 복수의 대안적인 방법론을 설계하고 시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쟁 입찰로 발급된 면허 및 건설 허가의 분류를 식별하며, 그러한 면허 및 건설 허가의 자격과 성격을 구체화하며, 이 항에 의한 사용을 위한 방법론들을 설계함에 있어서, 연방통신위원회는 스펙트럼의 사용에 있어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들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 법 1조에 구체화된 목적 및 다음 목적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A) 행정적 또는 사법적 지연 없이 교외 지역의 주민들을 포함하여 일반의 편익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의 발전과 급속한 이용,
- (B) 면허의 지나친 편중을 피하고 중소기업, 교외 전화회사들, 소수 그룹 및 여성들이 소유하는 사업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신청자들에게 면허를 분산함으로써 경제적 기회와 경쟁을 촉진하고 새롭고 창조적인 기술들을 미국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C) 공공의 스펙트럼 자원의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이용되는 방법들을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피하고 상업적 사용에 이용되는 공공 자원의 가치 일부를 공공에 환원, 그리고
- (D) 전자 스펙트럼의 효율적이고 강화된 사용.

- (4) 규칙의 내용—(3)호에 따른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 연방통신위원회는,
- (A) 로열티 지불과 함께 또는 그 지불 없이 일시불로 또는 보증 할부지급, 기타 (3)호(B)에 기술된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다른 스케줄이나 방법론, 그리고 그러한 스케줄과 방법론의 조합을 포함하여 대안적 지불 스케줄과 계산 방법을 고려하여야 하고,
  - (B) 적절한 이행일과 이행 위반에 대한 벌칙과 같이 교외 지역에 신속한 서비스 전달을 보장하고 면허 소유자나 건설 허가소지자가 스펙트럼을 비축하는 것을 방지하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신속한 도입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행요건을 포함하여야 하고,
  - (C) 공익, 편의, 필요, 이 법의 목적, 제안된 서비스의 성격에 부하도록 (i) 지역간에 면허와 서비스를 공평하게 배분, (ii) 중소기업, 교외 전화회사, 소수 그룹 및 여성이 소유하는 사업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신청자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 그리고 (iii)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투자와 급속한 도입을 촉진하도록 지역의 설정과 대역의 할당을 정하여야 하며,
  - (D) 중소기업, 교외 전화회사, 소수 그룹 및 여성이 소유하는 사업체에게 스펙트럼에 근거한 서비스의 제공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세제 혜택이나 경쟁 입찰에서 우대권을 주거나 기타 절차를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 (E) 면허나 건설 허가를 부여하기 위해 이용되는 방법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부담이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이전 공개, 불법행위 금지, 지불 스케줄을 요구하여야 한다.
- (5) 입찰자 및 면허신청자의 자격—입찰자의 면허 신청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연방통신위원회가 요구하는 정보와 보증을 입찰자가 제출하지 않는 한 누구도 이 항에 따른 경쟁 입찰 시스템에 참여할 수 없다, 신청자가 (a)항, 제308조(b)항, 제310조에 따라 자격 있다고 연방통신위원회가 결정하지 않는 한 어떠한 면허도 이 항에 따라 선정된 신청자에게 부여될 수 없

다. (3)호에 기술된 목적에 부합하게 연방통신위원회는 규칙으로 자격에 관한 중요하고 실질적인 사실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 i ) (2)에 의해 허용된 절차에 부합되게 신속한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6) 해석의 원칙—이 항의 어느 부분도 또는 경쟁 입찰 사용에서의 어느 부분도

(A)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설정된 스펙트럼 배분(distribution) 기준과 절차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B) 이 조(h)항, 제301조, 제304조, 제307조, 제310조, 또는 제706조 또는 기타 이 법의 다른 규정(이 조(d)항(2)호, (e)항을 제외)의 요건에 영향을 주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며,

(C) 연방통신위원회가 이 법의 다른 규정에 의한 스펙트럼 면허를 규제하거나 회수할 권한을 축소하지 아니하며,

(D) 이 항에 따라 발급되지 않은 동일한 서비스내의 다른 면허들에 적용되는 권리와 면허 갱신의 기대를 포함하여 다른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E) 양립할 수 없는 신청 및 면허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연방통신위원회가 공익의 관점에서 기술적 해결책, 협상, 중요자격, 서비스 규제, 기타 수단을 계속 사용해야 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F) 연방통신위원회가 전국적, 지역, 지방 차원의 면허나 건설 허가를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G) 연방통신위원회가 새로운 통신 서비스나 기술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들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H) 면허나 건설 허가의 신청자가 이 법 제8조에 따라 부과된 요금을 지불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 공익 결정에 있어 수입의 고려

(A) 금지되는 고려—이 항에 따라 면허 또는 건설 허가가 부여되는 사용을 위하여, 주파수 대역을 제303조(c)항에 따라 할 당하는 결정을 하고 이 항(4)

호(c)에 따른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 연방통신위원회는 공익, 편의, 필요성의 판단을 이 항에 의한 경쟁 입찰 시스템 사용으로부터 얻는 연방의 예상 수입에 근거할 수 없다.

(B) 제한되는 고려—이 항(4)호(A)에 따른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 연방통신위원회는 공익, 편의, 필요성의 판단을 오로지 이 항에 의한 경쟁 입찰 시스템 사용으로부터 얻는 연방의 예상수입에만 또는 주로 근거할 수 없다.

(C) 스펙트럼 수요의 고려는 영향을 받지 않음—이 호의 어느 부분도 연방통신위원회가 스펙트럼에 근거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계속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8) 수입의 처리

(A) 일반적 원칙—(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항에 의한 경쟁 입찰 시스템 사용으로부터의 모든 수입은 미국 연방법전 Title 31, Chapter 33에 따라 국고에 산입된다.

(B) 수입의 보유—(A)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 의해 요구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비용을 위하여 그러한 수입으로 부터 필요한 금액만큼의 상계 징수액이 연방통신위원회의 급여와 비용 계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한 상계 징수액은 수입예산계정의 조건에 따른 책임에 이용가능하게 되어야 하며, 그러한 계정에 분기별로 입금되어야 한다. (i)항에 의한 무작위 선정을 사용하는 면허를 할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1994년부터 1998년까지의 회계연도기간 동안 연방통신위원회에게 배정된 예산은 이 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상계 징수액은 지출될 때까지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허용된다.

(C) 경매 위탁 계정의 사용과 예치—이 항에 따른 경쟁 입찰시스템에서 입찰자의 자격으로 연방통신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공탁금은 연방통신위원회가 이 항의 목적을 위하여(재무부 장관(Secretary of the Treasury)과 협의 후) 지정하는 어느 금융기관의 이자부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경쟁 입찰 종결

후 45일 이내에,

- ( i ) 낙찰자의 예치금은 국고에 편입되며,
  - ( ii ) 낙찰 받지 못한 입찰자의 예치금은 입찰자에게 반환되며, 그리고
  - ( iii ) 그 계정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이 법 제714조에 따라 설치된 통신개발 기금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 (9) 과거 정부 스펙트럼의 사용—이 항의 제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연방통신위원회는 다음의 주파수 대역 사용을 위하여 이 항에 따라 면허와 허가를 발급하여야 한다.
- (A) 총 10 MHz 이상의 대역으로, 그리고
  - (B) 국가 통신 및 정보 관리조직법(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Organization Act) Part B에 따라 정부 사용으로 재할당되는 것.
- (10) 추가 스펙트럼 이용가능시 부수적 권한
- (A) 최초 조건—이 항에 따라 면허나 허가를 발급할 연방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다음을 만족하는 경우에 비로소 발효된다. ( i ) 상무부장관(Secretary of Commerce)이 국가 통신 및 정보 관리조직법 제113조(d)항(1)호에 의해 요구되는 보고서를 연방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 ii ) 그러한 보고서가 총 50M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의 즉각적인 재할당을 권고하고, ( iii ) 그러한 주파수 대역이 국가 통신 및 정보 관리조직 법 113(a)에 의해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며, 그리고 ( iv ) 연방통신위원회가 이 법 제332조(c)항(1)호(D)에 의해 요구되는 규칙 제정을 완료한 경우.
  - (B) 추후 조건—이 항의 제정일로부터 2년 후, 연방통신위원회가 이 항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발급할 권한은 다음의 경우 효력이 정지된다.
    - ( i ) 상무부장관이 국가 통신 및 정보 관리조직법 제113조(a)항에 의해 요구되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 ( ii ) 대통령이 국가 통신 및 정보 관리조직법 제114조(a)항의 (1), (2)호에 의해 요구되는 주파수 할당을 철회 또는 제한하지 못하였거나,

- (iii) 연방통신위원회가 국가 통신 및 정보 관리조직법 제115조(a)항에 의해 요구되는 규칙을 제정하지 못하였거나,
  - (iv) 연방통신위원회가 이 항 제정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현재 및 미래 2010년까지 각 주 및 지방 정부의 공공안전기관의 스펙트럼 수요 연구서 및 공공안전 면허 소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주파수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완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 (v) 연방통신위원회가 이 항의 제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어느 주가 제출한 이의 신청을 제332조(c)항(3)호하에서 요구하는 기간 내에 그 조에 따라 기각 또는 승인하지 못한 경우, 그러한 실패가 보정될 때까지.
- (11) 종료—이 항에 의하여 면허나 허가를 부여할 연방통신위원회의 권한은 1998. 9. 30. 종료된다.
- (12) 평가—1997. 9. 30.까지 연방통신위원회는 일반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A) 이 항에 의한 경쟁 입찰 시스템 사용으로부터 얻은 수입과 미래 수입의 예측 명세를 포함하고,
  - (B) (3), (4)호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해 설정된 방법론을 기술하고,
  - (C) 위 호에 열거된 목적의 달성이라는 견지에서 그러한 방법론들의 상대적인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고,
  - (D) 다음의 여부와 정도를 평가하며:
    - (i) 경쟁 입찰이 무선 스펙트럼 면허 부여 절차의 능률과 효율성을 현저히 증진하였는지 여부,
    - (ii) 경쟁 입찰이 통신 시장에 스펙트럼에 근거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새로운 회사의 진입을 촉진시켰는지 여부,
    - (iii) 경쟁 입찰이 교외 지역에 신속한 서비스 전달을 담보하였는지, 그리고 교외의 스펙트럼 사용자들의 수요를 적절하게 설명하였는지 여부,
    - (iv) 중소기업, 교외 전화회사 그리고 소수 그룹의 구성원이나 여성들이 소유

한 사업체가 경쟁 입찰에 성공적으로 참가할 수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E) 경쟁 입찰 과정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 변경을 권고하는 것이어야  
한다.

(13) 개척자(pioneer)에 대한 우대와 관련하여 공공 스펙트럼의 가치 환수

(A) 총칙—(6)호(G)에도 불구하고, 연방통신위원회는 이 호의 요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통신 서비스나 기술의 개발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에게 연방통신위원회가 부여하는 우선적 취급에 따른 허가를 부여할 수  
없다.

(B) 가치의 환수—연방통신위원회는 공공 스펙트럼 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러한 면허 수령의 조건으로서 다음에 의해 결정되는 금액을 지급하는데  
동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그 공공자원 가치의 일부를 공중에 환원시켜야  
한다.

(i) 연방통신위원회가 결정하는 허가의 낙찰자가 대역폭, 서비스 지역의 범  
위, 사용상의 제한, 기타 그러한 자에게 부여되는 면허에 따른 기술 성격  
의 조건에서 합리적으로 가장 손색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한 연방  
통신위원회가 판단하기에 우대 조치에 따른 면허 부여로 인해 비정상적  
으로 낙찰된 허가를 제외하고,

(ii) 그러한 각 낙찰 금액을 각각의 서비스 지역 인구로 나누어(이하 “1인당  
낙찰금액”),

(iii) (i)에 의하여 확인된 허가의 1인당 낙찰금액의 평균을 산출하여,

(iv) 그러한 평균 금액을 15% 차감하여, 그리고

(v) (iv)에 의해 결정된 금액에 그러한 자가 받은 허가의 서비스 지역 인구를  
곱한다.

(C) 분납의 허용—연방통신위원회는 그러한 자에게 (B)에 의해 요구되는 금액  
을 로열티 지불과 함께 또는 그 지불 없이 일시불로 또는 5년 이내의 기간  
범위에서 보증된 할부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 (D) 개척자 우대에 대한 규칙 제정—아래(iv)에 서술된 신청의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통신위원회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나 기존의 서비스를 상당히 고양시키는 신기술 개발에 현저히 공헌한 자가 면허 과정상의 우대를(상호배타적인 신청의 제출을 차단함으로써) 요청하는 신청을 평가할 절차와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규칙은,
- (i) 연방통신위원회의 직원이 아닌 자들로부터 선정된 무선학의 전문가나 그러한 우선적 대우를 요청하는 신청자가 검토와 확인의 기회를 가진 후, 그러한 공헌의 정도를 결정하는 절차와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ii) 그러한 공헌의 가치가 이 항에 의하여 필적할만한 면허를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으로부터 감액을 정당화하도록 보장함으로써 부당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절차를 포함하고,
  - (iii) 이 호의 제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규정되고,
  - (iv) 1994. 9. 1.까지 제출된 신청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 (v) (F)에 의한 연방통신위원회의 권한 종료일에 효력이 정지된다.
- (E) 계류중인 신청에 관한 시행—Third Report and Order in General Docket 90-314(연방통신위원회 93-550, 1994. 2. 3. 공표)에서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해 허용된 우선적 대우에 따라 부여된 개인 통신 서비스에 있어서 이 호를 광대역(broadband) 면허에 적용하는 경우,
- (i) 연방통신위원회는 그러한 제3차 보고 및 명령에 포함된 우선권 부여를 재검토할 수 없으며, 연방통신위원회는 이 호의 제정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그러한 부여에 근거한 면허 발급을 지연할 수 없고, 그러한 우선권과 허가는 행정심판(administrative review)이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 (ii) 연방통신위원회는 제3차 보고 및 명령에서 그러한 면허들에 지정된 대역폭이나 서비스 지역들을 변경할 수 없으며,
  - (iii) (v)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통신위원회는 (B) (i)의 목적을

- 위하여 합리적으로 가장 필적할만한 면허로서 어떠한 신청자도 우대 조치를 받지 못한 상위 20개 시장(인구수에 따른 서열로)에 대한 블록 A와 B를 위한 개인통신 서비스에 있어서 광대역 면허들을 사용하여야 하며,
- (iv) (C)의 목적을 위하여, 연방통신위원회는 다음의 조건하에 5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보증 할부를 허용하여야 한다.
- (I) 면허 부여 과정에서 사용된 우선적 처우를 포함하여, 면허의 부여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더 이상 행정심판 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시되어, 처음 2년 동안 미지급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 단, (iii)에 기술된 필적할만한 면허들의 경매 종료일 이전에는 그러한 지급이 요구될 수 없으며, 그리고
- (II) 위 최초 2년의 경과 후에는 연방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 미지급액 및 이자를 지급하고, 그리고
- (v) 연방통신위원회는 이 호에 의한 개인 통신 서비스 광대역 면허에 대하여 400,000,000달러 이상의 금액을 환수해야 하며, 만일 그 금액이 400,000,0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연방통신위원회는 각 면허 소유자의 면허 지역의 인구에 기초하여 그러한 면허 소유자간에 배분함으로써 400,000,000달러를 환수하여야 한다. (v)에 의하여 징수가 요구되는 금액에 대하여 연방통신위원회는 (iv)에 의하여 징수되도록 요구된 미지급액에 대한 이자를 포함시킬 수 없다.
- (F) 만료－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이나 기존 서비스를 상당히 고양시키는 신기술의 개발에 현저히 공헌한 자에게 면허 과정에서 우선적 대우를(상호 배타적인 신청의 제출을 배제함으로써) 제공할 연방통신위원회의 권한은 1998. 9. 30.에 만료된다.
- (G) 발효일－이 호는 그 제정일 이후에 발효하며,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이나 기존 서비스를 상당히 고양시키는 신기술의 개발에 현저히 공헌한 자에게 면허 과정에서 우선적 대우를(상호 배타적인 신청의 제출을 배제함으로써)

제공하는 어떤 면허절차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가 1994. 8. 1. 이후 발급하는 허가에 적용된다.

(k) 방송국 갱신 절차

- (1) 갱신의 기준—방송국 면허 소유자가 그러한 면허의 갱신 신청을 연방통신위원회에 제출하면, 연방통신위원회는 직전의 허가기간 동안 그 방송국에 대하여 다음을 인정하면 갱신을 허용하여야 한다.
  - (A) 방송국이 공익, 편의, 필요성에 봉사하였고,
  - (B) 면허 소유자가 이 법이나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및 규제를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 (C) 면허 소유자가 이 법이나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및 규제를 전체적으로 보아 남용의 정도를 구성하는 다른 위반을 하지 않았을 것.
- (2) 기준 불충족의 효과—방송국 면허 소유자가 이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연방통신위원회는 (3)호에 따라 갱신 신청을 기각하거나 허용될 수 있는 최대 기간보다 단축된 기간의 갱신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갱신을 허용할 수 있다.
- (3) 기각의 기준—(e)항에 규정된 대로 통지와 청문회의 기회를 가진 후, 면허 소유자가 (1)호에 구체화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또한 보다 약한 제재의 부과를 정당화할만한 감경사유가 없다고 연방통신위원회가 결정하면, 연방통신위원회는
  - (A) 제308조에 의해서 그러한 면허 소유자가 제출한 갱신 신청을 기각(denying)하는 명령을 발하고, 그리고
  - (B) 그 다음에야 그 이전 면허 소유자의 채널 또는 방송 시설을 구체화한 제308조에 의하여 제출될 수 있는 건설 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 (4) 경쟁자의 고려 금지—(1) 또는 (2)호에 구체화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연방통신위원회는 갱신 신청자 이외의 자에게 허가를 부여함으로써 공익, 편의, 필요성에 부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 제310조 [47 U.S.C. 310] 면허의 소유와 이전의 제한

- (a) 이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무선국 면허는 외국 정부나 그 대표자에게 부여되거나 그러한 자가 보유할 수 없다.
- (b) 다음의 자에게는 어떠한 방송, 기간통신 사업자 또는 항공 경로 무선국 또는 항공 고정 관제국 면허가 부여되거나 이들이 면허를 보유할 수 없다.
  - (1)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대표자,
  - (2) 외국 정부의 법에 의하여 조직된 회사,
  - (3) 외국인들이나 그들의 대표자들 또는 외국 정부나 그 대표자 또는 외국법에 의하여 조직된 회사가 주식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한 것으로 기록되거나 의결권이 행사되는 회사,
  - (4) 연방통신위원회가 면허의 거부나 취소가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외국인들이나 그들의 대표자들 또는 외국 정부나 그 대표자 또는 외국법에 의하여 조직된 회사가 주식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한 것으로 기록되거나 의결권이 행사되는 회사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되는 회사.
- (c) 이 법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가 외국인에게발급할 수 있는 아마추어 무선국 면허에 추가하여, 만일 미국의 아마추어 무선국 운영자들을 위하여 호혜적으로 적용되는 미국과 어느 외국 정부가 당사자이며 유효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협정이 있는 경우, 연방통신위원회는 연방통신위원회가 제정하는 조건하에 그 외국 정부에 의해 아마추어 무선국 운영자로서 면허받은 외국인이 미국, 속령 및 푸에르토리코에서 아마추어 무선국을 운영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이 법의 다른 규정과 행정절차법의 규정은 그러한 승인의 신청, 변경, 정지, 또는 취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d) 어떠한 건설 허가나 무선국 면허 또는 그에 따른 권리도 연방통신위원회에 신청되고 연방통신위원회가 공익, 편의, 필요성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든지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전, 양도, 또는 처분될 수 없으며, 그러한 건설 허가나 면허 소유 회사의 지배권의 이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한 신청은 제안된 건설 허가나 면허를 이전받을 자나 양수인이 문제의 건설 허가나 면허를 마치 제 308조에 의하여 신청하는 것처럼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리를 함에 있어서, 연방통신위원회는 제안된 건설 허가나 면허를 이전받을 자나 양수인 이외의 자에게 그 건설 허가나 면허를 이전, 양도, 또는 처분함으로써 이익, 편의, 필요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고려할 수 없다.

- (e) (1) 1977. 3. 9. 채택된 제1차 보고서 및 명령(docket No.20548; 42 Fed. Reg. 16145)에 의하여 부여된 기존 시설에 대한 예외규정의 사유로 지역 집중 규칙(regional concentration rules)으로부터 면제되는 방송국과 그에 대한 소유권의 경우에, 그러한 면제는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무선국의 기술 시설에 대한 변경의 이유만으로 종료될 수 없다.
- (2) 이 항의 목적을 위하여, “지역 집중 규칙”은 누구든지 하나 또는 수개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어느 2개의 방송국이 3번째 방송국과(도시와 도시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100마일 이내에 있고 또한 그 방송국들중의 일부와 주된 서비스 지역 중첩이 있는 경우 3개의 방송국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운영, 또는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1983. 6. 1. 발효한) 연방 규칙집 Title 47의 제73.35조, 제73.240조, 및 제73.636조 규정들을 의미한다.

#### 제311조 [47 U.S.C. 311] 방송 서비스 신청에 대한 특별 요건

- (a) 방송 서비스 무선국 승인서를 위하여 제309조(b)항(1)호가 적용되는 신청이 연방통신위원회에 제출되었을 때, 신청인은
  - (1) 그 방송국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거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인 주요 지역에 그러한 신청의 공지를 하여야 하며, 또한
  - (2) 만일 제309조에 따라 그 신청에 대하여 정식으로 청문회가 지정되면, 적어도 청문회 개시 10일전에 그 지역에 청문회를 공지하여야 한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이 항에 따라 주어지는 공지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그러한 공지가 주어지

는 방식과 빈도를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 (b) (a)항에 언급된 청문회는 연방통신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러한 장소에서 개최될 수 있으며, 그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언제나 연방통신위원회는 청문회를 당해 방송국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지역내 또는 인근의 장소에서 개최함으로써 공익, 편의, 필요성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c) (1) 방송국 건설 허가에 둘 이상의 신청이 연방통신위원회에 계류중이고 그 중 하나에게만 허가가 부여될 수 있는 경우에, 연방통신위원회의 승인 없이 신청자들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자중 일부가 자신의 신청을 철회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이다.
- (2) 그러한 경우 연방통신위원회의 승인 요청은 그러한 계약의 모든 당사자들이 연대하여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요청에는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이 요구하는 구체성, 형식, 방법으로 계약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 (3) 연방통신위원회는 (A) 계약이 공익, 편의, 필요성에 부합하고, (B) 계약 당사자 누구도 그러한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할 목적으로 그러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그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 (4) 이 항의 목적을 위하여, 그러한 신청이 연방통신위원회에 제출된 때로부터 신청에 대한 연방통신위원회의 허용이나 기각하는 명령이 더 이상 연방통신위원회의 재청문회나 법원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게 될 때 까지 신청이 연방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간주된다.
- (d) (1) 방송국의 운영 면허 갱신 신청과 그러한 방송국에 관한 하나 이상의 건설 허가 신청이 연방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오직 하나의 신청에만 면허가 부여될 수 있는 경우에, 연방통신위원회의 승인 없이 신청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나머지 신청자로부터 금전 지급, 자산 기타 가치 있는 것의 이전을 대가로 자신의 신청을 철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이다.

- (2) 그러한 경우 연방통신위원회의 승인 요청은 그러한 계약의 모든 당사자들이 연대하여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요청에는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이 요구하는 구체성, 형식, 방법으로 계약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 (3) 연방통신위원회는 (A) 계약이 공익, 편의, 필요성에 부합하고, (B) 계약 당사자 누구도 그러한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할 목적으로 그러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그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 (4) 이 항의 목적을 위하여, 그러한 신청이 연방통신위원회에 제출된 때로부터 신청에 대한 연방통신위원회의 허용이나 기각하는 명령이 더 이상 연방통신위원회의 재청문회나 법원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게 될 때까지 신청이 연방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간주된다.

#### 제312조 [47 U.S.C. 312] 행정 제재

- (a)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연방통신위원회는 방송국 면허나 건설 허가를 취소(revoke)할 수 있다.
  - (1) 신청이나 제308조에 따라 요구되는 사실의 진술에서 그 정을 알고 거짓된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 (2) 연방통신위원회가 원 신청에 대하여 알았다면 면허나 허가신청을 거부하였을 상황을 연방통신위원회가 알게 된 경우,
  - (3) 고의로 또는 반복하여 상당한 정도로 면허에 규정된 대로 운영하지 않을 때,
  - (4) 고의로 또는 반복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이나 명령, 또는 미국이 비준한 조약 규정을 위반 또는 준수하지 않은 경우,
  - (5) 이 조에 의하여 연방통신위원회가 발급한 최종의 금지 명령을 위반 또는 준수하지 못한 경우,
  - (6) 미국 연방 법전 Title 18의 제1304조, 제1343조, 제1464조를 위반한 경우, 또는

- (7) 고의로 또는 반복하여 법적으로 자격 있는 선거 입후보자가 자신의 입후보를 위하여 합리적인 방송국 사용시간을 구매하거나 합리적인 접근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 (b) 누구든지 (1) 면허에 규정된 바대로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거나, (2) 이 법 규정 또는 미국 연방 법전 Title 18의 제1304조, 제1343조, 제1464조를 위반 또는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3) 이 법이나 미국이 비준한 조약에 의해 허용된 연방통신위원회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 또는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연방통신위원회는 그러한 자에게 그러한 행위의 금지(cease and desist)를 명할 수 있다.
- (c) (a)항에 따라 면허 또는 건설 허가를 취소하기 전이나 또는 (b)항에 따라 금지 명령을 발하기 전에, 연방통신위원회는 면허 소유자, 건설허가 소지자 또는 관련자에게 취소나 금지 명령이 발급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적시된 명령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한 명령은 연방통신위원회가 의문시하고 있는 사안의 설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명령에 기재된 장소와 시간에 그 면허 소유자, 건설 허가 소지자, 또는 관련자가 연방통신위원회에 출두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증거제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두 요청 및 증거 제출 요구 기간은 명령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상의 기간이어야 한다. 다만 생명의 안전이나 재산이 관련된 경우, 연방통신위원회는 명령에 보다 단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청문회나 청문회 기회를 포기한 후 연방통신위원회가 취소나 금지 명령이 발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방통신위원회는 그러한 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이에 연방통신위원회의 판단사항과 그에 대한 이유를 포함하고 명령의 발효일을 구체화하여야 하며, 명령이 면허 소유자, 건설허가 소지자, 또는 관련자에게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d) 청문회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 증거 제출의 절차적 책임 및 입증 책임은 모두 연방통신위원회에 있다,
- (e) 면허나 건설 허가의 취소 절차의 도입에 관하여 적용되는 행정절차법 9조(b)항

[5 U.S.C. 제558조(c)항(1)호 및 (2)호] 규정은 이 조에 의한 금지 명령의 발급 절차에 대해서도 또한 적용된다.

(f)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 (1) 어떤 작위나 부작위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을 때 “고의(willful)”는 이 법 규정이나, 이 법에 의하여 승인된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이나 명령, 또는 미국이 비준한 조약의 위반 의도에 상관없이,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작위(commission)나 부작위(omission)를 의미한다.
- (2) 어떤 작위나 부작위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을 때 “반복적으로”는 일회 이상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그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1일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한다.

(g) 방송국이 계속하여 12개월 동안 방송 신호를 전송하지 못한다면, 그 방송국의 운영에 부여된 방송국 면허는 그 면허에 반대되는 조건 또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12개월의 경과하면 종료된다.

#### 제326조 [47 U.S.C. 326] 검열, 저속한 언어

이 법의 어느 부분도 무선국을 통하여 전송된 무선 통신이나 신호에 대하여 연방통신위원회에게 검열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연방통신위원회는 무선 통신에 의한 언론의 자유 권리를 간섭하는 규칙이나 조건을 공표하거나 설정할 수 없다.

#### 제399조 [47 U.S.C. 399] 선출직 공직 후보자의 지원 금지

비영리 교육 방송국은 선출직 공직 후보자를 지원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

#### 제399A조 [47 U.S.C. 399a] 사업 또는 기관 로고의 사용

(a)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 또는 기관 로고”는 회사, 기타 조직의 동일성을 독점적으로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그러한 회사나 조직의 상품, 서비스, 또는 편의를 판매 촉진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시각 또는 청각적 글자, 단어, 상징, 또는 사인을 의미한다.

- (b) 각 공공 텔레비전 방송국과 라디오 방송국은 사업 또는 기관 로고의 사용을 포함하거나 당해 회사나 조직의 위치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안내를 방송하도록 승인된다. 단, 그러한 안내방송이 정규 프로그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c) 이 조의 규정은 로고가 그 회사나 조직의 동일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식에 관하여 연방통신위원회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399B조 [47 U.S.C. 399b] 공공 방송국의 서비스, 시설, 제품의 공급**

- (a)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는 보상을 대가로 방송 또는 전송되며 다음을 의도하는 메시지 기타 프로그램 자료를 의미한다.
  - (1)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 시설, 제품의 제공에 종사하는 자가 제의하는 그러한 서비스, 시설,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 (2) 공적으로 중요하거나 이해가 있는 사안에 관하여 어느 자의 견해를 표현하거나, 또는
  - (3) 선출직 공직의 후보자를 지원 또는 반대.
- (b) (1) (2)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공공 방송국은 보상을 대가로 서비스, 시설, 제품의 제공을 영위하도록 승인된다.
  - (2) 어떠한 공공 방송국도 광고의 방송을 위하여 누구에게든지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없다.
- (c) (b) (1)에 특정된 제공에 종사하는 공공 방송국은 제396조(k)항에 의하여 공공 방송 회사가 배분한 기금을 그러한 제공에 관련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공공 방송 회사의 그러한 제공은 그러한 방송국에 의한 공공 통신 서비스의 제공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 (d) (b) (1)에 특정된 활동에 종사하는 각 공공 방송국은 공공 방송회사와 협의를 거쳐 이 조에 의한 활동에 대한 비용이나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수령한 금액을 확인하고, 그러한 금액을 다른 출처로부터 방송국이 수령한 금액과 분리하

여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고안되는 회계 시스템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02조 [47 U.S.C. 402] 연방통신위원회의 금지, 제한, 취소, 정지 명령의 절차**

- (a) 이 법에 의한 연방통신위원회의 명령을 금지, 제한, 취소, 또는 정지하는 절차는(이 조(b)항에 의해서 상소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미국 연방 법전 Title 28의 Chapter 158에 따라 그에 기술된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b) 연방통신위원회의 명령과 결정에 대한 항소는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에, 다음과 같은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1) 무선국 면허나 건설 허가 신청이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해 기각된 신청자,
  - (2) 어떠한 면허장의 갱신 또는 변경의 신청이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해 기각된 신청자,
  - (3) 어떠한 면허장 또는 그 면허장에 의한 권리의 이전, 양도, 처분의 승인이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해 기각된 신청자,
  - (4) 이 법 제325조에 의해 요구되는 건설 허가 신청이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해 기각된 신청자나 위 조에 의한 건설 허가가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해 취소된 허가신청자,
  - (5)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해 변경 또는 취소된 무선국 면허 또는 건설 허가의 소지자,
  - (6) 위 (1), (2), (3), (4), 그리고 (9)호에 기술된 신청을 부여하거나 기각하는 연방통신위원회 명령에 의해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나쁜 영향을 받는 기타 자,
  - (7) 이 법 제312조에 의하여 금지명령이 내려진 자,
  - (8)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해 면허가 정지된 무선기사,
  - (9) 이 법 제271조에 의한 LATA간 서비스 제공 권한 신청이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하여 기각된 신청자,
- (c) 그러한 항소는 당해 결정이나 명령의 공지가 발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 원에 항소의 통지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한 항소의 통지는 항소가 이루어지는 절차의 성격에 대한 간략한 진술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항소인이 근거하고 있는 주장들을 각각의 번호로 분리하여 간략하게 담고 있어야 하며, 항소의 통지와 위 진술의 정본이 연방통신위원회에 송달증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지의 제출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절차 및 쟁점의 결정 권한을 가지고 연방통신위원회 또는 항소의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가처분 조치(temporary relief)를 명령으로 부여할 권한을 가진다. 가처분 조치를 부여하는 명령은 그 범위 및 신청에 있어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일 수 있으며, 항소가 이루어지는 사안에 대하여 현상유지를 허락하거나 또는 항소의 대상인 명령에 의하여 중단되거나 악영향을 받는 상태나 지위를 회복하게 할 수 있으며, 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청문회 및 항소심 결정 그리고 그 항소에서의 법원의 최종결정에 연방통신위원회의 준수까지 유효하다.
- (d) 위의 항소의 통지를 제출할 때, 항소인은 그러한 통지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연방통신위원회의 기록에 의해 항소의 이해당사자로 되어 있는 자들에게 항소 통지의 제출과 계류를 통지하여야 한다. 연방통신위원회는 미국 연방 법전 Title 28의 제2112조에 규정된 대로 항소의 대상인 명령이 발하여진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e) 그러한 항소 제출 후 30일 이내에 이해당사자는 소송 참가의 의사와 이해관계의 성격을 증명하는 확인된 진술을 항소인과 연방통신위원회 양자 모두에 송달하였다는 증명과 함께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항소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당해 연방통신위원회 명령의 취소나 변경으로 손해를 입거나 그 이해에 나쁜 영향을 받을 자는 이해당사자로 간주 되어야 한다.
- (f) 법원에 의한 그러한 항소의 심리 및 결정 절차에 대한 기록과 자료는 법원이 규칙으로 정하는 정보와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그러한 방식과 시간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g) 법원은 Title 5의 제706조에 의해 규정되는 방식으로 기록에 근거하여 항소에

대하여 심리하고 결정을 하여야 한다.

- (h) 법원이 연방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취소하는 결정과 명령을 내리는 경우 법원은 그 결정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방통신위원회에게 사건을 환송하여야 하며, 그러한 결정의 상소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경우 연방통신위원회는 즉각 법원의 명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아니하는 한, 위 항소 절차와 기록에 근거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i) 법원은 항소에 관련된 사안의 성질과 그 결과에 따라 그 재량으로 항소인 또는 기타 소송참가인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비용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연방통신위원회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 (j) 위 법원의 결정은 항소인, 연방통신위원회, 기타 소송참가인, 또는 미국 연방 법전 Title 28의 제1254조에 의한 법원의 확인에 의하여 동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고 신청에 따라 연방대법원이 이송명령 영장(writ of certiorari)을 허용하여 재심사하지 않는 한 최종적이다.

#### **제403조 [47 U.S.C. 403] 연방통신위원회의 자발적인 조사**

연방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연방통신위원회에 이의제기가 허용되거나, 또는 이 법 규정에 의하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거나, 또는 이법 규정의 집행에 관한 어떠한 사건이나 사안에 대하여서도 언제든지 스스로 조사를 할 권한을 가진다. 연방통신위원회는 금전의 지급명령을 제외하고는 조사가 이루어지는 사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집행할 권한을 포함하여, 이 법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것과 마찬가지로의 권한을 가지고 자발적인 조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제405조 [47 U.S.C. 405] 재고**

- (a) 연방통신위원회 또는 제5조(c)항(1)호에 의한 위임에 따라 연 방통신위원회내에 지정된 담당기관에 의한 어느 절차에서 명령, 결정, 보고, 또는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관련 당사자 또는 그러한 조치에 의 해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부정적 영향을 받는 자는 그러한 조치 등을 취한 기관에만 재고(reconsideration)

를 요청할 수 있다. 재고의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연방통신위원회이든 제5조 (c)항(1)호에 의하여 지정된 기타 담당기관이든 그 재량으로 재고를 허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재고의 신청은 당해 명령, 결정, 보고, 또는 조치의 통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어떠한 신청도 연방통신위원회의 특별한 명령 없이는 누구든지 연방통신위원회의 명령, 결정, 보고, 또는 조치의 준수를 면제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 집행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작용되지 아니한다. 재고 신청의 제출은 그러한 재심을 청구하는 자가 (1) 그러한 명령, 결정, 보고, 또는 조치를 초래한 절차의 당사자가 아니거나, 또는 (2) 연방통신위원회 또는 연방통신위원회내 지정된 담당기관 이 의결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사실 문제나 법적 문제에 근거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명령, 결정, 보고, 또는 조치의 사법심사의 전제 조건 이 되지 아니한다. 연방통신위원회나 연방통신위원회내의 지정된 담당기관은 재고 신청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 또는 기각하거나 적절하다면 추가적인 절차를 명하는 명령을 그 간략한 사유와 함께 내려야 한다. 단, 그러한 신청이 청문회 없이 부여된 승인장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연방통신위원회 또는 연방통신위원회내의 지정된 담당기관은 그러한 신청의 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재고는 연방통신위원회가 설정하는 그러한 일반적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단, 새로이 발견된 증거, 원래의 증거채택 이후에 이용가능하게 된 증거, 연방통신위원회 또는 연방통신위원회내의 지정된 담당기관이 원래의 절차에서 채택되었어야 했다고 믿는 증거를 제외한 어떠한 증거도 재고에서 채택될 수 없다. 재고 신청이 제402조(a)항이 적용되는 절차에서 제출되어야 하는 시한 또는 제402조(b)항에 의하여 제소가 이뤄져야 하는 시한은 연방통신위원회가 당해 명령, 결정, 보고, 또는 조치를 공지한 날로부터 기산된다.

- (b) (1) 제204조(a)항에 의한 청문회를 종결하거나 제208조(b)항에 의한 조사를 종료하는 명령의 재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연방통신위원회는 그러한 신청을 인정 또는 기각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 (2) (1)에 의하여 내려진 명령은 최종 명령이 되고 제402조(a)항에 의하여 항소될 수 있다.

**제415조 [47 U.S.C. 415] 소송의 제한**

- (a) 사업자의 적법한 요금 징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모든 소송은 청구원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2년 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그 후에는 제기할 수 없다.
- (b) 사업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과다 요금(overcharges)에 근거하지 아니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이 조(d)항에 근거하여 그 청구원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그 후에는 제기할 수 없다.
- (c) 과다 요금의 회수를 위한 소송은 이 조(d)항에 근거하여 청구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사업자에 대하여 제기되어야 한다. 단, 과다 요금의 반환청구가 위 2년 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었다면 위 2년은 그 사업자가 동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불허를 청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
- (d) (b)항 또는 (c)항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될 때까지 사업자가 동 서비스에 관하여 합법적인 요금의 회수를 위하여 (a)항에 의하여 제소를 하거나 제소하지 않고 그 서비스 요금을 징수하였다면, 그 시효기간은 그러한 소송이 제기되거나 그러한 요금이 사업자에 의하여 징수된 때로부터 90일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연장된다.
- (e)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메시지 전송에 관한 청구원인은 사업자에 의한 메시지 전송이나 전송을 제공한 때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 (f) 연방통신위원회의 금전지급 명령의 집행에 대한 신청은 그러한 명령일로부터 1년 내에 연방 지방법원이나 주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 (g) 이 조에서 사용되는 “과다요금”은 연방통신위원회에 적법하게 제출된 요금표의 요금을 초과한 서비스 요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TITLE V - 벌칙규정 - 몰수

**제501조 [47 U.S.C. 501] 일반적 벌칙**

이 법에서 금지되거나 불법인 것으로 선언된 어떠한 행위, 사안, 일을 고의(willfully) 또는 그 정을 알고(knowingly) 하거나 일어나도록 하거나, 또는 고의 또는 그 정을 알고 이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행위, 사안, 일을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하거나 이를 발생케 하는 자는 유죄판결시(upon conviction) 그에 대하여 이 법에 별도의(몰수 이외의) 벌칙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10,000달러 이하의 벌금(fine) 또는 1년 이하의 징역(imprisonment) 또는 그 병과의 처벌을 받는다. 단, 이 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위반의 유죄판결을 한번 받은 자가 이 조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는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위반하여 추후에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10,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병과로 처벌된다.

**제502조 [47 U.S.C. 502] 규칙, 명령 등의 위반**

이 법, 미국이 당사자인 국제 유무선 통신 조약이나 협정이나 그 부속규칙에 의해 제정되거나 부과되는 명령, 규칙, 제한이나 조건을 고의 또는 그 정을 알고 위반하는 자는 유죄판결 시 법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벌칙에 추가하여 그러한 위반이 발생하는 동안 일당 500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제503조 [47 U.S.C. 503] 리베이트 및 상계 시 몰수**

(a) 어느 사업자에게 주간 또는 국제 전송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송신자 또는 수신자로서 그러한 사업자로부터 주간 또는 국제 유무선 통신을 전송받으면서, 임직원, 대리인, 기타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통하거나 기타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서든지,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이 법에 규정된 요금표에 의하여 고정된 메시지 전송의 정규 요금에서 리베이트, 상계로서 금원, 또는 기타 가치 있는 것을 그 정을 알고 수령하거나 수령을 승낙한 자는, 이 법에 규정된 다른 벌칙에 추가하여 법원의 확인에 따라 그러한 수령액 또는 수령 가치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연방정부에 추징당한다. 그러한 소송에서 당해 소송의 개시 전 6년간의 기간동안 영수된 모든 리베이트 또는 기타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될 수 있고, 추징되는 금액은 그렇게 영수된 총금액 또는 기타 가치 있는 것의 총계의 3배가 되며, 경우에 따라 양자 모두이다.

(b) (1) 이 항의 (3), (4)호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하여 다음을 하였다고 결정되는 자는 연방에 과징금(forfeiture)을 몰수당한다.

(A)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하여 발급된 면허, 건설 허가, 증명서, 기타 승인의 조건을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상당히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B) 이 법 또는 미국이 당사자로서 미국을 구속하는 조약, 협정 기타 약정에 의해서 연방통신위원회가 발하는 규칙, 명령을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상당부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C) 이 법 제317조(c)항, 제508조(a)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D) 미국 연방 법전 Title 18의 제1304조, 제1343조, 제146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 항에 의한 과징금은 이 법에 의하여 규정된 다른 벌칙에 추가되는 것이다. 단, 이 항은 이 법 Title II, Title III의 Part II, Part III 및 제506조의 과징금 적용을 받는 어떠한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A) 위반자가 (i) 방송국 면허 소유자 또는 건설 허가 소지자이거나 (ii) 케이블 텔레비전 운영자이거나, 또는 (iii) 연방통신위원회가 발급하는 방송국, 케이블 텔레비전 운영면허, 건설 허가, 증명, 기타 승인의 신청자인 경우, 이 조에 의하여 결정되는 과징금은 각 위반 또는 위반이 계속되는 동안 일당 25,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이 항(1)호에 기술된 하나의 행위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계속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합계 250,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B) 위반자가 이 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간통신 사업자이거나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해 발급되는 기간통신 사업자 면허, 허가, 증명 기타 승인에 대한

신청자인 경우, 이 항에 의하여 결정된 과징금은 각 위반 또는 위반이 계속되는 동안 일당 100,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이 항(1)호에 기술된 하나의 행위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계속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합계 1,000,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C) (A) 또는 (B)에서 커버되지 않은 경우에 이 항에 의하여 결정되는 과징금은 각 위반 또는 위반이 계속되는 동안 일당 10,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이 항(1)호에 기술된 하나의 행위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계속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합계 75,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

(D) 그러한 과징금액은 연방통신위원회 또는 그 지정인이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에 의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그러한 과징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연방통신위원회 또는 그 지정인은 위반의 본질, 상황, 정도,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위반자에 대하여 비난가능성, 과거의 위반사례, 지불 능력, 그리고 기타 정의가 요구하는 다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 (A) 미국 연방 법전 Title 5의 제554조에 따른 통지와 연방통신위원회 또는 행정 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에 의한 청문의 기회를 가진 후 연방통신위원회의 재량으로 이 항에 의한 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호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는 자는 제402조(a)항에 따라 그에 대한 재심사(review)를 받을 수 있다.

(B) 어느 자가 이 호의 (A)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하여 그 지급명령이 더 이상 재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되거나 관할권 있는 법원이 연방통신위원회에 승소판결을 내린 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연방통신위원회는 그 문제를 연방 법무부장관에게 회부하여야 하며, 이거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관할권 있는 연방법원에서 부과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그러한 소송에서 과징금 부과와 유효성(validity)과 적절성(appropriateness)은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이 항(3)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과징금도 아래의 조건이 충

족되기 전에는 이 항에 의하여 누구에게도 부과될 수 없다.

- (A) 연방통신위원회가 그러한 자에게 서면으로 과징금 부과 통지를 하고,
- (B) 등기 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그러한 자가 위 통지를 수령하거나 또는 연방통신위원회가 그러한 자의 최후로 알려진 주소로 통지를 보내고, 그리고
- (C) 그러한 자가 연방통신위원회가 규칙이나 명령으로 정하는 합리적 기간 내에 서면으로 그러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그러한 통지는 ( i ) 그러한 자가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되는 법, 령, 규칙, 명령, 조약, 협정, 기타 약정, 면허, 허가, 증명, 문서 기타 승인의 개별 해당 조항 및 조건을 적시하고, ( ii ) 그러한 자에 대하여 비난되고 있는 행위나 부작위의 성격과 그러한 비난이 근거로 하는 사실을 기술하여야 하며, 그리고 ( iii ) 그러한 행위가 발생한 날을 기술하여야 한다. 이 호에 의하여 결정된 과징금은 이 법 제504조(a)항에 따라 징수되어야 한다.

- (5) 이 항(3)호에 의해 요구되는 통지 전 또는 이 항(4)호에 의해 요구되는 명백한 책임의 통지 전에 (A) 해당자에게 위반되었다고 비난되고 있는 조항을 적시한 소환장(citation)을 발부하고, (B) 그러한 자의 거주지에 가장 가까운 연방통신위원회의 지방사무소에서 연방통신위원회 직원과 개별적 면담을 할 합리적 기회를 부여하여, (C) 그 후에도 그 자가 위 소환장에 기술된 유형의 행위를 한 경우에만,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해 발급되는 면허, 허가, 증명, 기타 승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또는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해 발급되는 면허, 허가, 증명, 기타 승인에 대한 신청자에 대하여 과징금이 이 항에 의하여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 호의 규정은 면허, 허가, 증명 기타 승인이 요구되는 활동에 그 자가 종사하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개별 무선국 운영이 제307조(e)항에 따른 규칙에 의해 승인된 서비스의 사용에 할당된 주파수를 전송하는데 종사하는 케이블 텔레비전 시스템 운영자인 경우, 그리고 해당자가 연방통신위원회나 탑을 사용하는 면허 소유자나 허가 소지자로부터

터 제303조(q)항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의 통지를 이전에 받은 자로서 무면허 탐 소유자인 경우에는 제303조(q)항의 위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호의 요건이 해당자에 대하여 충족될 경우마다, 그러한 자는 이 호에 의하여 송부되는 소환장에 기술된 유형의 행위에 대하여 추가적인 소환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6) 다음과 같은 경우 이 항에 의하여 누구에게든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없다.

(A) 그러한 자가 이 법 Title III에 의하여 발급된 방송국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장되는 위반이 다음과 같이 발생한 경우: ( i ) 요구되는 통지 또는 명백한 책임의 통지의 발급일로부터 1년 전에 발생하였거나, 또는 ( ii ) 그러한 면허의 현재 임기의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것 중에 먼저 인 것.

(B) 그러한 자가 이 법 Title III에 의하여 발급된 방송국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장되는 위반이 요구되는 통지 또는 명백한 책임의 통지의 발급일로부터 1년 전에 발생한 경우.

이 호의 목적상 “그러한 허가의 현재 임기의 개시일”은 면허소지자가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최후의 임기의 개시일을 의미한다. 면허의 갱신 신청이 계류 중이어서 제307조(c)항에 의한 유효한 면허가 계속되는 결과로서 별도의 면허 임기가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제504조 [47 U.S.C. 504] 과징금 관련 규정**

(a) 이 법에 규정된 과징금은 연방의 국고에 산입되며, 이 법 제503조(b)항(3)호에 의하여 결정되는 과징금에 대하여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자 또는 사업자가 주사무소를 두거나 그 사업자의 회선이나 시스템이 통과하는 연방의 지방 관할에서 연방의 이름으로 민사소송(civil suit)에 의하여 징수될 수 있다. 단, 이 법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소송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재판이어야 한다. 또한 선박몰수의 경우에는 그 선박이 도착 또는 출항하는 지역의 관할에서 해사사건(libel)으로 징수될 수 있다. 그러한 과징금

은 여타 일반 또는 특별 벌칙에 추가적인 것이다. 이 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연방 법무부 장관의 지휘하에 기소하는 것은 각급의 지방 검사의 의무이다. 그러한 기소의 비용은 연방법원의 배정예산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 (b) 이 법 Title II, Title III의 Part II, Part III, 제503조(b)항에 적용을 받아 부과된 과징금은 타당한 사실 확인 방법과 관련 규칙에 의해서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하여 면제나 경감될 수 있으며, 이미 소송이 제기된 경우 연방통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그러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소의 중지를 지시해야 한다. 단, 관할권 있는 법원이 결정한 후에는 과징금의 면제 또는 경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c) 연방통신위원회가 이 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명백한 책임 통지를 발령하였을 경우, 그러한 사실은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절차에서 그러한 통지가 발급된 자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 단, (i) 과징금이 이미 납부되었거나 또는 (ii) 관할권 있는 법원이 과징금의 납부를 명하였고 그러한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05조 [47 U.S.C. 505] 위반행위의 관할**

이 법에 의한 위반에 대한 재판은 위반행위가 행해진 관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그 위반이 공해나 특정 주 또는 관할의 외부에서 행하여진 경우 위반자가 발견되거나 위반자가 최초로 발견된 관할에서 재판을 한다. 위반이 하나의 관할에서 시작되어 다른 관할에서 종료된 경우 마치 그 위반의 전부가 어느 관할에서든지 실제로 이루어진 것과 같은 방식으로 어느 관할에서든지 조사, 재판, 및 판결될 수 있다.

#### **제506조 [47 U.S.C. 506] 오대호 협정의 위반**

- (a) 오대호 협정의 규정 또는 그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가 정한 규칙과 명령을 위반하여 항해하는 미국 선박 또는 미국의 관할권에 있는 영해를 그렇게 항해하는 외국 선박은 연방에 소송 또는 해사사건의 방식으로 500달러의 과징금 처

분을 받는다. 그러한 항해가 계속되는 동안 매일 별도의 위반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b) 미국 선박의 선장이 오대호 협정의 규정 또는 그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가 정한 규칙과 명령을 고의로 준수 또는 이행하지 못한 경우 개인적으로 100달러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 제507조 [47 U.S.C. 507] 특정 보수의 공개

- (a) (d)항의 제약을 받으며, 방송국의 직원이 누구로부터(당해 방송 별칙규정 제외) 그 방송국을 통한 어떠한 사안의 방송을 위하여 금원, 서비스, 기타 가치 있는 것을 지급받거나 이를 약속받았거나 또는 누구든지(당해 방송국을 제외) 그러한 직원에게 그러한 지급을 하였거나 그것을 약속한 자는 방송 전에 방송국에 그러한 수령 또는 약속의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 (b) (d)항의 제약을 받으며, 라디오 방송국을 통하여 방송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의 제작 또는 준비와 관련하여, 그러한 프로그램의 일부로 그러한 사안을 포함시키는 대가로 금원, 서비스, 기타 가치 있는 것을 수령, 지급 또는 그 약속을 한 자는 방송 전에 그러한 사실을 지급자의 고용자 또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그를 위해 제작되는 자 또는 그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방송국 면허 소유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c) (d)항의 제약을 받으며, 라디오 방송국을 통하여 방송을 위해 프로그램을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자는 누구든지 방송 전에 그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다음 사안의 포함을 위하여 어느 자가 금원, 서비스, 기타 가치를 지급, 수령, 또는 약속한 것으로 그가 알고 있는 정보 또는 그에게 공개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 (d)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이 조 규정은 제317조(d)항에 의해서 연방통신위원회의 면제를 이유로 사전고지(announcement)가 제317조에 의해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e) 제317조에 의해서 요구되는 사전고지의 프로그램 삽입은 이 조에서 요구되는

공개로 간주된다.

- (f) 이 조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기타 가치”는 방송국을 통한 방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프로그램 및 그 방송과 관련하여 무료 또는 명목상의 요금으로(nominal charge)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재산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그러한 서비스 또는 재산이 그러한 방송 또는 프로그램에서 서비스 또는 재산의 사용에 합리적으로 관련된 식별 표시를 넘어 어느자, 상품, 서비스, 상표, 브랜드의 식별을 방송 또는 프로그램에 포함시 키는 대가로 제공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g)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각 위반에 대하여 10,000달러 이하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병과에 처해진다.

**제508조 [47 U.S.C. 508] 지식, 기술, 기회의 경쟁 시 금지되는 행위**

- (a) 청취자 또는 시청자를 기망할 의도로 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 (1) 지적 지식이나 기술의 경쟁에 선의로 참여하였다고 알려진 경쟁자에게 특별하고 비밀스런 지원을 제공하고 그러한 경쟁의 결과가 일부 또는 전부 사전 예정 또는 결정되도록 하는 것,
  - (2) 지적 지식이나 기술의 경쟁에 선의로 참여하였다고 알려진 경쟁자를 설득, 뇌물, 협박 등을 하여 그러한 경쟁에서 자신의 지식이나 기술을 보이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도, 강제하여 그 경쟁의 결과가 일부 또는 전부 사전 예정 또는 결정되도록 하는 것,
  - (3) 지적 지식이나 기술, 기회에 선의라고 알려진 경쟁의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 예정 또는 결정할 목적으로 술책 또는 기획을 하는 것,
  - (4) 프로그램의 일부를 구성하는 지적 지식이나 기술, 기회에 선의라고 알려진 경쟁과 관련하여 이 항(1), (2), (3)호에 언급된 행위나 일을 하였거나 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그러한 것을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서 그러한 프로그램의 제작, 방송에 참여하거나 방송국 면허 소유자 또는 후원자

(sponsor)에게 이를 제의하는 것,

(5) 하나 이상의 자가 음모의 목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어떤행위를 하는 경우, 이 항(1)호 내지 (4)호에 의해 금지된 행위나 일을 하는 자와 음모하는 것.

(b)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1) “경쟁(contest)”은 상으로 금전 또는 기타 유상의 가치가 후원자, 또는 기타의 자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방송에서 고지된 방송국에 의한 경쟁 방송을 의미한다.

(2) “청취자 또는 시청자”는 수신기를 통하여 방송국에 의한 프로그램을 청취 또는 시청하는 일반대중을 의미한다.

(c) (a)항을 위반하는 자는 10,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병과로 처벌된다.

<첨부 3>

## 미국 FCC 규정 제208조 공식제소 일반절차

### Filing A Formal Section 208 Complaint. General Procedures

#### 47 C.F.R. Section 1.720 ~ 1.736

##### Sec. 1.720 General pleading requirements.

Formal complaint proceedings are generally resolved on a written record consisting of a complaint, answer, and joint statement of stipulated facts, disputed facts and key legal issues, along with all associated affidavits, exhibits and other attachments. Commission proceedings may also require or permit other written submissions such as briefs, written interrogatories, and other supplementary documents or pleadings. Those formal complaint proceedings handled on the Enforcement Bureau's Accelerated Docket are subject to pleading and procedural rules that differ in some respects from the general rules for formal complaint proceedings.

- (a) Pleadings must be clear, concise, and explicit. All matters concerning a claim, defense or requested remedy, including damages, should be pleaded fully and with specificity.
- (b) Pleadings must contain facts which, if true, are sufficient to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Act or Commission order or regulation, or a defense to such alleged violation.
- (c) Facts must be supported by relevant documentation or affidavit.
- (d) Legal arguments must be supported by appropriate judicial, Commission, or statutory authority.

- (e) Opposing authorities must be distinguished.
- (f) Copies must be provided of all non-Commission authorities relied upon which are not routinely available in national reporting systems, such as unpublished decisions or slip opinions of courts or administrative agencies.
- (g) Parties are responsible for the continuing accuracy and completeness of all information and supporting authority furnished in a pending complaint proceeding. Information submitted, as well as relevant legal authorities, must be current and updated as necessary and in a timely manner at any time before a decision is rendered on the merits of the complaint.
- (h) Specific reference shall be made to any tariff provision relied on in support of a claim or defense. Copies of relevant tariffs or relevant portions of tariffs that are referred to or relied upon in a complaint, answer, or other pleading shall be appended to such complaint, answer, or other pleading.
- (i) All statements purporting to summarize or explain Commission orders or policies must cite, in standard legal form, the Commission ruling upon which such statements are based.
- (j) Pleadings shall identify the name, address, telephone number, and facsimile transmission number for either the filing party's attorney or, where a party is not represented by an attorney, the filing party.

[53 FR 11852, Apr. 11, 1988, as amended at 58 FR 25572, Apr. 27, 1993; 63 FR 1035, Jan. 7, 1998; 63 FR 41446, Aug. 4, 1998; 64 FR 60725, Nov. 8, 1999]

**Sec. 1.721 Format and content of complaints.**

- (a) Subject to paragraph (e) of this section governing supplemental complaints filed pursuant to Sec. 1.722, and paragraph (f) of this section governing Accelerated Docket proceedings, a formal complaint shall contain:

- (1) The name of each complainant and defendant;
- (2) The occupation,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of each complainant and, to the extent known, each defendant;
- (3) The name,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of complainant's attorney, if represented by counsel;
- (4) Citation to the section of the Communications Act and/or order and/or regulation of the Commission alleged to have been violated.
- (5) A complete statement of facts which, if proven true, would constitute such a violation. All material facts must be supported, pursuant to the requirements of Sec. 1.720(c) and paragraph (a)(11) of this section, by relevant affidavits and documentation, including copies of relevant written agreements, offers, counter-offers, denials, or other related correspondence. The statement of facts shall include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manner and time period in which a defendant has allegedly violated the Act, Commission order, or Commission rule in question, including a full identification or description of the communications, transmissions, services, or other carrier conduct complained of and the nature of any injury allegedly sustained by the complainant. Assertions based on information and belief are expressly prohibited unless made in good faith and accompanied by an affidavit explaining the basis for the plaintiff's belief and why the complainant could not reasonably ascertain the facts from the defendant or any other source;
- (6) Proposed findings of fact, conclusions of law, and legal analysis relevant to the claims and arguments set forth in the complaint;
- (7) The relief sought, including recovery of damages and the amount of damages claimed, if known;
- (8) Certification that the complainant has, in good faith, discussed or attempted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settlement with each defendant prior to the filing of the formal complaint. Such certification shall include a statement that, prior to the filing of the complaint, the complainant mailed a certified letter outlining the allegations that form the basis of the complaint it anticipated filing with the Commission to the defendant carrier or one of the defendant's registered agents for service of process that invited a response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nd a brief summary of all additional steps taken to resolve the dispute prior to the filing of the formal complaint. If no additional steps were taken, such certificate shall state the reason (s) why the complainant believed such steps would be fruitless;

- (9) Whether a separate action has been filed with the Commission, any court, or other government agency that is based on the same claim or same set of facts, in whole or in part, or whether the complaint seeks prospective relief identical to the relief proposed or at issue in a notice-and-comment proceeding that is concurrently before the Commission;
- (10) An information designation containing:
  - ( i ) The name, address, and position of each individual believed to have firsthand knowledge of the facts alleged with particularity in the complaint, along with a description of the facts within any such individual's knowledge;
  - ( ii ) A description of all documents, data compilations and tangible things in the complainant's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that are relevant to the facts alleged with particularity in the complaint. Such description shall include for each document:
    - (A) The date it was prepared, mailed, transmitted, or otherwise disseminated;
    - (B) The author, preparer, or other source;
    - (C) The recipient (s) or intended recipient (s);

- (D) Its physical location; and
- (E) A description of its relevance to the matters contained in the complaint; and
- (iii) A complete description of the manner in which the complainant identified all persons with information and designated all documents, data compilations and tangible things as being relevant to the disput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dentifying the individual (s) that conducted the information search and the criteria used to identify such persons, documents, data compilations, tangible things, and information;
- (11) Copies of all affidavits, documents, data compilations and tangible things in the complainant's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upon which the complainant relies or intends to rely to support the facts alleged and legal arguments made in the complaint;
- (12) A completed Formal Complaint Intake Form;
- (13) A declaration, under penalty of perjury, by the complainant or complainant's counsel describing the amount, method, and date of the complainant's payment of the filing fee required under Sec. 1.1105(1) (c) or (d), and the complainant's 10-digit FCC Registration Number, if any;
- (14) A certificate of service; and
- (15) A FCC Registration Number is required under Part 1, Subpart W. Submission of a complaint without the FCC Registration Number as required by Part 1, subpart W will result in dismissal of the complaint.
- (b) The following format may be used in cases to which it is applicable, with such modifications as the circumstances may render necessary:

Before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Washington, DC 20554

In the matter of

---

Complainant,

v.

---

Defendant.

File No.(To be inserted by the Enforcement Bureau)

Complaint

To: The Commission.

The complainant(here insert full name of each complainant and, if a corporation, the corporate title of such complainant) shows that:

1. (Here state occupation, post office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of each complainant).
2. (Here insert the name, occupation and, to the extent known,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of defendants).
3. (Here insert fully and clearly the specific act or thing complained of, together with such facts as are necessary to give a full understanding of the matter, including relevant legal and documentary support).

Wherefore, complainant asks(here state specifically the relief desired).

---

(Date)

---

(Name of each complainant)

---

(Name,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of attorney, if any)

- (c) Where the complaint is filed pursuant to Sec. 47 U.S.C. Sec. 271(d)(6)(B), the complainant shall clearly indicate whether or not it is willing to waive the ninety-day resolution deadline contained within 47 U.S.C. 271(d)(6)(B),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Sec. 1.736.

(d) The complainant may petition the staff, pursuant to Sec. 1.3, for a waiver of any of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Such waiver may be granted for good cause shown.

(e) Supplemental complaints.

- (1) Supplemental complaints filed pursuant to Sec. 1.722 shall conform to the requirements set out in this section and Sec. 1.720, except that the requirements in Secs. 1.720(b), 1.721(a)(4), (a)(5), (a)(8), (9), (a)(12), and (a)(13) shall not apply to such supplemental complaints;
- (2) In addition, supplemental complaints filed pursuant to Sec. 1.722 shall contain a complete statement of facts which, if proven true, would support complainant's calculation of damages for each category of damages for which recovery is sought. All material facts must be supported, pursuant to the requirements of Sec. 1.720(c) and paragraph (a)(11) of this section, by relevant affidavits and other documentation. The statement of facts shall include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matters relied upon, including a full identification or description of the communications, transmissions, services, or other matters relevant to the calculation of damages and the nature of any injury allegedly sustained by the complainant. Assertions based on information and belief are expressly prohibited unless made in good faith and accompanied by an affidavit explaining the basis for the complainant's belief and why the complainant could not reasonably ascertain the facts from the defendant or any other source;
- (3) Supplemental complaints filed pursuant to Sec. 1.722 shall contain a certification that the complainant has, in good faith, discussed or attempted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settlement with respect to damages for which recovery is sought with each defendant prior to the filing of the supplemental complaint. Such

certification shall include a statement that, no later than 30 days after the release of the liability order, the complainant mailed a certified letter to the primary individual who represented the defendant carrier during the initial complaint proceeding outlining the allegations that form the basis of the supplemental complaint it anticipates filing with the Commission and inviting a response from the carrier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he certification shall also contain a brief summary of all additional steps taken to resolve the dispute prior to the filing of the supplemental complaint. If no additional steps were taken, such certification shall state the reason (s) why the complainant believed such steps would be fruitless.

- (f) Complaints on the Accelerated Docket.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e), the term document also shall include data compilations and tangible things.
- (1) Formal complaints that have been accepted onto the Accelerated Docket shall conform to the requirements set out in this section with the following listed exceptions:
  - ( i ) The requirement in Sec. 1.720(c) and paragraphs (a)(5) and (a)(11) of this section that factual assertions be supported by affidavit shall not apply to complaints on the Accelerated Docket. Nevertheless, allegations of material fact, whether based on personal knowledge or information and belief, that cannot be supported by documentation remain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ec. 1.52.
  - ( ii ) Complaints on the Accelerated Docket are not required to include proposed findings of fact, conclusions of law, and legal analysis relevant to the claims and arguments set forth in the complaint, as required in paragraph (a)(6) of this section. Nevertheless, complaints on the Accelerated Docket shall fully set out the facts and legal theories on which the complainant premises its

claims.

- (iii) In light of the requirement for staff-supervised settlement negotiations in Sec. 1.730(b), complaints on the Accelerated Docket are not required to include a certification that the complainant has discussed or attempted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settlement with each defendant, as required in paragraph(a)(8) of this section.
  - (iv) In light of the automatic document production required in Sec. 1.729(i)(1), complaints on the Accelerated Docket are not required to include a description of all relevant documents in the complainant's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as required in paragraph(a)(10) (ii) of this section.
  - (v) Complaints on the Accelerated Docket are not required to provide the description, required in paragraph(a)(10) (iii) of this section, of the manner in which the complainant identified persons with knowledge of, and documents relevant to, the dispute.
- (2) Formal complaints that have been accepted onto the Accelerated Docket will comply with the following requirements in addition to those requirements generally applicable in formal complaint proceedings:
- (i) As required in Sec. 1.729(i)(1), complaints on the Accelerated Docket shall be accompanied, when served on defendants, by copies of documents, within the complainant's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that are likely to bear significantly on the issues raised in the complaint. Unless otherwise directed, these documents shall not be filed with the Commission.
  - (ii) Complaints on the Accelerated Docket will bear the following notation in bold typeface above the normal caption on the first page: "Accelerated Docket Proceeding: Answer Due Within Ten Days of Service Date."

[53 FR 11853, Apr. 11, 1988, as amended at 63 FR 1035, Jan. 7, 1998; 63 FR

41446, Aug. 4, 1998; 64 FR 60725, Nov. 8, 1999; 66 FR 16616, Mar. 27, 2001; 66 FR 47895, Sept. 14, 2001]

**Sec. 1.722 Damages.**

- (a) If a complainant wishes to recover damages, the complaint must contain a clear and unequivocal request for damages.
- (b) If a complainant wishes a determination of damages to be made in the same proceeding as the determinations of liability and prospective relief, the complaint must contain the allegations and information required by paragraph(h) of this section.
- (c) Notwithstanding paragraph(b) of this section, in any proceeding to which no statutory deadline applies, if the Commission decides that a determination of damages would best be made in a proceeding that is separate from and subsequent to the proceeding in which the determinations of liability and prospective relief are made, the Commission may at any time order that the initial proceeding will determine only liability and prospective relief, and that a separate, subsequent proceeding initia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e) of this section will determine damages.
- (d) If a complainant wishes a determination of damages to be made in a proceeding that is separate from and subsequent to the proceeding in which the determinations of liability and prospective relief are made, the complainant must:
  - (1) Comply with paragraph(a) of this section, and
  - (2) State clearly and unequivocally that the complainant wishes a determination of damages to be made in a proceeding that is separate from and subsequent to the proceeding in which the determinations of liability and prospective relief will be made.

- (e) If a complainant proceeds pursuant to paragraph(d) of this section, or if the Commission invokes its authority under paragraph(c) of this section, the complainant may initiate a separate proceeding to obtain a determination of damages by filing a supplemental complaint that complies with Sec. 1.721(e) and paragraph(h) of this section within sixty days after public notice(as defined in Sec. 1.4(b) of this chapter) of a decision that contains a finding of liability on the merits of the original complaint.
- (f) If a complainant files a supplemental complaint for damage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e) of this section, the supplemental complaint shall be deemed, for statutory limitations purposes, to relate back to the date of the original complaint.
- (g) Where a complainant chooses to seek the recovery of damages upon a supplemental complaint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e) of this section, the Commission will resolve the separate, preceding liability complaint within any applicable complaint resolution deadlines contained in the Act.
- (h) In all cases in which recovery of damages is sought, it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complainant to include, within either the complaint or supplemental complaint for damages fil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e) of this section, either:
  - (1) A computation of each and every category of damages for which recovery is sought, along with an identification of all relevant documents and materials or such other evidence to be used by the complainant to determine the amount of such damages; or
  - (2) An explanation of:
    - ( i ) The information not in the possession of the complaining party that is necessary to develop a detailed computation of damages;
    - ( ii ) Why such information is unavailable to the complaining party;

- (iii) The factual basis the complainant has for believing that such evidence of damages exists;
  - (iv) A detailed outline of the methodology that would be used to create a computation of damages with such evidence.
- (i) Where a complainant files a supplemental complaint for damage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e) of this section, the following procedures may apply:
- (1) Issues concerning the amount, if any, of damages may be either designated by the Enforcement Bureau for hearing before, or, if the parties agree, submitted for mediation to, a Commission Administrative Law Judge. Such Administrative Law Judge shall be chosen in the following manner:
    - ( i ) By agreement of the parties and the Chief Administrative Law Judge; or
    - ( ii ) In the absence of such agreement, the Chief Administrative Law Judge shall designate the Administrative Law Judge.
  - (2) The Commission may, in its discretion, order the defendant either to post a bond for, or deposit into an interest bearing escrow account, a sum equal to the amount of damages which the Commission finds, upon preliminary investigation, is likely to be ordered after the issue of damages is fully litigated, or some lesser sum which may be appropriate, provided the Commission finds that the grant of this relief is favored on balance upon consideration of the following factors:
    - ( i ) The complainant's potential irreparable injury in the absence of such deposit;
    - ( ii ) The extent to which damages can be accurately calculated;
    - ( iii ) The balance of the hardships between the complainant and the defendant; and
    - ( iv ) Whether public interest considerations favor the posting of the bond or ordering of the deposit.
  - (3) The Commission may, in its discretion, suspend ongoing damages proceedings

for fourteen days, to provide the parties with a time within which to pursue settlement negotiations and/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 (4) The Commission may, in its discretion, end adjudication of damages with a determination of the sufficiency of a damages computation method or formula. No such method or formula shall contain a provision to offset any claim of the defendant against the complainant. The parties shall negotiate in good faith to reach an agreement on the exact amount of damages pursuant to the Commission-mandated method or formula. Within thirty days of the release date of the damages order, parties shall submit jointly to the Commission either:
  - ( i ) A statement detailing the parties' agreement as to the amount of damages;
  - ( ii ) A statement that the parties are continuing to negotiate in good faith and a request that the parties be given an extension of time to continue negotiations; or
  - ( iii ) A statement detailing the bases for the continuing dispute and the reasons why no agreement can be reached.
- (j) Except where otherwise indicated, the rules governing initial formal complaint proceedings govern supplemental formal complaint proceedings, as well.

[66 FR 16616, Mar. 27, 2001]

**Sec. 1.723 Joinder of complainants and causes of action.**

- (a) Two or more complainants may join in one complaint if their respective causes of action are against the same defendant and concern substantially the same facts and alleged violation of the Communications Act.
- (b) Two or more grounds of complaint involving the same principle, subject, or statement of facts may be included in one complaint, but should be separately stated and numbered.

[53 FR 11853, Apr. 11, 1988]

**Sec. 1.724 Answers.**

- (a) Subject to paragraph(k) of this section governing Accelerated Docket proceedings, any carrier upon which a copy of a formal complaint is served shall answer such complaint in the manner prescribed under this section within twenty days of service of the formal complaint by the complainant, unless otherwise directed by the Commission.
- (b) The answer shall advise the complainant and the Commission fully and completely of the nature of any defense, and shall respond specifically to all material allegations of the complaint. Every effort shall be made to narrow the issues in the answer. The defendant shall state concisely its defense to each claim asserted, admit or deny the averments on which the complainant relies, and state in detail the basis for admitting or denying such averment. General denials are prohibited. Denials based on information and belief are expressly prohibited unless made in good faith and accompanied by an affidavit explaining the basis for the defendant's belief and why the defendant could not reasonably ascertain the facts from the complainant or any other source. If the defendant is without knowledge or information sufficient to form a belief as to the truth of an averment, the defendant shall so state and this has the effect of a denial. When a defendant intends in good faith to deny only part of an averment, the defendant shall specify so much of it as is true and shall deny only the remainder. The defendant may deny the allegations of the complaint as specific denials of either designated averments or paragraphs.
- (c) The answer shall contain proposed findings of fact, conclusions of law, and legal analysis relevant to the claims and arguments set forth in the answer.
- (d) Averments in a complaint or supplemental complaint filed pursuant to Sec. 1.722 are deemed to be admitted when not denied in the answer.

- (e) Affirmative defenses to allegations contained in the complaint shall be specifically captioned as such and presented separately from any denials mad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c) of this section.
- (f) The answer shall include an information designation containing:
  - (1) The name, address, and position of each individual believed to have firsthand knowledge of the facts alleged with particularity in the answer, along with a description of the facts within any such individual's knowledge;
  - (2) A description of all documents, data compilations and tangible things in the defendant's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that are relevant to the facts alleged with particularity in the answer. Such description shall include for each document:
    - ( i ) The date it was prepared, mailed, transmitted, or otherwise disseminated;
    - ( ii ) The author, preparer, or other source;
    - ( iii ) The recipient (s) or intended recipient (s);
    - ( iv ) Its physical location; and
    - ( v ) A description of its relevance to the matters in dispute.
  - (3) A complete description of the manner in which the defendant identified all persons with information and designated all documents, data compilations and tangible things as being relevant to the disput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dentifying the individual(s) that conducted the information search and the criteria used to identify such persons, documents, data compilations, tangible things, and information;
- (g) The answer shall attach copies of all affidavits, documents, data compilations and tangible things in the defendant's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upon which the defendant relies or intends to rely to support the facts alleged and legal arguments made in the answer.

- (h) The answer shall contain certification that the defendant has, in good faith, discussed or attempted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settlement with the complainant prior to the filing of the formal complaint. Such certification shall include a brief summary of all steps taken to resolve the dispute prior to the filing of the formal complaint. If no such steps were taken, such certificate shall state the reason(s) why the defendant believed such steps would be fruitless;
- (i) Where the complaint is filed pursuant to 47 U.S.C. 271(d)(6)(B), the defendant shall clearly indicate its willingness to waive the 90-day resolution deadline contained within 47 U.S.C.271(d)(6)(B),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Sec. 1.736.
- (j) The defendant may petition the staff, pursuant to Sec. 1.3, for a waiver of any of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Such waiver may be granted for good cause shown.
- (k) Accelerated Docket Proceedings.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k), the term document also shall include data compilations and tangible things.
  - (1) Any party named as a defendant in an Accelerated Docket formal complaint shall answer such complaint in the manner prescribed under this section within ten days of service of the complaint by the complainant, unless otherwise directed by the Commission. Except as set forth in this paragraph (k), answers in Accelerated Docket proceedings shall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 (2) The requirement in Sec. 1.720(c) and paragraph (g) of this section that factual assertions be supported by affidavit shall not apply to answers in Accelerated Docket proceedings. Nevertheless, allegations of material fact, whether based on personal knowledge or information and belief, that cannot be supported by documentation remain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ec. 1.52.

- (3) Answers on the Accelerated Docket are not required to include proposed findings of fact, conclusions of law, and legal analysis relevant to the defenses and arguments set forth in the answer, as required in paragraph (c) of this section. Nevertheless, answers on the Accelerated Docket shall fully set out the facts and legal theories on which the defendant premises its defenses.
- (4) In light of the requirement for staff-supervised settlement negotiations required in Sec. 1.730(b), answers on the Accelerated Docket are not required to include a certification that the defendant has discussed, or attempted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settlement with the complainant, as required in paragraph (h) of this section.
- (5) As required in Sec. 1.729(i)(1), answers on the Accelerated Docket shall be accompanied, when served on complainants, by copies of documents, within the defendant's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that are likely to bear significantly on the issues raised in the proceeding. Unless otherwise directed, these documents shall not be filed with the Commission. In light of this automatic document production requirement, answers on the Accelerated Docket are not required to include a description of all relevant documents in the defendant's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as required in paragraph (f)(2) of this section.
- (6) Answers on the Accelerated Docket are not required to provide the description, required in paragraph (f)(3) of this section, of the manner in which the defendant identified persons with knowledge of, and documents relevant to, the dispute.
- (7) In Accelerated Docket proceedings, the defendant, as required in Sec. 1.729(i)(1), shall serve, contemporaneously with its answer, the complainant (s) with copies of documents, within the defendant's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that are likely to bear significantly on the issues raised in the complaint and/or the answer.

[53 FR 11853, Apr. 11, 1988, as amended at 58 FR 25572, Apr. 27, 1993; 63 FR 1037, Jan. 7, 1998; 63 FR 41446, Aug. 4, 1998; 66 FR 16617, Mar. 27, 2001]

**Sec. 1.725 Cross-complaints and counterclaims.**

Cross-complaints seeking any relief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mmission against any carrier that is a party (complainant or defendant) to that proceeding are expressly prohibited. Any claim that might otherwise meet the requirements of a cross-complaint may be filed as a separate complaint in accordance with Secs. 1.720 through 1.736. For purposes of this subpart, the term “cross-complaint” shall include counterclaims. [63 FR 1037, Jan. 7, 1998]

**Sec. 1.726 Replies.**

- (a) Subject to paragraph(g) of this section governing Accelerated Docket proceedings, within three days after service of an answer containing affirmative defenses present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Sec. 1.724(e), a complainant may file and serve a reply containing statements of relevant, material facts and legal arguments that shall be responsive to only those specific factual allegations and legal arguments made by the defendant in support of its affirmative defenses. Replies which contain other allegations or arguments will not be accepted or considered by the Commission.
- (b) Failure to reply to an affirmative defense shall be deemed an admission of such affirmative defense and of any facts supporting such affirmative defense that are not specifically contradicted in the complaint.
- (c) The reply shall contain proposed findings of fact, conclusions of law, and legal analysis relevant to the claims and arguments set forth in the reply.
- (d) The reply shall include an information designation containing:
  - (1) The name, address and position of each individual believed to have firsthand

knowledge about the facts alleged with particularity in the reply, along with a description of the facts within any such individual's knowledge.

- (2) A description of all documents, data compilations and tangible things in the complainant's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that are relevant to the facts alleged with particularity in the reply. Such description shall include for each document:
  - ( i ) The date prepared, mailed, transmitted, or otherwise disseminated;
  - ( ii ) The author, preparer, or other source;
  - ( iii ) The recipient(s) or intended recipient(s);
  - ( iv ) Its physical location; and
  - ( v ) A description of its relevance to the matters in dispute.
- (3) A complete description of the manner in which the complainant identified all persons with information and designated all documents, data compilations and tangible things as being relevant to the disput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dentifying the individual(s) that conducted the information search and the criteria used to identify such persons, documents, data compilations, tangible things, and information;
- (e) The reply shall attach copies of all affidavits, documents, data compilations and tangible things in the complainant's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upon which the complainant relies or intends to rely to support the facts alleged and legal arguments made in the reply.
- (f) The complainant may petition the staff, pursuant to Sec. 1.3, for a waiver of any of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Such waiver may be granted for good cause shown.
- (g) Accelerated Docket Proceedings.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g), the term document also shall include data compilations and tangible things.

- (1) The filing of a separate pleading to reply to affirmative defenses is not permitted in Accelerated Docket proceedings. Complainants in such proceedings may include, in the Sec. 1.733(i)(4) pre-status-conference filing, those statements that otherwise would have been the subject of a reply.
- (2) In Accelerated Docket proceedings, the failure to reply, in the pre-status-conference filing, to an affirmative defense shall be deemed an admission of such affirmative defense and of any facts supporting such affirmative defense that are not specifically contradicted in the complaint.
- (3) If a complainant replies to an affirmative defense in its Sec. 1.733(i)(4), pre-status-conference filing, it shall include in that filing the information, required by paragraph(d)(1) of this section, identifying individuals with firsthand knowledge of the facts alleged in the reply.
- (4) An Accelerated Docket complainant that replies to an affirmative defense in its Sec. 1.733(i)(4), pre-status-conference filing also shall serve on the defendant, at the same time as that filing, those documents in the complainant's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that were not previously produced to the defendant and that are likely to bear significantly on the issues raised in the reply. Such a complainant is not required to comply with the remainder of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d) and (e) of this section.

[63 FR 1037, Jan. 7, 1998, as amended at 63 FR 41447, Aug. 4, 1998; 66 FR 16617, Mar. 27, 2001]

**Sec. 1.727 Motions.**

- (a) A request to the Commission for an order shall be by written motion, stating with particularity the grounds and authority therefor, and setting forth the relief or order sought.
- (b) All dispositive motions shall contain proposed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with supporting legal analysis, relevant to the contents of the pleading. Motions to compel discovery must contain a certification by the moving party that a good faith attempt to resolve the dispute was made prior to filing the motion. All facts relied upon in motions must be supported by documentation or affidavits pursuant to the requirements of Sec. 1.720(c), except for those facts of which official notice may be taken.

- (c) The moving party shall provide a proposed order for adoption, which appropriately incorporates the basis therefor, including proposed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relevant to the pleading. The proposed order shall be clearly marked as a "Proposed Order." The proposed order shall be submitted both as a hard copy and on computer disk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Sec. 1.734(d). Where appropriate, the proposed order format should conform to that of a reported FCC order.
- (d) Oppositions to any motion shall be accompanied by a proposed order for adoption, which appropriately incorporates the basis therefor, including proposed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relevant to the pleading. The proposed order shall be clearly captioned as a "Proposed Order." The proposed order shall be submitted both as a hard copy and on computer disk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Sec. 1.734(d). Where appropriate, the proposed order format should conform to that of a reported FCC order.
- (e) Oppositions to motions may be filed and served within five business days after the motion is filed and served and not after. Oppositions shall be limited to the specific issues and allegations contained in such motion; when a motion is incorporated in an answer to a complaint, the opposition to such motion shall not address any issues presented in the answer that are not also specifically raised in the motion. Failure to oppose any motion may constitute grounds for granting of

the motion.

- (f) No reply may be filed to an opposition to a motion.
- (g) Motions seeking an order that the allegations in the complaint be made more definite and certain are prohibited.
- (h) Amendments or supplements to complaints to add new claims or requests for relief are prohibited. Parties are responsible, however, for the continuing accuracy and completeness of all information and supporting authority furnished in a pending complaint proceeding as required under Sec. 1.720(g).

[53 FR 11854, Apr. 11, 1988, as amended at 58 FR 25572, Apr. 27, 1993; 63 FR 1036, Jan. 7, 1998; 63 FR 41447, Aug. 4, 1998]

**Sec. 1.728 Formal complaints not stating a cause of action; defective pleadings.**

- (a) Any document purporting to be a formal complaint which does not state a cause of action under the Communications Act will be dismissed. In such case, any amendment or supplement to such document will be considered a new filing which must be made within the statutory periods of limitations of actions contained in section 415 of the Communications Act.
- (b) Any other pleading filed in a formal complaint proceeding not in conformit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applicable rules in this part may be deemed defective. In such case the Commission may strike the pleading or request that specified defects be corrected and that proper pleadings be filed with the Commission and served on all parties within a prescribed time as a condition to being made a part of the record in the proceeding.

[53 FR 11854, Apr. 11, 1988]

**Sec. 1.729 Discovery.**

- (a) Subject to paragraph ( i ) of this section governing Accelerated Docket proceedings,

a complainant may file with the Commission and serve on a defendant, concurrently with its complaint, a request for up to ten written interrogatories. A defendant may file with the Commission and serve on a complainant, during the period starting with the service of the complaint and ending with the service of its answer, a request for up to ten written interrogatories. A complainant may file with the Commission and serve on a defendant, within three calendar days of service of the defendant's answer, a request for up to five written interrogatories. Subparts of any interrogatory will be counted as separate interrogatories for purposes of compliance with this limit. Requests for interrogatories filed and served pursuant to this procedure may be used to seek discovery of any non-privileged matter that is relevant to the material facts in dispute in the pending proceeding, provided, however, that requests for interrogatories filed and served by a complainant after service of the defendant's answer shall be limited in scope to specific factual allegations made by the defendant in support of its affirmative defenses. This procedure may not be employed for the purpose of delay, harassment or obtaining information that is beyond the scope of permissible inquiry related to the material facts in dispute in the pending proceeding.

- (b) Requests for interrogatories filed and served pursuant to paragraph (a) of this section shall contain a listing of the interrogatories requested and an explanation of why the information sought in each interrogatory is both necessary to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 and not available from any other source.
- (c) A responding party shall file with the Commission and serve on the propounding party any opposition and objections to the requests for interrogatories as follows:
  - (1) By the defendant, within ten calendar days of service of the requests for interrogatories served simultaneously with the complaint and within five calendar days of the requests for interrogatories served following service of the answer;

- (2) By the complainant, within five calendar days of service of the requests for interrogatories; and
- (3) In no event less than three calendar days prior to the initial status conference as provided for in Sec. 1.733(a).
- (d) Commission staff will consider the requests for interrogatories, properly filed and served pursuant to paragraph (a) of this section, along with any objections or oppositions thereto, properly filed and served pursuant to paragraph (b) of this section, at the initial status conference, as provided for in Sec. 1.733(a)(5), and at that time determine the interrogatories, if any, to which parties shall respond, and set the schedule of such response.
- (e) The interrogatories ordered to be answered pursuant to paragraph (d) of this section are to be answered separately and fully in writing under oath or affirmation by the party served, or if such party is a public or private corporation or partnership or association, by any officer or agent who shall furnish such information as is available to the party. The answers shall be signed by the person making them. The answers shall be filed with the Commission and served on the propounding party.
- (f) A propounding party asserting that a responding party has provided an inadequate or insufficient response to Commission-ordered discovery request may file a motion to compel within ten days of the service of such response, or as otherwise directed by Commission staff, pursuant to the requirements of Sec. 1.727.
- (g) The Commission may, in its discretion, require parties to provide documents to the Commission in a scanned or other electronic format that provides:
  - (1) Indexing by useful identifying information about the documents; and
  - (2) Technology that allows staff to annotate the index so as to make the format an efficient means of reviewing the documents.

- (h) The Commission may allow additional discover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ocument production, depositions and/or additional interrogatories. In its discretion, the Commission may modify the scope, means and scheduling of discovery in light of the needs of a particular case and the requirements of applicable statutory deadlines.
- (i) Discovery in Accelerated Docket proceedings
  - (1) Each party to an Accelerated Docket proceeding shall serve, with its initial pleading and with any reply statements in the pre-status-conference filing(see Sec. 1.726(g)(1)), copies of all documents in the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of the party that are likely to bear significantly on any claim or defense.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 i ), document also shall include data compilations and tangible things. A document is likely to bear significantly on a claim or defense if it:
    - ( i ) Appears likely to have an influence on, or affect the outcome of, a claim or defense;
    - ( ii ) Reflects the relevant knowledge of persons who, if their potential testimony were known, might reasonably be expected to be deposed or called as a witness by any of the parties;
    - ( iii ) Is something that competent counsel would consider reasonably necessary to prepare, evaluate or try a claim or defense; or
    - ( iv ) Would not support the disclosing party's contentions.
  - (2) In their Sec.1.733(i)(4) pre-status-conference filings, parties to Accelerated Docket proceedings may request the production of additional documents. In their Sec. 1.733(i)(4) filings, parties may also seek leave to conduct a reasonable number of depositions, including depositions of expert witnesses, if any. When requesting additional discovery, each party shall be prepared at the

status conference to justify its requests by identifying the specific issue or issues on which it expects to obtain evidence from each request.

(3) Interrogatories shall not be routinely granted in Accelerated Docket proceedings.

A party to an Accelerated Docket proceeding that prefers interrogatories to the other forms of available discovery, for reasons of convenience or expense, may seek leave in its Sec. 1.733(i)(4) pre-status-conference filing to propound a limited number of interrogatories.

(4) Expert Witnesses.

( i ) Any complainant in an Accelerated Docket proceeding that intends to rely on expert testimony for a purpose other than to rebut a defendant's expert evidence, shall identify its expert witnesses in the information designation required by Sec. 1.721(a)(10)(i). In its Sec. 1.721(a)(10)(i) information designation, such a complainant shall also provide its expert statement.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i)(4), an expert statement shall include a brief statement of the opinions to be expressed by the expert, the basis and reasons therefor and any data or other information that the witness considered in forming her opinions.

( ii ) Any defendant in an Accelerated Docket proceeding that intends to rely on expert testimony shall identify its expert witnesses in the information designation required by Sec. 1.724(f)(1). Such a defendant shall provide its expert statement with its Sec. 1.733(i)(4), pre-status-conference filing.

( iii ) Any complainant in an Accelerated Docket proceeding that intends to rely on previously undisclosed expert testimony to rebut any portion of the defendant's case shall identify the expert and provide the appropriate expert statement at the initial status conference.

( iv ) Expert witnesses shall be subject to deposition in Accelerated Docket

proceedings under the same rules and limitations applicable to fact witnesses.  
[63 FR 1038, Jan. 7, 1998, as amended at 63 FR 41447, Aug. 4, 1998]

**Sec. 1.730 The Enforcement Bureau's Accelerated Docket.**

- (a) Parties to formal complaint proceedings against common carriers within the responsibility of the Enforcement Bureau(see Secs. 0.111, 0.311, 0.314 of this chapter) may request inclusion on the Bureau's Accelerated Docket. As set out in Secs. 1.720 through 1.736, proceedings on the Accelerated Docket are subject to shorter pleading deadlines and certain other procedural rules that do not apply to other formal complaint proceedings before the Enforcement Bureau.
- (b) Any party that contemplates filing a formal complaint may submit a request to the Chief of the Enforcement Bureau's Market Disputes Resolution Division, either by phone or in writing, seeking inclusion of its complaint, once filed, on the Accelerated Docket. In appropriate cases, Commission staff shall schedule and supervise pre-filing settlement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to the dispute. If the parties do not resolve their dispute and the matter is accepted for handling on the Accelerated Docket, the complainant shall file its complaint with a letter stating that it has gained admission to the Accelerated Docket. When it files its complaint, such a complainant shall also serve a copy of its complaint on the Commission staff that supervised the pre-filing settlement discussions.
- (c) Within five days of receiving service of a complaint, any defendant in a formal complaint proceeding may submit by facsimile or hand delivery, to the Chief of the Enforcement Bureau's Market Disputes Resolution Division, a request seeking inclusion of its proceeding on the Accelerated Docket. Such a defendant contemporaneously shall transmit, in the same manner, a copy of its request to all parties to the proceeding. A defendant submitting such a request shall file and serve its

answer i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Sec. 1.724(k), except that the defendant shall not be required to serve with its answer the automatic document production required by Secs. 1.724(k)(7) and 1.729(i)(1). In proceedings accepted onto the Accelerated Docket at a defendant's request, the Commission staff will conduct supervised settlement discussions as appropriate. After accepting such a proceeding onto the Accelerated Docket, Commission staff will establish a schedule for the remainder of the proceeding, including the parties' Sec. 1.729(i)(1) automatic production of documents.

- (d) During the thirty days following the effective date of these rules, any party to a pending formal complaint proceeding in which an answer has been filed or is past due may seek admission of the proceeding to the Accelerated Docket by submitting a request by facsimile or hand delivery to the Chief of the Enforcement Bureau's Market Disputes Resolution Division, with facsimile copies to all other parties to the proceeding by the same mode of transmission. If a pending proceeding is accepted onto the Accelerated Docket, Commission staff will conduct supervised settlement discussions if appropriate and establish a schedule for the remainder of the proceeding, including the parties' Sec. 1.729(i)(1) automatic production of documents if necessary.
- (e) In determining whether to admit a proceeding onto the Accelerated Docket, Commission staff may consider factors from the following, non-exclusive list:
  - (1) Whether it appears that the parties to the dispute have exhausted the reasonable opportunities for settlement during the staff-supervised settlement discussions.
  - (2) Whether the expedited resolution of a particular dispute or category of disputes appears likely to advance competit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 (3) Whether the issues in the proceeding appear suited for decision under the constraints of the Accelerated Docket. This factor may entail, inter alia,

examination of the number of distinct issues raised in a proceeding, the likely complexity of the necessary discovery, and whether the complainant bifurcates any damages claims for decision in a separate proceeding. See Sec. 1.722(b).

- (4) Whether the complainant states a claim for violation of the Act, or Commission rule or order that falls within the Commission's jurisdiction.
- (5) Whether it appears that inclusion of a proceeding on the Accelerated Docket would be unfair to one party because of an overwhelming disparity in the parties' resources.
- (6) Such other factors as the Commission staff, within its substantial discretion, may deem appropriate and conducive to the prompt and fair adjudication of complaint proceedings.
- (f) If it appears at any time that a proceeding on the Accelerated Docket is no longer appropriate for such treatment, Commission staff may remove the matter from the Accelerated Docket either on its own motion or at the request of any party.
- (g) Minitrials.
  - (1) In Accelerated Docket proceedings, the Commission may conduct a minitrial, or hearing-type proceeding, as an alternative to requiring that parties submit briefs in support of their cases. Minitrials typically will take place between 40 and 45 days after the filing of the complaint. A Commission Administrative Law Judge ("ALJ") typically will preside at the minitrial, administer oaths to witnesses, and time the parties' presentation of their cases. In consultation with the Commission staff, the ALJ will rule on objections or procedural issues that may arise during the course of the minitrial.
  - (2) Before a minitrial, each party will receive a specific time allotment in which it may present evidence and make argument during the minitrial. The ALJ or other Commission staff presiding at the minitrial will deduct from each party's time

allotment any time that the party spends presenting either evidence or argument during the proceeding. The presiding official shall have broad discretion in determining any time penalty or deduction for a party who appears to be intentionally delaying either the proceeding or the presentation of another party's case. Within the limits imposed by its time allotment, a party may present evidence and argument in whatever manner or format it chooses, provided, however, that the submission of written testimony shall not be permitted.

- (3) Three days before a minitrial, each party to a proceeding shall serve on all other parties a copy of all exhibits that the party intends to introduce during the minitrial and a list of all witnesses, including expert witnesses, that the party may call during the minitrial. Service of this material shall be accomplished either by hand or by facsimile transmission. Objections to any exhibits or proposed witness testimony will be heard before the beginning of the minitrial.
- (4) No party will be permitted to call as a witness in a minitrial, or otherwise offer evidence from, an individual in that party's employ, unless the individual appears on the party's information designation(see Secs. 1.721(a)(10)(i) or 1.724(f)(1)) with a general description of the issues on which she will offer evidence. No party will be permitted to present expert evidence unless the party has complied fully with the expert-disclosure requirements of Sec. 1.729(i)(4). The Commission may permit exceptions to the rules in this paragraph(g)(4) for good cause shown.
- (5) Two days before the beginning of the minitrial, parties shall file proposed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These submissions shall not exceed 40 pages per party. Within three day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minitrial, parties may submit revised proposed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to meet evidence introduced or arguments raised at the minitrial. These submissions

shall not exceed 20 pages per party.

- (6) The parties shall arrange for the stenographic transcription of minitrial proceedings so that transcripts are available and filed with the Commission no more than three day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minitrial. Absent an agreement to the contrary, the cost of the transcript shall be shared equally between the parties to the proceeding.
- (h) Applications for review of staff decisions issued on delegated authority in Accelerated Docket proceedings shall comply with the filing and service requirements in Sec. 1.115(e)(4). In those Accelerated Docket proceedings which raise issues that may not be decided on delegated authority(see 47 U.S.C. 155(c) (1); 47 CFR 0.291(d)), the staff decision issued after the minitrial will be a recommended decision subject to adoption or modification by the Commission. Any party to the proceeding that seeks modification of the recommended decision may do so by filing comments challenging the decision within 15 days of its release by the Commission's Office of Media Relations.(Compare Sec. 1.4(b)(2).) Opposition comments may be filed within 15 days of the comments challenging the decision; reply comments may be filed 10 days thereafter and shall be limited to issues raised in the opposition comments.
- (i) If no party files comments challenging the recommended decision, the Commission will issue its decision adopting or modifying the recommended decision within 45 days of its release. If parties to the proceeding file comments to the recommended decision, the Commission will issue its decision adopting or modifying the recommended decision within 30 days of the filing of the final comments.

[63 FR 41448, Aug. 4, 1998, as amended at 64 FR 60725, Nov. 8, 1999]

**Sec. 1.731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produced or exchanged by the parties.**

- (a) Any materials generated in the course of a formal complaint proceeding may be

designated as proprietary by that party if the party believes in good faith that the materials fall within an exemption to disclosure contained in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5 U.S.C. 552(b)(1) through (9). Any party asserting confidentiality for such materials shall so indicate by clearly marking each page, or portion thereof, for which a proprietary designation is claimed. If a proprietary designation is challenged, the party claiming confidentiality shall have the burden of demonstrating,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that the material designated as proprietary falls under the standards for nondisclosure enunciated in the FOIA.

- (b) Materials marked as proprietary may be disclosed solely to the following persons, only for use in prosecuting or defending a party to the complaint action, and only to the extent necessary to assist in the prosecution or defense of the case:
  - (1) Counsel of record representing the parties in the complaint action and any support personnel employed by such attorneys;
  - (2) Officers or employees of the opposing party who are named by the opposing party as being directly involved in the prosecution or defense of the case;
  - (3) Consultants or expert witnesses retained by the parties;
  - (4) The Commission and its staff; and
  - (5) Court reporters and stenographer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section.
- (c) These individuals shall not disclose information designated as proprietary to any person who is not authorized under this section to receive such information, and shall not use the information in any activity or function other than the prosecution or defense in the case before the Commission. Each individual who is provided access to the information shall sign a notarized statement affirmatively stating that the individual has personally reviewed the Commission's rules and understands the limitations they impose on the signing party.

- (d) No copies of materials marked proprietary may be made except copies to be used by persons designated in paragraph (b) of this section. Each party shall maintain a log recording the number of copies made of all proprietary material and the persons to whom the copies have been provided.
- (e) Upon termination of a formal complaint proceeding, including all appeals and petitions, all originals and reproductions of any proprietary materials, along with the log recording persons who received copies of such materials, shall be provided to the producing party. In addition, upon final termination of the complaint proceeding, any notes or other work product derived in whole or in part from the proprietary materials of an opposing or third party shall be destroyed.

[58 FR 25573, Apr. 27, 1993, as amended at 63 FR 1039, Jan. 7, 1998]

**Sec. 1.732 Other required written submissions.**

- (a) The Commission may, in its discretion, or upon a party's motion showing good cause, require the parties to file briefs summarizing the facts and issues presented in the pleadings and other record evidence.
- (b) Unless otherwise directed by the Commission, all briefs shall include all legal and factual claims and defenses previously set forth in the complaint, answer, or any other pleading submitted in the proceeding. Claims and defenses previously made but not reflected in the briefs will be deemed abandoned. The Commission may, in its discretion, limit the scope of any briefs to certain subjects or issues. A party shall attach to its brief copies of all documents, data compilations, tangible things, and affidavits upon which such party relies or intends to rely to support the facts alleged and legal arguments made in its brief and such brief shall contain a full explanation of how each attachment is relevant to the issues and matters in

dispute. All such attachments to a brief shall be documents, data compilations or tangible things, or affidavits made by persons, that were identified by any party in its information designations filed pursuant to Secs. 1.721(a)(10)( i ), (a)(10)( ii ), 1.724(f)(1), (f)(2), and 1.726(d)(1),(d)(2). Any other supporting documentation or affidavits that is attached to a brief must be accompanied by a full explanation of the relevance of such materials and why such materials were not identified in the information designations. These briefs shall contain the proposed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which the filing party is urging the Commission to adopt, with specific citation to the record, and supporting relevant authority and analysis.

- (c) In cases in which discovery is not conducted, absent an order by the Commission that briefs be filed, parties may not submit briefs. If the Commission does authorize the filing of briefs in cases in which discovery is not conducted, briefs shall be filed concurrently by both the complainant and defendant at such time as designated by the Commission staff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 (d) In cases in which discovery is conducted, briefs shall be filed concurrently by both the complainant and defendant at such time designated by the Commission staff.
- (e) Briefs containing information which is claimed by an opposing or third party to be proprietary under Sec. 1.731 shall be submitted to the Commission in confidence pursuant to the requirements of Sec. 0.459 of this chapter and clearly marked "Not for Public Inspection." An edited version removing all proprietary data shall also be filed with the Commission for inclusion in the public file. Edited versions shall be filed within five days from the date the unedited brief is submitted, and served on opposing parties.
- (f) Initial briefs shall be no longer than twenty-five pages. Reply briefs shall be no

longer than ten pages. Either on its own motion or upon proper motion by a party, the Commission staff may establish other page limits for briefs.

- (g) The Commission may require the parties to submit any additional information it deems appropriate for a full, fair, and expeditious resolution of the proceeding, including affidavits and exhibits.
- (h) The parties shall submit a joint statement of stipulated facts, disputed facts, and key legal issues no later than two business days prior to the initial status conference, schedul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ec. 1.733 (a).

[53 FR 11855, Apr. 11, 1988. Redesignated and amended at 58 FR 25573, Apr. 27, 1993; 63 FR 1039, Jan. 7, 1998]

**Sec. 1.733 Status conference.**

- (a) In any complaint proceeding, the Commission may, in its discretion, direct the attorneys and/or the parties to appear before it for a status conference. Unless otherwise ordered by the Commission, and with the exception of Accelerated Docket proceedings, governed by paragraph ( i ) of this section, an initial status conference shall take place, at the time and place designated by the Commission staff, ten business days after the date the answer is due to be filed. A status conference may include discussion of:
  - (1) Simplification or narrowing of the issues;
  - (2) The necessity for or desirability of additional pleadings or evidentiary submissions;
  - (3) Obtaining admissions of fact or stipulations between the parties as to any or all of the matters in controversy;
  - (4) Settlement of all or some of the matters in controversy by agreement of the parties;
  - (5) Whether discovery is necessary and, if so, the scope, type and schedule for such discovery;

- (6) The schedule for the remainder of the case and the dates for any further status conferences; and
  - (7) Such other matters that may aid in the disposition of the complaint.
- (b) (1) Subject to paragraph ( i ) of this section governing Accelerated Docket proceedings, parties shall meet and confer prior to the initial status conference to discuss:
- ( i ) Settlement prospects;
  - ( ii ) Discovery;
  - ( iii ) Issues in dispute;
  - ( iv ) Schedules for pleadings;
  - ( v ) Joint statement of stipulated facts, disputed facts, and key legal issues; and
  - ( vi ) In a 47 U.S.C. 271(d)(6)(B) proceeding, whether or not the parties agree to waive the 47 U.S.C. 271(d)(6)(B) 90-day resolution deadline.
- (2) Subject to paragraph ( i ) of this section governing Accelerated Docket proceedings, parties shall submit a joint statement of all proposals agreed to and disputes remaining as a result of such meeting to Commission staff at least two business days prior to the scheduled initial status conference.
- (c) In addition to the initial status conference referenced in paragraph (a) of this section, any party may also request that a conference be held at any time after the complaint has been filed.
- (d) During a status conference, the Commission staff may issue oral rulings pertaining to a variety of interlocutory matters relevant to the conduct of a formal complaint proceeding including, inter alia, procedural matters, discovery, and the submission of briefs or other evidentiary materials.
- (e) Parties may make, upon written notice to the Commission and all attending parties at least three business days prior to the status conference, an audio recording of

the Commission staff's summary of its oral rulings. Alternatively, upon agreement among all attending parties and written notice to the Commission at least three business days prior to the status conference, the parties may make an audio recording of, or use a stenographer to transcribe, the oral presentations and exchanges between and among the participating parties, insofar as such communications are "on-the-record" as determined by the Commission staff, as well as the Commission staff's summary of its oral rulings. A complete transcript of any audio recording or stenographic transcription shall be filed with the Commission as part of the recor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f)(2) of this section. The parties shall make all necessary arrangements for the use of a stenographer and the cost of transcription, absent agreement to the contrary, will be shared equally by all parties that agree to make the record of the status conference.

- (f) The parties in attendance, unless otherwise directed, shall either:
  - (1) Submit a joint proposed order memorializing the oral rulings made during the conference to the Commission by 5:30 pm, Eastern Time, on the business day following the date of the status conference, or as otherwise directed by Commission staff. In the event the parties in attendance cannot reach agreement as to the rulings that were made, the joint proposed order shall include the rulings on which the parties agree, and each party's alternative proposed rulings for those rulings on which they cannot agree. Commission staff will review and make revisions, if necessary, prior to signing and filing the submission as part of the record. The proposed order shall be submitted both as hard copy and on computer disk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Sec. 1.734(d); or
  - (2) Pursuant to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e) of this section, submit to the Commission by 5:30 pm., Eastern Time, on the third business day following the status conference or as otherwise directed by Commission staff either:

- ( i ) A transcript of the audio recording of the Commission staff's summary of its oral rulings;
  - ( ii ) A transcript of the audio recording of the oral presentations and exchanges between and among the participating parties, insofar as such communications are "on-the-record" as determined by the Commission staff, and the Commission staff's summary of its oral rulings; or
  - ( iii ) A stenographic transcript of the oral presentations and exchanges between and among the participating parties, insofar as such communications are "on-the-record" as determined by the Commission staff, and the Commission staff's summary of its oral rulings.
- (g) Status conferences will be scheduled by the Commission staff at such time and place as it may designate to be conducted in person or by telephone conference call.
- (h) The failure of any attorney or party, following reasonable notice, to appear at a scheduled conference will be deemed a waiver by that party and will not preclude the Commission staff from conferring with those parties and/or counsel present.
- (i) Accelerated Docket Proceedings.
- (1) In Accelerated Docket proceedings, the initial status conference will be held 10 days after the answer is due to be filed.
  - (2) Prior to the initial status conference, the parties shall confer, either in person or by telephone, about:
    - ( i ) Discovery to which they can agree;
    - ( ii ) Facts to which they can stipulate and
    - ( iii ) Factual and legal issues in dispute.
  - (3) Two days before the status conference, parties shall submit to Commission staff a joint statement of:

- ( i ) The agreements that they have reached with respect to discovery;
  - ( ii ) The facts to which they have agreed to stipulate; and
  - ( iii ) The disputed facts or legal issues of which they can agree to a joint statement.
- (4) Two days before the status conference, each party also shall submit to Commission staff a separate statement which shall include, as appropriate, the party's statement of the disputed facts and legal issues presented by the complaint proceeding and any additional discovery that the party seeks. A complainant that wishes to reply to a defendant's affirmative defense shall do so in its pre-status-conference filing. To the extent that this filing contains statements replying to an affirmative defense, the complainant shall include, and/or serve with the statement, the witness information and documents required in Sec. 1.726(g)(3)-(4). A defendant that intends to rely on expert evidence shall include its expert statement in its pre-status conference filing.(See Sec. 1.729(i)(4)(ii).)

[53 FR 11855, Apr. 11, 1988. Redesignated and amended at 58 FR 25573, Apr. 27, 1993; 63 FR 1039, Jan. 7, 1998; 63 FR 41449, Aug. 4, 1998]

**Sec. 1.734 Specifications as to pleadings, briefs, and other documents; subscription.**

- (a) All papers filed in any formal complaint proceeding must be drawn in conformity with the requirements of Secs. 1.49 and 1.50.
- (b) All averments of claims or defenses in complaints and answers shall be made in numbered paragraphs. The contents of each paragraph shall be limited as far as practicable to a statement of a single set of circumstances. Each claim founded on a separate transaction or occurrence and each affirmative defense shall be separately stated to facilitate the clear presentation of the matters set forth.
- (c) The original of all pleadings and other submissions filed by any party shall be signed by the party, or by the party's attorney. The signing party shall include in

the document his or her address, telephone number, facsimile number and the date on which the document was signed. Copies should be conformed to the original. Unless specifically required by rule or statute, pleadings need not be verified. The signature of an attorney or party shall be a certificate that the attorney or party has read the pleading, motion, or other paper; that to the best of his or her knowledge, information, and belief formed after reasonable inquiry, it is well grounded in fact and is warranted by existing law or a good faith argument for the extension, modification, or reversal of existing law; and that it is not interposed solely for purposes of delay or for any other improper purpose.

- (d) All proposed orders shall be submitted both as hard copies and on computer disk formatted to be compatible with the Commission's computer system and using the Commission's current wordprocessing software. Each disk should be submitted in "read only" mode. Each disk should be clearly labelled with the party's name, proceeding, type of pleading, and date of submission. Each disk should be accompanied by a cover letter. Parties who have submitted copies of tariffs or reports with their hard copies need not include such tariffs or reports on the disk. Upon showing of good cause, the Commission may waive the requirements of this paragraph.

[53 FR 11855, Apr. 11, 1988. Redesignated at 58 FR 25573, Apr. 27, 1993, as amended at 63 FR 1040, Jan. 7, 1998]

**Sec. 1.735 Copies; service; separate filings against multiple defendants.**

- (a) Complaints may generally be brought against only one named carrier; such actions may not be brought against multiple defendants unless the defendant carriers are commonly owned or controlled, are alleged to have acted in concert, are alleged to be jointly liable to complainant, or the complaint concerns common questions of law or fact. Complaints may, however, be consolidated by the Commission for

disposition.

- (b) The complainant shall file an original copy of the complaint, accompanied by the correct fee, in accordance with part I, subpart G(see Sec. 1.1105(1)(c) and (d)) and, on the same day:
  - (1) File three copies of the complaint with the Office of the Commission Secretary;
  - (2) Serve two copies on the Market Disputes Resolution Division, Enforcement Bureau;
  - (3) If the complaint is filed against a carrier concerning matters within the responsibility of the International Bureau(see Sec. 0.261 of this chapter), serve a copy on the Chief, Policy Division, International Bureau; and
  - (4) If a complaint is addressed against multiple defendants, pay a separate fee, in accordance with part I, subpart G(see Sec. 1.1105(1)(c) and (d)), and file three copies of the complaint with the Office of the Commission Secretary for each additional defendant.
- (c) Generally, a separate file is set up for each defendant. An original plus two copies shall be filed of all pleadings and documents, other than the complaint, for each file number assigned.
- (d) The complainant shall serve the complaint by hand delivery on either the named defendant or one of the named defendant's registered agents for service of process on the same date that the complaint is filed with th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b) of this section.
- (e) Upon receipt of the complaint by the Commission, the Commission shall promptly send, by facsimile transmission to each defendant named in the complaint, notice of the filing of the complaint. The Commission shall send, by regular U.S.mail delivery, to each defendant named in the complaint, a copy of the complaint. The Commission shall additionally send, by regular U.S.mail to all parties, a schedule

detailing the date the answer will be due and the date, time and location of the initial status conference.

- (f) All subsequent pleadings and briefs filed in any formal complaint proceeding, as well as all letters, documents or other written submissions, shall be served by the filing party on the attorney of record for each party to the proceeding, or, where a party is not represented by an attorney, each party to the proceeding either by hand delivery, overnight delivery, or by facsimile transmission followed by regular U.S. mail delivery, together with a proof of such servic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Sec. 1.47(g). Service is deemed effective as follows:
  - (1) Service by hand delivery that is delivered to the office of the recipient by 5:30 pm, local time of the recipient, on a business day will be deemed served that day. Service by hand delivery that is delivered to the office of the recipient after 5:30 pm, local time of the recipient, on a business day will be deemed served on the following business day;
  - (2) Service by overnight delivery will be deemed served the businessday following the day it is accepted for overnight delivery by a reputable overnight delivery service such as, or comparable to, the US Postal Service Express Mail, United Parcel Service or Federal Express; or
  - (3) Service by facsimile transmission that is fully transmitted to the office of the recipient by 5:30 pm, local time of the recipient, on a business day will be deemed served that day. Service by facsimile transmission that is fully transmitted to the office of the recipient after 5:30 pm, local time of the recipient, on a business day will be deemed served on the following business day.
- (g) Supplemental complaint proceedings. Supplemental complaints filed pursuant to section 1.722 shall conform to the requirements set out in this section, except that the complainant need not submit a filing fee, and the complainant may effect

service pursuant to paragraph (f) of this section rather than paragraph (d) of this section numerals.

[53 FR 11855, Apr. 11, 1988. Redesignated and amended at 58 FR 25573, 25574, Apr. 27, 1993, as amended at 63 FR 1040, Jan. 7, 1998; 64 FR 60726, Nov. 8, 1999; 66 FR 16617, Mar. 27, 2001; 67 FR 13223, Mar. 21, 2002]

**Sec. 1.736 Complaints filed pursuant to 47 U.S.C. 271(d)(6)(B).**

- (a) Where a complaint is filed pursuant to 47 U.S.C.271(d)(6)(B), parties shall indicate whether they are willing to waive the ninety-day resolution deadline contained in 47 U.S.C. 271(d)(6)(B) in the following manner:
  - (1) The complainant shall so indicate in both the complaint itself and in the Formal Complaint Intake Form, and the defendant shall so indicate in its answer; or
  - (2) The parties shall indicate their agreement to waive the ninety-day resolution deadline to the Commission staff at the initial status conference, to be held in accordance with Sec. 1.733 of the rules.
- (b) Requests for waiver of the ninety-day resolution deadline for complaints filed pursuant to 47 U.S.C. 271(d)(6)(B) will not be entertained by the Commission staff subsequent to the initial status conference, absent a showing by the complainant and defendant that such waiver is in the public interest.

[63 FR 1041, Jan. 7, 1998]

<첨부 4>

## 미국 FCC 규정 집행국 기능 조항

### **Sec. 0.111 Functions of the Bureau.**

(a) Serve as the primary Commission entity responsible for enforcement of the Communications Act and other communications statutes, the Commission's rules, Commission orders and Commission authorizations, other than matters that are addressed in the context of a pending application for a license or other authorization or in the context of administration, including post-grant administration, of a licensing or other authorization or registration program.

(1) Resolve complaints, including complaints filed under section 208 of the Communications Act, regarding acts or omissions of common carriers(wireline, wireless and international).

Note to paragraph(a)(1): The Consumer and Governmental Affairs Bureau has primary responsibility for informally resolving individual informal complaints from consumers against common carriers(wireline, wireless and international) and against other wireless licensees, and informal consumer complaints involving access to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nd equipmen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International Bureau has primary responsibility for complaints regarding international settlements rules and policies.

(2) Resolve complaints regarding acts or omissions of non-common carriers subject to the Commission's jurisdiction under Title II of the Communications Act and related provisions, including complaints against aggregators under section 226 of the Communications Act and against entities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section 227 of the Communications Act.

Note to paragraph(a)(2): The Consumer and Governmental Affairs Bureau has primary responsibility for informally resolving individual informal complaints from consumers against non-common carriers subject to the Commission's jurisdiction under Title II of the Communications Act and related provisions.

(3) Resolve formal complaints regarding accessibility to communications services and equipmen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complaints filed pursuant to sections 225 and 255 of the Communications Act.

(4) Resolve complaints regarding radiofrequency interference and complaints regarding radiofrequency equipment and devices, including complaints of violations of sections 302 and 333 of the Communications Act.

Note to paragraph(a)(4): The Offi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has shared responsibility for radiofrequency equipment and device complaints.

(5) Resolve complaints regarding compliance with the Commission's Emergency Alert System rules.

(6) Resolve complaints regarding the lighting and marking of radio transmitting towers under section 303(q) of the Communications Act.

Note to paragraph(a)(6): The Wireless Telecommunications Bureau has responsibility for administration of the tower registration program.

(7) Resolve complaints regarding compliance with statutory and regulatory provisions regarding indecent communications subject to the Commission's jurisdiction.

(8) Resolve complaints regarding the broadcast and cable television children's television programming commercial limits contained in section 102 of the Children's Television Act.

Note to paragraph(a)(8): The Media Bureau has responsibility for enforcement of these limits in the broadcast television renewal context.

(9) Resolve complaints regarding unauthorized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communi-

cations facilities, including complaints of violations of section 301 of the Communications Act.

(10) Resolve complaints regarding false distress signals under section 325(a) of the Communications Act.

(11) Resolve other complaints against Title III licensees and permittees.

Note to paragraph(a)(11): The Media Bureau has primary responsibility for complaints regarding children's television programming requirements, and for political and related programming matters and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matters involving broadcasters, cable operators and other 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s. The relevant licensing Bureau has primary responsibility for complaints involving tower siting and the Commission's environmental rules. The Media Bureau has primary responsibility for complaints regarding compliance with conditions imposed on transfers of control and assignments of licenses of Cable Antenna Relay Service authorizations.

(12) Resolve complaints regarding pole attachments filed under section 224 of the Communications Act.

(13) Resolve complaints regarding multichannel video and cable television service under part 76 of the Commission's rules.

Note to paragraph(a)(13): The Media Bureau has primary responsibility for complaints regarding the following: subpart A(general), with the exception of Sec. 76.11 of this chapter; subpart B(Registration Statements); subpart C(Federal-State/Local Relationships [Reserved]); subpart D(carriage of television broadcast signals); subpart E(equal employment opportunity requirements); subpart F(nonduplication protection and syndicated exclusivity); subpart G, Sec. Sec. 76.205, 76.206 and 76.209 of this chapter(political broadcasting); subpart I(Forms and Reports); subpart J(ownership); subpart L(cable television access); subpart N, Sec. 76.944 of

this chapter(basic cable rate appeals), and Sec. Sec. 76.970, 76.971 and 76.977 of this chapter(cable leased access rates); subpart O(competitive access to cable programming); subpart P(competitive availability of navigation devices); subpart Q(regulation of carriage agreements); subpart S(Open Video Systems); and subparts T, U and V to the extent related to the matters listed in this note.

- (14) Resolve universal service suspension and debarment proceedings pursuant to Sec. 54.521 of this chapter.
- (15) Resolve complaints regarding other matters assigned to it by the Commission, matters that do not fall within the responsibility of another Bureau or Office or matters that are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with another Bureau or Office to be appropriately handled by the Enforcement Bureau.
- (16) Identify and analyze complaint information, conduct investigations, conduct external audits and collect information, including pursuant to sections 218, 220, 308(b), 403 and 409 (e) through (k) of the Communications Act, in connection with complaints, on its own initiative or upon request of another Bureau or Office.
- (17) Issue or draft orders taking or recommending appropriate action in response to complaints or investigati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dmonishments, damage awards where authorized by law or other affirmative relief, notices of violation, notices of apparent liability and related orders, notices of opportunity for hearing regarding a potential forfeiture, hearing designation orders, orders designating licenses or other authorizations for a revocation hearing and consent decrees. Issue or draft appropriate orders after a hearing has been terminated by an Administrative Law Judge on the basis of waiver. Issue or draft appropriate interlocutory orders and take or recommend appropriate action in the exercise of its responsibilities.

- (18) Encourage cooperative compliance efforts.
- (19) Mediate and settle disputes.
- (20) Provide information regarding pending complaints, compliance with relevant requirements and the complaint process, where appropriate and to the extent the information is not available from the Consumer and Governmental Affairs Bureau or other Bureaus and Offices.
- (21) Exercise responsibility for rulemaking proceedings regarding general enforcement policies and procedures.
- (22) Advise the Commission or responsible Bureau or Office regarding the enforcement implications of existing and proposed rules.
- (23) Serve as the primary point of contact for coordinating enforcement matters, including market and consumer enforcement matters, with other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as well as with foreign governments after appropriate consultation, and provide assistance to such entities. Refer matters to such entities, as well as to private sector entities, as appropriate.
- (b) Serve as trial staff in formal hearings conducted pursuant to 5 U.S.C. 556 regarding applications, revocation, forfeitures and other matters designated for hearing.
- (c) In coordination with the International Bureau,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conferences dealing with monitoring and measurement; serve as the point of contact for the U.S. Government in matters of international monitoring, fixed and mobile direction-finding and interference resolution; and oversee coordination of non-routine communications and materials between the Commission and international or regional public organizations or foreign administrations.
- (d) In conjunction with the Offi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work with technical standards bodies.

- (e) Oversee the Commission's privatized ship radio safety inspection program.
  - (f) Provide field support for, and field representation of, the Bureau, other Bureaus and Offices and the Commission. Coordinate with other Bureaus and Offices as appropriate.
  - (g) Handle congressional and other correspondence relating to or requesting specific enforcement actions, specific complaints or other specific matters within the responsibility of the Bureau, to the extent not otherwise handled by the Consumer and Governmental Affairs Bureau, the Office of General Counsel(impermissible ex parte presentations) or another Bureau or Office;
  - (h) Have authority to issue non-hearing related subpoenas for the attendance and testimony of witnesses and the production of books, papers, correspondence, memoranda, schedules of charges, contracts, agreements, and any other records deemed relevant to the investigation of matters within the responsibility of the Bureau. Before issuing a subpoena, the Enforcement Bureau shall obtain the approval of the Office of General Counsel.
  - (i) Perform such other functions as may be assigned or referred to it by the Commission.
- [ 64 FR 60716 , Nov. 8, 1999, as amended at 67 FR 13218 , Mar. 21, 2002; 68 FR 36942 , June 20, 2003; 69 FR 30233 , May 27, 2004; 71 FR 69034 , Nov. 29, 2006]

<첨부 5>

## 미국 연방규정(C.F.R) 사후규제 관련 조항

### TITLE 47-TELECOMMUNICATION

#### CHAPTER I-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CONTINUED)

#### PART 73\_RADIO BROADCAST SERVICES-

##### **Sec. 73.1206 Broadcast of telephone conversations.**

Before recording a telephone conversation for broadcast, or broadcasting such a conversation simultaneously with its occurrence, a licensee shall inform any party to the call of the licensee's intention to broadcast the conversation, except where such party is aware, or may be presumed to be aware from the circumstances of the conversation, that it is being or likely will be broadcast. Such awareness is presumed to exist only when the other party to the call is associated with the station(such as as employee or part-time reporter), or where the other party originates the call and it is obvious that it is in connection with a program in which the station customarily broadcasts telephone conversations.

[35 FR 7733, May 20, 1970]

##### **Sec. 73.1216 Licensee-conducted contests.**

A licensee that broadcasts or advertises information about a contest it conducts shall fully and accurately disclose the material terms of the contest, and shall conduct the contest substantially as announced or advertised. No contest description shall be false, misleading or deceptive with respect to any material term.

Note 1: For the purposes of this rule:

- (a) A contest is a scheme in which a prize is offered or awarded, based upon

chance, diligence, knowledge or skill, to members of the public.

- (b) Material terms include those factors which define the operation of the contest and which affect participation therein. Although the material terms may vary widely depending upon the exact nature of the contest, they will generally include: how to enter or participate; eligibility restrictions; entry deadline dates; whether prizes can be won; when prizes can be won; the extent, nature and value of prizes; basis for valuation of prizes; time and means of selection of winners; and/or tie-breaking procedures.

Note 2: In general, the time and manner of disclosure of the material terms of a contest are within the licensee's discretion. However, the obligation to disclose the material terms arises at the time the audience is first told how to enter or participate and continues thereafter. The material terms should be disclosed periodically by announcements broadcast on the station conducting the contest, but need not be enumerated each time an announcement promoting the contest is broadcast. Disclosure of material terms in a reasonable number of announcements is sufficient. In addition to the required broadcast announcements, disclosure of the material terms may be made in a non-broadcast manner.

Note 3: This rule is not applicable to licensee-conducted contests not broadcast or advertised to the general public or to a substantial segment thereof, to contests in which the general public is not requested or permitted to participate, to the commercial advertisement of non-licensee-conducted contests, or to a contest conducted by a non-broadcast division of the licensee or by a non-broadcast company related to the licensee.

[41 FR 43152, Sept. 30, 1976]

**Sec. 73.1217 Broadcast hoaxes.**

No licensee or permittee of any broadcast station shall broadcast false information

concerning a crime or a catastrophe if:

- (a) The licensee knows this information is false;
- (b) It is foreseeable that broadcast of the information will cause substantial public harm, and
- (c) Broadcast of the information does in fact directly cause substantial public harm.

Any programming accompanied by a disclaimer will be presumed not to pose foreseeable harm if the disclaimer clearly characterizes the program as a fiction and is presented in a way that is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Note: For purposes of this rule, “public harm” must begin immediately, and cause direct and actual damage to property or to the health or safety of the general public, or diversion of law enforcement or other public health and safety authorities from their duties. The public harm will be deemed foreseeable if the licensee could expect with a significant degree of certainty that public harm would occur. A “crime” is any act or omission that makes the offender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by law. A “catastrophe” is a disaster or imminent disaster involving violent or sudden event affecting the public.

[57 FR 28640, June 26, 1992]

## **PART 64\_MISCELLANEOUS RULES RELATING TO COMMON CARRIERS-**

### **Sec. 64.703 Consumer information.**

- (a) Each provider of operator services shall:
  - (1) Identify itself, audibly and distinctly, to the consumer at the beginning of each telephone call and before the consumer incurs any charge for the call;
  - (2) Permit the consumer to terminate the telephone call at no charge before the call is connected;
  - (3) Disclose immediately to the consumer, upon request and at no charge to the

consumer-

- ( i ) A quotation of its rates or charges for the call;
  - ( ii ) The methods by which such rates or charges will be collected; and
  - ( iii ) The methods by which complaints concerning such rates, charges, or collection practices will be resolved; and
- (4) Disclose, audibly and distinctly to the consumer, at no charge and before connecting any interstate non-access code operator service call, how to obtain the total cost of the call, including any aggregator surcharge, or the maximum possible total cost of the call, including any aggregator surcharge, before providing further oral advice to the consumer on how to proceed to make the call. The oral disclosure required in this subsection shall instruct consumers that they may obtain applicable rate and surcharge quotations either, at the option of the provider of operator services, by dialing no more than two digits or by remaining on the line. The phrase “total cost of the call” as used in this paragraph means both the variable(duration-based) charges for the call and the total per-call charges, exclusive of taxes, that the carrier, or its billing agent, may collect from the consumer for the call. It does not include additional charges that may be assessed and collected without the involvement of the carrier, such as a hotel surcharge billed by a hotel. Such charges are addressed in paragraph (b) of this section.
- (b) Each aggregator shall post on or near the telephone instrument, in plain view of consumers:
- (1) The name, address, and toll-free telephone number of the provider of operator services;
  - (2) Except for CMRS aggregators, a written disclosure that the rates for all operator-assisted calls are available on request, and that consumers have a

right to obtain access to the interstate common carrier of their choice and may contact their preferred interstate common carriers for information on accessing that carrier's service using that telephone;

- (3) In the case of a pay telephone, the local coin rate for the pay telephone location; and
- (4) The name and address of the Consumer Information Bureau of the Commission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Consumer Information Bureau, Consumer Complaints-Telephone, Washington, D.C. 20554), to which the consumer may direct complaints regarding operator services. An existing posting that displays the address that was required prior to the amendment of this rules(i.e., the address of the Common Carrier Bureau's Enforcement Division, which no longer exists) may remain until such time as the posting is replaced for any other purpose. Any posting made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is amendment must display the updated address(i.e., the address of the Consumer Information Bureau).
- (c) Updating of postings. The posting required by this section shall be updated as soon as practicable following any change of the carrier presubscribed to provide interstate service at an aggregator location, but no later than 30 days following such change. This requirement may be satisfied by applying to a payphone a temporary sticker displaying the required posting information, provided that any such temporary sticker shall be replaced with permanent signage during the next regularly scheduled maintenance visit.
- (d) Effect of state law or regulation.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b) of this section shall not apply to an aggregator in any case in which State law or State regulation requires the aggregator to take actions that are substantially the same as those required in paragraph (b) of this section.

- (e) Each provider of operator services shall ensure, by contract or tariff, that each aggregator for which such provider is the presubscribed provider of operator services is i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b) of this section. [56 FR 18523, Apr. 23, 1991, as amended at 61 FR 14981, Apr. 4, 1996; 61 FR 52323, Oct. 7, 1996; 63 FR 11617, Mar. 10, 1998; 63 FR 43041, Aug. 11, 1998; 64 FR 47119, Aug. 30, 1999; 67 FR 2819, Jan. 22, 2002]

**Sec. 64.1200 Delivery restrictions.**

- (a) No person or entity may: (1) Initiate any telephone call(other than a call made for emergency purposes or made with the prior express consent of the called party) using an automatic telephone dialing system or an artificial or prerecorded voice;
- ( i ) To any emergency telephone line, including any 911 line and any emergency line of a hospital, medical physician or service office, health care facility, poison control center, or fire protection or law enforcement agency;
- ( ii ) To the telephone line of any guest room or patient room of a hospital, health care facility, elderly home, or similar establishment; or
- ( iii ) To any telephone number assigned to a paging service, cellular telephone service, specialized mobile radio service, or other radio common carrier service, or any service for which the called party is charged for the call.
- ( iv ) A person will not be liable for violating the prohibition in paragraph (a)(1) (iii) of this section when the call is placed to a wireless number that has been ported from wireline service and such call is a voice call; not knowingly made to a wireless number; and made within 15 days of the porting of the number from wireline to wireless service, provided the number is not already on the national do-not-call registry or caller's company-specific do-not-call list.

- (2) Initiate any telephone call to any residential line using an artificial or prerecorded voice to deliver a message without the prior express consent of the called party, unless the call;
  - ( i ) Is made for emergency purposes;
  - ( ii ) Is not made for a commercial purpose;
  - ( iii ) Is made for a commercial purpose but does not include or introduce an unsolicited advertisement or constitute a telephone solicitation;
  - ( iv ) Is made to any person with whom the caller has an established business relationship at the time the call is made; or
  - ( v ) Is made by or on behalf of a tax-exempt nonprofit organization.
- (3) Use a telephone facsimile machine, computer, or other device to send an unsolicited advertisement to a telephone facsimile machine, unless-
  - ( i ) The unsolicited advertisement is from a sender with an established business relationship, as defined in paragraph (f) (5) of this section, with the recipient; and
  - ( ii ) The sender obtained the number of the telephone facsimile machine through-
    - (A) The voluntary communication of such number by the recipient directly to the sender, within the context of such established business relationship; or
    - (B) A directory, advertisement, or site on the Internet to which the recipient voluntarily agreed to make available its facsimile number for public distribution. If a sender obtains the facsimile number from the recipient's own directory, advertisement, or Internet site, it will be presumed that the number was voluntarily made available for public distribution, unless such materials explicitly note that unsolicited advertisements are not accepted at the specified facsimile number. If a sender obtains the facsimile number from other sources, the sender must take reasonable steps to verify that the

recipient agreed to make the number available for public distribution.

- (C) This clause shall not apply in the case of an unsolicited advertisement that is sent based on an established business relationship with the recipient that was in existence before July 9, 2005 if the sender also possessed the facsimile machine number of the recipient before July 9, 2005. There shall be a rebuttable presumption that if a valid established business relationship was formed prior to July 9, 2005, the sender possessed the facsimile number prior to such date as well; and
- (iii) The advertisement contains a notice that informs the recipient of the ability and means to avoid future unsolicited advertisements. A notice contained in an advertisement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under this paragraph only if-
  - (A) The notice is clear and conspicuous and on the first page of the advertisement;
  - (B) The notice states that the recipient may make a request to the sender of the advertisement not to send any future advertisements to a telephone facsimile machine or machines and that failure to comply, within 30 days, with such a request meeting the requirements under paragraph (a)(3)(v) of this section is unlawful;
  - (C) The notice sets forth the requirements for an opt-out request under paragraph (a)(3)(v) of this section;
  - (D) The notice includes-
    - (1) A domestic contact telephone number and facsimile machine number for the recipient to transmit such a request to the sender; and
    - (2) If neither the required telephone number nor facsimile machine number is a toll-free number, a separate cost-free mechanism including a Web site address or e-mail address, for a recipient to transmit a request pursuant to such notice

to the sender of the advertisement. A local telephone number also shall constitute a cost-free mechanism so long as recipients are local and will not incur any long distance or other separate charges for calls made to such number; and

- (E) The telephone and facsimile numbers and cost-free mechanism identified in the notice must permit an individual or business to make an opt-out request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 (iv) A facsimile advertisement that is sent to a recipient that has provided prior express invitation or permission to the sender must include an opt-out notice that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 (a)(3)(iii) of this section.
- (v) A request not to send future unsolicited advertisements to a telephone facsimile machine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under this subparagraph only if-
  - (A) The request identifies the telephone number or numbers of the telephone facsimile machine or machines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 (B) The request is made to the telephone number, facsimile number, Web site address or e-mail address identified in the sender's facsimile advertisement; and
  - (C) The person making the request has not, subsequent to such request, provided express invitation or permission to the sender, in writing or otherwise, to send such advertisements to such person at such telephone facsimile machine.
- (vi) A sender that receives a request not to send future unsolicited advertisements that complies with paragraph (a)(3)(v) of this section must honor that request within the shortest reasonable time from the date of such request, not to exceed 30 days, and is prohibited from sending unsolicited advertisements to

the recipient unless the recipient subsequently provides prior express invitation or permission to the sender. The recipient's opt-out request terminates the established business relationship exemption for purposes of sending future unsolicited advertisements. If such requests are recorded or maintained by a party other than the sender on whose behalf the unsolicited advertisement is sent, the sender will be liable for any failures to honor the opt-out request.

- (vii) A facsimile broadcaster will be liable for violations of paragraph (a)(3) of this section, including the inclusion of opt-out notices on unsolicited advertisements, if it demonstrates a high degree of involvement in, or actual notice of, the unlawful activity and fails to take steps to prevent such facsimile transmissions.
- (4) Use an automatic telephone dialing system in such a way that two or more telephone lines of a multi-line business are engaged simultaneously.
- (5) Disconnect an unanswered telemarketing call prior to at least 15 seconds or four (4) rings.
- (6) Abandon more than three percent of all telemarketing calls that are answered live by a person, or measured over a 30-day period. A call is "abandoned" if it is not connected to a live sales representative within two (2) seconds of the called person's completed greeting. Whenever a sales representative is not available to speak with the person answering the call, that person must receive, within two (2) seconds after the called person's completed greeting, a prerecorded identification message that states only the name and telephone number of the business, entity, or individual on whose behalf the call was placed, and that the call was for "telemarketing purposes." The telephone number so provided must permit any individual to make a do-not-call request

during regular business hours for the duration of the telemarketing campaign. The telephone number may not be a 900 number or any other number for which charges exceed local or long distance transmission charges. The seller or telemarketer must maintain records establishing compliance with paragraph (a) (6) of this section.

- ( i ) A call for telemarketing purposes that delivers an artificial or prerecorded voice message to a residential telephone line that is assigned to a person who either has granted prior express consent for the call to be made or has an established business relationship with the caller shall not be considered an abandoned call if the message begins within two (2) seconds of the called person's completed greeting.
- ( ii ) Calls made by or on behalf of tax-exempt nonprofit organizations are not covered by paragraph (a) (6) of this section.
- (7) Use any technology to dial any telephone number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whether the line is a facsimile or voice line.
- (b) All artificial or prerecorded telephone messages shall:
  - (1) At the beginning of the message, state clearly the identity of the business, individual, or other entity that is responsible for initiating the call. If a business is responsible for initiating the call, the name under which the entity is registered to conduct business with the State Corporation Commission(or comparable regulatory authority) must be stated, and
  - (2) During or after the message, state clearly the telephone number(other than that of the autodialer or prerecorded message player that placed the call) of such business, other entity, or individual. The telephone number provided may not be a 900 number or any other number for which charges exceed local or long distance transmission charges. For telemarketing messages to residential telephone

subscribers, such telephone number must permit any individual to make a do-not-call request during regular business hours for the duration of the telemarketing campaign.

(c) No person or entity shall initiate any telephone solicitation, as defined in paragraph (f)(12) of this section, to:

(1) Any residential telephone subscriber before the hour of 8 a.m. or after 9 p.m.(local time at the called party's location), or

(2) A residential telephone subscriber who has registered his or her telephone number on the national do-not-call registry of persons who do not wish to receive telephone solicitations that is maintained by the federal government. Such do-not-call registrations must be honored for a period of 5 years. Any person or entity making telephone solicitations(or on whose behalf telephone solicitations are made) will not be liable for violating this requirement if:

( i ) It can demonstrate that the violation is the result of error and that as part of its routine business practice, it meets the following standards:

(A) Written procedures. It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written procedures to comply with the national do-not-call rules;

(B) Training of personnel. It has trained its personnel, and any entity assisting in its compliance, in procedures established pursuant to the national do-not-call rules;

(C) Recording. It has maintained and recorded a list of telephone numbers that the seller may not contact;

(D) Accessing the national do-not-call database. It uses a process to prevent telephone solicitations to any telephone number on any list established pursuant to the do-not-call rules, employing a version of the national do-not-call registry obtained from the administrator of the registry no more

than 31 days prior to the date any call is made, and maintains records documenting this process.

Note to paragraph (c)(2)( i ) (D): The requirement in paragraph 64.1200 (c)(2)( i )

(D) for persons or entities to employ a version of the national do-not-call registry obtained from the administrator no more than 31 days prior to the date any call is made is effective January 1, 2005. Until January 1, 2005, persons or entities must continue to employ a version of the registry obtained from the administrator of the registry no more than three months prior to the date any call is made.

(E) Purchasing the national do-not-call database. It uses a process to ensure that it does not sell, rent, lease, purchase or use the national do-not-call database, or any part thereof, for any purpose except compliance with this section and any such state or federal law to prevent telephone solicitations to telephone numbers registered on the national database. It purchases access to the relevant do-not-call data from the administrator of the national database and does not participate in any arrangement to share the cost of accessing the national database, including any arrangement with telemarketers who may not divide the costs to access the national database among various client sellers; or

( ii ) It has obtained the subscriber's prior express invitation or permission. Such permission must be evidenced by a signed, written agreement between the consumer and seller which states that the consumer agrees to be contacted by this seller and includes the telephone number to which the calls may be placed; or

( iii ) The telemarketer making the call has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recipient of the call.

- (d) No person or entity shall initiate any call for telemarketing purposes to a residential telephone subscriber unless such person or entity has instituted procedures for maintaining a list of persons who request not to receive telemarketing calls made by or on behalf of that person or entity. The procedures instituted must meet the following minimum standards:
- (1) Written policy. Persons or entities making calls for telemarketing purposes must have a written policy, available upon demand, for maintaining a do-not-call list.
  - (2) Training of personnel engaged in telemarketing. Personnel engaged in any aspect of telemarketing must be informed and trained in the existence and use of the do-not-call list.
  - (3) Recording, disclosure of do-not-call requests. If a person or entity making a call for telemarketing purposes(or on whose behalf such a call is made) receives a request from a residential telephone subscriber not to receive calls from that person or entity, the person or entity must record the request and place the subscriber's name, if provided, and telephone number on the do-not-call list at the time the request is made. Persons or entities making calls for telemarketing purposes(or on whose behalf such calls are made) must honor a residential subscriber's do-not-call request within a reasonable time from the date such request is made. This period may not exceed thirty days from the date of such request. If such requests are recorded or maintained by a party other than the person or entity on whose behalf the telemarketing call is made, the person or entity on whose behalf the telemarketing call is made will be liable for any failures to honor the do-not-call request. A person or entity making a call for telemarketing purposes must obtain a consumer's prior express permission to share or forward the consumer's request not to be called

to a party other than the person or entity on whose behalf a telemarketing call is made or an affiliated entity.

- (4) Identification of sellers and telemarketers. A person or entity making a call for telemarketing purposes must provide the called party with the name of the individual caller, the name of the person or entity on whose behalf the call is being made, and a telephone number or address at which the person or entity may be contacted. The telephone number provided may not be a 900 number or any other number for which charges exceed local or long distance transmission charges.
- (5) Affiliated persons or entities. In the absence of a specific request by the subscriber to the contrary, a residential subscriber's do-not-call request shall apply to the particular business entity making the call(or on whose behalf a call is made), and will not apply to affiliated entities unless the consumer reasonably would expect them to be included given the identification of the caller and the product being advertised.
- (6) Maintenance of do-not-call lists. A person or entity making calls for telemarketing purposes must maintain a record of a consumer's request not to receive further telemarketing calls. A do-not-call request must be honored for 5 years from the time the request is made.
- (7) Tax-exempt nonprofit organizations are not required to comply with 64.1200(d).
- (e) The rules set forth in paragraph (c) and (d) of this section are applicable to any person or entity making telephone solicitations or telemarketing calls to wireless telephone numbers to the extent described in the Commission's Report and Order, CG Docket No. 02-278, FCC 03-153, "Rules and Regulations Implementing the 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 of 1991."
- (f) As used in this section: (1) The terms automatic telephone dialing system and

autodialer mean equipment which has the capacity to store or produce telephone numbers to be called using a random or sequential number generator and to dial such numbers.

- (2) The term clear and conspicuous for purposes of paragraph (a) (3) (iii) (A) of this section means a notice that would be apparent to the reasonable consumer, separate and distinguishable from the advertising copy or other disclosures, and placed at either the top or bottom of the facsimile.
- (3) The term emergency purposes means calls made necessary in any situation affecting the health and safety of consumers.
- (4) The term established business relationship for purposes of telephone solicitations means a prior or existing relationship formed by a voluntary two-way communication between a person or entity and a residential subscriber with or without an exchange of consideration, on the basis of the subscriber's purchase or transaction with the entity within the eighteen (18) months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the telephone call or on the basis of the subscriber's inquiry or application regarding products or services offered by the entity within the three months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the call, which relationship has not been previously terminated by either party.
- ( i ) The subscriber's seller-specific do-not-call request, as set forth in paragraph (d) (3) of this section, terminates an established business relationship for purposes of telemarketing and telephone solicitation even if the subscriber continues to do business with the seller.
- ( ii ) The subscriber's established business relationship with a particular business entity does not extend to affiliated entities unless the subscriber would reasonably expect them to be included given the nature and type of goods or services offered by the affiliate and the identity of the affiliate.

- (5) The term established business relationship for purposes of paragraph (a)(3) of this section on the sending of facsimile advertisements means a prior or existing relationship formed by a voluntary two-way communication between a person or entity and a business or residential subscriber with or without an exchange of consideration, on the basis of an inquiry, application, purchase or transaction by the business or residential subscriber regarding products or services offered by such person or entity, which relationship has not been previously terminated by either party.
- (6) The term facsimile broadcaster means a person or entity that transmits messages to telephone facsimile machines on behalf of another person or entity for a fee.
- (7) The term seller means the person or entity on whose behalf a telephone call or message is initiated for the purpose of encouraging the purchase or rental of, or investment in, property, goods, or services, which is transmitted to any person.
- (8) The term sender for purposes of paragraph (a)(3) of this section means the person or entity on whose behalf a facsimile unsolicited advertisement is sent or whose goods or services are advertised or promoted in the unsolicited advertisement.
- (9) The term telemarketer means the person or entity that initiates a telephone call or message for the purpose of encouraging the purchase or rental of, or investment in, property, goods, or services, which is transmitted to any person.
- (10) The term telemarketing means the initiation of a telephone call or message for the purpose of encouraging the purchase or rental of, or investment in, property, goods, or services, which is transmitted to any person.
- (11) The term telephone facsimile machine means equipment which has the capacity to transcribe text or images, or both, from paper into an electronic

signal and to transmit that signal over a regular telephone line, or to transcribe text or images(or both) from an electronic signal received over a regular telephone line onto paper.

(12) The term telephone solicitation means the initiation of a telephone call or message for the purpose of encouraging the purchase or rental of, or investment in, property, goods, or services, which is transmitted to any person, but such term does not include a call or message:

- ( i ) To any person with that person's prior express invitation or permission;
- ( ii ) To any person with whom the caller has an established business relationship; or
- ( iii ) By or on behalf of a tax-exempt nonprofit organization.

(13) The term unsolicited advertisement means any material advertising the commercial availability or quality of any property, goods, or services which is transmitted to any person without that person's prior express invitation or permission, in writing or otherwise.

(14) The term personal relationship means any family member, friend, or acquaintance of the telemarketer making the call.

(g) Beginning January 1, 2004, common carriers shall:

(1) When providing local exchange service, provide an annual notice, via an insert in the subscriber's bill, of the right to give or revoke a notification of an objection to receiving telephone solicitations pursuant to the national do-not-call database maintain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methods by which such rights may be exercised by the subscriber. The notice must be clear and conspicuous and include, at a minimum, the Internet address and toll-free number that residential telephone subscribers may use to register on the national database.

(2) When providing service to any person or entity for the purpose of making

telephone solicitations, make a one-time notification to such person or entity of the national do-not-call requirements, including, at a minimum, citation to 47 CFR 64.1200 and 16 CFR 310. Failure to receive such notification will not serve as a defense to any person or entity making telephone solicitations from violations of this section.

- (h) The administrator of the national do-not-call registry that is maintained by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make the telephone numbers in the database available to the States so that a State may use the telephone numbers that relate to such State as part of any database, list or listing system maintained by such State for the regulation of telephone solicitations.

[68 FR 44177, July 25, 2003, as amended at 68 FR 59131, Oct. 14, 2003; 69 FR 60316, Oct. 8, 2004; 70 FR 19337, Apr. 13, 2005; 71 FR 25977, May 3, 2006; 71 FR 56893, Sept. 28, 2006; 71 FR 75122, Dec. 14, 2006]

**Sec. 64.2009 Safeguards required for use of customer proprietary network information.**

- (a) Telecommunications carriers must implement a system by which the status of a customer's CPNI approval can be clearly established prior to the use of CPNI.
- (b) Telecommunications carriers must train their personnel as to when they are and are not authorized to use CPNI, and carriers must have an express disciplinary process in place.
- (c) All carriers shall maintain a record, electronically or in some other manner, of their own and their affiliates' sales and marketing campaigns that use their customers' CPNI. All carriers shall maintain a record of all instances where CPNI was disclosed or provided to third parties, or where third parties were allowed access to CPNI. The record must include a description of each campaign, the specific CPNI that was used in the campaign, and what products and services were offered as a part of the campaign. Carriers shall retain the

record for a minimum of one year.

- (d) Telecommunications carriers must establish a supervisory review process regarding carrier compliance with the rules in this subpart for outbound marketing situations and maintain records of carrier compliance for a minimum period of one year. Specifically, sales personnel must obtain supervisory approval of any proposed outbound marketing request for customer approval.
- (e) A telecommunications carrier must have an officer, as an agent of the carrier, sign and file with the Commission a compliance certificate on an annual basis. The officer must state in the certification that he or she has personal knowledge that the company has established operating procedures that are adequate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rules in this subpart. The carrier must provide a statement accompanying the certificate explaining how its operating procedures ensure that it is or is not in compliance with the rules in this subpart. In addition, the carrier must include an explanation of any actions taken against data brokers and a summary of all customer complaints received in the past year concerning the unauthorized release of CPNI. This filing must be made annually with the Enforcement Bureau on or before March 1 in EB Docket No. 06-36, for data pertaining to the previous calendar year.
- (f) Carriers must provide written notice within five business days to the Commission of any instance where the opt-out mechanisms do not work properly, to such a degree that consumers' inability to opt-out is more than an anomaly.
  - (1) The notice shall be in the form of a letter, and shall include the carrier's name, a description of the opt-out mechanism (s) used, the problem (s) experienced, the remedy proposed and when it will be/was implemented, whether the relevant state commission (s) has been notified and whether it has taken any action, a copy of the notice provided to customers, and contact information.

- (2) Such notice must be submitted even if the carrier offers other methods by which consumers may opt-out.

[63 FR 20338, Apr. 24, 1998, as amended at 64 FR 53264, Oct. 1, 1999; 67 FR 59213, Sept. 20, 2002; 72 FR 31962, June 8, 2007]

## **PART 54\_UNIVERSAL SERVICE**

### **Sec. 54.405 Carrier obligation to offer Lifeline.**

All eligible telecommunications carriers shall:

- (a) Make available Lifeline service, as defined in Sec. 54.401, to qualifying low-income consumers, and
- (b) Publicize the availability of Lifeline service in a manner reasonably designed to reach those likely to qualify for the service.
- (c) Notify Lifeline subscribers of impending termination of Lifeline service if the carrier has a reasonable basis to believe that the subscriber no longer meets the Lifeline-qualifying criteria, as described in Sec. 54.409. Notification of impending termination shall be in the form of a letter separate from the subscriber's monthly bill. A carrier providing Lifeline service in a state that has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applicable to Lifeline termination, that requires, at a minimum, written notification of impending termination, must comply with the applicable state requirements.
- (d) Allow subscribers 60 days following the date of the impending termination letter required in paragraph (c) of this section in which to demonstrate continued eligibility. Subscribers making such a demonstration must present proof of continued eligibility to the carrier consistent with applicable state or federal verification requirements, as described in Sec. 54.410 (c). Carriers must terminate subscribers who fail to demonstrate continued eligibility within the

60-day time period. A carrier providing Lifeline service in a state that has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applicable to Lifeline termination must comply with the applicable state requirements.

[65 FR 47905, Aug. 4, 2000, as amended at 69 FR 34600, June 22, 2004]

**Sec. 54.411 Link Up program defined.**

- (a) For purposes of this subpart, the term “Link Up” shall describe the following assistance program for qualifying low-income consumers, which an eligible telecommunications carrier shall offer as part of its obligation set forth in Sec. Sec. 54.101 (a) (9) and 54.101 (b):
  - (1) A reduction in the carrier’s customary charge for commencing telecommunications service for a single telecommunications connection at a consumer’s principal place of residence. The reduction shall be half of the customary charge or \$30.00, whichever is less; and
  - (2) A deferred schedule for payment of the charges assessed for commencing service, for which the consumer does not pay interest. The interest charges not assessed to the consumer shall be for connection charges of up to \$200.00 that are deferred for a period not to exceed one year. Charges assessed for commencing service include any charges that the carrier customarily assesses to connect subscribers to the network. These charges do not include any permissible security deposit requirements.
  - (3) For an eligible resident of Tribal lands, a reduction of up to \$70, in addition to the reduction in paragraph (a)(1) of this section, to cover 100 percent of the charges between \$60 and \$130 assessed for commencing telecommunications service at the principal place of residence of the eligible resident of Tribal lands.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charges assessed for commencing telecommunications services shall include any charges that the carrier customarily

assesses to connect subscribers to the network, including facilities-based charges associated with the extension of lines or construction of facilities needed to initiate service. The reduction shall not apply to charges assessed for facilities or equipment that fall on the customer side of demarcation point, as defined in Sec. 68.3 of this chapter.

- (b) A qualifying low-income consumer may choose one or both of the programs set forth in paragraphs (a)(1) and (a)(2) of this section. An eligible resident of Tribal lands may participate in paragraphs (a)(1), (a)(2), and (a)(3) of this section.
- (c) A carrier's Link Up program shall allow a consumer to receive the benefit of the Link Up program for a second or subsequent time only for a principal place of residence with an address different from the residence address at which the Link Up assistance was provided previously.
- (d) An eligible telecommunications carrier shall publicize the availability of Link Up support in a manner reasonably designed to reach those likely to qualify for the support.

[62 FR 32948, June 17, 1997, as amended at 65 FR 47906, Aug. 4, 2000]

## **PART 79\_CLOSED CAPTIONING AND VIDEO DESCRIPTION OF VIDEO PROGRAMMING**

### **Sec. 79.2 Accessibility of programming providing emergency information.**

- (a) Definitions. (1)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definitions in Sec. Sec. 79.1 and 79.3 apply.
- (2) Emergency information. Information, about a current emergency, that is intended to further the protection of life, health, safety, and property, i.e., critical details regarding the emergency and how to respond to the emergency. Examples of

the types of emergencies covered include tornadoes, hurricanes, floods, tidal waves, earthquakes, icing conditions, heavy snows, widespread fires, discharge of toxic gases, widespread power failures, industrial explosions, civil disorders, school closings and changes in school bus schedules resulting from such conditions, and warnings and watches of impending changes in weather.

Note to paragraph (a) (2): Critical detail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specific details regarding the areas that will be affected by the emergency, evacuation orders, detailed descriptions of areas to be evacuated, specific evacuation routes, approved shelters or the way to take shelter in one's home, instructions on how to secure personal property, road closures, and how to obtain relief assistance.

(b) Requirements for accessibility of programming providing emergency information.

(1)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s must make emergency information, as defined in paragraph (a) of this section, accessible as follows:

- ( i ) Emergency information that is provided in the audio portion of the programming must be made accessible to persons with hearing disabilities by using a method of closed captioning or by using a method of visual presentation, as described in Sec. 79.1 of this part;
- ( ii ) Emergency information that is provided in the video portion of a regularly scheduled newscast, or newscast that interrupts regular programming, must be made accessible to persons with visual disabilities; and
- ( iii ) Emergency information that is provided in the video portion of programming that is not a regularly scheduled newscast, or a newscast that interrupts regular programming, must be accompanied with an aural tone.

(2) This rule applies to emergency information primarily intended for distribution to an audience in the geographic area in which the emergency is occurring.

(3)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s must ensure that:

- ( i ) Emergency information should not block any closed captioning and any closed captioning should not block any emergency information provided by means other than closed captioning; and
  - ( ii ) Emergency information should not block any video description and any video description provided should not block any emergency information provided by means other than video description.
- (c) Complaint procedures. A complaint alleging a violation of this section may be transmitted to the Commission by any reasonable means, such as letter, facsimile transmission, telephone(voice/TRS/TTY), Internet e-mail, audio-cassette recording, and Braille, or some other method that would best accommodate the complainant's disability. The complaint should include the name of the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 against whom the complaint is alleged, the date and time of the omission of emergency information, and the type of emergency. The Commission will notify the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 of the complaint, and the distributor will reply to the complaint within 30 days.

[65 FR 26762, May 9, 2000, as amended at 65 FR 54811, Sept. 11, 2000]

## **PART 64\_MISCELLANEOUS RULES RELATING TO COMMON CARRIERS-**

### **Sec. 64.1120 Verification of orders for telecommunications service.**

- (a) No telecommunications carrier shall submit or execute a change on the behalf of a subscriber in the subscriber's selection of a provider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 except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prescribed in this subpart.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preclude any State commission from enforcing these procedures with respect to intrastate services.
- (1) No submitting carrier shall submit a change on the behalf of a subscriber in the

subscriber's selection of a provider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ior to obtaining:

- ( i ) Authorization from the subscriber, and
  - ( ii ) Verification of that author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prescribed in this section. The submitting carrier shall maintain and preserve records of verification of subscriber authorization for a minimum period of two years after obtaining such verification.
- (2) An executing carrier shall not verify the submission of a change in a subscriber's selection of a provider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 received from a submitting carrier. For an executing carrier, compliance with the procedures described in this part shall be defined as prompt execution, without any unreasonable delay, of changes that have been verified by a submitting carrier.
- (3) Commercial mobile radio services(CMRS) providers shall be excluded from the verification requirements of this part as long as they are not required to provide equal access to common carriers for the provision of telephone toll services, in accordance with 47 U.S.C. 332 (c) (8).
- (b) Where a telecommunications carrier is selling more than one type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e.g., local exchange, intraLATA/intrastate toll, interLATA/interstate toll, and international toll) that carrier must obtain separate authorization from the subscriber for each service sold, although the authorizations may be made within the same solicitation. Each authorization must be verified separately from any other authorizations obtained in the same solicitation. Each authorization must be verified in accordance with the verification procedures prescribed in this part.
- (c) No telecommunications carrier shall submit a preferred carrier change order

unless and until the order has been confirmed in accordance with one of the following procedures:

- (1) The telecommunications carrier has obtained the subscriber's written or electronically signed authorization in a form that meets the requirements of Sec. 64.1130; or
  - (2) The telecommunications carrier has obtained the subscriber's electronic authorization to submit the preferred carrier change order. Such authorization must be placed from the telephone number (s) on which the preferred carrier is to be changed and must confirm the information in paragraph (a) (1) of this section. Telecommunications carriers electing to confirm sales electronically shall establish one or more toll-free telephone numbers exclusively for that purpose. Calls to the number (s) will connect a subscriber to a voice response unit, or similar mechanism, that records the required information regarding the preferred carrier change, including automatically recording the originating automatic number identification; or
  - (3) An appropriately qualified independent third party has obta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forth in paragraphs (c)(3) ( i ) through (c)(3) ( iv ) of this section, the subscriber's oral authorization to submit the preferred carrier change order that confirms and includes appropriate verification data(e.g., the subscriber's date of birth or social security number). The independent third party must not be owned, managed, controlled, or directed by the carrier or the carrier's marketing agent; must not have any financial incentive to confirm preferred carrier change orders for the carrier or the carrier's marketing agent; and must operate in a location physically separate from the carrier or the carrier's marketing agent.
- ( i ) Methods of third party verification. Automated third party verification

systems and three-way conference calls may be used for verification purposes so long as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s (c)(3) (ii) through (c)(3) (iv) of this section are satisfied.

- (ii) Carrier initiation of third party verification. A carrier or a carrier's sales representative initiating a three-way conference call or a call through an automated verification system must drop off the call once the three-way connection has been established.
  - (iii) Requirements for content and format of third party verification. All third party verification methods shall elicit, at a minimum, the identity of the subscriber; confirmation that the person on the call is authorized to make the carrier change; confirmation that the person on the call wants to make the carrier change; the names of the carriers affected by the change(not including the name of the displaced carrier); the telephone numbers to be switched; and the types of service involved. Third party verifiers may not market the carrier's services by providing additional information, including information regarding preferred carrier freeze procedures.
  - (iv) Other requirements for third party verification. All third party verifications shall be conducted in the same language that was used in the underlying sales transaction and shall be recorded in their entirety.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forth in 4.1120(a)(1) (ii), submitting carriers shall maintain and preserve audio records of verification of subscriber authorization for a minimum period of two years after obtaining such verification. Automated systems must provide consumers with an option to speak with a live person at any time during the call.
- (4) Any State-enacted verification procedures applicable to intrastate preferred carrier change orders only.

- (d) Telecommunications carriers must provide subscribers the option of using one of the authorization and verification procedures specified in Sec. 64.1120 (c) in addition to an electronically signed authorization and verification procedure under 64.1120 (c) (1).
- (e) A telecommunications carrier may acquire, through a sale or transfer, either part or all of another telecommunications carrier's subscriber base without obtaining each subscriber's authorization and verification in accordance with Sec. 64.1120 (c), provided that the acquiring carrier complies with the following streamlined procedures. A telecommunications carrier may not use these streamlined procedures for any fraudulent purpose, including any attempt to avoid liability for violations under part 64, subpart K of the Commission rules.
  - (1) No later than 30 days before the planned transfer of the affected subscribers from the selling or transferring carrier to the acquiring carrier, the acquiring carrier shall file with the Commission's Office of the Secretary a letter notification in CC Docket No. 00-257 providing the names of the parties to the transaction, the types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to be provided to the affected subscribers, and the date of the transfer of the subscriber base to the acquiring carrier. In the letter notification, the acquiring carrier also shall certify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 to provide advance subscriber notice in accordance with Sec. 64.1120(e)(3), with the obligations specified in that notice, and with other statutory and Commission requirements that apply to this streamlined process. In addition, the acquiring carrier shall attach a copy of the notice sent to the affected subscribers.
  - (2) If, subsequent to the filing of the letter notification with the Commission required by Sec. 64.1120(e)(1), any material changes to the required information should develop, the acquiring carrier shall file written notification of these

changes with the Commission no more than 10 days after the transfer date announced in the prior notification. The Commission reserves the right to require the acquiring carrier to send an additional notice to the affected subscribers regarding such material changes.

- (3) Not later than 30 days before the transfer of the affected subscribers from the selling or transferring carrier to the acquiring carrier, the acquiring carrier shall provide written notice to each affected subscriber of the information specified. The acquiring carrier is required to fulfill the obligations set forth in the advance subscriber notice. The advance subscriber notice shall be provid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47 U.S.C. 255 and the Commission's rules regarding accessibility to blind and visually-impaired consumers, 47 CFR 6.3, 6.5 of this chapter. The following information must be included in the advance subscriber notice:

- ( i ) The date on which the acquiring carrier will become the subscriber's new provider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
- ( ii ) The rates,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ervice (s) to be provided by the acquiring carrier upon the subscriber's transfer to the acquiring carrier, and the means by which the acquiring carrier will notify the subscriber of any change (s) to these rates, terms, and conditions.
- ( iii ) The acquiring carrier will be responsible for any carrier change charges associated with the transfer, except where the carrier is acquiring customers by default, other than through bankruptcy, and state law requires the exiting carrier to pay these costs;
- ( iv ) The subscriber's right to select a different preferred carrier for the telecommunications service (s) at issue, if an alternative carrier is available,
- ( v ) All subscribers receiving the notice, even those who have arranged preferred

carrier freezes through their local service providers on the service (s) involved in the transfer, will be transferred to the acquiring carrier, unless they have selected a different carrier before the transfer date; existing preferred carrier freezes on the service (s) involved in the transfer will be lifted; and the subscribers must contact their local service providers to arrange a new freeze.

- (vi) Whether the acquiring carrier will be responsible for handling any complaints filed, or otherwise raised, prior to or during the transfer against the selling or transferring carrier, and (vii) The toll-free customer service telephone number of the acquiring carrier.

[65 FR 47691, Aug. 3, 2000, as amended at 66 FR 12892, Mar. 1, 2001; 66 FR 28124, May 22, 2001; 68 FR 19159, Apr. 18, 2003; 70 FR 12611, Mar. 15, 2005]

<첨부 6>

## 영국통신법 분쟁해결 관련 조항

### Chapter 3

#### Disputes and appeals

##### Disputes

185 Reference of disputes to OFCOM (1) This section applies in the case of a dispute relating to the provision of network access if it is-

- (a) a dispute between different communications providers;
- (b) a dispute between a communications provider and a person who makes associated facilities available;
- (c) a dispute between different persons making such facilities available;
- (d) a dispute relating to the subject-matter of a condition set under section 74(1) between a communications provider or person who makes associated facilities available and a person who (without being such a person) is a person to whom such a condition applies; or
- (e) a dispute relating to the subject-matter of such a condition between different persons each of whom (without being a communications provider or a person who makes associated facilities available) is a person to whom such a condition applies.

(2) This section also applies in the case of any other dispute if-

- (a) it relates to rights or obligations conferred or imposed by or under this Part or any of the enactments relating to the management of the radio spectrum that are not contained in this Part;

- (b) it is a dispute between different communications providers; and
  - (c) it is not an excluded dispute.
- (3) Any one or more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may refer it to OFCOM.
- (4) A reference made under this section is to be made in such manner as OFCOM may require.
- (5) The way in which a requirement under subsection (4)-
- (a) is to be imposed, or
  - (b) may be withdrawn or modified, is by a notice published in such manner as OFCOM consider appropriate for bringing the requirement, withdrawal or modification to the attention of the persons who, in their opinion, are likely to be affected by it.
- (6) Requirements imposed under subsection (4) may make different provision for different cases.
- (7) A dispute is an excluded dispute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2) if it is about-
- (a) obligations imposed on a communications provider by SMP apparatus conditions;
  - (b) contraventions of sections 125 to 127;
  - (c) obligations imposed on a communications provider by or under any of sections 128 to 131; or
  - (d) the operation in the case of a communications provider of section 134.
- (8)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 (a) the disputes that relate to the provision of network access include disputes as to the terms or conditions on which it is or may be provided in a particular case; and
  - (b) the disputes that relate to an obligation include disputes as to the terms or conditions on which any transaction is to be entered into for the purpose of complying with that obligation.

186 Action by OFCOM on dispute reference (1) This section applies where a dispute is referred to OFCOM under and in accordance with section 185.

(2) OFCOM must decide whether or not it is appropriate for them to handle the dispute.

(3) Unless they consider-

- (a) that there are alternative means available for resolving the dispute,
- (b) that a resolution of the dispute by those means would be consistent with the Community requirements set out in section 4, and
- (c) that a prompt and satisfactory resolution of the dispute is likely if those alternative means are used for resolving it, their decision must be a decision that it is appropriate for them to handle the dispute.

(4)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after OFCOM have decided-

- (a) that it is appropriate for them to handle the dispute, or
- (b) that it is not, they must inform each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of their decision and of their reasons for it.

(5) The notification must state the date of the decision.

(6) Where-

- (a) OFCOM decide that it is not appropriate for them to handle the dispute, but
- (b) the dispute is not resolved by other means before the end of the four months after the day of OFCOM's decision, the dispute may be referred back to OFCOM by one or more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187 Legal proceedings about referred disputes (1) Where a dispute is referred or referred back to OFCOM under this Chapter, the reference is not to prevent-

- (a) the person making it,
- (b) another party to the dispute,
- (c) OFCOM, or

- (d) any other person, from bringing, or continuing, any legal proceedings with respect to any of the matters under dispute.
  - (2) Nor is the reference or reference back to OFCOM under this Chapter of a dispute to prevent OFCOM from-
    - (a) giving a notification in respect of something that they have reasonable grounds for believing to be a contravention of any obligation imposed by or under any an enactment;
    - (b) exercising any of their other powers under any enactment in relation to a contravention of such an obligation; or
    - (c) taking any other step in preparation for or with a view to doing anything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s.
  - (3) If, in any legal proceedings with respect to a matter to which a dispute relates, the court orders the handling of the dispute by OFCOM to be stayed or sisted-
    - (a) OFCOM are required to make a determination for resolving the dispute only if the stay or sist is lifted or expires; and
    - (b) the period during which the stay or sist is in force must be disregarded in determining the period within which OFCOM are required to make such a determination.
  - (4) Subsection (1) is subject to section 190 (8) and to any agreement to the contrary binding the parties to the dispute.
  - (5) In this section “legal proceedings” means civil or criminal proceedings in or before a court.
- 188 Procedure for resolving disputes (1) This section applies where-
- (a) OFCOM have decided under section 186 (2) that it is appropriate for them to handle a dispute; or
  - (b) a dispute is referred back to OFCOM under section 186(6).

- (2) OFCOM must-
  - (a) consider the dispute; and
  - (b) make a determination for resolving it.
- (3) The procedure for the consideration and determination of the dispute is to be the procedure that OFCOM consider appropriate.
- (4) In the case of a dispute referred back to OFCOM under section 186(6), that procedure may involve allowing the continuation of a procedure that has already been begun for resolving the dispute by alternative means.
- (5) Except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and subject to section 187 (3), OFCOM must make their determination no more than four months after the following day-
  - (a) in a case falling within subsection (1) (a), the day of the decision by OFCOM that it is appropriate for them to handle the dispute; and
  - (b) in a case falling within subsection (1) (b), the day on which the dispute is referred back to them.
- (6) Where it is practicable for OFCOM to make their determination before the end of the four month period, they must make it as soon in that period as practicable.
- (7) OFCOM must-
  - (a) send a copy of their determination, together with a full statement of their reasons for it, to every party to the dispute; and
  - (b) publish so much of their determination as(having regard, in particular, to the need to preserve commercial confidentiality) they consider it appropriate to publish.
- (8) The publication of information under this section must be in such manner as OFCOM consider appropriate for bringing it to the attention, to the extent that

they consider appropriate, of members of the public.

- 189 Disputes involving other member States (1) This section applies where it appears to OFCOM that a dispute referred or referred back to them under this Chapter relates partly to a matter falling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regulatory authorities of another member State.
- (2) A dispute relates to matters falling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regulatory authorities of another member State to the extent that-
- (a) it relates to the carrying on of activities by one or both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in more than one member State or to activities carried on by different parties to the dispute in different member States; and
- (b) the activities to which the dispute relates, so far as they are carried on in another member State, are carried on in the member State for which those authorities are the regulatory authorities.
- (3)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2) the activities that are carried on in a member State include anything done by means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 or part of such a network, which is situated in that member State.
- (4) Before taking any steps under this Chapter in relation to the reference or the dispute, OFCOM must consult the other regulatory authorities within whose jurisdiction the matter falls.
- (5) It shall be the duty of OFCOM to secure that steps taken in relation to the reference or dispute (whether taken by them or by the other regulatory authorities) are, so far as practicable, agreed between OFCOM and those authorities.
- (6) Accordingly, section 188 is to have effect in relation to the reference as if the period for making a determination which is specified in subsection (5) of that section were such period (if any) as may be agreed between-

- (a) OFCOM; and
  - (b) the other regulatory authorities within whose jurisdiction the matter falls.
- 190 Resolution of referred disputes (1) Where OFCOM make a determination for resolving a dispute referred to them under this Chapter, their only powers are those conferred by this section.
- (2) Their main power(except in the case of a dispute relating to rights and obligations conferred or imposed by or under the enactments relating to the management of the radio spectrum) is to do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 (a) to make a declaration setting ou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 (b) to give a direction fixing the terms or conditions of transactions between the parties to the dispute;
    - (c) to give a direction imposing an obligation, enforceable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 to enter into a transaction between themselves on the terms and conditions fixed by OFCOM; and
    - (d) for the purpose of giving effect to a determination by OFCOM of the proper amount of a charge in respect of which amounts have been paid by one of the parties of the dispute to the other, to give a direction, enforceable by the party to whom the sums are to be paid, requiring the payment of sums by way of adjustment of an underpayment or overpayment.
  - (3) Their main power in the excepted case is just to make a declaration setting ou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 (4) Nothing in this section prevents OFCOM from exercising the following powers in consequence of their consideration under this Chapter of any dispute-
    - (a) their powers under Chapter 1 of this Part to set, modify or revoke general conditions, universal service conditions, access related conditions, privileged

- supplier conditions or SMP conditions;
  - (b) their powers to vary, modify or revoke wireless telegraphy licences or grants of recognised spectrum access;
  - (c) their power to make, amend or revoke regulations under section 1 or 3 of the Wireless Telegraphy Act 1949(c. 54).
- (5) In the case of a dispute referred back to OFCOM under section 186 (6)-
- (a) OFCOM may, in making their determination, take account of decisions already made by others in the course of an attempt to resolve the dispute by alternative means; and
  - (b) the determination made by OFCOM may include provision ratifying decisions so made.
- (6) Where OFCOM make a determination for resolving a dispute, they may require a party to the dispute-
- (a) to make payments to another party to the dispute in respect of costs and expenses incurred by that other party in consequence of the reference of the dispute to OFCOM, or in connection with it; and
  - (b) to make payments to OFCOM in respect of costs and expenses incurred by them in dealing with the dispute.
- (7) OFCOM are not, under subsection (6) (b), to require payments to be made to them by a party to the dispute except-
- (a) in a case where the dispute relates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under the enactments relating to the management of the radio spectrum; or
  - (b) where it appears to OFCOM that the reference of the dispute by that party was frivolous or vexatious or that that party has otherwise abused the right of reference conferred by this Chapter.

- (8) A determination made by OFCOM for resolving a dispute referred or referred back to them under this Chapter binds all the parties to the dispute.
- (9) Subsection (8) is subject to section 192.

<첨부 7>

## 영국통신법 경쟁관련 조항

### Part 5 Competition in communications markets

#### Chapter 1 Functions of OFCOM under competition legislation

369 Matters in relation to which OFCOM have competition functions (1) In this Chapter references to communications matters are references to an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 (a) the provis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 (b) the provis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 (c) the provision or making available of services or facilities which are provided or made available-
  - ( i ) by means of, or in association with the provision(by the same person or another)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 or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 or
  - ( ii )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the use of any such network or service (whether provided by the same person or another);
- (d) apparatus used for providing or making available anything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s;
- (e) broadcasting and related matters.

(2)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make such amendments of subsection (1) as he may consider appropriate for the purpose of modifying the description of activities in respect of which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Part-

- (a) confer functions on OFCOM under Part 1 of the Competition Act 1998(c. 41) or

relate to the carrying out by OFCOM of those functions; or

- (b) confer functions on OFCOM under Part 4 of the Enterprise Act 2002(c. 40) or relate to the carrying out by OFCOM of those functions.

- (3) No order is to be made containing provision authorised by this section unless a draft of the order has been laid before Parliament and approved by a resolution of each House.

370 OFCOM's functions under Part 4 of the Enterprise Act 2002 (1) The functions to which subsection (2) applies shall be concurrent functions of OFCOM and the Office of Fair Trading.

- (2) This subsection applies to the functions of the Office of Fair Trading under Part 4 of the Enterprise Act 2002(market investigations)(other than sections 166 and 171) so far as relating to commercial activities connected with communications matters.

- (3) So far as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or in connection with, subsections (1) and (2), references in Part 4 of the Enterprise Act 2002 to the Office of Fair Trading (including references in provisions of that Act applied by that Part) shall be construed as including references to OFCOM except-

- (a) in sections 166 and 171; and
- (b) where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 (4) In subsection (2) the reference to activities connected with communications matters, so far as it is a reference to activities connected with any apparatus falling within paragraph (d) of section 369(1), includes a reference to—

- (a) the supply and export of any such apparatus; and
- (b) the production or acquisition of any such apparatus for supply or export.

- (5) Before the Office of Fair Trading or OFCOM first exercises in relation to any matter functions which are exercisable concurrently by virtue of this section, that

person shall consult the other.

- (6) Neither the Office of Fair Trading nor OFCOM shall exercise in relation to any matter functions which are exercisable concurrently by virtue of this section if functions which are so exercisable have been exercised in relation to that matter by the other.
- (7) It shall be the duty of OFCOM, for the purpose of assisting the Competition Commission in carrying out an investigation on a reference made to them by OFCOM by virtue of subsection (1), to give to the Commission-
  - (a) any information which is in OFCOM's possession and relates to matter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and-
    - ( i ) is requested by the Commission for that purpose, or
    - ( ii ) is information which, in OFCOM's opinion, it would be appropriate for that purpose to give to the Commission without any such request;
 and
  - (b) any other assistance which the Commission may require, and which it is within OFCOM's power to give, in relation to any such matters, and the Commission, for the purposes of carrying out any such investigation, shall take into account any information given to it for that purpose under this subsection.
- (8) If any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by virtue of this section, any functions fall to be, or are capable of being, carried out by OFCOM in relation to any particular case, that question shall be referred to and determined by the Secretary of State.
- (9) No objection shall be taken to anything done under Part 4 of the Enterprise Act 2002(c. 40) by or in relation to OFCOM on the ground that it should have been done by or in relation to the Office of Fair Trading.
- (10) Section 117 of the Enterprise Act 2002(offences of supplying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as applied by section 180 of that Act shall have effect so far as

relating to functions exercisable by OFCOM by virtue of this section as if the references in section 117(1)(a) and (2) to the Office of Fair Trading included references to OFCOM.

(11) Subject to subsection (12), section 3 does not apply in relation to anything done by OFCOM in the carrying out of their functions by virtue of this section.

(12) In the carrying out of any functions by virtue of this section OFCOM may nevertheless have regard to any of the matters in respect of which a duty is imposed by section 3(1) to (4) if it is a matter to which the Office of Fair Trading is entitled to have regard in the carrying out of those functions.

371 OFCOM's functions under the Competition Act 1998 (1) The functions to which subsection (2) applies shall be concurrent functions of OFCOM and the Office of Fair Trading.

(2) This subsection applies to the functions of the Office of Fair Trading under the provisions of Part 1 of the Competition Act 1998(c. 41) (other than sections 38 (1) to (6) and 51) so far as relating to-

(a) agreements, decisions or concerted practices which are of the kind mentioned in section 2(1) of that Act (agreements, decisions or practices affecting trade and having as their object or effect the prevention, restriction or distortion of competition) and which relate to activities connected with communications matters; or

(b) conduct which is of the kind mentioned in section 18(1) of that Act (conduct abusing a dominant position) and relates to such activities.

(3) So far as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provisions of subsections (1) and (2), references to the Office of Fair Trading in Part 1 of the Competition Act 1998 are to be read as including references to OFCOM, except-

(a) in sections 38(1) to (6), 51, 52(6) and (8) and 54, and

- (b) where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 (4) In subsection (2), the reference to activities connected with communications matters, so far as it is a reference to activities connected with any apparatus falling within paragraph (d) of section 369(1), includes a reference to-
  - (a) the supply and export of any such apparatus; and
  - (b) the production or acquisition of any such apparatus for supply or export.
- (5) In section 54 of the Competition Act 1998-
  - (a) in subsection (1)(definition of “regulator” for the purposes of Part 1 of that Act), for paragraph (a) there shall be substituted—
    - “(a) the Office of Communications;”
  - (b) in subsection (4)(power to make regulations about concurrent functions of the Office of Fair Trading and sectoral regulators), “or by Chapter V of Part I of the Transport Act 2000” there shall be inserted “to this Act, by Chapter 5 of Part 1 of the Transport Act 2000 or by section 371 of the Communications Act 2003”.
- (6) In paragraph 5 of Schedule 2 to the Competition Act 1998(publication of list of networking arrangements under the 1990 Act excluded from the Chapter 1 prohibition)—
  - (a) in sub-paragraph (2), for “The 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ITC”)” there shall be substituted “OFCOM”; and
  - (b) in sub-paragraph (3), for “The ITC” there shall be substituted “OFCOM”.
- (7) In section 59(1) of the Competition Act 1998(interpretation of Part 1), after the definition of “Minister of the Crown” there shall be inserted—
  - “OFCOM” means the Office of Communications;”.
- (8) OFCOM may carry out, in respect of activities connected with communications matters and concurrently with the Office of Fair Trading, the functions of the

Office of Fair Trading under any of paragraphs 3, 7, 19(3) and 36 to 39 of Schedule 13 to the Competition Act 1998(transitional provisions).

- (9) If any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by virtue of this section, any functions fall to be, or are capable of being, carried out by OFCOM in relation to a particular case, that question shall be referred to and determined by the Secretary of State.
- (10) No objection shall be taken to anything done under by or in relation to OFCOM under the Competition Act 1998(c. 41) on the ground that it should have been done by or in relation to the Office of Fair Trading.
- (11) Subject to subsection (12), section 3 does not apply in relation to anything done by OFCOM in the carrying out of their functions by virtue of this section.
- (12) In the carrying out of any functions by virtue of this section OFCOM may nevertheless have regard to any of the matters in respect of which a duty is imposed by section 3(1) to (4) if it is a matter to which the Office of Fair Trading is entitled to have regard in the carrying out of those functions.

372 Application of the Competition Act 1998 to news provision (1) Section 194A of the 1990 Act(which modifies the Competition Act 1998 in relation to agreements relating to Channel 3 news provision) shall be amended as follows.

- (2) In subsection (1)(meaning of “relevant agreement”)-
  - (a) for “section 31A(a)” there shall be substituted “section 280 of the Communications Act 2003”; and
  - (b) for “section 31(2)”(in both places) there shall be substituted “that section”.
- (3) In subsections (2), (6) and (7)(b)(i) (consultations with and notifications to the Office of Fair Trading), after the words “the OFT”, in each place where they occur, there shall be inserted “and OFCOM”.
- (4) In subsection (3)(b)-
  - (a) for “section 31(2)” there shall be substituted “section 280 of the Communications

Act 2003”; and

- (b) for “section 31(1) and (2)” there shall be substituted “that section of that Act of 2003”.
- (5) In subsection (5)(c)(declaration without notification), after “the OFT” there shall be inserted “or OFCOM or both of them”.
- (6) In subsection (7)(restriction on exercise by Office of Fair Trading of Chapter III powers)-
  - (a) for “The OFT may not” there shall be substituted “Neither the OFT nor OFCOM may”; and
  - (b) for paragraph(a) there shall be substituted-
    - “(a) the Secretary of State has been notified by the OFT or(as the case may be) by OFCOM of its or their intention to do so; and”.
- (7) In subsection (8)(notice by Office of Fair Trading to the Secretary of State), for the words from the beginning to “assist” in paragraph(a) there shall be substituted-
- (8) Where the OFT or OFCOM is or are proposing to exercise any Chapter III powers in respect of a relevant agreement, it or they must give the Secretary of State particulars of the agreement and such other information-
  - (a) it considers or(as the case may be) they consider will assist”.
- (8) In subsection (9), in the definition of “Chapter III powers”, for “given to the OFT by” there shall be substituted “of the OFT and of OFCOM under”.

<첨부 8>

## 영국통신법 집행절차 관련 조항

### Enforcement of conditions

#### 94 Notification of contravention of conditions

- (1) Where OFCOM determine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for believing that a person is contravening, or has contravened, a condition set under section 45, they may give that person a notification under this section.
- (2) A notification under this section is one which- (a) sets out the determination made by OFCOM; (b) specifies the condition and contravention in respect of which that determination has been made; and (c) specifies the period during which the person notified has an opportunity of doing the things specified in subsection (3).
- (3) Those things are- (a) making representations about the matters notified; (b) complying with notified conditions of which he remains in contravention; and (c) remedying the consequences of notified contraventions.
- (4) Subject to subsections (5) to (7) and section 98(3), the period for doing those things must be the period of one month beginning with the day after the one on which the notification was given.
- (5) OFCOM may, if they think fit, allow a longer period for doing those things either(a) by specifying a longer period in the notification; or (b) by subsequently, on one or more occasions, extending the specified period.
- (6) The person notified shall have a shorter period for doing those things if a shorter period is agreed between OFCOM and the person notified.
- (7) The person notified shall also have a shorter period if- (a) OFCOM have reasonable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contravention is a repeated contravention; (b) they have determined that, in those circumstances, a shorter period would be appropriate; and (c) the shorter period has been specified in the notification.

- (8) A notification under this section- (a) may be given in respect of more than one contravention; and (b) if it is given in respect of a continuing contravention, may be given in respect of any period during which the contravention has continued.
- (9) Where a notification under this section has been given to a person in respect of a contravention of a condition, OFCOM may give a further notification in respect of the same contravention of that condition if, and only if- (a) the contravention is one occurring after the time of the giving of the earlier notification; (b) the contravention is a continuing contravention and the subsequent notification is in respect of so much of a period as falls after a period to which the earlier notification relates; or (c) the earlier notification has been withdrawn without a penalty having been imposed in respect of the notified contravention.
- (10) OFCOM must not give a notification under this section in a case in which- (a) they decide that a more appropriate way of proceeding in relation to the contravention in question would be under the Competition Act 1998 (c. 41); and (b) they publish a statement to that effect in such manner as they consider appropriate for bringing their decision to the attention of the persons who, in their opinion, are likely to be affected by it.
- (11)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 contravention is a repeated contravention, in relation to a notification with respect to that contravention, if- (a) a previous notification under this section has been given in respect of the same contravention or in respect of another contravention of the same condition; and (b) the subsequent notification is given no more than twelve months after the day of the making by OFCOM of a determination for the purposes of section

95(2) or 96(2) that the contravention to which the previous notification related did occur.

## **95 Enforcement notification for contravention of conditions**

- (1) This section applies where-
  - (a) a person(“the notified provider”) has been given a notification under section 94;
  - (b) OFCOM have allowed the notified provider an opportunity of making representations about the matters notified; and
  - (c) the period allowed for the making of the representations has expired.
- (2) OFCOM may give the notified provider an enforcement notification if they are satisfied-
  - (a) that he has, in one or more of the respects notified, been in contravention of a condition specified in the notification under section 94; and
  - (b) that he has not, during the period allowed under that section, taken all such steps as they consider appropriate- ( i ) for complying with that condition; and ( ii ) for remedying the consequences of the notified contravention of that condition.
- (3) An enforcement notification is a notification which imposes one or both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on the notified provider-
  - (a) a requirement to take such steps for complying with the notified condition as may be specified in the notification;
  - (b) a requirement to take such steps for remedying the consequences of the notified contravention as may be so specified.
- (4) A decision of OFCOM to give an enforcement notification to a person-
  - (a) must be notified by them to that person, together with the reasons for the decision, no later than one week after the day on which it is taken; and
  - (b) must fix a reasonable period for the taking of the steps required by the notification.

- (5) It shall be the duty of a person to whom an enforcement notification has been given to comply with it.
- (6) That duty shall be enforceable in civil proceedings by OFCOM-
  - (a) for an injunction;
  - (b) for specific performance of a statutory duty under section 45 of the Court of Session Act 1988 (c. 36); or
  - (c) for any other appropriate remedy or relief.

#### **96 Penalties for contravention of conditions**

- (1) This section applies (in addition to section 95) where-
  - (a) a person (“the notified provider”) has been given a notification under section 94;
  - (b) OFCOM have allowed the notified provider an opportunity of making representations about the matters notified; and
  - (c) the period allowed for the making of the representations has expired.
- (2) OFCOM may impose a penalty on the notified provider if he-
  - (a) has, in one or more of the respects notified, been in contravention of a condition specified in the notification under section 94; and
  - (b) has not, during the period allowed under that section, taken the steps OFCOM consider appropriate- ( i ) for complying with the notified condition; and ( ii ) for remedying the consequences of the notified contravention of that condition.
- (3) Where a notification under section 94 relates to more than one contravention, a separate penalty may be imposed in respect of each contravention.
- (4) Where such a notification relates to a continuing contravention, no more than one penalty may be imposed in respect of the period of contravention specified in the notification.
- (5) OFCOM may also impose a penalty on the notified provider if he has contravened, or is contravening, a requirement of an enforcement notification given

under section 95 in respect of the notified contravention.

- (6) Where OFCOM impose a penalty on a person under this section, they shall-
  - (a) within one week of making their decision to impose the penalty, notify that person of that decision and of their reasons for that decision; and
  - (b) in that notification, fix a reasonable period after it is given as the period within which the penalty is to be paid.
- (7) A penalty imposed under this section-
  - (a) must be paid to OFCOM; and
  - (b) if not paid within the period fixed by them, is to be recoverable by them accordingly.

**97 Amount of penalty under s. 96**

- (1) The amount of a penalty imposed under section 96 is to be such amount not exceeding ten per cent. of the turnover of the notified provider's relevant business for the relevant period as OFCOM determine to be-
  - (a) appropriate; and
  - (b) proportionate to the contravention in respect of which it is imposed.
- (2) In making that determination OFCOM must have regard to-
  - (a) any representations made to them by the notified provider;
  - (b) any steps taken by him towards complying with the conditions contraventions of which have been notified to him under section 94; and
  - (c) any steps taken by him for remedying the consequences of those contraventions.
- (3)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 (a) the turnover of a person's relevant business for a period shall b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such rules as may be set out by order made by the Secretary of State; and
  - (b) provision may also be made by such an order for determining what is to be

treated as the network, service, facility or business by reference to which the calculation of that turnover falls to be made.

- (4) No order is to be made containing provision authorised by subsection (3) unless a draft of the order has been laid before Parliament and approved by a resolution of each House.
- (5) In this section- “relevant business” means(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n order under subsection (3) and to subsections (6) and (7)) so much of any business carried on by the notified provider as consists in an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 (a) the provision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
  - (b) the provision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
  - (c) the making available of associated facilities;
  - (d) the supply of directories for use in connection with the use of such a network or service;
  - (e) the making available of directory enquiry facilities for use for purposes connected with the use of such a network or service;
  - (f) any business not falling within any of the preceding paragraphs which is carried on in association with any business in respect of which any access-related condition is applied to the person carrying it on; “relevant period”, in relation to a contravention by a person of a condition set under section 45, means-
    - (a) except in a case falling within paragraph (b) or (c), the period of one year ending with the 31st March next before the time when notification of the contravention was given under section 94; (b) in the case of a person who at that time has been carrying on that business for a period of less than a year, the period, ending with that time, during which he has been carrying it on; and (c) in the case of a person who at that time has ceased to carry on that business,

the period of one year ending with the time when he ceased to carry it on.

- (6) In the case of a contravention of an SMP apparatus condition the relevant business is so much of any business carried on by the person in respect of whose contravention the penalty is imposed as consists in the supply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apparatus.
- (7) So much of any business of a person on whom the penalty is imposed as falls within paragraph (f) of the definition of a relevant business shall be disregarded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except in relation to- (a) a contravention of an access-related condition imposed in respect of that business; or  
(b) a contravention of an enforcement notification given under section 95 relating to such a condition.
- (8) In this section “the notified provider” has the same meaning as in section 96.

#### **98 Power to deal with urgent cases**

- (1) This section applies where OFCOM determine-
  - (a) that they are entitled to give a notification under section 94 with respect to a contravention by a person (“the contravening provider”) of a condition set under section 45, other than an SMP apparatus condition;
  - (b)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for suspecting that the case is an urgent case; and
  - (c) that the urgency of the case makes it appropriate for OFCOM to take action under this section.
- (2) A case is an urgent case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if the contravention has resulted in, or creates an immediate risk of-
  - (a) a serious threat to the safety of the public, to public health or to national security;
  - (b) serious economic or operational problems for persons (other than the contravening provider) who are communications providers or persons who make associated

facilities available; or

- (c) serious economic or operational problems for persons who mak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or associated facilities.

(3) OFCOM may, in a notification under section 94 with respect to the contravention, specify a period of less than one month for doing the things mentioned in subsection (3) of that section.

(4) OFCOM shall also have power to give to the contravening provider-

- (a) a direction that his entitlement to provide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or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or to make associated facilities available, is suspended (either generally or in relation to particular networks, services or facilities); or
- (b) a direction that that entitlement is restricted in the respects set out in the direction.

(5) A direction under subsection (4)-

- (a) must specify the networks, services and facilities to which it relates; and
- (b) except so far as it otherwise provides, takes effect for an indefinite period beginning with the time at which it is notified to the person to whom it is given.

(6) A direction under subsection (4)-

- (a) in providing for the effect of a suspension or restriction to be postponed, may provide for it to take effect only at a time determined by or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direction; and
- (b) in connection with the suspension or restriction contained in the direction or with the postponement of its effect, may impose such conditions on the contravening provider as appear to OFCOM to be appropriate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his customers.

- (7) Those conditions may include a condition requiring the making of payments-
  - (a) by way of compensation for loss or damage suffered by the contravening provider's customers as a result of the direction; or
  - (b) in respect of annoyance, inconvenience or anxiety to which they have been put in consequence of the direction.
- (8) OFCOM have power to revoke a direction given under subsection (4)-
  - (a) with effect from such time as they may direct;
  - (b) subject to compliance with such requirements as they may specify; and
  - (c) to such extent and in relation to such networks, services or facilities, or parts of a network, service or facility, as they may determine.

#### **99 Confirmation of directions under s. 98**

- (1)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after giving a direction under section 98(4), OFCOM must give the person to whom it is given-
  - (a) an opportunity of making representations to them about the grounds on which it was given and its effect; and
  - (b) an opportunity of proposing steps to remedy the situation.
- (2)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the period allowed by OFCOM for making those representations has ended, they must determine-
  - (a) whether the contravention providing the grounds for the giving of the direction did occur; and
  - (b) whether the circumstances made it an urgent case justifying the giving of the direction.
- (3) If OFCOM decide that the contravention did occur and that the direction was justified, they may confirm the direction.
- (4) If not, they must exercise their power to revoke it.
- (5)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after determining whether to confirm the

direction, OFCOM must notify the person to whom it was given of their decision.

- (6) Conditions included in a direction by virtue of section 98(7) have effect only if the direction is confirmed.

#### **100 Suspending service provision for contraventions of conditions**

- (1) OFCOM may give a direction under this section to a person who is a communications provider or makes associated facilities available("the contravening provider") if they are satisfied-
  - (a) that he is or has been in serious and repeated contravention of conditions set under section 45, other than an SMP apparatus condition;
  - (b) that an attempt, by the imposition of penalties or the giving of enforcement notifications under section 95 or both, to secure compliance with the contravened conditions has failed; and
  - (c) that the giving of the direction is appropriate and proportionate to the seriousness(when repeated as they have been) of the contraventions.
- (2) A direction under this section is-
  - (a) a direction that the entitlement of the contravening provider to provide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or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or to make associated facilities available, is suspended (either generally or in relation to particular networks, services or facilities); or
  - (b) a direction that that entitlement is restricted in the respects set out in the direction.
- (3) A direction under this section-
  - (a) must specify the networks, services and facilities to which it relates; and
  - (b) except so far as it otherwise provides, takes effect for an indefinite period beginning with the time at which it is notified to the person to whom it is given.

- (4) A direction under this section-
  - (a) in providing for the effect of a suspension or restriction to be postponed, may provide for it to take effect only at a time determined by or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direction; and
  - (b) in connection with the suspension or restriction contained in the direction or with the postponement of its effect, may impose such conditions on the contravening provider as appear to OFCOM to be appropriate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at provider's customers.
- (5) Those conditions may include a condition requiring the making of payments(a) by way of compensation for loss or damage suffered by the contravening provider's customers as a result of the direction; or (b) in respect of annoyance, inconvenience or anxiety to which they have been put in consequence of the direction.
- (6) If OFCOM consider it appropriate to do so (whether or not in consequence of representations or proposals made to them), they may revoke a direction under this section or modify its conditions-
  - (a) with effect from such time as they may direct;
  - (b) subject to compliance with such requirements as they may specify; and
  - (c) to such extent and in relation to such networks, services or facilities, or parts of a network, service or facility, as they may determine.
- (7)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there are repeated contraventions by a person of conditions set under section 45 to the extent that-
  - (a) in the case of a previous notification given to that person under section 94, OFCOM have determined for the purposes of section 95(2) or 96(2) that such a contravention did occur;
  - (b) in the period of twelve months following the day of the making of that determination, one or more further notifications have been given to that person in respect

- of contraventions of a condition set under section 45; and
- (c) the previous notification and the subsequent ones all relate to contraventions of the same condition (whether the same contravention or different contraventions).

#### **101 Suspending apparatus supply for contraventions of conditions**

- (1) OFCOM may give a direction under this section to a person who supplies electronic communications apparatus (“the contravening supplier”) if they are satisfied-
  - (a) that he is or has been in serious and repeated contravention of any SMP apparatus conditions;
  - (b) that an attempt, by the imposition of penalties or the giving of enforcement notifications under section 95 or both, to secure compliance with the contravened conditions has failed; and
  - (c) that the giving of the direction is appropriate and proportionate to the seriousness (when repeated as they have been) of the contraventions.
- (2) A direction under this section is-
  - (a) a direction to the contravening supplier to cease to act as a supplier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apparatus (either generally or in relation to apparatus of a particular description); or
  - (b) a direction imposing such restrictions as may be set out in the direction on the supply by that supplier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apparatus (either generally or in relation to apparatus of a particular description).
- (3) A direction under this section takes effect, except so far as it otherwise provides, for an indefinite period beginning with the time at which it is notified to the person to whom it is given.
- (4) A direction under this section-
  - (a) may provide for a prohibition or restriction to take effect only at a time determined

- by or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direction; and
  - (b) in connection with a prohibition or restriction contained in the direction or with the postponement of its effect, may impose such conditions on the contravening supplier as appear to OFCOM to be appropriate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at supplier's customers.
- (5) Those conditions may include a condition requiring the making of payments-
- (a) by way of compensation for loss or damage suffered by the contravening supplier's customers as a result of the direction; or
  - (b) in respect of annoyance, inconvenience or anxiety to which they have been put in consequence of the direction.
- (6) If OFCOM consider it appropriate to do so (whether or not in consequence of representations or proposals made to them), they may at any time revoke a direction under this section or modify its conditions-
- (a) with effect from such time as they may direct;
  - (b) subject to compliance with such requirements as they may specify; and
  - (c) to such extent and in relation to such apparatus or descriptions of apparatus as they may determine.
- (7)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there are repeated contraventions by a person of SMP apparatus conditions to the extent that-
- (a) in the case of a previous notification given to that person under section 94, OFCOM have determined for the purposes of section 95(2) or 96(2) that such a contravention did occur;
  - (b) in the period of twelve months following the day of the making of that determination, one or more further notifications have been given to that person in respect of contraventions of an SMP apparatus condition; and
  - (c) the previous notification and the subsequent ones all relate to contraventions of

the same condition (whether the same contravention or different contraventions).

## **102 Procedure for directions under ss. 100 and 101**

- (1) Except in an urgent case, OFCOM are not to give a direction under section 100 or 101 unless they have-
  - (a) notified the contravening provider or contravening supplier of the proposed direction and of the conditions (if any) which they are proposing to impose by that direction;
  - (b) provided him with an opportunity of making representations about the proposals and of proposing steps for remedying the situation; and
  - (c) considered every representation and proposal made to them during the period allowed by them for the contravening provider or the contravening supplier to take advantage of that opportunity.
- (2) That period must be one ending not less than one month after the day of the giving of the notification.
- (3)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giving a direction under section 100 or 101 in an urgent case, OFCOM must, provide the contravening provider or contravening supplier with an opportunity of-
  - (a) making representations about the effect of the direction and of any of its conditions; and
  - (b) proposing steps for remedying the situation.
- (4) A case is an urgent case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if OFCOM-
  - (a) consider that it would be inappropriate, because the contraventions in question fall within subsection (5), to allow time, before giving a direction under section 100 or 101, for the making and consideration of representations; and
  - (b) decide for that reason to act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3), instead of subsection (1).

- (5) The contraventions fall within this subsection if they have resulted in, or create an immediate risk of-
- (a) a serious threat to the safety of the public, to public health or to national security;
  - (b) serious economic or operational problems for persons (apart from the contravening provider or contravening supplier) who are communications providers or persons who make associated facilities available; or
  - (c) serious economic or operational problems for persons who mak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or associated facilities.
- (6) In this section- “contravening provider” has the same meaning as in section 100; and “contravening supplier” has the same meaning as in section 101.

### **103 Enforcement of directions under ss. 98, 100 and 101**

- (1) A person is guilty of an offence if he provides an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 or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 or makes available any associated facility-
- (a) while his entitlement to do so is suspended by a direction under section 98(4) or 100; or
  - (b) in contravention of a restriction contained in such a direction.
- (2) A person is guilty of an offence if he supplies electronic communications apparatus-
- (a) while prohibited from doing so by a direction under section 101; or
  - (b) in contravention of a restriction contained in such a direction.
- (3) A person guilty of an offence under this section shall be liable-
- (a) on summary conviction, to a fine not exceeding the statutory maximum;
  - (b) on conviction on indictment, to a fine.
- (4) Sections 94 to 99 apply in relation to a contravention of conditions imposed by a direction under section 98, 100 or 101 as they apply in relation to a contraven-

tion of conditions set under section 45.

#### **104 Civil liability for breach of conditions or enforcement notification**

- (1) The obligation of a person to comply with-
  - (a) the conditions set under section 45 which apply to him,
  - (b) requirements imposed on him by an enforcement notification under section 95, and
  - (c) the conditions imposed by a direction under section 98 or 100, shall be a duty owed to every person who may be affected by a contravention of the condition or requirement.
- (2) Where a duty is owed by virtue of this section to a person-
  - (a) a breach of the duty that causes that person to sustain loss or damage, and
  - (b) an act which- (i) by inducing a breach of the duty or interfering with its performance, causes that person to sustain loss or damage, and (ii) is done wholly or partly for achieving that result, shall be actionable at the suit or instance of that person.
- (3) In proceedings brought against a person by virtue of subsection (2)(a) it shall be a defence for that person to show that he took all reasonable steps and exercised all due diligence to avoid contravening the condition or requirement in question.
- (4) The consent of OFCOM is required for the bringing of proceedings by virtue of subsection (1)(a).
- (5) Where OFCOM give a consent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4) subject to conditions relating to the conduct of the proceedings, the proceedings are not to be carried on by that person except in compliance with those conditions.

● 저 자 소 개 ●

---

강 하 연

-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학사
-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GSIS) 석사
-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박사  
(정치경제 및 산업정책 전공)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서 보 현

-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
- McGill Univ. Faculty of Law(Montreal) Visiting Research Fellow(1988~1989)
- Univ. of Washington, School of Law(Seattle) Visiting Scholar(1997~1998)
- IT분야 국제회의 한국 대표단(ITU, WSIS, WRC, APEC, ASEAN+3, APT, ASEM 등)
- TEIN, TEIN2 유럽 아시아 전문가회의 한국대표, KRnet 2004~2008 운영위원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협력연구실장

김 성 웅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 학사
-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박 민 정

- 이화여자대학교 영문학 학사
- 고려대학교 국제통상학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정책연구 08-70

방송통신 규제기관 국제협력 방안 연구

---

---

2008년 12월 일 인쇄

2008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방 석 호

발행처 정 보 통 신 정 책 연 구 원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1-1

TEL: 570-4114 FAX: 579-4695~6

인 쇄 인 성 문 화

ISBN 978-89-8242-519-6 93320

---

---

1. 본 연구보고서는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수행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2.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